





#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편 34



•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9월 설립 이후 학술분야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내에서 공동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방향과 각국의 공동체 정책 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화해와 상호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한·일, 한·중 및 중·일 등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및 나아가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 틀 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며,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국내외의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정책 구상이 향후 이 지역 내 주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평화 구축과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역사현안 및 영토문제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을 정리하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

과 전망』은 지난 2008년 재단의 의뢰로 3개 연구팀이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연구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관심있는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일반 독자도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필에 참여하신 이숙중, 나종석, 이남주 교수님 등과 공동연구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책머리에 9

● 한·중·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이숙중·김기석·박영준·서상민·전재성·조양현·한석희

I. 머리말	17
1_ 연구목적	17
2_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분석	23
II. 중 국	37
1_ 중국의 동아시아 범위 인식	40
2_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 변화	46
3_ 중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정책	51
4_ 중국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공동체	60
III. 일 본	70
1_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범위	70
2_ 일본의 지역 인식 변화 과정	73
3_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	88
4_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목표와 전망	105
5_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	117
IV. 한 국	118
1_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논의의 변화과정	118
2_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개와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145
V.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155

•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나종석·권용혁·이진원

I. 머리말	181
II. 한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188
1_ 경제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194
2_ 정치군사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198
3_ ‘유교문화권’ 이론	204
4_ 계보학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223
5_ 구성주의적 문화 이론	229
6_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	233
III. 일본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240
1_ 경제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247
2_ 정치군사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250
3_ ‘유교문화권’ 이론	253
4_ 계보학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256
5_ 구성주의적 동아시아 이론	259
6_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	263
IV. 실증적 자료로 본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정체성 문제	270
1_ 실증적 연구분석틀	271
2_ 자료분석	275
V. 실증적 자료로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300
1_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	301
2_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	311
VI.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비전과 제언	318
1_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규범	320
2_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의 전제로서의 과거사 정리 문제	333
3_ 순화된 애국주의 : 자민족중심주의와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 매개체	344
4_ 정책적 제언	361

• <b>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b> 이남주·배기찬	
<b>—동북아 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b>	
I. 머리말	379
1_ 연구목적	379
2_ 연구내용과 방법	385
II. 동북아 3국 간 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388
1_ 갈등유형의 구분	388
2_ 영유권문제	391
3_ 역사문제	398
4_ 경제적 이익의 충돌 : 해양경계문제	406
5_ 국제정치적 갈등	411
III.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과 민족주의	417
1_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강화 추세와 원인	417
2_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상호작용	428
3_ 각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및 문제점	434
IV. 동북아 갈등 및 민족주의 대응방안	437
1_ 동북아 갈등에 대한 종합평가와 갈등해결의 방향	437
2_ 갈등문제에 대한 다층적 접근	442
3_ 코리아 이니셔티브	450
V. 맺음말	455
<b>찾아보기</b>	464

• 책머리에

21세기 초 동아시아는 복합변환을 겪고 있다. 냉전의 양극구조는 탈냉전의 다극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세력전이 현상과 더불어 러시아의 국력강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 관계의 차원에서도 양대 진영의 뚜렷한 이분화 현상에서 국익에 따른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국익에 따른 동맹, 연합, 적대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변환의 시대에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거대 조류를 타고 근대국민국가 질서가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국익에 기초하여 국가가 주도하던 국제관계가 다차원적 네트워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는 각기 다른 형태로 21세기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류이자 각 국가들이 의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일부이다. 냉전으로 양분되어 있던 국제관계가 다원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지역적으로 보다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지역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곧 지역주의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는 지역에 속한 많은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공통의 원칙, 규범, 규칙의 토대 위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의도적 전략과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주의의 건설에는 각 국가의 의식적인 노력과 구상이 포함되고, 그 과정에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 간의 조정과 타협, 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게 마련이다. 각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주의의 구상 간의 세력균형 속에 평형이 이루어질 때, 지역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1990년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는 담론 수준에 그쳤으며, 담론이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이다.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경제의 기적을 구가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이은 경제적 위기로, APEC에 대한 회의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통상 및 통화와 같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의 제도화가 진전되어 왔다. 비록 논의 수준에 그쳤지만 1997년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제안이나, 2000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참여하는 ASEAN+3(APT)이 결성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은 본격화되었다.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이후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의 일환으로 공동체전략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0년 11월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동남아시아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응하여 일본은 ASEAN과의 ‘포괄적 경제연대협정’ 및 ‘동아시아개발 이니셔티브’ 등을 제안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지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심화는 비록 지역협력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었으나,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화(regionalization)를 넘어서 지역주의(regionalism)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공동의 가치와 신념, 문

화적 동질성, 기능적 상호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동아시아 인식을 다루고자 하였다. 한·중·일 각국이 보는 동아시아 인식은 왜 같은 동아시아공동체를 여론 주도층이 논하면서도 심도 있는 인식공동체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또한 왜 각국 정부가 어떻게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을 서로 다른 지역전략에 종속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을 지리적 개념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미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영역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만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바라고 있으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중국으로의 투자와 주변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이 지역 국가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극화를 실현하여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여 역내에서 힘의 균형을 취한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깔려 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를 이른바 ‘광역 동아시아’로 인식하여 구성국 확대를 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묶어 동아시아로 인식해 왔으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른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국가의 일부를 포함하는 확대된 동아시아 지역 인식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 인식 이면에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면 광역화된 동아시아가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다. 한편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 형성에서 공동의 가치, 정체성 공유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

시아 외교의 방향은 주변 여러 국가와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전략이 지역 내 주도권 경쟁과 연관된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전략은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은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질서의 변동과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공동체 전략을 전개해 왔던 것은 아니며, 대체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 부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지역 전략과 공동체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패권 지속, 중국의 영향력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통 4강체제하의 세력균형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 전략적 대안으로 첫째, 주변국과의 다중 전략적 관계를 맺고, 둘째, 연성 권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환과정에서 한국이 주도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창출에 공헌하며, 셋째, 한국 문제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국제정치에서의 극한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사 등 지역 정체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다섯째, 시장평화와 민주평화를 최대한 이용하는 공동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 특히 인간안보 문제 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곱째, 민족정체성과 보편적·지역적 정체성이 평화롭게 공

존할 수 있도록 정체성 전략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문제를 정체성 형성의 이념적 지향성을 ‘미래의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모색함으로써 기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틀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다. 미래의 기획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서구 근대의 물결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갈등과 대립은 물론이고 냉전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가 초래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의 구상을 모색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데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동아시아공동체에 필요한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아시아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성찰작업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의 여러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것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달리 말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동아시아 이론들을 다음 6개의 유형들로 나누어서 그 이론들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6개의 이론 유형은 경제 중심 동아시아 이론, 정치군사 중심 동아시아 이론, ‘유교 문화권’ 이론, 계보학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구성주의적 문화이론 그리고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정체성 형성에서 유교 문화적 공통성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유교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어떤 차이점과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 중요한 이론적 결론들을 도출해보려고 했다.

유교 문화적 공통성의 변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 외에도 일본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일본인들이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해보았다.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특히 정체성 형성에 관련하여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해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유 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 현재적 공감대 인식 확보 및 확장 그리고 미래지향적 공동체 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으로 세분하여 구체적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중·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에서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공동체 정책은 서울대 전재성 교수와 강원대의 김기석 교수가, 중국은 연세대 한석희 교수와 동아시아연구원 서상민 박사가, 일본은 한국국방대학교 박영준 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양현 교수가 담당하였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에서 공동체 이론 전반적 분석과 동아시아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나중석 연구교수가 일본 관련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진원 교수가, 비전과 제언은 울산대학교 권용혁 교수가 담당하였다.

「동아시아공동체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은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와 배기찬 교수가 참여하였다.

공동연구의 결과이다 보니 각 장의 균형을 맞추고 개념과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몇 차례 편집과 수정을 거듭하여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출판팀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9년 9월 30일

필자를 대신하여 이 속 중

# 한·중·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이숙중 · 김기석 · 박영준  
서상민 · 전재성 · 조양현 · 한석희

- I. 머리말
- II. 중국
- III. 일본
- IV. 한국
- V.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 한·중·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이숙중 · 김기석 · 박영준  
서상민 · 전재성 · 조양현 · 한석희

## I. 머리말

### 1. 연구목적

21세기 국제정치는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거대조류, 즉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등의 조류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재화, 서비스, 문화 등의 이동으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이 증대되고, 세계적 수준의 통합과 지역적 수준의 통합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양자적 교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주의 혹은 지역공동체가 국가의 자연스러운 정책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출현이 가능해진 이유는 정보, 교통, 문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주의에 성공한 지역도 다른 지역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자극을 주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형성하여 주권국가체제를 넘어 지역통합체의 제도를 갖추어 가고 있고, 유럽인들은 공동의 정체성하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하

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유럽에서 받아들인 주권국가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발흥, 국가 간 경쟁의 심화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다른 지역에 대해 우위를 점한 상황은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동아시아는 전통지역질서에서 근대적 주권국가체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 사대자소(事大字小)의 논리에 기반을 둔 천하질서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특성은 크게 약화되었고, 주권국가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국가 간 경쟁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세기에 청일전쟁과 같은 지역패권전쟁, 일본의 세력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러일전쟁, 제국주의 경쟁, 이후 냉전기 초강대국 간의 경쟁을 거쳐, 오늘날 민족주의적 대립과 경쟁 속에 동아시아는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요원한 일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정치를 부추기는 현상이 많이 있다. 앞에서 논한 유럽통합이 주는 자극은 물론,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 조류는 각 차원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 테러, 난민, 인권 등 초국경적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오고 있다. 공식적 차원에서 1989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를 필두로 1993년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199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 ASEM), 1997년 ASEAN+3,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 EAS)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지역협력체가 등장해 왔다. 정치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러한 지역주의적 추세는 사회문화 영역으로도 확산되어, 인적 교류와 이민이 확대되었고 문화교류는 1980년대까지 일본 대중문화를 소비하던 유형에서 1990년대 한국, 중국 그리고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서로 활발하게 상호 교류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아시아의 지역주의 인식의 확산과 협력활성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 중심에는 경제 영역의 상호작용 확대, 특히 이른바 지역화(regionalization)의 진전이 논의를 추동하는 동력이었다.<sup>1)</sup>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저해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역내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보다 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국 역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역내 국가와 활발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런 추세에 기여하였다.<sup>2)</sup>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요청,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개별국가의 협력적 대응전략,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출범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의 출범으로 표상되는 유럽 및 북미의 지역화 경향에 대한 대응,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나타난 미국의 헤게모니적 권력에 대한 불신감과 새로운 아시아 정체성의 부상 등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많은 요인이 지적되어 왔다.<sup>3)</sup>

1) Peter J. Katzenstein(1997), "Introduction :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 M. Beeson(2003a), "ASEAN Plus Three and the rise of reactionary regionalis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5(2).

2) T. J. Pempel(2005),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3) J. Ravenhill(2002), "A Three Bloc World? The New East Asian

그러나 동아시아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간 경쟁 및 민주주의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민족국가 단위를 넘어 전개되는 협력의 필요성 사이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떤 국가전략과 논리로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동아시아는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세력의 장이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생존과 번영이 수시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공동체를 한국의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놓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는 이미 지역전략의 한 대안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태를 만들려고 벌이는 경쟁이다. 즉, 동아시아의 지리적 인식과 범위와 관련된 문제, 참여국을 묶는 규범을 만드는 문제,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고안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제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 등 각의 제에 대한 국가 간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

Region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2) ; R. Stubbs(2002), “SEAN Plus Three :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42(3) ; Douglas Webber(2001),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The Pacific Review*, 14(3) ; Paul Bowles(2002),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United)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2) ; R. A. Higgot(1998), “The Asian Economic Crisis :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3(3) ; Takeshi Terada(2003), “Constructing an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 From EAEC to ASEAN+3,” *The Pacific Review*, 16(2).

따라서 이들 국가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 전개되는 지역전략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3국 간 비교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한국·중국·일본이 펼쳐 나가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이 결국 근본적으로 각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된 3국 간 비교연구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의 지식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치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태’, ‘극동’, ‘대동아’ 등의 개념을 대신해 ‘동아시아’의 개념이 정착된 것은 전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4)</sup> 그렇지만 지리적 개념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4) 김명섭(2005), 「동아시아냉전질서의 탄생」,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1960년대 말 ‘동아시아’ 개념이 국제관계 연구의 분석단위로 도입되었다[S. Haggard(1969),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Americas,” Mansfield, Hellmann, Donald C., “Emergence of an East Asian International Sub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3]. 당시 미국정부의 외교문서에는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북동아시아(Northeast Asia)’, ‘극동(Far East)’ 외에 ‘동아시아(East Asia)’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때의 ‘동아시아’ 개념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합한 지역범위에 가까운 것이었다. 1966년 11월 1일 이에 해당되는 국무부 지역국의 명칭이 ‘극동국(Bureau of Far Eastern Affairs)’에서 ‘동아시아태평양국(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으로 변경되었다. *United States Government Organization Manual, 1965~1966*(Washington, D. C. : Federal Register Divisio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965), p. 87 ; *United States Government Organization Manual, 1968~1969*, 1968, p. 84. 전자의 ‘극동’은 ‘동아시아(일본, 한국, 타이완)’, ‘동남아시아(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타이, 베트남)’, ‘남서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남태평양제도)’ 및 ‘아시아 공산권(홍콩, 마카오, 중국)’으로 구성되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제도 등 태평양 지역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후자의 ‘동아시아태평양’에서는 양자를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그때의 ‘동아시아’란 ‘극동’으로부터 태평양제국을 제외한 지역, 즉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합한 범위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없으며, 지역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주권국가를 넘어선 지역주민의 소속의식, 즉 정체성이 수렴하는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sup>5)</sup>

그 이유는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각국의 지역전략을 지식사회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논의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지역범위에 대한 논의조차 일치를 보지 못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규범, 제도, 제도의 주도권 등과 관련된 논의로 발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3국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의 포괄범위를 왜 서로 다르게 확정하고 자신들의 지역전략에 종속시키는지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이는 한·중·일 각국의 동아시아 인식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장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한계와 가능성을 도출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근대화 이후 동아시아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역사 인식의 이해와 동시에 최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에 대한 천착을 동시에 요구하는 작업만큼 기존 역사 일변도나 정책 일변도의 연구와 차별되는 독창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도출해 낼 분석은 단기적인 제도연구와 함께 동북아의 역사갈등을 녹아 낼 수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비전 제시 및 교차하는 동북아 3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5) 田中明彦(2003), 「東アジア」という新地域形成の試み：ASEAN+3の展開,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編, 『アジア學の將來像』, 東京：東京大學出版會；毛里和子 外(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東京：岩波書店.

## 2.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분석

### 1)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사적 개관

근대 국제정치는 유럽의 근대 국제정치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개별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단위의 폭력의 분산적 소유와 전쟁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국가 간의 폭력 사용을 막고, 국제정치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라는 것이 근대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국가 간에는 국가의 방어적·협력적 의도와 상관없이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며, 국가 간 협력은 상대적 이익의 갈등과 배반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근대 국제정치의 논리적 귀결이다.

근대 국제체제의 기원이 된 유럽은 수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치렀다. 그러면서 전쟁의 피해를 막는 협력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처리과정에서 유럽협조체제를 성립시켜 강대국 간 회의를 통한 외교라는 기제와 다자협력체제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이후 20세기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패전국 독일의 처리문제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럽국가 간 다자협력체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유럽의 다자협력 혹은 지역주의는 발전과정마다 다양한 논리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제정치의 안보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로 다자적 지역주의 협력이 발전되어 왔다.

근대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의 정치가 전쟁을 치르면서, 상호협력과 학습과정의 필요성을 자극하고, 다자협력의 길을 걷게 된다는 유럽 모델은 다른 지역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강대국 간 이익조정과 협력의 논리, 기능

적·경제적 상호의존의 확산과 그로 인한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협력고양 가능성,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국가 간 평화적 협상과 협력가능성 증가 그리고 다자제도의 창출에서 비롯되는 경로의존성과 환류효과, 거래비용 감소효과 등 제도적 평화 가능성, 더 나아가 이익의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적 집합정체성 창출을 통한 안보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등의 이론적 기제가 유럽에서 출현하여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 협력 모델이 되어 왔다.

동북아 역시 피상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상호 간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점차 늘어나는 역내 경제 상호의존으로 협력의 범위와 심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각 국가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고, 동북아 지역주의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편협한 민족주의보다 광범위한 지역주의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적 이해조정 가능성 증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시장평화 가능성 증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민주평화 가능성 증가, 지역적 집합정체성의 강조로 인한 구성주의적 지역주의 가능성 증가 그리고 지역국제정치 제도화 정도 증가 등의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6)</sup>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발전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는 유럽 등 다른 지역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보다 더욱 어려운 지역주의와 안보다자체제 성립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는 근대 국제정치의 전형적인 길을 밟아오지 못하였다. 19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의 각 국가는 전통국제질서를 따랐으며, 주권국가체제의 근대 국제질서는 1840년 아편

6)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역사적 개관에 대해서는 윤태영(2005),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Michel Yahuda(1996),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Asia-Pacific, 1945~1996*, London : Routledge 등 참조.

전쟁을 시발로 폭력적으로,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전파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정치적 근대화 이행과정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미완성된 모습의 세력균형의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런 와중에 21세기의 다양한 안보현안이 지역국제정치에 들어와 현재 동아시아는 근대이행과 근대 그리고 21세기적 현안이라는 3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현안으로 지적되는 것은 독도, 조어도, 일본 북방도 서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양자 간 영토분쟁, 중일 간 가스전, 한일 간 동해 어업 및 영해 문제와 같은 해양분쟁,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비롯된 역사 인식 문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교과서 갈등 문제, 중국의 발전으로 인한 중일 간 세력경쟁, 역시 중국의 발전으로 인한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미·중 간 세력경쟁,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분쟁, 북핵문제, 미국의 군사변환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역내 군사질서의 재편 문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과제, 테러, 환경 등 21세기적 인간안보 문제 등이다.<sup>7)</sup>

평면적으로 나열해 보면 같은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층위가 다른 문제들이다. 우선, 영토분쟁과 해양분쟁, 역사 인식과 역사교과서 갈등 등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근대이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행은 제국주의 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을 지속하였고, 그

7)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에 관한 연구로는 김유은(2004),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남궁곤(2006), 「도이치(Karl Deutsch)의 고전적 통합이론에 의한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실천과정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박인휘(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과 제도화: 유럽공동체의 교훈과 지역 정체성 창출방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조운영(2006),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 가능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등 참조.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는 제국 아니면 식민지의 양자택일의 가능성에만 직면하였다. 청(淸)과 조선은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고, 반면 일본은 성공적인 제국의 길을 걸었다. 근대 국제정치가 국가의 주권성에 기반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때, 동북아 국제정치는 애초부터 주권적 평등, 내정불간섭, 영토의 보존과 같은 근대 국제규범이 내재화되기 이전, 제국주의 대 식민지라는 근대 국제정치의 특정단계에서의 규범에 기반을 두게 된 것이다.

제국주의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1945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첫째,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은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 중국은 반제투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토와 타이완으로 양분되어 통일적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국가로 있다. 한국 역시 탈식민지 과정에서 냉전의 논리에 휩싸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이는 근대이행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내적으로 통일된 국민국가의 토대를 이루지 못한 결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궁극적 원인은 제국주의적 근대 전파과정에 있다. 반면 일본은 성공적 근대화의 길을 걸었으나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여 군사적·외교적 제한을 받는 처지에 놓였고, ‘보통’의 국민국가 건설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대이행 과정에서 비롯된 성공한 제국의 길과 실패한 식민지의 길이 모두 불완전한 근대이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과거청산 문제 때문에 불완전한 근대이행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은 일본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국내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이 일본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 기억 때문이다.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 판단과는 별도로, 일본제국주의 경험이 낳은 기억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는 현실 국제정치의 논리로 존재하고 있다. 비록 기억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가 현실적 기반이 없는 비과학적 인식이라 하더라도 국제정치에서 인식과 오인의 요소가 현실적 힘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제국주의의 기억은 여전히 중요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한 요소이다.

근대이행의 국제정치 문제가 현실에 남아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근대 국제정치의 특성도 동북아에 남아 있다. 즉, 세력균형과 근대국가 간 이익갈등의 문제이다. 현재 동북아는 중국의 부상으로 급격한 세력전이를 겪고 있다. 2006년 IMF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력이 이미 세계 4위이다. 중국의 2006년 국내총생산은 2조 6300만 달러로, 미국 13조 2400억 달러, 일본 4조 4600억 달러, 독일 2조 6300억 달러에 이어 4위의 강대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SIPRI가 집계한 2005년도 군사비 지출을 보면, 미국 4782억 달러, 영국 483억 달러, 프랑스 462억 달러, 일본 421억 달러에 이어 중국 410억 달러로 근소한 차이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 4, 5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력전이가 평화적 세력조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발전에 대하여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 군사력 증강의 투명성 요구 그리고 중국을 의식한 외교, 군사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맞서고 있다. 양국은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에 걸맞는 미일동맹 강화와 외무·국방장관의 2+2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2007년 5월 1일 미일 간 외무·국방 장관회담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 나토와의 협력강화를 논의하였으며, 군사기밀보호를 위한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보전협정(GSOMIA)’을 사실상 체결하는 등 군사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 정부는 2007년 3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와 ‘안정보장협력에 관한 일호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준동맹관계를 결성하였다. 2008년 10월 미국은 인도와 원자력협정을 강화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의 군사협력은 물론 나토의 이른바 '글로벌 파트너십'과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근대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의 논리와는 별도로 21세기적 인간안보의 문제는 새로운 안보위협을 안기고 있다. 북핵문제에서 보듯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은 근대이행의 문제와 근대 세력균형 갈등과는 별도로 동북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인간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는 다양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환경이었다. 각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향후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보건대,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전형적인 근대 국제정치와는 달리 근대이행기, 근대, 21세기의 문제를 복합적·중첩적으로 겪고 있으며, 평면적으로 보이는 현안 역시 구조적 단층을 달리하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현안에서의 지역적·다자적 협력은 서로 상이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동아시아공동체 역시 각각의 현안에서 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루려면 중층적으로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2) 동아시아공동체 협력에 관한 이론적 분석

한국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그만큼 현실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제제도 혹은 다자협력의 경우를 보면, 힘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거나, 국가 간 공동이익을 밝혀 제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당위와 규범에 호소하는 경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는 힘과 이익에 기반하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다자적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면 규범에 근거한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념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동아시아공동체가 단순한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발생하는 협력체가 아니라, 서로 간에 존재하는 유대감과 집합정체성의 결과라고 한다면, 다자협력체 혹은 다자주의, 지역주의는 이보다는 약한 실체일 것이다. 공동의 정체성과 문화에 기반을 둔 다자협력도 있을 수 있지만, 동아시아공동체처럼 '하나임'의 느낌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속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현재 동아시아 질서의 상황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자. 현재 동아시아 질서의 성격은 현실주의적·도구적 질서의 성격이 주된 특징이나 점차 자유주의적·규범적 질서를 구성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전히 미국 패권의 힘에 의한 주도, 세력균형, 동맹, 자력구제의 원칙이 주(主)가 되어, 규범보다는 힘이, 협조보다는 갈등이, 제도보다는 편의적 관계가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점차 제도화된 협력과 규범, 국제레짐, 다자적 관계가 출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근대이행의 미완결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공통의 비전과 규범을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한 기존의 동아시아 국가와 제국적으로 양극체제를 주도한 소련과

미국은 하나의 사회로서 동북아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행위주체가 누구인지, 즉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북한이 근대국가로 존립하는 것을 외교적 혹은 실체적으로 승인할 것인지, 이들의 안전보장을 어떠한 형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였고 미국을 공격하였던 일본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전후처리를 어떻게 마감하며, 정당한 국제정치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을지, 즉 일본의 정상국가화 노력에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현실주의적·도구적 질서 속에서의 갈등해결은 근본적인 세력균형의 변화에 대해 제도화된 대응을 이끌어 내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흔히, 현실주의적 질서 속에서의 국력의 불균등한 발전은 불안정을 야기시킨다고 여겨지는데, 세력전이와 같은 현상이 대표적이다. 세력전이 상황에서 기존의 이등국(二等國) 혹은 그보다 약하였던 국가가 세력을 급속히 신장시키면 이에 대한 제도화된 대처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은 전쟁으로 귀결된 경우가 종종 있다. 19세기 말부터의 독일의 급속한 성장이 유럽의 체제 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세계대전으로 화한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세력신장이 괄목할 만하다. 중국은 과거의 공산주의체제를 상당 부분 탈피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세력증가와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위협론으로 인식되어 동아시아 국가, 특히 미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력전이가 급속히 일어나고, 이를 적절히 흡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많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의 현실주의적 질서는 패권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냉전종식 이후, 유럽 국가들은 냉전기 동맹을 해체하거나 재조정하고, 미국에 대한 유럽의 목소리를 신장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유럽연합의 강화와 군사적 자립, 외교노선에서의 독자적 노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NATO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이라크전에 대한 이른바 반전 유럽 3국의 등장, 반미여론의 확산 등이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미패권을 중심으로 한 양자 동맹의 네트워크와 미중 간의 양자 관계, 미북 간의 현안해결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자체적인 갈등해소 및 협력기제가 자리잡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역내 안정자 혹은 균형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역내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이라는 역외 국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패권주도의 현실주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다자주의적 질서와 다자주의적 갈등해소 기제의 결여이다. 기존의 분석에 따르면, 다자주의적 제도가 형성되려면 강한 주도국에 의한(즉 힘에 의한 제도의 창출), 공동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교섭에 의한(즉 이익에 의한 제도의 창출), 전통적으로 혹은 새롭게 등장한 지역공동체의식, 집합정체성에 의한 제도의 창출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집합정체성에 의한 다자주의적 제도의 창출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여전히 과거의 적대감이 남아 있고,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지역적 유대감은 약화되었으며, 새롭게 지역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사상적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의 이익 역시 첨예하게 엇갈려 환경문제, 난민문제 등 이른바 인간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적 갈등해소와 협력이 점차 나타나고는 있으나, 막상 영토문제, 안보문제 등 이른바 정치적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다자 간 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힘에 의한 제도의 창출은 역시 미 패권 주도에 의한 방안이 가장 유력하나, 미국은 여전히 다자주의적 질서를 미 주도의 양자

적 질서의 보완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다자주의적 제도, 즉 ARF나 APEC 정도 수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패권은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를 선호한다는 전통적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질서와 협력은 현실주의적·도구적 단계를 벗어나 점차 자유주의적·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냉전적 양극대립의 종식이라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시장의 확산 및 역내 국가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요소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세계화와 더불어 역내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며, 한·중·일 3국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또한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발전, 중국의 개방, 개혁으로 말미암아 정부차원, 시민사회차원에서의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교섭을 통한 해결, 시민사회차원에서의 지역적 집합정체성의 출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노력, 사회문화적 교류 등은 보다 복잡한 제도와 규범의 출현 및 정착을 자극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모든 사안에 군사력을 위시한 힘의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를 줄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조류의 확산은 진정한 다자주의 협력, 더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노력에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다자적 협력이 아닌 다자주의적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다자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책수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다자안보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제도이론이 주는 함의이다. 무엇보다 다자제도(multilateral institution)와 다자주의제도(institution of

multilateralism)가 구별되어야 한다. 다자제도는 셋 이상의 행위자가 참가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현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제도로, 단기적이고 작은 사안에 대한 합의 위에서도 가능하다. 반면에 다자주의제도는 공동의 가치, 일반원칙 그리고 광범위한 상호성 등에 기반을 둔 보다 보편적이고 원칙지향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다자주의제도 속에서 각각의 행위자는 이익충족에도 주의해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위하여 단기적이고 특수한 이익을 양보할 정도로 제도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자제도 혹은 다자주의제도가 만들어지려면 강대국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다자제도를 약소국이 주도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효를 거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익에 비추어 다자제도 혹은 다자주의제도를 창설하고, 그 틀 속에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다자제도 혹은 다자주의제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자제도 혹은 다자주의제도가 성립되고 힘을 발휘하려면 세력균형과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원리가 점차 줄어들고, 상호 간의 이익에 기반을 둔 협력,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식의 공유, 가치와 문화, 규범을 공유하는 상호이해와 집합정체성의 확산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원칙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제도가 성립되고, 장기간 유지되려면 국제정치구조 전반의 점진적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8)</sup>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는 다자

8) 다자주의제도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해 James A. Caporaso(199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 The Search for Foundations," John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hn Gerard Ruggie(1992), "Multilateralism :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 Lisa L. Martin(1992), "Interests, Power, and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4) ; Robert Keohane(1990),

적 협력과 공동체를 향한 노력이 있었고, 한국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세안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 등은 안보, 경제, 환경, 문화 등의 이슈에서 국가 간 협의를 심화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많은 현안도 동아시아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 한국은 한국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동아시아 다자협력과정에서 주도권을 취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 이익을 발견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례로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2·13 합의과정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상과 협력의 기제를 거치면서 서서히 다자안보제도의 창출을 이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현실적이고 유력한 집합적 안보제도가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의미가 크다. 앞서 논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제외하고는 동북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이다. 또한 동북아시아협력대화는 정부 간 공식대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발휘하기 어려웠다.<sup>9)</sup>

규범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당위론도 물론 있지만, 현실주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쟁의 장에서 독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는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

“Multilateralism :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XL vo. 4 등 참조.

9) 이동휘(2005), 『북핵 6자회담의 과제 : 다자협상분석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 3) 한·중·일의 지역전략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이와 같이 다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조류이기도 하지만 현실주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각 국가들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 국가전략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냉전으로 양분되어 있던 국제관계가 다원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지역적으로 보다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지역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곧 지역주의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는 지역에 속한 많은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공통의 원칙, 규범, 규칙의 토대 위에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의도적 전략과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건설에는 각 국가의 전략적 노력과 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 간의 조정과 타협 그리고 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마련이다. 각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주의 구상 간의 세력균형 속에서 평형이 이루어질 때, 지역주의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지역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매우 유동적이다. 범위를 가장 넓게 잡고 있는 유엔이 설정한 동아시아를 보면, 동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미얀마에 이르고,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약 20억으로 세계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국가 간 지역기구를 상정하면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동북아의 한·중·일 3국, 즉 현재의 ASEAN+3으로 통상적으로 13개국을 지칭한다. 개발문제나 환경문제 등 특정 이슈에 따라 북한이나 몽골, 타이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리적 영토군으로서나 국가 간 연합체로서 동아시아를 획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동시에 동아시아는 문화적 일체감이나 심리적 귀속감을 주는 추상

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라고 할 때 또는 한 국가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지칭할 때 이는 정확하게 특정군의 국가연합체라기보다는 다분히 유동적인 인식상의 공동체이다. 이 점에서 특정 국가의 국민이 ‘동아시아’라고 인식하는 지리적 범위는 자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어디까지를 동아시아로 간주할 것인가는 특히 자국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동아시아 지역기구를 만들려는 정치지도자 및 지식인 사이에서 논란거리였다. 이들이 간주하는 동아시아는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국의 이해관계와 국익에 바탕을 둔 지역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의도적인 지역주의 레토릭이나 정부의 지역외교는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동아시아를 수용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국가군을 동아시아로 정의하기로 한다. 동시에 이 연구는 어떻게 ‘동아시아’가 지리적 범위 내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인식되는지 그 ‘하위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와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확대된 동아시아’에 관심을 둘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범위의 축소와 확장의 변화과정은 특정 시점에서 해당 정부의 지역정책에 의해 주도되지만 역사적으로 장기간 축적된 상호인식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최근 떠오르는 인도를 동아시아공동체로 끌어들이려는 몇몇 정부의 지역전략은 해당 국가 국민이 갖고 있는 거리감과 이질감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동시에 일본, 한국, 중국의 관계는 미래지향적 동북아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다가도 역사문제로 좌초되곤 한다.

이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무성하였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과 정책이 등한시하였던 동아시아 인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에서 동아

시아 협력에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역내 지배적 2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동북아 3국의 협력과 공동체 구축은 동북아라는 하부 지역은 물론 ASEAN 주도로 느슨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협력을 제도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 II. 중국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주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이다. 과거 중국외교는 양자외교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그러던 것이 개혁개방으로 경제적 성공과 함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국력이 상승하자 1990년대 이후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견제하려는 주변국의 ‘중국위협론(中國威脅論)’에 대한 대응으로 다자외교를 양자외교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9월에서 2005년 5월까지 일본·미국·EU와 각각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한 후 중국은 다자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이웃과의 선린과 동반자(與鄰爲善 以鄰爲伴)’, 기초하에 2000년 ASEAN과의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다자 간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문가 그룹 구성에 합의하였고, 2001년 11월 제5차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제안하고, 2002년 11월에는 ‘포괄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서

명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본격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갔다.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 3국 간 FTA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02년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민간연구기관 간 FTA공동연구를 제안하면서 FTA에 불을 지핀 이후 2005년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3국 간 FTA 가능성 검토를 위한 공식 연구그룹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2008년 5월 중국의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일본과 그외 역내 각 국가와 함께 “동아시아 협력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중국은 ASEAN+3, ASEAN+1, 6자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다자안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목표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를 배제하고 그 회원국을 역내 국가로만 제한하려는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역내 국가만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첫째 주변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중국으로의 투자와 주변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 둘째 이 지역 국가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극화를 실현하여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고 역내에서 힘의 균형을 취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주변지역인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 국가에 비해 발전된 국가로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에 중요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북한, 타이완이 속해 있으며, 미국과 동맹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대중국 견제세력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소수이고, 이 연구도 일본과 중국 학계의 연구현황만 다루고 있어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중국에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이슈가 어떻게 형성되고 중국의 주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파악하려면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을 위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다자안보 조직을 사례로 그 변화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길게는 1970년 후반 개혁개방부터 현재까지로 잡을 수 있으나 다자외교와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대안으로서 지역주의를 인식하게 되어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 내외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달리 다자외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하였고 자국의 경제 발전에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지역 국가와 우호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1990년대 중반 외교수단으로서 다자주의의 선택적 수용과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알아야 한다. 이는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다자안보 조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통해 중국에게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어떤 의도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칠 함의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문제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리더십의 문제이며, 중국은 자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 중국의 동아시아 범위 인식

### 1)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범위

중국은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연구자나 중국의 공식문헌에 따라 ‘동아시아(東亞)’, ‘원동(遠東)’, ‘아시아(亞洲)’, ‘동북아시아(東北亞)’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리적·정치적·전략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고 ‘동북아시아’ 국가이면서 동

시에 ‘아시아·태평양(亞太)’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학자 사이에서는 중국이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동시에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이면서 태평양 국가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이면서, 심지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국가라고도 여기고 있다.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학계는 지정학적 용어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국제정치적 범위에서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는 아시아·태평양, 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하다. 이들 표현 중 지리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지역을 대표하는 용어는 아시아·태평양으로,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 ECAFE)’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SCAP)’로 개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1974년부터 중국은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sup>10)</sup>

한편 중국의 지역 범위와 인식을 파악하려면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지역 구분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국가와 지역’ 목록에서는 대륙을 크게 7개 지역(아시아 지역,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유라시아 지역, 유럽 지역, 북미·대양주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중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부

10) 중국의 한 학자는 아시아·태평양을 대, 중, 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아태’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대양주, 북미와 중남미 서부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아태’는 동북아(러시아 극동지역 포함), 동남아, 대양주(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포함)와 북미 서부(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것을 일컫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함하는 이른바 동아시아인 ‘소아태’가 ‘대아태’와 ‘중아태’의 핵심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王逸舟(1995), 『當代國際政治析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437쪽.

단, 북한, 한국, 필리핀, 동티모르,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23개국이 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속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분은 왕이<sup>11)</sup> 논문에서도 확인되는데,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범주를 “동북아, 동남아와 남아시아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리상의 범위로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러시아 우랄산맥의 동쪽 지역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대해 해당 범위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리적으로 아시아 중부에’ 있으며, ‘동아시아의 일원’이라는 발언을 통해<sup>12)</sup> 알 수 있듯,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동아시아의 구성원 국가라고 여기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는 주요 사전에서 정의한 동아시아의 범위를 살펴보면, 1983년 출판한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과 후베이(湖北)인민출판사가 출간한 『간명지식사전(簡明知識辭典)』에서는 동아시아를 중국, 한반도, 몽골,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동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90년 『중국백과대사전(中國百科大辭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동아시아 범주에 대한 공식적 정의에 기초해 판단해 보면, 1990년대까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로 구성된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1) 王毅(2006), 「思考二十一世紀的新亞洲主義」, 『外交評論』 2006年 第3期, 6쪽, <http://www.laomu.cn/wxzp/ydzz/wenxueqikan/xhzw/xhzw2006/xhzw20061902-2.html>.

12) 江澤民(2006), 『江澤民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314쪽.

## 2) 동아시아 지역 범주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학계 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논의가 수적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이러한 논의에 발맞춰 동아시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동아시아와 관련해 중국학계의 논의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이 규정하는 동아시아의 범위가 1990년대 초반 지리적 기준에 기반을 둔 것과 달리 문화적·경제적 기준을 추가하면서 점차 그 규정 범위를 지리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송하이탕<sup>13)</sup>은 동아시아 과학기술 교류사와 관련한 책에서, 동아시아는 아시아 동부의 중국(타이완 포함), 한국과 북한이 있는 한반도, 일본 열도와 러시아의 연해주인 극동지역의 일부분인 '5개 국가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5개 국가와 지역'이라는 표현은 타이완이 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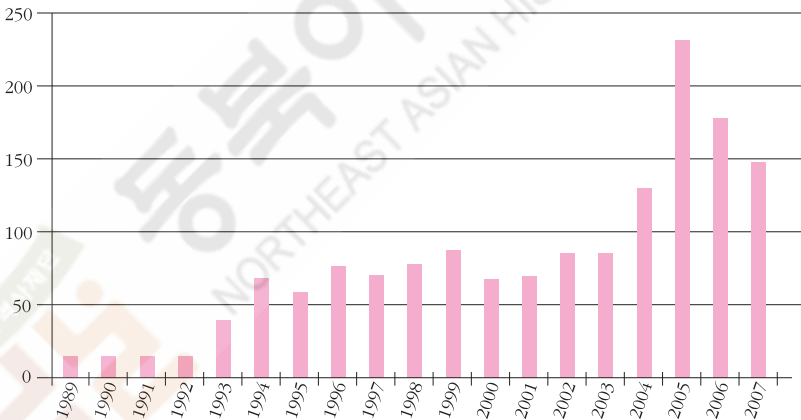


그림 1\_ 중국 학술지에서의 '동아시아(동아)' 관련 논문수(1990~2007)

※ 출처: 期刊網(www.cnki.net). 기간망의 학술지 영역 중에서 '정치군사와 법률'과 관련된 중국의 각종 정기간행물(학술지 포함)만 선택한 후 '동아시아(東亞)'를 키워드로 검색한 논문수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13) 熊海堂(1995), 『東亞產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입장에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적 실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하면서 ‘지역’이라는 단어로 타이완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관스제<sup>14)</sup>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국(타이완과 홍콩 포함), 일본, 한국, 북한과 싱가포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뤼롱취<sup>15)</sup>는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연안 지대로서 아시아 대륙의 동부 대륙, 반도와 섬을 포함하는데, 중국(타이완, 홍콩 포함), 일본, 한국, 북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5개국이 이 지역에 포함되며, 문화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한자 문화 영향을 받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1998년에 발표한 동아시아 모델을 분석한 논문의 경우 몇몇은 동아시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있다. 이페이창<sup>16)</sup>은 동아시아는 지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아시아의 동부와 태평양 서부의 대륙과 해양 섬으로서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등의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ASEAN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청지밍<sup>17)</sup>은 동아시아는 주로 일본과 아시아 네 마리 용 그리고 ASEAN 4개국(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 9개 국가와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중국학계 내부의 논의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동아시아는 동북아 3개국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또는 전체 ASEAN 국가로 범위

14) 關世傑(1996), 「試論21世紀東亞發展中的文化問題」, 『國際政治研究』第2期.

15) 羅榮渠(1997), 『現代化新論繼篇：東亞與中國的現代化進程』,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6) 易培強(1998), 「關於“東亞模式”的思考」,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第4期.

17) 程極明(1998), 「關於“東亞模式”的思考」, 『國外社會科學情況』第3期.

를 확대하여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북아시아의 국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 8개국, 5개국, 3개국인가에 대해 학자 간의 이견이 있다. 양구이옌<sup>18)</sup>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기준과 함께 경제적·문화적 유사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동아시아를 중국, 일본, 한국, 북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 8개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 러시아, 몽골을 동아시아 국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록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며, 러시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후 동아시아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편 몽골은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는 문화적으로 이슬람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미국이 몇몇 동아시아 국가와의 안보·전략적 동맹을 통해 안보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을 동아시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대다수의 중국학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동아시아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리적 범위를 넘어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 등이 포함되어 동아시아의 개념과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의 범위를 동북아시아 3개국인 한·중·일과 ASEAN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를 한·중·일 3개국으로 할 것인지 몽골과 북

---

18) 楊貴言(2002), 「東亞概念辨析」, 『當代亞太』第2期.

한을 포함한 5개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 2.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 변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 국내의 관련 논의와 정책은 개혁개방 전과 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교류와 협력이 대폭 확대되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된 인식과 정책변화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자외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외교수단으로서 다자주의의 선택적 수용 및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동시에 자국의 경제발전에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깨닫고 그 지역 국가와 우호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부터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개혁개방을 전후로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1949년 신중국 수립부터 1978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까지로 한다면, 이 시기 중국은 이데올로기를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장 우선시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신중국과 함께 중국을 스스로 아시아 국가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는 서방(西方)과 대립되는 동방(東方)에 속한, 즉 아시아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관점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자국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라는 정체성

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인민’, 더 나아가다면 제3세계 국가의 ‘인민’ 간 단결을 통해 ‘반패권주의’와 ‘제국주의 타도’라는 기존의 외교정책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동아시아 인식을 파악하려면 중국이 제창한 ‘중간지대론’이 갖는 의미와 그 속에 동아시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신중국 수립 직후, 중국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당시 외교정책은 소련 ‘일변도’ 정책이었고, 소련의 세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진영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이라 할 수 있는 중·소간의 이념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양대진영론에 반기를 들고 독자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중간지대(中間地帶)’에 속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반제국주의 투쟁의 지도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sup>19)</sup>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소련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되어 가면서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간주하고, 1968년 8월 20일 소련이 체코에 무력침공을 감행하자,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주중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소련은 수정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사회제국주의(社會帝國主義)’”라고 선언하면서 소련의 체코 침공은 “미제국주의의 베트남 침공과 동일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sup>20)</sup>

19) ‘중간지대론’이란 모순론과 반제통일전선론의 이론적 기초하에 중국이 제기한 것으로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비(非)사회주의 국가 전체를 ‘중간지대’로 보는 것이다.

20) 葉自成(2004), 『新中國外交思想：從毛澤東到鄧小平』,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28~131쪽.

이후 중국은 ‘중간지대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제3세계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마오쩌둥은 1974년 2월 22일 케네스 데이비드 카운다(Kenneth David Kaunda) 잠비아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과 소련을 제1세계 국가로 본다. 일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는 제2세계이다. 우리는 제3세계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제3세계이다. 모든 아프리카도 제3세계이며, 라틴아메리카 역시 제3세계”<sup>21)</sup>라는 ‘3개 세계론(三個世界論)’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중국지도부의 지역 구분은 단순히 지리적 인근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획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인식에 따른 지역범주 구분이다. 마오쩌둥 사후 집권한 덩샤오핑 역시 마오쩌둥의 전략적 인식을 따랐다. 이는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0년대 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개발도상국 국가”이며 “영원히 제3세계에 속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덩샤오핑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sup>22)</sup>

이렇듯 개혁개방이 천명되기 이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세계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에게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위한 물질적·이념적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 사이에서 지도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대외전략의 목표로 삼아 왔다.

## 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8년 이후 몇 년간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기본구도를 미·소 양 패권국가와 제3세계 국가 간의 대립으로 간주하였다. 1980년 4

21) 『人民日報』(1968, 8, 24).

22) 『人民日報』(1974, 4, 11).

월 12일 덩샤오핑은 “우리의 현재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오쩌둥 주석이 제정한 정책을 따르는 것이며 마오쩌둥 사상의 진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오쩌둥 주석이 제정한 제3세계 이론을 견지한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러나 점차 과거의 세계관이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라는 당면한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2년 제12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기존의 국제정세관인 ‘제3세계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중국 이후 지속해 오던 ‘국제적 통일전선 전략’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대신에 ‘특정 적을 상정하지 않는’ 평화공존 5항 원칙(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와 평화공존 5항 원칙)을 축으로 하는 ‘독립자주대외정책(獨立自主的對外政策)’을 천명하였다.<sup>24)</sup>

이러한 외교전략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환되기 시작한다. 1984년 5월 덩샤오핑은 “우리의 대외정책에 조정이 있었다. 우리는 과거 ‘일변도’ 정책과 반패권 통일전선 구축을 언급한 바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고 독립자주외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sup>25)</sup>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고 대외정책을 이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을 간주하게 되었다. 냉전적 전략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선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발전 과제 해결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지역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였다.

신중국 수립 이후 정치적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인식에서 서서히 벗어나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새

2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8), 『鄧小平思想年譜』,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4) 『人民日報』(1982. 9. 8).

2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8), 앞의 책, 318쪽.

로운 대외전략과 외교목표를 모색하면서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을 강조한다. 이미 1982년 제12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근본이익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외교정책의 노선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기반을 둘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sup>26)</sup> 과거 중국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을 통하여 중국 일국만이 아닌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을 강조하였지만, 개혁개방 이후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당시 중국이 직면한 국가이익인 경제발전과 현대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이 처한 지리적인 환경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주변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서방국가들의 봉쇄를 돌파하려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중국 대외정책의 축색였던 이념과 체제 대결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과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양자외교는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중국외교의 기본원칙이었고, 다자외교는 강대국의 대중국봉쇄라고 여기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종합국력이 상승하면서 자신의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수단으로 다자외교를 양자외교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강대국화의 수단으로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sup>27)</sup> 1999년 9월에서 2005년 5월까지 일

---

26) 『人民日報』(1982. 9. 8).

본, 미국, EU와 각각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한 후, 중국은 다자 외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 3. 중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정책

#### 1) 동아시아의 중요성 인식

오늘날 동아시아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과 투자 활동의 주무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 경제발전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7년도 중국의 무역총액 2조 1738억 달러 중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나라라 할 수 있는 일본, 아세안, 홍콩, 한국, 타이완과의 무역액이 9,202억 달러로 전체 무역액의 42.4%에 달하고 있다.

2006년도 중국 내 투자 국가를 살펴보면(표 1 참조),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비중이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의 대중국 직간접 투자를 포함한 투자액은 352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52.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중국은 전략적 목표인 ‘화평발전(和平發展)’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서 동아시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보여 준 중국의 대응으로 지역 내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이 중국 안팎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내 국

---

27) Mark Lanteigne(2005), *China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lternative Paths to Global Power*, N. Y :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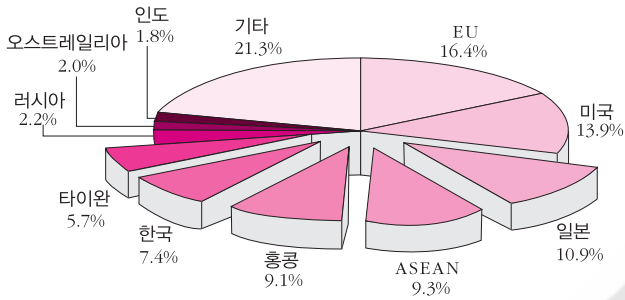


그림 2\_ 2007년도 중국의 주요 무역 국가

(표 1) 2006년도 대중국 투자 국가 순위 및 총액

(단위 : 만 달러)

국가(지역)	직접투자	기타투자	총액	비중(%)
홍콩	2,023,292	195,077	2,218,369	33.1
버진 제도	1,124,758	9,123	1,133,881	16.9
일본	459,806	11,907	471,713	7.0
한국	389,487	1,232	390,719	5.8
미국	286,509	1,071	287,580	4.3
싱가포르	226,046	35	226,081	3.4
타이완	213,583	674	214,257	3.2
케이만 제도	209,546	2,275	211,821	3.2
독일	197,871	151	198,022	3.0
사모아	153,754	-	153,754	2.3
기타	1,017,401	183,974	1,201,375	17.9
총계	6,302,053	405,519	6,707,572	100.0

※ 참고 : 『중국통계연감』, 2007.

가의 시장과 투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 범위가 아닌 중국 자신이 있는 지역 내로 국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sup>28)</sup>

28) 중국이 지역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楚樹龍(1999), 「中國的國家利益, 國家力量和國家戰略」, 『戰略與管理』 第4期; 唐世平(2001), 「再論

1998년 당시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정상회의(9+3)<sup>29)</sup>의 연설에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줄곧 동아시아 협력을 강조”해 왔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심지어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중국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국가와 민족의 진흥을 실현하는 것은 아시아 각 국가 인민들의 공통적인 바람이고 목표이다. 협력만이 아시아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아시아가 진정한 부상과 진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0)</sup> 이렇듯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통해 패권적 지위를 향해 나가고 있다.

## 2) 중국의 양자·다자 외교

양자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2002년 열린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이웃과의 선린과 동반자(興隣爲善, 以隣爲伴)’라는 8자의 방침을 제시하고, 나아가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방식, 즉 ‘이웃

中國的大戰略, 『戰略與管理』 第4期 참조. Sutter는 중국이 지역 내 우의를 차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지역 내 국가 간에 존재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의구심, 둘째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가 헤징(hedging)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아시아 내 미국 주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Robert Sutter(2006), “Why Rising China Can’t Dominate Asia,” *PacNet*, No. 45].

29)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가입하면서 ASEAN의 회원국은 10개국이 되었다.

30) 溫家寶(2004), 「加強合作, 互惠共贏」, 溫家寶總理在第八次東盟與中日韓領導人會議上的講話,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4/3020472.html>.

과 우호관계 강화, 지역협력 강화(加強睦鄰友好, 加強地域合作)’를 강조한 바 있다.<sup>31)</sup>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비전통 안보위협인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중국은 국제적인 대테러전쟁에 건설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변지역 국가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점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의 불안정한 도전자로 인식되어 온 중국이 오늘날에는 주변 국가에 의해 보다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을 현실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주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sup>32)</sup> 중국이 2020년까지 ‘샤오강(小康) 사회의 전면적 실현’이라는 국가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을 패권경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냉전해체 이후 점차 개선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戰略協作夥伴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중 간의 관계는 비록 고구려 등 고대사와 관련한 역사인식상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만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 발전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를 선언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政冷經熱)”로 표현되는 중일 간의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다소 악화되었지만, 아베 신

31) 中共中央文獻研究室(1994), 『毛澤東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690쪽.

32) David Shambaugh(2004), “China Engages Asia :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9(3), pp. 63~87.

조[安倍晋三]가 총리로 집권하면서 정치적인 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중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비난을 가급적 자제하였고, 오히려 원자바오는 2007년 4월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내외를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하면서 양국 관계의 화해 무드는 지속되어 갔다.<sup>33)</sup>

한편, UN과 같은 국제적 조직에만 관심을 두던 중국이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점차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 내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1997년 제15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선린우호와 “UN 등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자외교에서 소원하였던 것에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2002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이웃과의 선린과 동반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다자외교에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역협력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동아시아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2007년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이웃과의 선린과 동반자의 주변외교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와 구체적 사업의 협력(務實合作)을 강화하면서, 지역협력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있어<sup>34)</sup> 향후 적극적 다자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中國青年報』(2007. 4. 13).

34) 『人民日報』(1997. 9. 22 ; 2002. 11. 18 ; 2007. 10. 25).

### 3)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이웃과의 선린과 동반자’의 기초하에 2000년 ASEAN과의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다자 간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개최된 보아오 포럼의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 국가와 함께 지역안보 영역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안보제도 형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중국은 각 국가와 함께 안보대화 기제를 설립하고, 군사 영역에서의 신뢰협력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sup>35)</sup>

2005년 12월에 중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5월 일본 방문 중 후진타오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과 그의 역내 각 국가와 함께 “동아시아 협력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자적 지역협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sup>36)</sup>

첫째, 1997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이다. 중국은 금융위기 발생 당시 지역 외 선진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를 적극

3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篇(2002), 『中共十三屆四中全會以來歷次全國代表大會中央全會重要文獻選編』,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人民日報』(2004. 4. 24).

36) 蘇浩(2006), 「東亞開放地區主義的演進與中國的作用」,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46~47쪽.

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하거나 심지어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내외부의 인식이 있었다.<sup>37)</sup> 중국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2001년의 '9·11테러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는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공동위협을 인식하게 되었고,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이 촉진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응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다자외교와 더불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초보적인 모색을 병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중국이 정치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취한 다자외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1997년 3월 중국은 필리핀과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아세안지역포럼 제3차 신뢰조치 보충 소그룹 회의라는 지역안보문제와 관련된 정부 측 다자국제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다양한 지역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7년 12월 중국은 ASEAN+3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한·중·일 간 '21세기를 향한 협력선언'에 서명하였고, 이후 '10+3'과 3개의 '10+1' 기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아세안 정상과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건설을 선언하였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해 각방 행위 선언(南海各方行為宣言)」에 서명하였고, 2003년에는 '동남아시아 우호조약'에 다른 어떤

37) 曹雲華(2005), 「論東亞一體化的動力與源泉」, 『當代亞太』第8期, 17쪽.

역외 국가보다 먼저 가입하여 ASEAN과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대시켰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ASEAN 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5월 ‘ASEAN+3’ 제2차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역 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스왑체계 수립을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 淸邁倡議)’에 서명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문가 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1년 11월 제5차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제안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중국·ASEAN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2010년까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5년에 체결하기로 하는 등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본격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중국·ASEAN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화물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7월부터 중국과 ASEAN은 ‘화물무역협정’을 시행하여 2006년 7월 화물무역에 대한 전면적인 세금인하 조치를 취하였고, 2007년 1월 양측은 ‘FTA 서비스 무역협정’에 서명하여 경제와 무역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역내 국가와의 금융협력에 적극적인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와 155억 달러 통화스왑 협정에 서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 간의 FTA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오고 있다. 2002년 11월 제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민간연구기관 간의 FTA 공동연구를 제안하면서 FTA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이후, 2005년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3국 간 FTA 가능성 검토를 위한 공식연구그룹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표 2〉 중국과 ASEAN+3 국가 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국	체결 일시 (년/월/일)	통화스왑 금액(US \$)	비고
중국 → 타이	2001/12/6	20억	-
중국 ↔ 일본	2002/3/28	30억	-
중국 ↔ 한국	2002/6/24	20억	-
	2005/5/27	40억으로 상향 조정	-
중국 → 말레이시아	2002/10/9	15억	-
중국 → 필리핀	2003/8/31	10억	-
중국 → 인도네시아	2003/12/30	10억	-
	2005/10/17	20억으로 상향 조정	-
	2006/10/17	40억으로 상향 조정	통화스왑 수정본(修訂稿) 체결

※ 참고 : 김진영(2007),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4호.

또한 2001년 중앙아시아 국가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SCO)를 새롭게 건설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였고, 중국은 해당 기구의 사무처를 자국 수도인 베이징에 설치하는 등 기구운영에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sup>38)</sup>

게다가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관련한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 NEAT)’를 운영 중이다. 2002년 11월 개최된 10+3 정상 비공식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의 기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 연구 소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과시켰는데,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 내용 중 하나인 NEAT 구축 사업을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인도하였고, 2003년 9월 제1차 NEAT 대회를 베이징에서 개

38) David Shambaugh(2004) ; Evans S, Medeiros and Taylor M. Fravel(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82(6).

최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정책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그리고 지식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건설 활동에 나서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sup>39)</sup> 첫째, 다자외교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국내적 안정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초국가적 위협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주의 운동 분쇄 노력에 SCO가 보여 준 역할,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6자회담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가 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적극적인 다자외교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대외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다자외교는 중국에게 잠재적인 적대 국가를 억제시키며, 국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SCO로 인해 NATO가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중국의 주변 지역은 잠재적인 비우호적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4. 중국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공동체

중국이 어떤 의도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함의와 문제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

---

39) Yong Deng(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4~238.

아공동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 핵심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며, 중국은 자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성공적 수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에 있어 동아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주변지역인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비해 그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는 다른 지역 국가에 비해 발전된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 타이완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대중국 견제세력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요 학자들은 공동체 형성은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 자국의 역량을 투사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 국가가 중국에 대해 갖는 의구심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sup>40)</sup> 예를 들어 연쉐통 [閻學通] 같은 학자는 오늘날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지역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이며, 일본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는 결국 중국의 경쟁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스스로 지역 내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자국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가능성과 그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40) Mark Leonard(2008), *What Does China Think?*, N. Y. : Publicaffairs, pp. 102~104.

## 1)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과정에서의 주도세력 관련 중국의 입장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는 지역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닌 일종의 협상, 협조를 통하여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이념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편으로 양자관계를 중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관계를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점진적인 제도화를 이루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견해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기보다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경제공동체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 진행해야 할 형태는 동아시아 지역의 FTA 체결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다양성, 지역 내 경제협력의 증가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제기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국가 간 FTA 체결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데 기반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대해 중국은 10+3을 동아시아 협력의 기본구조로 하여 경제협력을 우선하고 정치와 안보 협력 영역으로 점진적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sup>41)</sup> 경제협력은 금융, 과학기술, 정보, 환경보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영역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외환위기 재발방지 등 위기요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꾀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ASEAN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그 중심이며 추동력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 역외 국가인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여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sup>42)</sup> 이

41) 朱鎔基(2001, 11, 5), 「加強東亞合作, 促進共同發展」, 朱鎔基總理在第五次東盟與中日韓領導人會議上的講話.

42) 劉少華(2007a), 「東亞區域合作的路徑選擇」, 『國際問題研究』第5期, 39~45쪽; 王聯

런 점에서 중국은 ‘ASEAN+3’의 세력을 주축으로 한 공동체 건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관련 국가와 지역 외부의 행위자가 지역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자바오는 중국·ASEAN 대화 관계 건설 15주년 기념 정상 회의에서 “ASEAN이 동아시아 협력에서 핵심 지위를 갖고 ASEAN+3이 협력 과정에서 주요 채널 역할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sup>43)</sup> 전 외교부 부장 왕이[王毅] 역시 “ASEAN은 오늘날 동아시아 협력에서 주요한 추동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ASEAN은 ‘10+3’ 회의의 조정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협력의 특징이며 각 국가이익이 부합하는 원만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ASEAN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sup>44)</sup>

이처럼, 중국이 역내 국가만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첫째, 경제적 이유로 주변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중국으로의 투자와 주변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둘째, 전략적 이유로 지역 국가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극화를 실현하여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고 역내에서 힘의 균형을 취한다는 고려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은 가능한가? 중국은 ‘10+3’을 기초로 한다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이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sup>45)</sup> 첫째,

합(2006), 「東亞共同體：構想、機遇、挑戰」, 『世界經濟與政治論壇』第2期, 77쪽.  
 4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00), 『十五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人民出版社, 743쪽.  
 44) 王毅(2004), 앞의 글.  
 45) 劉少華(2007b), 「論東盟在東亞區域合作中的領導能力」, 『當代亞太』第9期, 55~56쪽.

ASEAN 국가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라는 점이며, 둘째, '10+3'을 기초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은 동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10+3'을 기초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때문이다. '10+3' 협력 기제 내에 해당 국가 간의 이견과 모순이 존재하긴 하지만, 동아시아정상회의와 같이 확대된 범위의 국가와의 내부 이견을 해결하는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학계 내에서 ASEAN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근거는 ASEAN 구성원 국가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고, 정치안보적 영역에서 동아시아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 협력을 이끄는 것이 가능한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sup>46)</sup>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각 구성원의 경제발전 수준 간의 차이는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에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협력을 중국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정부 스스로 동아시아 협력 과정에서 지도국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입장 표명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중국위협론'의 우려와 부상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품고 있는 경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 역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주변 국가들이 아직도 경계심을 가지고

46) 李恆(2005), 「東亞區域合作：雙邊自由貿易協定還是區域經濟一體化?」, 『當代亞太』第1期, 20~26쪽.

47) 李榮林(2005), 「中國-東盟自由貿易區與東亞區域經濟一體化」, 『當代亞太』第8期, 19~23쪽.

있기 때문에 양 국가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ASEAN이 동아시아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8)</sup>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기본구상은 일본 등이 주장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기초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sup>49)</sup> 중·일 양국의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2005년 12월 12일 처음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공동체 이슈가 안전으로 채택되지 않았다.<sup>50)</sup> 여기에서 채택된 「쿠알라룸푸르 선언문」에는 비록 ‘ASEAN+3’ 협력체제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중심축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여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건설 주장과 의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기초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sup>51)</sup>

## 2)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목표

중국은 ASEAN+3, ASEAN+1, 6자회담과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다자안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화적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를 배제하고, 그 회원국을 역내 국가로만 제한하려는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이를

48) 鄭先武(2007), 「東亞共同體願景的虛幻性析論」, 『現代國際關係』 第4期, 59쪽.

49) 張蘊嶺(2008), 「對東亞合作發展的再認識」, 『當代亞太』 第1期, 16쪽; 劉少華(2007a), 앞의 글, 55쪽.

50) 『中國新聞網』(2005, 12, 12).

51) 劉少華(2007b), 앞의 글, 56쪽.

반증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관련국 사이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모델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중국은 이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주도적 역량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망하에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개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협력 과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 또는 억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의 국가에 참가요청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잠재적 주도 역량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역 외 국가가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불만의 표현하였다.<sup>52)</sup>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공동체를 추진하는 제도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ASEAN+3’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안보정치, 문화영역에서 협력을 실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53)</sup>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활동 초기에 중국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동아시아공동체 개념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ASEAN+3 정부 문건 등 다양한 곳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질적 의도는 동아시아에서 기능적 차원의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예상된다.<sup>54)</sup>

52) 강택구(2007), 「탈냉전기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제3호, 77쪽.

53) 張蘊嶺(2008), 앞의 글, 16쪽.

54) 張蘊嶺(2008), 앞의 글, 13쪽.

### 3)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원 원칙

구성원 문제에서 중국은 비폐쇄성, 개방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개방적 태도란 “동아시아공동체가 모든 역외 국가와의 동등한 수준과 같은 방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이들 역외 국가 중 몇몇은 지역협력 과정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관련 국가가 되거나 나아가 회원국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몇몇 다른 국가는 동아시아공동체 발전 과정에서 다자적 기제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동아시아공동체와 대화와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라고 보고 있으며 경제적 관계와 안보동맹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광범위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 현실적 이익과 전통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장쩌민이 ‘주변안보문제 좌담회’에서 “미국은 서반구에 있어 비록 우리의 이웃국가는 아니지만, 중국 주변 안보환경에 미치는 관건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중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양자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역할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56)</sup>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국이 원하느냐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이다.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첫 번째 회의 개최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 준 입장처럼, 중국은 초기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동아시아

55) 王聯合(2006), 앞의 글, 77쪽.

56) 江澤民(2006), 앞의 책, 318쪽.

아 지역의 주도권을 중국이 확보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구성원 국가의 확대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시도에 반발해 왔다. 미국의 참여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은 동아시아에 중요한 이익과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서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 현실”이고 “만약 동아시아 협력에서 미국의 이익을 배제하면, 반드시 미국의 반대와 저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역협력의 일반적인 규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sup>57)</sup>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참여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외교적 수사로 종종 등장하는 ‘전폭적 지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은 완곡하게나마 미국의 동아시아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미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sup>58)</sup> 즉 동아시아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고무시켜야 하며, 자연재해, 환경, 유행성 질병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기능적인 협력을 통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동아시아공동체 제도화 문제

제도화 수준과 관련하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동의하지만, 이를 제도화 수준이 높은 지역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부정적이

---

57) 王毅(2004), 앞의 글.

58) 秦亞青(2005), 「東亞共同體建設進程與美國作用」, 『外交評論』第6期, 28쪽.

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안보이익의 큰 편차, 경제발전의 격차, 빈부차이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정치제도, 문화배경 등의 차이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의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수준은 중국 국가이익과 국가 발전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지역 내 공동체 건설에서 제도화 수준의 진전을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행함(先易後難)’과 ‘점진적인 진전(循序漸進)’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상은 일종의 조화적 질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 정책은 ‘융통적’이다.<sup>59)</sup> 그 이유로는 첫째, 동아시아 협력의 기제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가둠으로써 다른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 대한 이익이 중국 경제발전과 ‘화평발전’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이 14개 국가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이외의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의 국가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은 난샤(南沙) 군도 문제, 중·일 간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싼 해양주권과 관련된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 내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SCO의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역조직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장더광(張德廣)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하는 SCO 사무처를 중국은 자국의 수도 베이징에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과의 양자

59) 龐中英(2001), 「中國的亞洲戰略：靈活的多邊主義」, 『世界經濟與政治』第10期.

〈표 3〉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발전 방향과 내용	동아시아 지역의 FTA 건설을 통한 경제공동체 우선 창설
주요 협력세력	ASEAN 10개국과 동북아시아 3개국(한·중·일)
협력목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평화적 부상
구성원원칙	비폐쇄성, 개방성의 원칙,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 배제 선호
제도화 수준	선이후난(先易後難)과 점진적인 진전의 방식

적 외교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약소국으로서 중국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는 중국과 전 지구적 또는 지역적으로 전략적 모순관계를 노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역 내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오늘날 중국의 정책을 종합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60)</sup>

### III. 일본

#### 1.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범위

전후 일본의 정부, 학계 등에서 사용한 ‘동아시아’ 개념의 범위를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북아시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한

60) 전략적 모순관계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중일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강택구(2008), 「동아시아 지역 내 강대국 간 경쟁과 세력전이 : 21세기 중국의 대일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2호, 7~31쪽 참조.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그리고 여기에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등이다.

일본에서는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며,<sup>61)</sup> 일본에서도 동북아 3국 중심의 동아시아 개념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sup>62)</sup> 과거 한국에서 동아시아가 동북아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러한 용어는 보편화되지 못하였다.<sup>63)</sup>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친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가 보편화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그룹(이하 EAEG)’ 제안이었다. 1989년 설립된 APEC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개념에 입각한 것인 데 대해서, EAEG는 이 ‘백인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념이었다. 이후 ‘ASEAN+3’이 제도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범위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보편화되었다.<sup>64)</sup>

61) 大庭三枝(2004), 『アジア太平洋地域形成への道程：境界國家日豪のアイデンティティ模索と地域主義』, 京都：ミネルヴァ書房.

62) 森嶋通夫(2001), 『日本にできることは何か—東アジア共同体を提案する』, 東京：岩波書店.

63)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22.

64) 山景進(2003),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ASEANパートナーシップ」, 山景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渡邊利夫(2004), 『東アジア市場統合への道』, 東京：勁草書房; 大庭三枝(2001), 「地域主義と日本の選択」, 末廣昭·山景進 編, 『アジア政治經濟論：アジアの中の日本を目指して』, 東京：NTT出版; 高荳健(2001), 「ASEANの擴大大國關係：地域秩序へのイニシアチブと限界」, 山

21세기 들어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ASEAN+3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지역 개념에 근거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2002년 1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행한 정책연설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였는데,<sup>65)</sup> 그 중심국가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포함되었고,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인도가 참가하였다. 일본은 ASEM의 아시아 측 대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참가를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동아시아의 범위를 이른바 구(舊) 서방진영의 선진국인 오세아니아의 두 국가로 확대한 것은 문화, 인종 등 아시아적 공통요소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범세계적 가치체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화라는 기준에서 뒤져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sup>66)</sup>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범위의 특징으로서 이른바 ‘광역동아시아’로의 구성국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친 지역 범위로서의 동아시아가 보편화되어 왔으며, 21세기 들어 이른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국가의 일부를 포함하는 확대된 동아시아 지역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影進 編, 『轉換期のASEAN: 新たな課題への挑戦』,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菊池務(2001, 5), 「東アジア地域主義の可能性: ASEAN+(日中韓)の経緯と展望」, 『國際問題』 494.

65) 小泉純一郎(2002), 「共に歩み共に進むコミュニティ」(シンガポール演説).

66) 김기석(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32쪽; 배금찬(2005a),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 분석: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편, 『주요국제문제분석』; 손열 외(2006),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 2. 일본의 지역 인식 변화 과정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지역 개념이 포함하는 공간을 근대 이후 일본이 스스로를 어떤 지역공간에 귀속시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구성주의적 시각의 연구성과 및 새로운 언설(言說)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역 정체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가행위를 국익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으로 간주하는 현실주의 이론은 정체성, 사상, 역사적 경험 등이 물질적 요인(경제력·군사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의 행동규범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정체성 문제도 파워로 환원하여 이해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시대에 따라 국익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지역인식과 관련된 국가행위를 국익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기보다는, 정체성의 표출로 파악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sup>68)</sup> 즉, 지역은 “유동적인 것으로 물리적·정신적 행동 면에서의 역사적 궤적의 복잡한 혼합물이며, 쉽없이 변화하며 재정의되는 것”, 즉 속성과 관계성이 지역을 창조한다.<sup>69)</sup>

67) S. Peou(2002), “Regional community building for global security governance,” V. Rittberger ed.,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21st Century*, Tokyo :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68) 大庭三枝(2004), 앞의 책.

69) T. J. Pempel(2005).

## 1) 전전의 ‘대동아공영권’

전전(戰前)에 일본이 제창한 대동아공영권은 영미의 헤게모니 블록, 이탈리아의 후발 자본주의 블록, 소련과 중국공산당과 같은 공산주의 블록 등 당시 블록경제의 강화라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급조된 것이었다.<sup>70)</sup>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유럽에서의 독일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제국주의는 1940년 8월을 전후하여 대동아공영권 개념을 급조하였다. 1940년 7월에 고노에(近衛文麿)내각이 결정한 「기본국책요강(基本國策要綱)」과 관련하여 9월 1일 마쓰오카(松岡洋右) 외상의 담화에서 언급된 이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공식문서로는 1941년 1월 31일의 「대프랑스령 인도지나·타이 시책요강(對仏印·泰施策要綱)」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동아공영권의 요체는 일본을 맹주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에 걸친 경제권, 즉 ‘공존공영’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만주국에 대해서는 ‘일만일체’, 일중전쟁기에는 ‘동아신질서’를 주장한 반면, 서구열강 지배하의 동남아시아로 ‘남진’하기 위해서 식민지해방의 슬로건이 포함되었다. 대동아공영권 개념에는 메이지유신기의 대외팽창주의, 자유민권론적인 대외이념, 제국주의적 팽창야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아시아연대론과 아시아침략론, ‘대동합방론’, 아시아·먼로주의, 동아협동체론, 동아연맹론 등), 체계화된 이념이나 이론체계를 찾는 것은 곤란하다.<sup>71)</sup> 다만 대동아공영권의 공간 범위는 일본·만주국·중화민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상정하고, 동남아시아를 자원 공급 지역으로 그리고 남태평양을 국방권으로 하였으며, ‘일본의 생존권’으로 ‘대동아’가 선전되었다. 단, ‘대동아’의 범위, ‘공영’의 의미는 제창된 당시에는 명확

70) 김경일(2005), 「대동아공영권의 이념과 아시아의 정체성」,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71) 榮澤幸二(1995), 『‘大東亞共榮圈’の思想』, 東京 : 講談社.

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1941년 일본이 미·영에 선전포고를 하여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대외적인 목표로 내걸고 ‘대동아전쟁’을 미화·정당화하였다.

이렇듯 대동아공영권에 포함된 ‘아시아주의’적 발상은 일본제국주의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며, 전후 일본 대외정책에 깊은 ‘외상’을 남겼는데, 아시아를 구미 열강 식민지배로부터 해방, 독립시켜 대등한 국가연합을 실현한다는 이상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국을 침략하고, 구미 열강의 식민지배하의 동남아 지역 국가에 실질적인 ‘독립’을 주지 못한 채 끝났다.

일본 점령하에서는 일본어의 황민화교육이나 황궁요배(皇宮要拜) 강요, 인적·물적 수탈을 자행한 바, 일본도 종래의 구미 중주국과 같은 침략자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동아공영권 제국은 대부분 소멸하였고, 동남아에는 구중주국에 의한 식민지배가 다시 도래하게 되었다.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기억은 전후 일본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하여 아시아 국가를 정치적으로 결집하려고 하면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이라고 아우를 받게 되는 부(負)의 유산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냉전체제로의 편입

패전 후 점령정책하에서 일본 외교의 최대관심은 유리한 조건하의 조속한 주권회복에 있었으며, 점령통치의 직접 군정으로의 이행 방지, 천황제의 유지를 비롯한 관대한 개혁정책 유도,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 및 조속한 강화조약 체결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강화조약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과 패전국의 주권회복을 의미하는 만큼, 당초 일본정부는 조기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전쟁 배상의 규모, 안전보장의 확보, 미군기지, 오키나와(沖縄), 오가사와라(小笠原) 및 북방 4개 도서의 주권회복 등의 문제에 대한 연합국 측과 일본 측의 입장 조

율은 장기화되었다.

연합국의 점령통치는 한편으로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좌파세력의 부활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逆)코스’을 거치면서 보수정치가들을 정치 일선으로 재등장시켰다. 이들 혁신파 보수 세력은 패전 후 일본이 추구해야 할 노선으로 서로 다른 국가상을 제시하였고, 당시 주요 정치쟁점이었던 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 및 재군비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다. 공산당과 사회당 계열의 좌파 정치가들은 ‘평화주의’와 ‘비무장중립’의 입장에서 미·일 안보협력과 재무장에 반대하였다(이른바 사회민주주의 노선).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같은 보수정치가들은 국력, 자립, 주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였으며(전통적 국가주의 노선), 독자적인 군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편무(片務)적인 안보조약 체결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주장하였다.

한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를 중심으로 한 관료출신 정치가들은 패전국 일본의 활로를 산업과 무역을 통한 경제부흥에서 찾고자 하였는데,<sup>72)</sup> 요시다는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위력이 없는 일본의 안전을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통해 확보하려는 좌파의 주장이나 피폐한 경제사정을 무시한 채 재무장을 추진하려는 우파의 주장을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헌법 9조의 비무장원칙을 유지한 채, 일본을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독립과 안전 보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진입함으로써 자국의 군비지출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한다는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

72) 五百旗頭 編(2006), 『真戰後日本外交史』(新版), 東京: 有斐閣, 283~284쪽.

1948년 총리 겸 외상으로 복귀한 요시다는 강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주도하여 미일안보조약 체결을 이끌어 내, 일본은 미국 주도 동아시아 냉전체제에 편입하고 주권을 회복하였다. 요시다는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연합국과의 일괄적인 강화(이른바 전면강화)를 포기하고, 자유진영 국가와의 강화(다수강화 혹은 단독 강화)를 우선시하였고 이에 대해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강화조약 교섭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배상조건을 완화하고 경제부흥을 지원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재군비를 요구하였던 반면 일본은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기지의 존속 및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면서도 재군비에는 반대하였다. 결국 양국은 강화 후의 점진적인 방위력 증강이라는 선에서 타협하고 1951년 9월 소련과 중국이 서명에 불참한 가운데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이듬해 4월 그 발효와 함께 일본의 주권은 회복되었다. 요시다 총리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수락연설에서 “최근 불행하게도 공산주의적 압박과 전제를 수반한 음험한 세력이 극동에 대해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 각처에 공공연한 침략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본국민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단적 침공에 대해 일본국민은 다른 자유국가에 집단적 보호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중국과의 사이에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다.

### 3) 경제재건과 ‘아시아’로의 복귀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배상과 경제협력을 수단으로 ‘아시아’로의 복귀를 모색하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지역통합 구상’이 있었다. 냉전의 발생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을 일본의 경제재건 및 국제사회로의 복귀에 중점을 두도록 변화시켰고, 그 일환으로 당시 트루먼 정권은 미국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율적인 지역체제의 구축을 아시아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일본의 공업력과 아시아 국가의 원료 및 시장을 결합하는 이른바 ‘지역적 경제통합안’을 검토하였다.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전후 배상을 기본적으로 ‘역무배상(役務賠償)’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일본은 전후 아시아 국가와의 배상교섭에서 자본재와 용역의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는 전후 일본의 대아시아 경제진출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1957년 기시 총리가 추진한 ‘동남아시아 개발기금 구상’은 동남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밝힌 것으로, 미국 원조의 ‘수용기관’을 마련해 일본의 경제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sup>73)</sup> 한편 일본은 1954년 콜롬보 플랜과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에 가맹하고 이듬해 반동회의에 참가해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였다. 1956년의 경제백서는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고 선언하여, 일본경제가 이미 전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은 부흥이 아니라 고도성장이 될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 이후 일본경제는 투자확대, 기술혁신, 소비증대에 의해 중화학공업, 설비·생산·경영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게 된다.

1957년의 『외교청서』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좁은 국토 안에 많은 인구가 사는 일본이 국민생활의 향상, 경제발전, 국력배양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력의 평화적 대외진출’, 즉 경제적 대외진출에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외교’야말로 일본외교가 당면한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외교는 ‘통상국

---

73) 保城廣至(2001), 「岸外交評價の再構築：東南アジア開發基金構想の提唱と挫折」, 『國際關係論研究』 17.

가’ 혹은 ‘무역입국’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위해 자유 무역체제의 유지와 더불어 천연자원, 자본 및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 외교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다. 전후 초기 일본이 구상한 경제전략의 핵심은 자국의 앞선 기술력을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선진국의 자본에 결합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요시다의 직계이자 이른바 보수본류(保守本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케다(池田勇人)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 ‘경제국가’의 원형이 완성되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함께 OECD 가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국 및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으로의 이행을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사회로의 경제적 복귀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일본은 이른바 ‘대국 의식’이 발아하였다.

1960년대 원조국으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은 1966년에 창설된 아시아개발은행에의 가입과 동남아시아 개발각료회의 개최였으며, 이들 기구는 이후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sup>74)</sup>

이러한 일본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 1966년 4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개발각료회의인데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의 각료급 대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대사급 옵서버가 참가한 동 회의에서 주최국 일본은 향후 동남아시아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소득 1%의 원조공여 목표의 조기 실현을 약속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당시 외무성의 의도에 따르면, 동 회의는 종래와 같은 미국 원조의 ‘인수기

74) 曹良鉉(2006), 「1977年福田赳夫首相東南アジア歴訪と日本の東南アジア政策形成：『福田ドクトリン』をめぐる通説の批判的検討」, 國際關係論研究會, 『國際關係論研究』 22號.

관'을 마련하여 일본의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상업 목적의 단시야적인 경제협력'의 지양이란, 바꿔 말하면 경제원조의 확대를 수단으로 한 대아시아 적극 외교의 제언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무성이 각료회의를 통해 얻고자 한 최대 목적은 정치적 동기에 있었다. 일본은 또한 아시아 개발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미국과 동일한 2억 달러를 출자함으로써 최대 출자국이 되었다.<sup>75)</sup>

일본의 아시아 복귀의 완결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은 1977년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인데, '후쿠다 독트린'은 일반적으로 1977년 8월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마닐라에서 행한 '우리나라(일본)의 동남아시아 정책'이란 제목의 연설 말미에 포함된 다음의 3항목을 가리킨다. '후쿠다 독트린'이 주목받은 것은 이것이 전후 최초의 일본의 외교 자세를 분명히 한 정책연설이기 때문이다. 외무성은 이를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밝힌 적극적 외교 자세로 자평하기도 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 공헌하고자 하는 일본의 정치적 의지가 최초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쿠다 총리는 마닐라 연설에서 "첫째, 우리나라(일본)는 평화에 철저히하여 군사대국은 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바, 이러한 입장에서 동남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나라와의 사이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정한 친구로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접하는 상호 신뢰 관계를 쌓아올린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등한 협력자'의 입장에서 ASEAN 및 그 가맹국의 연대와 강인성 강화의 자주적 노력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역외 제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인도차이나 제국과의 사이에는 상

---

75) 鄭滿娥(2002), 「1960年代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と日本の外交政策：アジア開発銀行(ADB)本店所在地決定過程を中心に」,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科, 『比較社會文化研究』 11.

호이해에 근거하는 관계의 양성을 도모하여, 이로써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치는 평화와 번영의 구축에 기여한다”라고 표명하였다.<sup>76)</sup>

#### 4) ‘태평양’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의 모색

1960년대에는 ‘태평양’이 지역협력 모색의 근거가 되는 지역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는데, 이를 근거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기구인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태평양경제위원회(PBEC) 및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가 설립되었다.<sup>77)</sup> 1963년 관료, 경제인으로 구성된 일본경제조사협회의의 보고서는 ‘태평양경제협력’에 대해 태평양 역내 선진 5개국(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간 협력을 우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EEC) 결성에 자극받은 코지마<sup>小島滿</sup> 교수는 1965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PAFTA)’ 구상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역내 선진 5개국 간의 자유 무역지대 설립과 정책협조,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1968년 태평양무역개발회의가 개최되고, 또한 이와 별도로 1967년에 경제인 모임인 태평양경제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두 회의는 주로 태평양 역내 선진 5개국이 참가자로 구성되었다. 1982년에는 관계, 재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차원의 태평양경제협력회의가 설립되어 지역협력을 위한 협의 및 조사 축적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을 지역 개념으로 하는 지역협력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바로 아시아태평양이사회(이하 ASPAC)에의 참가이다.<sup>78)</sup> 한국정부는 1964년

76) 外務省(1978), 「福田總理大臣のマニラにおけるスピーチ」, 326~330쪽.

77) 菊池努(1995), 『APEC: アジア太平洋新秩序の模索』,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大庭三枝(2004), 앞의 책.

78) 曹良鉉(2006), 앞의 글.

‘자유 진영 아시아제국의 결속’과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자유제국 외상회의’ 설립을 제창하는데, 이는 2년 후 ASPAC 설립으로 귀결되었다.<sup>79)</sup> 일본은 당초 한국과의 국교 미수교 상황과 ASPAC의 강력한 반공 지향성을 이유로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즉, 일본은 비록 자유진영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강력한 반공정책을 취하는 국가와는 달리 유연한 외교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상회의 참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한일회담 타결을 계기로 회의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일본정부의 참가 결정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상 회의 불참 명분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소극적인 이유 외에도 “본건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한 우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적극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참가조건으로 ASPAC의 반공동맹적 성격을 완화시켰고, 이후 ASPAC은 동남아시아개발각료회의, ADB와 더불어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의 주된 기제가 되었다.

1970년대 테탕트 시기가 되면 ASPAC은 자연 소멸하지만,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은 이후 일본의 정치지도자에 의해 자주 언급되었고, 이는 ‘태평양’ 지역 개념이 추구하는 서구 선진국과의 협조와 ‘아시아’ 지역 개념이 의도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역 개념으로 정착되었다.<sup>80)</sup>

---

79) 木宮正史(2001), 「一九六〇年代韓國における冷戦外交の三類型：日韓國交正常化, ベトナム派兵, ASPAC」, 小此木政夫·文正仁 編, 『國家·市場·國際體制』, 東京：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80년대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설립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간 협력체가 출현하는데, 일본은 ‘열린 지역주의’의 입장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그 설립에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였다.<sup>81)</sup> 1980년대 후반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난항과 유럽 및 아메리카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아시아에서도 지역적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무역자유화와 지역주의를 상호배타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구미의 지역주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아시아 국가와의 지역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즉, ‘열린 지역주의’라는 지역 정체성이 당시 일본외교의 목표가 되었다.

APEC 설립과 같은 시기에 마하티르 총리가 제창한 EAEG 구상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기구로서, 미국의 반대와 일본 등 역내 국가의 소극적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구상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지금의 ASEAN+3에 해당) 국가만의 기구로, 서구식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에 미국은 EAEG가 아시아태평양을 분단하여 백인국가에 대항하는 비백인 국가 연대를 결성하려는 ‘폐쇄된 지역주의’라고 반대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82)</sup>

하지만 EAEG 구상은 그후 APEC 내의 동아시아경제협력체(이하 EAEC) 설립으로 귀결되었고, 1994년 아세안외상회의에서 ASEAN 6개국과 한·중·일 3국 외상이 비공식모임을 가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태동에 일조하였다. 1996년 2월 아시아유럽회의(ASEM)에는 아시아 측에서 아세안 7개국과 한·

80) 大庭三枝(2004), 앞의 책.

81) 菊池努(1995), 앞의 책 ; 大庭三枝(2004), 앞의 책.

82) 田中明彦(2007), 『アジアのなかの日本 日本の〈現代〉2』, 東京 : NTT出版, 제8장.

중·일 3국이 참가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아시아 측 10개국은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EAEC가 상정한 ‘동아시아’ 차원의 최초 정상회담으로 평가된다.<sup>83)</sup> 당시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참가를 주장하였으나, ASEAN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는 성장을 계속하던 아시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그 피해의 중심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 후, IMF 등의 국제기관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기존의 APEC 역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일본 대장성은 당시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동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구상은 ASEAN과 한·중·일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ASEAN+3’이라는 협력틀이 제도화되어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대두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ASEAN+3’을 자국의 대아시아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의 관여확대로 귀결되었다. 1997년 12월 ASEAN 및 한·중·일 3국 정상은 통화위기에의 협조방안을 논의하였는데, 3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매년 ‘ASEAN+3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일본은 여기에서 아시아 통화위기 대응책을 발표하여 ‘ASEAN+3’이라는 협력틀이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의해 동아시아 차원의 통화스왑체제가 구축되었다.<sup>84)</sup>

83) 田中明彦(2003), 앞의 글; 毛里和子 外(2006), 앞의 책, 279~282쪽.

84) 大庭三枝(2003), 「通貨・金融協力とFTAに見る日本の東アジア地域形成戦略」, 山景進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ASEAN+3 외상회의, 동년 11월에는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금융통화 협력 외에, 한반도 정세, 인도차이나 정세, 동중국해 영유권,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종래에 EASEG 구상과 같은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던 일본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클린턴 정부의 태도 변화 외에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일본 내부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sup>85)</sup>

### 5) '광역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제창

21세기 들어서 일본정부가 제창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지역 범위는 기존의 ASEAN+3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하였고, 그 구상은 이른바 '광역 동아시아'를 지향하고 있다.

2002년 1월 동남아를 순방한 고이즈미 총리는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추진과 함께, 그 핵심구성원을 ASEAN, 한·중·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sup>86)</sup> 이는 종래의 동아시아의 개념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광역 동아시아' 내지는 '확대 동아시아'라 부를 수 있다.<sup>87)</sup> 이러한 개념의 확대에 따라 2003년 12월 일본은 ASEAN 정상을 초청하여 '일·ASEAN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포함한 '도쿄선언'을 채택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의 관여를 한층 분명히 하였으며, 이후 제59회 국제연합총회 일반토론 연설(2004), 제162 국회 시정방침 연설(2005)에서도 같은 의사를 표명하였다.

85) 大庭三枝(2001), 앞의 글.

86) 小泉純一郎(2002), 앞의 글.

87) 山景進(2003), 앞의 글, 6~7쪽.

한편 일본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서 경제연대협정(이하 EPA) 구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sup>88)</sup>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EPA 추진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는데, EPA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등 일본의 지역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후 일본정부는 2006년 5월과 6월에, 동아시아 EPA 구상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과 이른바 ‘동아시아 OECD’ 구상을 포함한 ‘경제성장전략대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EPA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며, 그 결과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방향성을 둘러싼 한·중·일 3국 간의 알력, 특히 일·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범위 및 협력의 진행방식에서 중국이 ASEAN+3과 FTA를 선호하는 데 반해, 일본은 ‘동아시아정상회의’와 EPA를 주장하였다.<sup>89)</sup> 특히 일·중 간의 주도권 경쟁은 ASEAN+3의 역할 확대, 즉 동북아시아 3국의 역할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6)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의 변화 특징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는, 먼저 일본의 지역 인식은 결국 자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인식은 아시아와의 관계설정 양식에 관한 것으로,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관여에서 양자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외

88) 박재욱(2006), 「일본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 전략과 시사점」, 『국제문제연구』 2006년 겨울호.

89) Gilbert Rozman, Kazuhiko Togo and Joseph Ferguson, eds.(2007), *Japanese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Strategic Thought in Northeast Asia)*,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pp. 257~267.

에, 스스로 귀속되어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단순히 복수의 국가 모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의식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고자 시도하는 정치적 지향성에 관계되는 것이고,<sup>90)</sup> 다음으로 전후 일본의 지역 인식에는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광역 동아시아’ 등 복수의 지역 개념이 추구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일찍 성공한 선진국’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태평양’으로의 경사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서구 선진국과의 협조(특히 대미 협조)’를 의식한 것이었다면,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를 추구한 의식 내면에는 ‘아시아와의 연대감’이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지역 개념은 정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진력에서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지역 인식은 부단히 변화하는 가운데 중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 인식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의 잠정결론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으로의 회귀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 정체성의 태생적인 특징인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선진국으로서도 혹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도 편안한 자기 귀속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를 시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에 의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즉 ‘광역 동아시아’의 제창은 ‘동아시아’, 즉 아시아에의 경사가 주는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

90) 大庭三枝(2004), 앞의 책.

‘광역 동아시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라는 오세아니아 국가가 포함되며, ‘태평양 국가’이기를 자청하는 미국의 참가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관여하는 지역주의는 어느 하나에 국한되기보다는 복수의 협력방안을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 즉 중층적 지역주의 구조가 될 개연성이 크다.<sup>91)</sup>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이 찬성하지 않는 한, 일본이 추구하는 광역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2중의 정체성을 정합적으로 추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며,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일본이 다시 ‘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지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동아시아로 경사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

#### 1) 지역전략으로서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태평양주의와 동아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동아시아주의가 길항하고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up>92)</sup> 과연 동아시아공동체론이 일본 외교정책론의 중심 범주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 앞 절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지역협력과 통합의 정책을 지역별로 나누

91) 菊池努(2005), 「東アジア共同體構想：背景と展望」, 黒柳米司 編, 『アジア地域秩序とASEANの挑戦』, 東京：明石書店, 208쪽 ; John Ravenhill(2002), pp. 167~195.

92) 山本吉宣(2007), 「地域統合理論と東アジア共同體」, 毛里和子 編,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1：新たな地域形成』, 東京：岩波書店, 315쪽.

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북아 3국을 범위로 한 지역전략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 간 협력 가운데 지리적 범위가 가장 작은 것 중 하나가 한·중·일 정상회담 혹은 한·중·일 각료회담 체제이다. 먼저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0년 이후 정례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경제장관, 재무장관 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각료급 회담도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가운데 관심을 가질 만한 회담은 2003년 10월 개최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3국은 안보, 무역, 투자,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재난, 관광, 문화, 국제범죄 등 14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보대화 강화 및 군사 분야 인사 교류, 무역 및 투자 협력, 황사·산성비·기후변화 등 환경보호 협력 강화, 폭풍·태풍·홍수·지진 등 재난예방 관리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금융안정 협력과 북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에 공동노력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7년 1월 세부, 동년 11월 싱가포르 등 ASEAN+3 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되거나, 2005년 이후 역사 및 영토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적이 있으나,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ASEAN+3과 분리되어 최초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후쿠오카 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가 ASEAN+3과 분리되어 일본의 동북아 국가에 대한 주요 회의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과 병행하

여 외교,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관련부서 각료회담 또한 3국 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3년 9월에 한·중·일 경제무역각료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3국 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05년 5월에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외상회담에서는 3국 간 에너지 협력, 문화협력을 긴밀히 하고 차관급 고위대화를 활성화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중·일 범위 내에서 일본은 정상회담에 적극 참가하고 있고, 경제 및 무역관계 각료뿐 아니라 외교, 환경, 과학기술 분야 각료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 (2)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지역전략

일본은 2003년 9월,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 고관의 비공식모임인 동북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가한 이래 6자회담의 멤버로 관련국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 체제에서 합의한 주요 공동선언, 즉 2005년 9·19공동선언, 2007년 2·13선언 등에 참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추진 등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과정과 병행하여 북일관계 정상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납치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등 경제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틀이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ASEAN에 대한 지역전략

동남아 국가는 1950년대를 통해 전후 배상이 종료된 이후 일본으로서는

가장 먼저 외교적 관계를 맺어 왔고, 경제적 관계도 심화해 온 지역이며, 다자 간 협력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동남아 국가가 1960년대 ASEAN을 결성한 이래 일본의 역대 총리도 ASEAN 외교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998년 12월, 오부치 총리는 일본+ASEAN 정상 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일본·ASEAN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1월,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2003년 12월 개최된 일본·ASEAN 특별 정상회담에서는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일본이 차관 15억 달러를 제공하고 타이·필리핀·말레이시아 3국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며, 3년간 연수생 및 유학생 4만 명 이상 수용 등을 제안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설치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sup>93)</sup>

그리고 후쿠다 총리는 2008년 5월, 국제교류회의 주최 세미나 연설에서 일본·ASEAN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협정(AJCEP)은 아세안 역내에 단일시장을 만드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실현이라는 아세안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아세안 현장 제정 이후 아세안 담당 대사를 설치하고, 아세안대표부를 설치할 것임을 공언하기도 하였다.<sup>94)</sup> 일본과 ASEAN 간에는 경제 및 외교각료 회담도 활발하게 개최되었는데, 2001년 9월에 개최된 ASEAN+일본 경제장관 회담에서는 일본과 ASEAN이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2006년 8월에 개최된 일본+ASEAN 경제상회의에서는 ASEAN+한·

93) 『동아일보』(2003. 12. 12).

94) 『日本經濟新聞』(2008. 5. 23).

중·일+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6개국에 의한 EPA 구상이 제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East Asia, ASEAN Economic Research Center : 이하 ERIA)의 설립이 제안된 바 있다. ERIA는 향후 동아시아판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개최된 일본+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EPA의 축이 되는 무역자유화에 합의하고 2007년 11월에 열린 일본+ASEAN 경제상회의에서는 경제협력협정 EPA 교섭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는 일본+메콩강 유역 5개국(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참가) 외상회의가 개최되어 이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 계획이 논의되기도 하였다.<sup>95)</sup>

이와 같이 일본은 ASEAN+3의 틀과 별도로 ASEAN과의 개별적인 정상회담 및 경제장관 회담을 해오면서 아세안이 추진하는 공동체 계획에 대한 지원을 밝히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 (4) ASEAN+3 혹은 ASEAN+3+3 전략

1997년 말, ASEAN+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ASEAN+3은 이후 제도화되어 정상회의, 관계 각료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sup>96)</sup> 특히 2004년 7월에 개최된 ASEAN+3 외상회의의 장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향한 협력관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명 발표를 계기로, 무역, 투자, 금융, 안전 보장 분야에서 ASEAN과 한·중·일이 통합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으며, 2004

95) 『朝日新聞』(2008. 1. 12).

96) 애초 1997년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일본과 아세안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세안 측이 일본만 아니라 중국, 한국을 포함한 정상회담 개최를 역제안하여 ASEAN+3이 태동하였다[山本吉宣(2007), 앞의 글, 320쪽].

년 5월에 개최된 ASEAN+3 재무상회의에서는 ASEAN+3 국가 간 2국 간 통화스왑협정을 다국 간 협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제안하여 통화위기 발발 시 최대 수백억 달러 상호교환하는 제도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2007년 1월에는 제10회 ASEAN+3 정상회담에서는 여성, 빈곤대책, 재해대책, 광업분야 등의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확대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1월에는 제11회 ASEAN+3 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제2의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ASEAN+3은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분야의 협력을 보면, ASEAN+3의 틀을 주축으로 해양안보를 위해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4월, 일본이 주도해 ASEAN+3+인도, 홍콩이 참가한 가운데 해적대책 국제회의와 「아시아 해적대책 챌린지 2000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지역포럼(이하 ARF)과 ASEAN+3 안보협력에서 저강도 분쟁대책과 경제안보 이슈를 제기하였고, ASEAN+3+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 16개국이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아시아 지역의 해상테러 및 해상방위협정 체결, 이에 따라 해적정보 공유센터를 싱가포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ASEAN+3의 협의체는 2005년 12월, ASEAN+3+3, 이른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현재까지 ASEAN+3, 혹은 ASEAN+3+3의 정상회담과 각료회담 체제는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지역적 범위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여타 지역과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이 레벨의 다자 간 협의체에서 취급된 주 의제는 통화유통, 해상테러 방지, 재해대책, 빈곤대책 등 공동이익에 관련된 분야이다.

### (5)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을 범위로 하는 APEC, ARF, ASEM 등 다자 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APEC은 1989년 발족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적 상호의존의 제도화 촉진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시작, 1991년에 중국, 홍콩, 타이완이 APEC에 가입하였고, 1993년 시애틀에서 열린 회의에서부터 APEC 정상회담이 개시되었다. 이후 1994년 APEC 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이 발표되어 2010년까지 선진국 간,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완전한 무역자유화 목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 일본의 아태지역전략은 2007년 9월,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서 기후변동, 에너지 안전보장 및 클린 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적 전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권 구상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하였다.<sup>97)</sup> 한편 ARF는 1994년에 발족되었는데, 아태 지역 내 안보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구로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처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98)</sup> 2000년, ARF에 북한이 최초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졌고, 2007년 8월 24번째 회원국으로 스리랑카가 가입하였다.

일본 『외교청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유럽 NATO와 같은 다국 간의 집단방위적 안전보장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고, 미국을 중핵으로 하는 양국 간 안전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양국 간 동맹 이외 다국 간 대화틀로 ARF를 적극 활용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sup>99)</sup> 한편 1996년, 아시

97) 『외교靑書』(2008), 54쪽.

98) 山本吉宣(2007), 앞의 글, 319쪽.

99) 『외교靑書』(2008), 118쪽.

아와 유럽 관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SEM은 정치, 경제, 문화사회 3분야에서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범위로 다음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는데, 1996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방위성이 주도가 되어 아시아태평양 당국자 포럼이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국가 등 20여 개국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연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한국 등 8개국과 지역이 참가하는 아시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관리를 공동으로 강화하는 체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APEC, ARF, ASEM 등은 ASEAN+3의 영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을 범위로 조직된 다자 간 협의체로서 공동체 결성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광역 지역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다자 간 협의체에 적극 참가하면서 이외 아시아태평양 방위당국자 포럼, 아시아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도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 (6) 일본의 글로벌 차원의 전략

일본은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 범위를 넘어 글로벌 레벨의 협의체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안보 및 경제적 역할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이 국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G5의 멤버로 일본은 이후 그 구성국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구성되고, 여기

에 러시아를 더해 구성된 G8 정상회담 체제가 출현하였을 때도 고정멤버로 참가하여 국제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3년 에비앙 G8 정상회의 및 2004년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다른 참가국과 공동으로 북핵 폐기를 촉구하였고, 2007년 독일 G8 정상회담 및 2008년 7월에 일본에서 주최한 G8 정상회담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주도하였다. 또한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2003년 이후 미국이 주창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이하 PSI)에도 주축 멤버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도쿄만 해상에서 PSI 훈련을 일본이 주최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0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만 해상에서 일본 주최로 PSI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밖에 일본은 일본+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 일본+중양아시아 5개국 외상회의, 일본+아프리카 국가 간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단, 이러한 글로벌 레벨의 협의체는 공동체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일본의 지역협력 현황

	한·중·일	6자회담	ASEAN+3+3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1990년대			1999년 이후 정상 회담	1989 APEC 1994 ARF 1996 ASEM	G7
2000~2004	2001년 정상회담	2003년 개시	재무상, 외상	아시아안보회의	G8 PSI
2005~현재	외교, 환경, 과학 기술 확대	2007. 2. 13 합의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와 같이 일본의 지역협력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베이징 6자회담, ASEAN+3+3,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범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에 의해 장기적인 전략으로 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것은 ASEAN+3 혹은 ASEAN+3+3 수준에서이다. 이외의 협의체는 공동체 결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경제, 안보 분야에 걸친 협력증진 혹은 일본의 대외적 영향력 확대를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중·일 간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ASEAN+3 혹은 ASEAN+3+3의 레벨에서 공동체 구축이 논의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만일 ASEAN+3의 차원에서 공동체 구축을 실현하려면 동북아시아, 즉 한·중·일 혹은 6자회담 참가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규범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 2) 일본의 분야별 동아시아 통합 정책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은 경제통합, 안보통합, 사회문화 통합, 과학기술·환경 통합의 4분야를 대상으로 한다.<sup>100)</sup> 이 기준에 비춰 이하에서는 경제통합, 정치·안보 통합, 사회문화 통합, 과학기술·환경 통합 분야로 나누어 일본의 정책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경제통합 추진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는 동아시아 공동의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2003년 7월 진행된 일본 『통상백서』는 일본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창설 구상을 제기하고 있는데,

---

100) 山本吉宣(2007), 앞의 글, 315쪽.

구체적인 과제로 아세안 전체 및 한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향후 중국, 타이완, 홍콩과도 FTA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6년 4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일본이 주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ASEAN,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과 경제협력협정 체결과 동아시아관 경제협력기구 창설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 창설 등을 구상하고 있다.<sup>101)</sup> 그 연장선에서 2007년 1월, 한·중·일+ASEAN+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필리핀 세부에서 경제각료회의를 갖고 EPA 검토 개시에 합의하고 일본이 제안한 ERIA 창설에도 합의하였다.<sup>102)</sup>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공동경제권 창설을 목적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경제협력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용통체제 구축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또 다른 외환위기에 대비하여 통화용통협정(스왑협정) 체결의 폭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통화스왑협정을 넘어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제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2006년 2월, 대장성 재무관을 지낸 구로다(黒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무역, 투자, 통화, 금융 방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유럽형 경제통합을 목표로 지향할 필요가 있고,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동

101) 경제산업성의 구상에 대해 일본정부 내의 외무성이나 농수성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02)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기후변동, 에너지 안전보장 및 클린 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이 채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권 구상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하였다[『外交青書』(2008), 54쪽].

아시아 통합의 진전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주요 7개국 재무상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동아시아판 창설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즉,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단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은 역내 여타 국가와 공동으로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통화용통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FTA, EP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FTA가 국가 간 관세와 투자규제를 철폐하는 시스템이라 한다면 EPA는 이에 더해 지적재산권 보호 등 공통 경제규칙을 정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EPA를 체결하고, 2006년에는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6년 8월에는 한·중·일+ASEAN+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EPA 체결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간 에너지 용통과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일본의 주요 정책이다. 2001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자원에너지청은 아시아판 국제에너지기구를 만들어 각국 간 에너지 용통체제 구축을 구상하고 아시아 국가에 에너지 비축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이래,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였다.<sup>103)</sup> 그 결과 참가정

103) 구체적인 내용은 ① 에너지 절약 추진 : 금후 5년간 1000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여 아시아-에너지 절약 센터 설치, ② 바이오 에너지 추진 : 금후 5년간 500명의 연수생 연수 실시, ③ 석탄 클린 사용 : 석탄액화지원센터 건설 등 ④ 에너지 빈곤의 해소 : 금후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관련 ODA 실시 등이었다.

상 간에 동아시아 에너지 안전보장에 관한 세부 선언이 채택되었다.<sup>104)</sup> 이와 같이 일본은 무역자유화, 통화스왑, 에너지 협력, 공동의 채권시장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2) 정치·안보 분야 통합

일본은 ARF와 같은 다자 간 협의체 진전을 통해 동아시아 다국 간 안전보장체제 구축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2년도 『방위백서』에도 동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달리 다국 간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ARF와 다국 간 안보대화 및 교류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3년도 『외교청서』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유럽 NATO와 같은 다국 간 집단안전보장 기구가 발달하지 못해, 일본으로서는 미일안보체제를 기축으로 하면서 ARF와 같은 다국 간 대화의 틀을 정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책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렇듯 일본은 ARF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유용하고 효율적인 조직발전에 적극 공헌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ARF와 같은 역내 다자 간 안보협력체 참가 이외에 WMD 수출관리, 역내 해적테러 대책 등의 특별한 목적을 지닌 안보레짐 결성을 주도한다거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한국 등과 함께 WMD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관리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외에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ISS) 주최의 아시아 안전보장회의 그리고 2002년부터 개시된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 ACD)에 적극 참가

---

104) 『通商白書』(2007), 235쪽.

하여 관계국 간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펼치는 한편, 2003년부터 개시된 베이징 6자회담에도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상 최초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의체로 창설된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틀로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라고 간주하고 있다.<sup>105)</sup>

경제분야와 비교한다면 일본은 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해적에 대한 대책이나 WMD 수출관리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 (3) 사회문화 분야 통합

지역공동체 형성에는 인식의 공유도 중요한 요소,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인식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본이 역점을 기울이는 분야는 역사공동연구 및 학생, 청년교류 사업 등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역사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역사공동연구는 2002년 1월, 한·일 양국 간 역사전문가로 구성된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기구는 양국 외교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양국의 역사학자 각각 10여 명 내외가 참가하여 2005년 5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기 팀이 3년간 활동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4월에는 한일역사공동연구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새롭게 교과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공동연구 성과를 양국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중국과도 역사공동연구를 착수하여, 2006년 12월에 중일역사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하반기에 중일역사공동연구 제1기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105) 船橋洋一(2007. 4. 16), 「日本·世界 : 6者, 日本はもっと關與を」, 『朝日新聞』, 6쪽.

예정이었으나, 중일 양국 연구진 간에 의견조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과발표가 연기되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학생 및 청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3월, 경제산업성은 아시아 각국 유학생 매년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판 ‘폴브라이트 장학금 제도’ 설립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07년부터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공동으로 아시아 유학생 2,000여 명에 대한 무상장학금 제도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7년 1월, 아베 총리는 제2회 EAS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350억 엔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6,000명 정도의 청소년을 일본에 초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후임인 후쿠다 총리도 2008년 5월, 국제교류회의 연설을 통해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6,000여 명의 청년을 선발, 일본에서 연수하는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계획하에 아시아태평양 대학 간 교류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후속작업으로 2008년 7월, ASEAN+한·중·일 대학 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계획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5년간 최대 5,000명을 교류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 간 인식공동체 형성을 학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대학원 대학의 설립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와세다 대학의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교수는 ‘동아시아학’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학생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공동의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아시아대학원 대학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언 속에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인식공동체의 형성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일본의 지식인, 학자, 정치세력 간에 공유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의 역사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 간 청소년 교류계획 및 유럽 에라스무스 계획을 모델로 한 동아시아 각국 간 대학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대학원 대학의 설립 구상도 이미 벵부 지역에 설치된 아시아태평양대학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 (4) 과학기술·환경 분야 통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중·일 3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은 눈에 띄게 발전해 왔다. 2002년 4월 개최된 한·중·일 제4회 환경상회의에서는 황사현상에 대응하는 공동협력태세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거나, 2005년 10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황사와 이상기온 등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007년 12월 개최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황사와 광학 스모그에 대해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통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1월, 제1회 한·중·일 과학기술협력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환경, 에너지, 방재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환경 이슈는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자 채널에서도 일본이 주도하여 아젠다를 설정해 나가고 있다. 2007년 11월, 제3회 EAS에서 후쿠다 총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 ① 저탄소, 순환형 사회의 구축, ② 다종다양한 자연과의 공생, ③ 장래를 위한 환경보전의 지적 인프라 만들기 등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등을 제안하여 이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sup>106)</sup>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2008년 10월에 개최된 EAS에 참석한 16개국 정상이 도시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 강화방안이 논의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환경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한·중·일 혹은 EAS 수준에서 전향적인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주도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5) 일본의 동아시아 통합 노력의 특징

경제, 정치안보,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일본이 취하는 공동체 정책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일본의 분야별 공동체 정책

	경제통합	정치·안보 분야	과학기술·환경	사회문화
90년대		ARF 개시		
2000 ~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비즈니스권</li> <li>• 동화스왑 협정</li> <li>• 아시아채권 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D 개시</li> <li>• 아시아안전보장회의 개시</li> <li>•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시</li> <li>• 해상테러 방지협정 체결</li> <li>• 베이징 6자회담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환경상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역사공동연구</li> </ul>
2005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제휴 협정</li> <li>• EPA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중 역사공동연구 개시</li> <li>• 아시아관 폴브라이트</li> <li>• 아시아관 에라스무스</li> <li>• 동아시아대학원대학 구상</li> </ul>

106) 일본이 제안한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저탄소, 순환경 사회의 구축 :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와 경제성장을 양립하려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자금 메커니즘에 따라 정책지원, 폐기물 적정처리 추진 등을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금후 5년간 500명 이상 연수원 수용, ②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자연과의 공생 : 일본 관측위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삼림자원관리 지원, 세계은행의 삼림탄소 파트너십 기금에 1000만 달러 거출, 각국과 협력하여 중요 산호초 네트워크 전략 책정, 일본·ASEAN 간 환경대화 실시, ③ 장래를 위한 환경보전의 지적 인프라 만들기 : 환경관련 분야를 이수하는 대학원생 금후 4년간 500명 이상 초빙, 동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환경전문가 팀 구성, 온실가스효과 관측 기술위성을 2008년도에 발사, 관측 데이터를 각국에 제공, 동아시아 환경 분야에서 대학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外交靑書』(2008), 50~51쪽.

이와 같이 일본은 경제분야 통합에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제도화를 진전과 이슈별 협력방안 제안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안보 분야 공동체 형성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WMD 수출관리나 해상테러 방지대책 등은 일본의 주도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일 간, 중·일 간 역사 공동연구가 개시되었고, 청소년 간 교류와 대학 간 교류에서도 일본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시작된 시기는 짧으나 참가국 간 공동의 이익이 확인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경제, 교육문화, 환경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치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목표와 전망

##### 1) '경계국가'론 : 주변성의 해소

개념적으로 지역화와 지역주의를 구별하여 동아시아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상호작용, 인간, 재화, 정보, 문화의 지역 내 교류확대에 수반된 경제적 지역통합, 즉 지역화가 선행한 반면, 정부 간 지역기구의 설립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sup>107)</sup> 지역주의가 지역 정체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프로세스'인 데 반해, 지역

107) 와세다 대학의 모리 가즈코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에는 경제분야에서는 지역화가 선행, 사회문화영역에서도 지역화가 진전, 정치영역에서는 지역주의보다도 내셔널리즘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毛里和子(2007), 「東アジア共同體を設計する：現代アジア學へのチャレンジ」, 毛里和子 編,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1：新たな地域形成』, 東京：岩波書店, 15쪽.

화는 상호의존의 진전에 수반된 경제적 지역통합, 즉 ‘아래로부터의 경제적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다.<sup>108)</sup>

동아시아의 ‘지역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지역주의’는 아시아가 세계화의 물결에 직면해서 비로소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된 1990년대에야 가시화되었다. 시라이시[白石隆]에 따르면, 전후의 유럽에서는 정체성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지역통합에 정치적 의지를 부여 하였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 주도의 이른바 ‘기러기형(flying geese)’ 경제발전 전에 수반하는 시장확대에 따라 ‘지역화’가 진행되었다.<sup>109)</sup> 이처럼 지금까지 지역통합에의 정치적 지향성이 약하였던 아시아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즉,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 전후 복수의 지역 인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21세기 들어 왜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안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오바[大庭三枝]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실재(實在)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아시아’와 ‘선진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국가(境界國家)’ 일본의 태생적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10)</sup> 즉, 기존의 지역 개념에서는 그 주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경계국가는 자국의 경계성(境界性)에 기인하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국이 중심에 위치하는 새로운 국가 그룹, 말하자면 ‘자기포섭적(自己包攝的) 지역’의 창출( 주변성의 해소)을 끊임없이

108) T. J. Pempel(2005); Stephen Haggard(1997),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09) 白石隆(2004), 『帝國とその限界：アメリカ・東アジア・日本』, 東京：NTT出版;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1997), *Network Power : Japan and Asia*,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10) 大庭三枝(2004), 앞의 책.

모색해 왔다는 것이다.

## 2)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오바의 논의에 따르면 경제국가의 주변성이 해소되었을 때, 즉 새로운 자기포섭적 지역이 창출되었을 때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을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 혹은 타 지역의 경제블록화에의 대응이다. 세계 각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아시아 지역이 지역단위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패쇄적 지역주의에 대응함으로써 전후 자유무역주의 속에서 발전해 온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11)</sup> 전후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던 일본이 1980년대 이후 지역주의에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유럽과 북미 등의 지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있다. 즉, 일본이 앞서서 지역주의를 추구하였다기보다는,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의에 관여하게 된 측면이 크다.<sup>112)</sup>

둘째, 경제협력의 제도화로 일본의 주도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일본기업의 단절없는(seamless) 지역적 생산과 판매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sup>113)</sup> 일본은 1980년대까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과 유통의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전체에 구축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불황과 세계화라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동아시아

111) 菊池努(2005), 앞의 글.

112) 伊藤憲一·田中明彦 監修(2005), 『東アジア共同體と日本の針路』,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菊池努(1995), 앞의 책.

113) 菊池努(2005), 앞의 글, 200~201쪽.

아 지역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이 ‘아시아와의 연대’, 즉 협조적 지역분업체제의 재활성화를 통해,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소자화(小子化)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경우 일본의 활로는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 EPA 체결, 국제금융통화정책협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대중견제의 측면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는데, 동아시아의 범위 속에 ASEAN+3 참가국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이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자, 그 때까지 이들 국가와의 포괄적인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역시 이들 국가와의 EP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동남아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에 한계를 느끼던 일본으로서는 동남아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고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보다 광역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제창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ASEAN+3만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sup>114)</sup>

넷째, 미·일 공조이다. 전후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지역주의는 특히 미국과의 연대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자연스런 선택이며,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러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

---

114) 김기석(2006), 앞의 글.

다. 즉,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대미협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이 ‘태평양’ 지역주의를 강조한 것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현재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추구하거나, 광역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에 대한 배려라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을 제창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동아시아 차원의 통화스왑 체제의 구축을 주도하여 ‘엔의 국제화’를 시도한 것은, 미국 지배의 국제통화·금융체제에 대한 도전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의 양국 동맹을 일본의 안전보장의 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의 재편과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sup>115)</sup>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미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만을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 3) 일본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의 장애요인

#### (1) 역사문제와 민족주의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국가 간 마찰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민족주의 교육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제약요인이다.<sup>116)</sup> 전후의 ‘동아시아 역사논쟁’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115) Christopher Hughes and Akiko Fukushima(2004), “U.S.-Japan Security Relations : Toward Bilateralism Plus?,” Ellis S. Krauss and T. J. Pempel, eds., *Beyond Bilateralism : U.S.-Japan Relations in the New Asia-Pacific*,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J. Samuels(2007), *Securing Japan :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16) 小原雅博(2005), 『東アジア共同体：強大化する中国と日本の戦略』, 東京：日本経済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문제가 되었  
고(지역화), 199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갈등구조가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에 일  
상화되고(구조화), 2000년대에는 정부 간 마찰을 넘어선 국제적 민간 네트워크  
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중층화).

21세기 들어 일본지도자들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한국,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이들 간의 지역협력을 위축시킨 경우가 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배상,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에 성의를 갖고 대응해야 하고, 중국은 애국주의  
적 역사교육이 반일교육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국 역시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 (2) 일·중 패권경쟁

이미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참가국과 그 실현방법을 논  
고 동아시아 국가 간, 특히 중·일 간 알력은 지역협력의 모멘텀을 약화시켰  
다. 일본이 미국 등 과거 자유주의 국가와 함께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자 움  
직이고, 중국은 미·일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  
치, 경제적 접근을 강화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실현은  
요원하다 할 수 있다. 일·중의 주도권 경쟁은 지역협력의 페이스메이커로서  
ASEAN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3국 간의 결속을 떨어뜨리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이는 이들 국가가 한 자리에 모여려면 ‘ASEAN’  
이라는 장을 통해야만 하는 상황, 즉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

新聞社 ; 이숙중(2006), 「동북아 민족주의의 미래 : 시론적 탐색」, 『21세기 동북아 공  
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波多野澄雄(2004), 「“歴史和解”への道  
標 : 戦後日本外交における“歴史問題”」, 編添谷芳秀·田所昌幸 編, 『日本の東アジア  
構想』, 東京 : 慶應義塾大學出版會.

중·일은 제로섬의 관계를 극복하고 윈윈 게임의 시각에서 상대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불가결하고, 일본 역시 장기불황을 탈출하여 재성장을 이루려면 안정된 중국시장과 중국과의 정책협조가 필요하다.<sup>117)</sup>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 (3) 미국의 견제

탈냉전 이후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라는 양자관계 중심의 전략을 추구해 왔으므로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반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점증하는 국력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PEC 창설 후 그 제도화를 둘러싼 교섭과, ‘동아시아’ 지역 단위의 협력안으로 부상한 EAEG 구상이나,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주목받은 아시아통화기금 구상의 귀결은, 모두 지역질서의 향배를 둘러싼 ‘아시아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를 부각시켰다. 또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을 빼고 설립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전 국무부 고관의 발언은, 동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반대이사 표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118)</sup> 이처럼 역대 미국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태도가 일정하지

117) 菊池努(2005), 앞의 글.

118) 『朝日新聞』(2005. 5. 1).

않았던 바,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은 변화할 수 있고,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국내요인·산업구조 등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에는 경제통합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무역자유화가 불가결하나 각국의 산업구조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19)</sup>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려면 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FTA 혹은 EPA의 체결), ② 관세동맹으로의 이행(통일된 무역정책), ③ 공통의 경제정책과 단일통화의 도입이라는 3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역내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가 경제통합의 선결조건인데,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이를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역내 가장 앞선 선진국인 일본은 자국의 시장을 역내 개도국에게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즉,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자국의 시장개방이라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와 높은 수준의 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농수산업 관련 수입자유화, 인력이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의원내각제라는 일본의 정치제도 특성상 이는 쉽지 않다.

---

119) 伊藤憲一·田中明彦 監修(2005), 앞의 책, 301~303쪽; 菊池努(2005), 앞의 글, 200쪽.

#### 4)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전망

시카모토 다카오<sup>[坂本多加雄]</sup>와 같은 학자는 일본 내에 유라시아 중심부<sup>(러시아, 중국)</sup> 지향파와 유라시아 주변부<sup>(미국, 동남아)</sup> 지향파의 대립구조가 있다고 분석하고, 유라시아 중심부와의 정치적 관계는 피하고, 유라시아 주변부 및 아메리카와의 제휴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면서,<sup>120)</sup> 동아시아공동체 반대 논리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일본 학자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일본의 안보, 경제 분야의 국가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장성 재무관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 교수로 있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sup>[榊原英資]</sup>는 미국이 2000년 이후 경기감속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이 아메리카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아시아와의 지역적 연결이 중요하며,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sup>121)</sup>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추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안보 측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칸 히데키<sup>[菅英輝]</sup>와 아카네야 다츠오<sup>[赤根谷達雄]</sup> 등은 안보 측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일·중 삼각구조가 일본 외교정책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한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및 ASEAN 국가와 다국 간 공동안보틀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한국, 중국에 대해 역사 인식에 대한 신뢰를 장기간에 걸쳐 회복해야

120) 坂本多加雄(2001), 『國家學のすすめ』, 東京:ちくま書房, 246~247쪽.

121) 榊原英資(2001, 11), 『日經金融新聞』, 11쪽.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2)</sup>

한편 아카네야 다츠오[赤根谷達雄]도 유럽에는 포럼형 안보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동맹형 안보기구인 NATO가 병존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는 포럼형 안보기구인 ARF 이외에 NATO에 상당하는 지역적 안전보장기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지역적 문제를 협의하는 장으로서 AR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향후 동북아시아에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외교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sup>123)</sup> 반면, 마스모토 켄이치[松本健一]와 아마코 사토시[天兒慧] 등과 같은 학자들은 공동의 가치구축,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필요를 제언하기도 한다. 특히 마스모토 켄이치는 아시아 고유의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아시아 공통의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의 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sup>124)</sup> 아마코 사토시는 동아시아 경제 관계는 긴밀화되고 있지만, 정치와 의식의 긴밀화 및 통합이 필요하고, 비경제 분야에서 지적 공유를 목표로 하는 중층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 인식, 상호이해, 격차와 빈곤, 민주주의, 안전보장 분야에서 아시아 유식자 포럼을 창설하여 토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25)</sup>

21세기 아시아가 직면한 신안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는 ① 테러, 해적, 인신매매, 무기밀수, 조류 인플루엔자 등

122) 菅英輝(2004), 〈필자 인터뷰〉.

123) 赤根谷達雄(2004), 「日本の安全保障に關する理論的考察」, 赤根谷達雄·落合浩太郎. 『日本の安全保障』, 東京: 有斐閣, 102~103쪽.

124) 松本健一, 「新しいアジア構想を」, 『朝日新聞』(2005. 5. 26).

125) 天兒慧, 「有識者集い 語り合う場を」, 『朝日新聞』(2004. 6. 16), 6쪽.

비전통적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 ② 세계의 성장 센터로서 아시아 유지, 고용창출, 성장지속, ③ 지역대국화하는 중국에 대한 관여와 역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26)</sup>

이와 같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안된 것이 “어떻게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와타나베 타이조(渡邊泰造)와 같은 사람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서 일본의 주도권 장악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본이 역내 협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ASEAN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ASEAN 국가와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ASEAN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념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sup>127)</sup>

경제적 통합과 안보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도쿄대 교수였던 아마모토 요시노부(山本吉宣)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요체는 다원적 안전보장공동체와 경제통합의 조합에 있다고 하면서 경제통합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틀을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과제로 삼고,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에 안전보장공동체를 만들어 동남아시아 안보공동체와 접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동아시아이든, 아시아태평양이든, 통합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힘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동아시아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으므로 집단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28)</sup>

126) 白石隆(2004), 앞의 책.

127) 渡邊泰造(2003), 「共同體意識から見る東アジア協力と日本の進路」, 山景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46쪽.

128) 山本吉宣(2007), 앞의 글, 316~339쪽.

이와는 달리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주장도 있다.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이종원 등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제도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가 불안정하다고 진단한다. 일본외교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어 신뢰구축에 성공하였지만 동북아시아는 지역기구를 갖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개한 다국 간 외교의 협력을 동북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전의 가상 적국도 포함하여 지역안전보장기구에 확대 재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럴려면 선결조건으로 북·일, 미·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일본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협의회 창설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9)</sup>

이와 같이 일본 학자와 전문가 상당수는 일본의 경제적·안보적·사회문화적 이익확보를 위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세안 위임론(渡邊泰造), 집단관리 및 주도(山本吉宣), 일본역할론(高原明生, 藤原歸一, 李鍾元) 등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 연구자들이 특히 일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합해 볼 때, 향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경제통합 흐름을 유지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투자의 자유화 등을 요소로 하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공동대책을 강구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의 역내

129) 金子勝·藤原歸一·山口二郎 編著(2003), 『東アジアで生きよう! : 經濟構想・共生社會・歴史認識』, 東京 : 岩波書店.

공동협력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sup>130)</sup>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동맹체제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긴장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안보협력체의 강화, 6자회담에 대한 지속적 관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간 협력체제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 및 대학교류, 역사공동연구 강화, 역내 공동의 대학원 설치 등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5.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

일본은 나름대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안보·사회문화·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다자 간 협력과 공동체 구축 흐름에 상당히 관여해 왔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활용하여 우리로서도 각 분야에 걸친 공동체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정책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참가국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정책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균형의 요소를 포함한 권력정치적 리얼리즘이 포함되어 있다.<sup>131)</sup> 또한 공동체 형성에서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 공유가 중요한데,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우리 의식을

130) 『通商白書』(2007), 230쪽.

131) 山本武彦(2007), 「日本の東アジア共同體外交と共同體構想」, 毛里和子 編,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1: 新たな地域形成』, 東京: 岩波書店, 146쪽.

주변 여러 국가와 공유하고 집합적 정체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니셔티브를 잡아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로는 아시아와 일본, 아시아에 대한 경제원조 배분 등을 강조하지만 아시아와의 공동의식을 일본의 파워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sup>132)</sup>

따라서 우리로서도 일본의 이러한 한계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동아시아 각국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적극 개발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세력경쟁이나 자국이익의 확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역내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동의 평화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IV. 한국

### 1.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논의의 변화과정

1980년대 말 이후의 국제적 정세를 놓고 보면, 한반도의 국제정치지형을 강하게 규정해 왔던 냉전질서가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수화에 따라 주변국과의 역사마찰이 격화되는 등 대안적 지역질서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아울러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과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유형의 지역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地域)이란 유동적 개념이다. 지역이 단순한 지리적 경

---

132) 山本武彦(2007), 위의 글, 158~159쪽.

계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함의를 내포한 채 행위자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역학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새롭게 정의되는 역사적 산물<sup>133)</sup>이라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상 장기적인 국가전략보다 당장의 생존에 골몰해야 하였던 한국에게 지역주의 프로젝트란 비현실적인 이상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국가적(혹은 민족적) 생존의 절박한 문제였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은 독자적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대부분 주변 강대국의 관념을 차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질서하에서 통용된 대부분의 개념, 즉 아시아, 동양, 동아시아(East Asia), 극동(Far East),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 태평양(Pacific), 아시아태평양/태평양아시아(Asia Pacific), 환태평양(Pacific Rim), 태평양 연안(Pacific Basin) 등이 여과없이 사용되었다.

그러한 여러 개념 중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이 세 가지 지역 범주의 역사적 배경, 의미, 그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지역 범주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 지역을 획정하고 있는 각 개념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지리적 범위, 정치적 함의 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

133) 딜리 아리프, 김영희 역(1993),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 지역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창작과 비평』 통권 73호 ; David Capie(1994), "Rival Regions? East Asian Regionalism and It's Challenge to the Asia-Pacific," *Pacific Review*, 7(2) ; Richard Higgot and Richard Stubbs(1995), "Competing Conceptions of Economic Regionalism : APEC versus EAEC in the Asia Pacific,"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Summer) ; Peter J. Katzenstein(2000), "Regionalism and East Asia," *New Political Economy*, 5(4).

하고 그다지 엄밀한 구분 없이(interchangeably) 사용되어 왔고 동일한 용어도 사용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념적 혼동이 심하였다는 점이다. 또 특정 개념 내지 단위가 시대에 따라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은 물론 같은 개념도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얻는 등 다양한 변천과정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협력들의 맥락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된 지역 개념은 아시아태평양(혹은 태평양/환태평양)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내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해 지역 개념은 분화·다양화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 경쟁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후 냉전기 동안 한국의 지역 관념을 지배하였던 아시아태평양은 1989년 APEC 출범 이후까지 사용되다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sup>134)</sup>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1980년대 말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공산권 연구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탈냉전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사용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동아시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구상(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을 통해 동북아시아를 단위로 한 지역주의 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여 현재 한국 지역 인식의 가장 보편화된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용어는 1970년대까지 역사학계에서 일부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사회과학계에서도 통용되기 시작

---

134) 1990년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던 아시아태평양과 동아시아 중에서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가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넘어 보편화되는 과정은 지역 개념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명백히 보여 준다. Richard Higgot and Richard Stubbs(1995).

하였다. 동아시아 개념이 보편화되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동아시아론·동아시아협력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가 하면, ASEAN+3의 맥락에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유형의 지역협력체를 표상하는 새로운 의미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은 발견, 상상,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사용된 지역 개념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추적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을 다룸에 있어, 우선 한국의 지역 인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 수립 후 1980년대까지 냉전기간 동안 한국정부에 의해 제안되거나 추진된 지역주의적 프로젝트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부정책을 다루게 되는데,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지역주의가 그리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지 않았고,<sup>135)</sup>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탈냉전에 한국에서 사용한 지역 개념을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로 분류하여 각 개념의 지리적 범위, 연원, 등장배경,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35) 최근 인문학자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차원에서 냉전 초기 태평양담론이 논의되고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 아시아론을 특정 권력 혹은 인물의 정치학이나 외교술로 축소시키기보다는 국가, 지역, 세계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 전망을 소유할 수 있었던 지식인 집단이 구축한 지역적 심상지리의 장으로 파악……”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이다. 하지만 이 연구도 냉전 이후 한국의 지식인들이 아시아를 ‘호출’하는 방식은 광복, 냉전의 도래, 한국전쟁과 같은 정치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김예림(2007),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 해방-한국전쟁 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 1) 냉전기 한국의 지역 인식 :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근대 이전 한국은 오랫동안 이른바 화이사상(華夷思想)에 기초한 사대자소(事大字小)와 조공체제에 기반을 둔 중국의 중화질서(중화제국)를 지역의 기본질서로 수용하였고, 서세동점 와중에 그것을 일본제국주의가 대체한 근대 이후는 일본의 강한 규정력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근대 이후 한국의 지역 인식은 주로 한·중·일 동양 3국을 지역적 범위로 하되 일본의 프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시각과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변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였다. 예컨대 근대 한국의 대표적 지역구상인 ‘삼국제후론’이나 ‘동양평화론’이 보여 주듯이 일본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형성된 지역 인식과 논리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적용한 형태였던 것이다.<sup>136)</sup>

일본이 패망하고, 정부수립 후 한국은 냉전적 국제질서와 미국 헤게모니 체제 그리고 국토분단이라는 정치구조적 제약 속에서 국가안보 내지 반공을 핵심 테마로 하여 지역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미일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여 생성된 ‘아시아태평양’ 개념의 수용이었다.<sup>137)</sup> 즉, 냉전으로 인한 한반도와 중국의 분할구도 속에서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동양 3국을 주축으로 한 많은 지역 개념은 현실성이 결여된 무용지물이 되었고 미일안보 동맹 대 중소동맹 혹은 이른바 남방삼각동맹 대 북방삼각동맹이라는 냉전적 대립구도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아시아태평양 개념이 부상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을 범주로 나름의 국가전략을 투영한 지역주의적 프로젝트

136) 정용화(2006), 「한국의 지역인식과 구상 (1) : 동양평화구상」,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 현광호(2006), 「유길준과 안중근의 동아시아 인식 비교」, 『역사비평』 가을호.

137) 노기명(2002), 「이승만 정권의 태평양 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 제 11권 ; 박명립(2006a), 「한국인의 지역인식과 구상 (2) : 김대중의 사례」,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를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언제나 미국의 의도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제약을 받았다.

### (1) 태평양동맹 구상

전후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프로젝트가 처음 구상되었던 것은 이승만의 ‘태평양동맹(Pacific Union)’ 구상이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반공적 안보동맹체를 미국 주도하에 아시아에도 설치하자는 것이 골자였으며, 공고화되는 냉전적 국제질서와 공산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지역동맹체를 만들어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9년경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필리핀의 키리노(Elpido Quirino), 중국의 장제스 등과 연대하여 그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이승만이 상정하였던 참여국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는 물론 남미국가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의 대부분 국가였다.<sup>138)</sup> 이 구상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일본 중심적 아시아 안보정책과 한국의 반일적 태도, 국민당 정부의 패퇴, 한미 상호방위협정 체결, 미국에 설득당한 필리핀의 동남아시아회의(Southeast Asia Conference) 결성으로의 방향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변질되어 1954년 민간 성격인 ‘아시아민족반공연맹(Asian People Anti-Communist League : APACL)’을 창설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sup>139)</sup>

138) 노기명(2002), 앞의 글.

139) 노기명(2002), 앞의 글 ; 박진희(2006),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구상」, 『역사비평』 통권 76호(가을) ; 최영호(1999),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 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동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2호.

## (2) 아시아태평양이사회

박정희 정부 역시 정권성립 직후인 1964년부터 지역협력 구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최초로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주의적 협력기구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아시아태평양이사회 회의(Asia and Pacific Council : 이하 ASPAC)’였다.<sup>140)</sup> 아시아태평양 연안의 10개국(한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읍저버로 라오스)으로 구성되었던 ASPAC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한미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은 박정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립하였으며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원하였던 미국의 존슨행정부가 지원하여 성립되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ASPAC 회의에서 ‘위대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구상’을 발표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였다.<sup>141)</sup>

하지만 ASPAC에는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경계하려는 반공적 성격이 강한 분단국 한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을 한 축으로 하고 정치성을 배격한 경제·문화적 접근을 주장하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참가국 사이의 본질적인 이견이 존재하였다.<sup>142)</sup> 이는 냉전적 대립이 첨예하게 남아 있던 한반도 정치지형하에서 선택한 한국정부의 반

140) 이동원(2001), 『행동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다』, 중앙M&B ; Brian Bridges(2006), “From ASPAC to EAS : South Korea and the Asian Pacific Basin,” *Working Paper Series*, Center for Asian Pacific Studies, Lingnan University, p. 1.

141) 박태균(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통권 76호(가을), 131~134쪽.

142) 박준영(1983),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적 의의 재조명」, 『사회과학논집』 3, 이화여자대학교.

공적 접근법이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던 시대 조류에 뒤쳐진 것을 의미하였다.<sup>143)</sup> 따라서 ASPAC은 중국의 부상으로 타이완의 국제 정치적 지위 약화 및 베트남의 공산화에 따른 반공적 지역협력 파트너의 상실 등에 대응할 수 없었다.

### (3) 태평양정상회담구상

1975년 베트남 공산화와 미국의 철수에 따른 역내의 긴장감과 힘의 공백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경제가 상당히 성장한 1970년대 말이 되어서야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잠시 되살아났는데 그 계기는 미국과 일본에서 왔다. 양국에서 태평양 지역 협력체제 구상안이 공식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1979년 7월 미국 상원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방안 중 하나로 ‘태평양무역개발기구(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 OPTAD)’안이 제출되어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오히라[大平正芳] 총리의 ‘환태평양연대구상(Pacific Basin Cooperation)’이 제안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분위기<sup>144)</sup>가 고조되었다.<sup>145)</sup>

미·일에 의해 제안된 지역협력체구상은 역내 국가의 비교적 폭넓은 공감

143) Tae Dong Chung(1977), “South Korea and Southeast Asia : A Reassessment,” *Asian Perspective*, 1(1).

144) 이 안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회원국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과거 안들에 비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NICs나 ASEAN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진전된 것이었다.

145) 박재규 외(1985), 「아시아태평양문제 기초연구 : 지역협력체 구상을 위한 방법론적 시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권 1호.

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등의 개도국이 가진 선진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도 박정희 암살과 그에 따른 국내정세 불안 때문에 지역구상에 관심을 보이지 못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안정된 1982년에 이르러서야 국제경제 환경변화와 신장된 경제력을 자산으로 한국이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태평양정상회담구상(Pacific Summit)’을 발표하게 되었다.<sup>146)</sup> 이는 세계의 주요 지역 중 태평양 지역만이 정상 간의 다면적 협의체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태평양시대의 현실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제약과 도전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태평양 연안의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47)</sup>

이 구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태평양 연안국의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합, 공동관심사와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이 협의체에는 역내의 37개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며, 셋째, 역내 모든 국가 간의 관계는 주권과 독립의 존중, 호혜평등, 내정불간섭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 국가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화 및 블록화를 지양하고, 넷째, 연안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의 개발문제를 비롯, 역내의 무역증대, 경제기술협력, 인력개발, 교통통신망 확충, 교육문화교류 등이 이 협의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도록 하며, 다섯째, 역내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및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증대, 심화시킴으로써 남북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sup>148)</sup>

146) 박재규 외(1985), 위의 글, 255~256쪽.

147) 왕임동(1986), 「아시아태평양 협력체 구상과 동남아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5쪽.

148) 박재규 외(1985), 앞의 글, 256쪽.

하지만 이 제안은 정상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파격성을 보였다거나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제안하였다는 점, 개방원칙을 천명하였다는 점 등 몇 가지 주목을 끌 만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모호한데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결여되었고 후속조치도 없어 다른 국가로부터 외교적 수사 이상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였다.<sup>149)</sup>

이와 같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지역에 대한 사고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립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하에 안전보장과 경제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지역 구상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역내 국가 사이에 이익, 책임, 가치, 상호존중의 공유 같은 기본 속성도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APEC 형성 시기까지 역내의 경제번영을 토대로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 혹은 ‘태평양 세기(Pacific century)’ 같은 추상적 레토릭 이외에 실질적 성과를 거의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는 점, 게다가 미국의 양자적 관계(hub-and-spoke)를 토대로 한 대아시아 정책 같은 구조적 한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어 실천적 추동력을 갖지 못한 그야말로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 2) 탈냉전 이후 한국의 지역 인식

1980년대 말 탈냉전과 민주화는 한국의 지역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지역 개념의 지속성과 변화를 반영한 세 가지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아시아태평양은 APEC의 출범과 함께 1990년대 중반까지 제도화되어 명맥을 유지해 나갔지만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

149) Brian Bridges(2006).

반면 탈냉전 및 구공산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의 지역주의적 프로젝트, 특히 정치안보 차원에서의 프로젝트가 동북아라는 새로운 지역단위에 중점을 두게 되고 아울러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여 의미가 다양한 ‘동아시아’가 등장하였다.

####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식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 APEC에 참여하면서 구체화되었다. APEC이 오랫동안 아시아태평양의 지역협력기구 창설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양국의 주도적 작업의 산물이기는 하지만,<sup>150)</sup> 한국 역시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호크 총리가 서울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APEC 창설을 최초로 제안하였을 때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열었을 뿐 아니라 제3차 서울총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타이완, 홍콩, 중국을 가입시키는 데 성공하여 APEC이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제도화되는 데 공헌하였다.<sup>151)</sup>

APEC이 정상회담으로 확대된 1993년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세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보다 지구적 차원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APEC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1994년 ARF, 1996년 ASEM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 그 역할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여타의 지역 범주가 점차 생겨나는 상황이었

---

150) Yoichi Funabashi ed.(1994), *Japan's International Agenda*,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Takeshi Terada(1999), “Genesis of APEC : Australian-Japan Political Initiatives,” *Pacific Economic Papers*, No. 298(December).

151) Yoichi Funabashi ed.(1994), pp. 73~76.

지만 공식적인 차원에서 APEC이 지역협력기구로서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범주는 한국 지역주의 인식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몇 가지 계기를 통해 지역협력단위로서의 아시아태평양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APEC의 취약성이 문제였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회원국, 목적과 수단에 대한 합의의 부재, 추진력의 부재와 같은 본질적인 것이었다.<sup>152)</sup> 게다가 1993년 뒤늦게 APEC에 적극적 자세로 돌아선 미국이 이 조직을 지역 간 협력체제를 지향하였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역자유화 추진기구로 변질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정된 일방주의(concerted unilateralism)’와 ‘부문별 조기자유화조치(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를 둘러싼 미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APEC은 약화되었다.<sup>153)</sup>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APEC의 한계가 한층 드러났는데, 다수 회원국이 심각한 외환위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EC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하지만 동티모르 문제나 국제테러리즘, 북한 핵문제 등 역내에서 갑자기 불거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1990년대 말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많은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가 APEC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변화되어 갔다.<sup>154)</sup>

152) John Ravenhill(2000), "APEC Adrift : Implications for Economic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cific Review*, 13(2).

153) John Ravenhill(2001), *APEC and the Construction of Pacific Rim Regional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6~222.

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시아태평양 범주에 대한 국내적 관심저하도 초래하였다. 외환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관심은 위기극복에 쏠려 있었고, 외환위기 방지와 극복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 APEC 등 지역협력기구보다는 한국의 거시정책 운용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IMF 등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기구의 역할을 APEC보다는 동아시아 지역 개념에 입각한 ASEAN+3을 통해 추구함으로써<sup>155)</sup> 한국 내에서 아시아태평양 개념은 점차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 갔다.

## (2) ‘동북아시아’ 지역 인식

19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가시화되고,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시작한 한국의 외교적 관심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구공산권국가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른바 ‘북방정책(nordpolitik)’으로 전환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올림픽 개최 후 본격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1989년 2월 헝가리 및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 1990년 9월에는 소련 그리고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수교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992년 3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북방정책은 한국외교의 핵심의제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1993년 3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1994년 6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탈퇴하는 등 북

---

154) John Ravenhill(2000).

155) 1985년 미국 망명에서 돌아온 김대중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설립한 조직의 명칭이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커다란 변화이다.

핵문제가 한반도 혹은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다. 그 이후 1997년 경제위기 때의 1~2년을 제외한다면 최근까지도 한국외교의 1차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있다.

탈냉전과 함께 북방정책 및 북핵문제 같은 참여한 외교안보적 과제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한국 지역전략 및 구상의 범주로 동북아시아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6자로 구성되는 ‘동북아평화협의체’를 제안한 이후 6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점차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요성을 얻어 갔다. 1993년의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동북아 4자회담 혹은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등장하였고 점차 지역적 의미로 굳어져 갔다.

동북아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과 남북한을 포괄하므로 지리적 인접성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독립 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와도 부합된다는 점, 냉전기 한반도 국제정치 중심 행위자가 포함되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최우선 과제인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탈냉전의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한국의 중심적 지역 개념으로 부상되었다.<sup>156)</sup> 하지만 한국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APEC, ARF 등에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협력정책 역시 추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지역 인식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과 새롭게 등장한 동북아시아가 공존하되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자는 경제영역의 기능적 협력, 후자는 외교안보적 차원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양분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156) 이수훈(2004), 「동북아시아대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동아일보사, 57~58쪽.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구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동북아시아를 경제영역까지 포괄하는 한국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공식단위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에너지 및 철도 분야 등에서 동북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시된 동북아시아대구상은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중장기 국가전략,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등 외교안보 영역(즉 평화영역)까지 포괄하는 구상으로 확대되었다.<sup>157)</sup> 이 구상의 목표는 한국이 주도하여 “역내 협력과 통합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신뢰, 호혜,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었다.<sup>158)</sup> 여기서 평화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그리고 다자 간 안보협력 증진 등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며 번영을 위한 과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금융, 물류, 투자, 에너지, 철도,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59)</sup>

이러한 동북아시아대구상은 발표 당시부터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는데,<sup>160)</sup>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에 의해 “그 구상의 원대함이나 너무 현실을 앞서가는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과잉적인 언표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대한 사려보다는 열정이 앞서 있다”거나,<sup>161)</sup> “구체적인 비전, 주체적 역량, 실현가능성 등에

157)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200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대구상』, 동북아시아 위원회.

158)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2003), 위의 책.

159)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2003), 앞의 책, 20~27쪽.

160)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2003), 앞의 책, 12~13쪽 ; 박사명(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161) 박명립(2006a), 앞의 글, 174쪽.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준비 없이 시작된 사실상 정치적 구호를 넘는 의미를 갖기 어려운”<sup>162)</sup> 구상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그 구상이 담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동북아라는 지역단위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에도 기인한다. 본래 동북아시아 개념의 생산지는 미국이며, 국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동(Far East), 동아시아 등과 혼용되어 왔다. 이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타이완 등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지역주의적 구상의 단위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동북아시아는 주로 러시아나 중국을 포함하는 적성국과 연계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역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이나 중국을 지역 협력의 파트너로서보다는 쌍무적 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동해연안의 일부지역에서 지방적 차원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혹은 일부 진보적 연구자를 제외하면 동북아시아를 지역 범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sup>163)</sup> 그리고 중국의 중화사상이나 화이사상에서 동북아시아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을 지칭하며 자신을 유럽국가로 인식하는 러시아에서도 역시 동북아시아는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

162) 손열 외(2006), 앞의 책, 12쪽.

163) Roji Nakagawa(2005), “The Revival of ‘Northeast Asia’ in Japan : Why Have Japanese Opinion Leaders Begun to Speak of ‘Northeast Asia’?,”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Vol. 3 ; 和田春樹(2003), 『東北アジア共同の家：新地域主義宣言』, 東京：平凡社；姜尙中(2001), 『東北アジア共同の家をめざして』, 東京：平凡社.

아 등 한반도와 주변 4강, 특히 중앙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를 지역 범위로 하는 동북아로 진화<sup>164)</sup> 시킴으로써 한국이 역내 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당사국들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괴리를 낳았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제안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프로젝트는 주변국의 호응과는 거리가 멀어졌다.<sup>165)</sup> 게다가 동북아시아 개념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 범주에 포함된 국가가 모두 세계적 강국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설정된 지역 프로젝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3) '동아시아' 지역 인식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개념의 연원은 '동양'을 대체한 일본의 '동아'<sup>166)</sup>이며 따라서 시간적으로나 사용 범위라는 측면에서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근대 이후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동양 혹은 동아를 수용하였지만,<sup>167)</sup> 전후에는 대동아공영권의 나쁜 기억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배적 개념이 등장하였으므로 동아시아는 공식적 지역주의 범주로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아시아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164)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를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로는 Rozman과 Cumings가 대표적이다[Rozman(2004) ; Cumings(1997) 등 참조].

165) Gilbert Rozman(1998), "Flawed Regionalism : Reconceptualizing Northeast Asia in the 1990s," *The Pacific Review*, 11(1).

166) 근대화 이후 동양을 많이 사용하던 일본은 1930년대부터 스스로 맹주로 군림할 수 있는 '동아'라는 영역 개념을 형성하였고, 거기에 '남방'을 부가하여 '대동아'를 형성하였다[고야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제16권 제3호, 40쪽 참조].

167) 최영중 외(2005),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상일 (2005), 「동아시아 공동체론 :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4권 1호.

합의를 가진 개념으로 재등장하였다.

첫째, 경제발전 유형으로서의 동아시아이다. 먼저 동아시아 개념이 부활한 계기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개념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은행이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책이다. 1970년대 말 서구 언론에 의해 접화되기 시작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일본이 세계경제 무대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존재로 부각되고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Asia's Four Dragons)’ 혹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체제(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역시 중남미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자 그 비결을 설명하면서 공통의 문화적 배경, 지리적 인접성, 일본의 발전국가적 성장모형을 공유하는 범주로서 동아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의 동아시아는 사용자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을 선택적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동아시아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을 시장, 정치체제, 관료, 경제정책 등의 변인을 통해 설명하는 ‘동아시아발전론’이다. 특히 존슨(Chalmers Johnson)의 발전국가론과 암스덴(Alice Amsden), 웨이드(Robert Wade) 같은 학자들의 문제제기에 자극받아 국내에서도 국가중심적 혹은 사회중심적 이론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있었다.<sup>168)</sup> 나머지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문화적 속성을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유교자본주의론·아시아적 가치론이다.<sup>169)</sup> 유교자본주의론은 주로 “유교의 덕

168) 구범모·백종국(1990), 「한국의 후발산업화 연구에 관한 문헌비평」, 『한국정치학회보』 제24권 1호.

169) 김석근(2006), 「유교자본주의? 짧은 유행과 긴 여운 그리고 남은 과제」, 『오늘의 동

목, 구체적으로 가족중심주의, 사회기강 유지, 건전한 노동정신, 교육존중, 성취의욕, 근면절검, 가족 및 소속 단체에 대한 귀속충성, 개인에 대한 단체의 우선, 질서서열의 존중 등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흐름이다.<sup>170)</sup>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남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고무되어 유교자본주의론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의 리관유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등이 주창한 것으로 유교를 포함하면서도 유교의 외연을 넘는 아시아적 특징을 갖는 복합적 가치를 아시아적 우월성의 근거로 내세워 위기에 처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서구의 비판에 맞서려 한 것이다.<sup>171)</sup> 이념적으로 이것은 서구와의 대립구조 속에서 아시아의 존재방식을 모색하는 대항담론적 성격이 강하였다.<sup>172)</sup>

흥미로운 것은 그 기원상 아시아적 가치론에서의 ‘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1990년대 기존의 동아시아 NICs에 더하여 점차 동남아시아 국가가 고도경제성장의 대열에 합류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동아시아 범주의 확장이었는데 국내 연구자들은 이런 동남아발 담론을 수용하면서도 지역 범주는 동아시아 3국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전반적으로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 맥락에서 진화한 이 동아시아 범주는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화라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 국가의 성장, 중국의 부상, 중남미 국가의

---

양사상』 제14호 2권 ; 전제국(1999), 「아시아적 가치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1호 ; 국민호(2007), 「동아시아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동양사회사상』 제15집.

170) 김석근(2006), 앞의 글, 69쪽.

171) 국민호(2007), 앞의 글.

172) 전제국(1999), 앞의 글.

성장 등 고도경제성장이 기존 동아시아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그 모델의 생산자인 일본이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또 한국이나 홍콩 같은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빠져 유용성을 잃어갔다. 즉, 설명변인으로서의 유교나 아시아적 가치라는 속성이 경제발전과 실제 인과관계를 갖는지 검증되기도 전에 경제발전이라는 현상 자체가 흔들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같은 부정적 담론의 범람과 함께 존립근거가 약화된 것이다.

엄밀히 본다면 이 계열의 동아시아는 경제발전이라는 구체적 현상, 발전을 추동한 정치경제적 요인, 지역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공유한 몇몇 국가를 결과적으로 범주화한 것이었으며 지역주의적 개념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점차 역내 경제교류가 증대되었다는 현실적 요인과 함께 아시아가 하나의 구획화된 경제단위로서 지역주의적 범주로 발전하여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이다. 이는 ‘창작과 비평그룹’으로 불리는 일단의 학자에 의해 제기된 대안적 동아시아론으로, 1990년대 초반 냉전적 대립구도가 완화되고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진전으로 전 지구적 자본의 획일화 논리가 횡행하는 와중에 “1970~80년대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1990년대 이후 변화한 나라 안팎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 일국적 시각과 세계체제적 시각의 매개항”으로 제기된 지적 실험으로서의 성찰적 동아시아론이며 동아시아가 한국에 ‘귀환’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sup>173)</sup>

이들은 탈냉전과 지구화의 와중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교착 및 긴장상태의

---

173) 백영서(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73쪽.

원인을 제공하였던 국민국가와 일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추구하는 인식적·방법론적 수단으로서 동아시아라는 확장된 공간적 지역정체성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자본주의와 그 대안을 자처한 소련식 사회주의, 양자 모두를 비판하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혜를 바탕으로 제3의 선택을 모색”하는,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장래에 대한 지역주의적 대안의 탐색이라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4)</sup>

인문학자들의 이러한 동아시아론은 한·중·일 3국, 말하자면 전통적인 ‘동양 3국’을 토대로 하면서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중심의 지리적 경계는 냉전의 산물임을 인식하면서 “서구가 구획한 동남아와 동북아의 경계를 교란하면서 동아시아론이 동북아 중심론으로 경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개념을 채택”하거나 나아가 “동아시아를 지리적으로 고정된 경계나 구조를 가진 실체로 보기를 단념하고 ……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75)</sup> 또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탈냉전의 현실 속에서 분단극복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적 팽창에 대한 경계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는 등의 형태로 확장된 동아시아 공간을 상정하기도 한다.<sup>176)</sup>

174) 최원식(2001), 「한국과 동아시아」,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175) 최원식(2004),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 동아시아론 보유」,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백영서(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176) 최원식(1995),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동아시아 :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장인성(2005),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과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 26집 2호.

‘창비그룹’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사회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재  
 생시키는 데 공헌한 바가 크며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시각에서  
 이 지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  
 정치적 인식 결여, 지나친 거대담론, 엄밀성이 결여된 인문학적 분석방법 등  
 의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실에 대한 비  
 판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된다. “동아시아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추동하는 기  
 본틀을 구성할 뿐, 동아시아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지역주체의 행동과 관  
 계망에 어떻게 연루되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창비의 성찰적 동아시아론  
 은 …… 동아시아를 ‘상상’할 따름이다” 또 “공동체론은 이론이 현실로 나타  
 난 역사성을 외면하고 전개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실천성이 결여된  
 추상적이고 공허한 논리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는 비판을 받았다.<sup>177)</sup> 아  
 울리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담론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현상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대면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sup>178)</sup> 나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은 …… 공간적 상상만이 아니라 경험과 전망이 응  
 축된 시간축에 대한 상상이며, 목적론적 당위성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둔 비전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sup>179)</sup>는 등 사회과학계에서는 주  
 로 현실적 함의 결여를 지적받아 왔다.

물론 스스로도 ‘기획’ 혹은 ‘지적 실험’이라는 수식어를 달 만큼 ‘상상’의 측  
 면을 강조하는 인문학자들의 담론을 보며 사회과학자들이 현실세계와의 괴리  
 를 지적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민국가 극복이라는 이들의 테

177) 한상일(2005), 앞의 글, 19쪽.

178) 최장집(2004),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와  
 지평」, 『아세아연구』 제47권 4호, 120쪽.

179) 장인성(2005), 앞의 글, 18쪽.

마는 동아시아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sup>180)</sup>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력하면서도 점차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어 가는 일본 그리고 지방자치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큼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그러한 대안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합국가론, 도시 간의 연맹 혹은 NGO나 시민사회의 연대 등은 1990년대의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일국적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현재진행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은 인식이나 정책을 앞서 가기 때문에 이들의 지적 실험은 상상을 뒷받침할 만한 현실적 행동지침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이다. 이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활성화된 ASEAN+3 중심의 제도인 ‘협력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를 의미한다. 애초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1990년대 초 아시아 국가만의 지역협력체로서 EAEG/EAEC를 제안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ASEAN 6개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등을 구성원으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ASEAN의 팽창과 함께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13개국,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결합하는 지역범주를 상정하게 되었다.<sup>181)</sup>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아시아태평양 개념에 근접하지만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적 행위자

180) 이남주(2005),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400~402쪽.

181) Terada Takeshi(2003) ; Baogang He(2004), “East Asian Ideas of Regionalism : A Normative Critiqu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8(1).

었던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선진국가(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하티르가 아시아 중심적(Asians only) ‘협력틀’을 제안한 것은 “이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대한 태도나 문화적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182)</sup>는 기본인식도 작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서구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APEC의 대안으로서의 의미와 지역중심국가로 미국 대신 일본을 상정하는 등 그 근처에 반미, 반서방 내지 반신자유주의적 정서를 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183)</sup>

개념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동아시아’ 인식은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의해 주도되어 온 아시아태평양 개념과의 경쟁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었다.<sup>184)</sup> 마하티르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자신이 빠진 동아시아협력체의 결성을 반대하고 일본, 한국, 타이 등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가에게 불참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구체화되지 못해 왔다. 하지만 1996년 ASEM 결성 당시 유럽국가의 아시아 파트너가 마하티르가 제안한 EAEC의 13개국으로 형성됨으로써 이 동아시아 개념은 자연스럽게 부활하였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통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운명공동체’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ASEAN+3이라는 지역협력체를 낳게 되면서 이 개념은 실현되었다.<sup>185)</sup>

게다가 ASEAN+3을 토대로 하는 정부차원의 지역협력 프로젝트가 1997년 출범 이후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제안되

182) Richard Higgot and Richard Stubbs(1995), p. 525에서 재인용.

183) Baogang He(2004), p. 112.

184) Richard Higgot and Richard Stubbs(1995).

185) Douglas Webber(2001).

고 시도되었던 어떤 형태의 지역협력 프로젝트보다 빠른 속도로 제도화를 이루어,<sup>186)</sup> 2005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최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역동적인 협력기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 개념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인식과 범주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는데, 동아시아 경제위기 발발 직후인 김대중 정부 전반기에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나 동아시아 스터디 그룹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끄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후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일정 부분 완화되어 위기감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내정치문제에 발목 잡혀 국제협력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 범주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생소하다는 문제도 있다. 우선 여기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항상 미국을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중심 행위자로 간주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제외된 이 협력틀의 추구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sup>187)</sup> 한국외교의 핵심과제인 북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로도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외교과제를 한국에게 던져 주었으며 이런 와중에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경제적·정치군사적 관계개선과 그를 통한 한반도 안정을 핵심 외교과제로 상정하게 된 만큼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 개념은 국내에서 동남아시아가 중심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과거 냉전시기 베트남, 필리핀 등이 체제갈등에 따라 중시했던 것과는 달리 탈냉전

186) 김기석(2007), 「일본의 동아시아 통합전략」, 『국가전략』 13권 1호.

187)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지역협력체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꿔 유보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기석(2007), 위의 글 참조.

기 한국외교의 중심이 북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로 이전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sup>188)</sup>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료는 이러한 동남아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위기 당시의 동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은 없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통상적인 외교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식적 제약 때문에 이 개념은 국제적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3)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논의 특징

이제까지 전후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지역 개념을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개념의 배경, 내용, 진화과정, 정치경제적 함의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역 인식도 상황적 산물이며 한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 내지 국내정치적 변화와 밀접히 연계된 유기체적 성격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나아가 같은 개념도 전혀 다른 범주와 의미를 가진 상태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제 영역의 지역 인식이 차별적인 측면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sup>189)</sup>

어차피 지역 인식과 구상은 강자 특히 헤게모니 국가의 인식을 반영한다.

188) 박사명(2007), 앞의 책.

189) 김예림(2007), 앞의 글.

〈표 6〉 한국의 지역 개념과 구상

개념	구상	주창자	대상 및 범위
동양	동양평화론	안중근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	태평양동맹 (Pacific Union)	이승만	태평양 연안 국가(일본 제외) : 한국, 미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남미 국가
	아시아태평양이사회 (ASPAC)	박정희	한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라오스 (옵저버)
	태평양정상회의 (Pacific Summit)	전두환	태평양 연안 37개국
동북아시아	동북아평화협의체	노태우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동북아시아 구상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노무현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동아시아		창비그룹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미국, 러시아)
	동아시아공동체 ASEAN+3(EAS)	김대중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게다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한국이 지역 개념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주변국가가 공유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와 학계, 학문영역, 심지어 개별 논자 사이에 존재하는 각 개념의 차별성에 둔감한 정리되지 않은 지역 인식 역시 문제이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예컨대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는 서로 다른 기원과 함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헌에서 엄밀한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도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범위와 학문적·정책적 함의는 다르다. 이런 문제는 보다 정교한 지역담론의 생성을 방해하고 연구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모호하게 해 왔다.

위에서 분석한 초보적 시도를 통해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지역 개념을 구분하고 각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범위와 함의를 가졌는지를 정리

하여, 그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밝혀 중층적인 지역 인식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북아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하지만 참여정부의 시도처럼 국가전체의 전략을 신기에는 아직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주변국과의 인식 차이를 비롯한 현실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급히 제시하였던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정책은 정교하지 못한 지역 인식이 정책적 비효율을 낳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념의 장단점과 함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 등을 분석하여 그 현실정치적 적실성을 구별해 내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전략을 만드는 것은 학문영역에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긴요한 과제이다.

## 2.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전개와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향후 동아시아는 현실주의적 한계와 자유주의적 혹은 다자주의적 가능성 속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쟁과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은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미래의 경쟁의 장에서 벌어질까 하는 점이다. 앞으로 펼쳐질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전략과 공동체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의 동북아 국제정치가 당분간 여전히 근대적 의미의 세력균형체제에 기반을 두고 작동한다고 볼 때, 가능한 미래의 체제적 모습을 상정해 보면 미국패권이 지속될 경우, 중국 주도의 동북아질서가 형성될 경우, 다국적 경쟁 질서가 형성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갈 경우, 다자주의 협

력이 가속화되어 공동체 형성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내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 먼저 예상되는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우리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하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

## 1) 동아시아 지역 국제정치 변화 가능성 진단

### (1) 미국 패권체제의 지속

미국은 세계 유일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군사비 지출의 40% 내외를 꾸준히 지출하고 있다. 21세기형 군사변환전략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10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안보레짐 등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적 공공외교로 미국의 대테러전쟁 주도권을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 더불어 부시행정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이른바 연성 권력강화전략 혹은 변환외교전략을 추진하여 경성 권력의 주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점차 악화되어 가는 국내경제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미국의 패권적 구조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1세기 전반을 통하여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미국의 패권체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순응전략이 불가피할 것이고,<sup>190)</sup>

---

190) 한국의 선택 대안에 관해서는 Stephen M. Walt(2005), *Taming American power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ew York : Norton 참조.

그 외중에 전형적인 동맹딜레마, 즉 연루·방기의 딜레마와 안보·자율성의 동맹딜레마에 처할 것이다.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의 경우 애초에 방기의 위험성을 경계하여 지나친 연루를 경계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한·미 양국의 안보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구전략에 연루될 위험성을 경계하게 되었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계속 미국의 지구전략, 동북아전략에 연루되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테러전략, 대중정책, 북한문제보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치중한 북핵전략,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을 둔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강화전략 등은 한국으로서는 이익도 있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는 정책이다. 더불어 미국 패권 동북아체제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시 정치적 자율성을 훼손당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국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속에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평 관계를 지향한 것이다. 그러나 미 주도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동맹 내에서의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안보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율성 확보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중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형성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연간 10%를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보여 왔고, 개발도상국형 경제성장에서 점차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이행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연성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매력공세’를 앞세워 중국의 국력강화가 지역질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질

서를 보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91)</sup> 과거 전통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은 시혜적 패권으로 기능하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sup>192)</sup>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단지 근대질서 속에서 하나의 강대국인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기존의 근대 국제질서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즉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혹은 국제체제 자체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는 없으나,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대테러전쟁 등 새로운 지구적 문제에 많은 국력을 집중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구조변환을 추구하고 주한·주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인데 더 시급한 지구적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더구나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미동맹, 미일동

191) Joshua Kurlantzick(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2) Zhang Yong Jin(2001), "System, Empire and State in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5) ; Victoria Tin-Bor Hui(2005),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ctoria Tin-Bor Hui (2004), "Toward a Dynamic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Insights from Comparing the Ancient Chinese and Early Modern European Syst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1), Winter, pp. 175~205 ; John K. Fairbank, ed.(1970),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전재성(2007),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맹 약화론 등은 더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에 기반한 것이다.<sup>193)</sup>

민약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내부의 정치경제적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연이어 군사적 강국화도 추구될 경우, 동북아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한국은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논리 위에서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취하는 정책, 중국에 대한 편승적 협력정책을 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약화시키면서 대중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주변국과의 협력을 고르게 추진하면서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중립적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對中) 균형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압력과 대중이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다. 대중 편승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과거 한미동맹의 동맹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현될 수 있다. 즉, 협력으로 인해 안보, 경제 이익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구조, 남북한 관계설정, 민족주의 사안 등의 처리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대중 중립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면 지속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 (3) 다극적 경쟁질서 형성

미국의 패권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중국의 부상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어 패권적 지위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일본과 러시아가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

193) Rajan Menon(2007), *The End of Allianc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유지할 경우, 동북아는 주변 4강의 다극적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이다. 미국의 국력약화와 중국의 경제발전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다극적 경쟁질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제도가 없을 경우, 동북아는 매우 역동적인 세력균형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 중 한국이 여전히 5위에 머물러 있다면 강대국 간 세력균형에서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경성 세력균형 질서에서 한국은 강대국 간 혹은 강대국 연합 간 세력차를 메울 만한 세력을 갖기가 쉽지 않고, 그러하다면 한국이 강대국 간 균형자의 역할을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연성 균형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동북아 세력 균형질서가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연성 균형전략은 보조적 위치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는 질서

낙관적인 가능성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협력질서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도 지속적으로 신장하겠지만,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당 부분 지속되고, 중국의 부상도 역시 러시아와 일본을 압도할 경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질서가 지속될 것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경쟁과 양극적 대립보다 협력이 주도할 경우, 동북아는 미·중 간의 이중패권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경쟁할 경우 미·중 양극질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으로서는 미·중 협력질서가 양극경쟁질서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상의 성격이 기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한정되고, 대중(對中) 관여정책이 성공하여 중국이 기존질서를 준수하면서 강화될 경우, 한·중 간은 물론 동북아 내에서 민주적 평화와 시장평화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적인 지역질서 대안을 가지고 부상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경쟁단계로 들어갈 것이고, 그 속에서 한국은 남북관계, 통일, FTA 등 양자경제관계, 지역문제해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5)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의 가속화

다자주의 협력이 빨라지면서 개별국가의 세력성장속도 및 세력균형구도와 상관없이 평화로운 협력이 지속되고, 동아시아공동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 모델과 같이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가 다자주의적 원칙하에 서로 협력을 가속화할 경우, 동북아는 세력균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할 것이다. 현재까지 동북아에는 견고한 지역협력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 ARF, NEACD, APEC, ASEAN+3, CSCAP 등의 다자제도가 있지만, 동북아에 집중하고 있는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협력안보제도라 문제를 심의하고 토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해결하고 강제하는 효율적인 기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sup>194)</sup> 그러나 만약 동북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질서가 창출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존과 안보에 투입하는 국력자원을 상당 부분 절감하고 경제·사회문화의 주요 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력과 비례하는 지역 내 발언권이 아닌, 가치와 정당성에 기초한 유사민주적 질서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동북아의 상대적 약소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다.

194) 하영선 편(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2)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요인 분석

향후 동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될 조건이 갖춰지거나 형성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최근의 경제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도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체제가 유지되거나 미·중 간 경쟁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동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낙관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타 지역, 특히 유럽과의 비교에서 흔히 제기되는 것은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사실 아시아 각국은 타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 규범, 국제법, 규칙에 의거하여 타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간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협력과 협동, 공동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현재 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현실주의적·도구적 질서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적·규범적 질서에 의해 점차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보적이고 편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성주의적·연대적 질서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지역적 집합정체성이나 집합적 이익이 확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 규범의 기초가 튼튼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 영토보존, 내정불간섭 등 국제연합에 명시된 근대 국민국가의 기초적 규범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이 무력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역내 국가 간 군비통제나 신뢰구축에 대한 명시적 제도가 많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

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아시아의 질서는 다양한 기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력구제, 패권의 역할, 양자주의, 동맹을 포함한 세력균형, 강대국 간 협조체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다자주의적 제도 등 안보제도의 스펙트럼상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식과 기제가 아시아 안보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그중에서 아시아에서는 패권과 자력구제, 세력균형과 같은 현실주의적 기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아의 질서가 미 패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거나 소수 강대국의 세력균형만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질서가 미국의 패권적 역할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물론 동맹의 네트워크와 전진배치, 확장된 억지력 등으로 역내 안보질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한반도, 양안관계, 중·일 간 경쟁에서 역내 안정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적 국민국가로 점차 자리 잡으면서, 이를 관장하는 규범을 제화하였고, 상호 간의 생존이나 발전, 협력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하였으며,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공동이익의 발견과 이의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경향의 확산은 미국의 패권적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역내의 분쟁과 갈등해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향후 미국의 역할에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미국은 역내 강대국 간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미국은 역내 상대적 약소국의 안보관심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약소국들은 미국이 역내에 있으며 역내의 강대국들의 야심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영토분쟁을 포함한 많은 잠재적 사안이 무력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토적

야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이러한 견해가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미국은 한·일 간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촉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트랙 2 외교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트랙 2 외교는 자유주의적·규범적 질서의 맹아를 싹틔우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 그 활동의 규범과 양식은 지역구조의 안정을 향상시키는 데에 모든 아시아 국가의 공동이익을 제고시킨다. 강대국의 관점에서 보면, 트랙 2 활동은 지역질서의 양자적 기초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트랙 2 외교의 다자적 활동은 강대국의 양자적 기초와 배타적 성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트랙 2의 기구들은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협력에 관해 회의적인 참여자를 보다 긍정적이고 대화지향적으로 변화시킨다. 트랙 2 활동을 통해 과거의 적대국이 우호관계를 맺는 것을 보는데, 특히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과거의 해묵은 감정에서 비롯된 적대감이 점차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sup>195)</sup>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향후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적 경쟁과 각축의 모습을 급속히 탈피할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공동체 마련을 위한 맹아적 움직임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양자의 흐름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195) Brian L. Job(2003), "Track 2 Diplomacy : Ideational Contribution to the Evolving Asia Security Order,"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V.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향후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정에도 도움이 되는 전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안보전략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다중 전략적 관계 설정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21세기적 전략적 동맹 구조조정,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관계,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조정은 한편으로는 한국이 앞으로 당면할 강대국 간 충돌에서 한국의 최후적 안보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지역적 협력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다자주의적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양가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중·일·러와의 관계협력도 단순히 양자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양자관계 강화의 전반적 틀, 더 나아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자적 협력을 이끄는 틀로 변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적 노력 뒤에는 다자적 협력을 위한 거대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거대전략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키는 연성 변환자(soft transformer)라 할 수 있다. 즉, 연성 권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환을 한국이 주도하여, 동아시아공동체 창출에 공헌하는 것이다. 여기서 변환이란 단순히 지역질서의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질서의 짜임새 자체의 변화를 의미

한다. 흔히 국제정치에서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 혹은 현실주의 질서라고 할 때, 거시적 혹은 중간단계적 짜임새를 이야기한다. 단순한 형태변화가 아니라 이러한 짜임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를 논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경쟁적 구도보다 협력적 구도가 정착될 때 보다 많은 국가이익이 확보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 지역다자협력 질서를 지향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북아 세력균형 질서 속에서 상대적 약소국 지위를 넘어 한국의 정책자원인 경제력·사회문화적 자원, 연성 권력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현재의 세력균형 구도로 보아 동북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자협력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다자협력구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원칙과 규범에 기반을 둔 진정한 다자주의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권력에 민감한 다자적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각국이 주장하는 제도적 구상 간 경쟁과 충돌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제도적 힘의 균형(balance of institutional power) 체제라는 복잡한 경쟁구도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sup>196)</sup>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를 구상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이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협력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취하면서, 한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협력제도 구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196)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2004),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그러나 단순히 국가이익 중심의 제도적 구상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상대적 약소국의 지위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가치적·지식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강대국의 자국 중심의 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지역질서를 염두에 둔 정책지 발상을 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장기적 원칙에 합의하도록 하여,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지역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익 패러다임을 가지게 하는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른바 지역질서 변환자 혹은 변환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sup>197)</sup>

한국은 지역적 제국으로 제국주의 전략을 추진해 본 적이 없고, 타국의 영토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복외교를 표방한 적도 없다. 동북아의 상대적 약소국 혹은 중진국으로서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를 추진하였고, 국익과 지역적 이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지역적 이익을 위한 많은 현안, 특히 환경, 난민, 테러, 비확산과 같은 인간안보 문제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입지강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구도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한국이 강대국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조정자 및 협력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다자적 협상의 제도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주변 강대국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국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제도적 틀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주변 강대국은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셋째, 한국 문제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지역공동체 출현에 공헌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들 수 있

---

197) Schroeder는 이를 transcending 전략이라고 부른다[Paul W. Schroeder(1994) 참조].

다. 6자회담은 애초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틀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안보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틀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소위원회 중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동북아 국가만의, 정부 간 다자안보대화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단순히 국가 간 이익에 기반을 둔 다자제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동북아 핵질서의 안정성 확보라는 동북아 국가 간의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자제도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를 지향하는 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은 한국과 동아시아 모두에 핵심이 되는 문제를 지역문제와 연결하여 공동체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왜곡된 근대이행과정에서 배가된 근대 국제정치의 경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근대이행 이전의 집합정체성 문제 해결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발전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걱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전근대 사대지소 질서를 다시 강조하며, 그 속에서 이타적 패권(benevolent hegemony)으로 작동해 온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연성 권력 전략과 맞물려 있는 이러한 노력은 한편으로 의미 있기도 하지만, 자국 중심이자 현재주의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과연 전근대 지역질서에서 중국과 주변 왕조가 가졌던 관계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어떠한 집합정체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동아시아 전체의 지적 유산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지역 공동의 상징과 기억, 문화를 배워 나갈 필요가 있다. 전근대로부터의 교훈은 원하던 원치 않든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 제기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동아시아 국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sup>198)</sup>

다섯째, 유럽의 경우처럼 근대적 자유주의가 추구한 시장평화와 민주평화

를 최대한 이용하는 공동체 전략이 필요하다. 복합적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자유주의적 정책이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내 경제교류의 증가,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 발전으로 인한 인적 교류 증가는 조심스러우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노력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전략적 호혜관계 역시 관 주도의 많은 한계가 있으나 경제적 교류증가 및 시민사회 교류를 강조하는 하나의 긍정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일 간, 한·중 간의 교류 역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족주의가 대결양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 특히 인간안보의 문제 혹은 탈근대 이슈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간안보 현안은 왜곡된 근대이행과 어느 정도 분리된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하나로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사와 같은 환경문제, 최근 중국 지진과 같은 재해, 북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 난민 등의 문제를 대할 때, 동아시아인들은 민족적 정체성보다 보편적 혹은 지역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정보혁명을 통한 정보화의 발전으로 앤더슨이 논하였던 인쇄자본주의의 정체성 변화 효과 같은 효과가 동아시아에서는 지역정체성 형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보화시대의 정체성은 민족정체성 강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역정체성 형성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일곱째, 이와 같이 전근대, 탈근대로 근대적 문제를 포위하면서, 민족주의가 새로운 통로를 통해 발현되고, 민족적 정체성과 보편적·지역적 정체성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체성 전략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

198) 전재성(2007), 앞의 글.

하다. 한국 역시 근대적 의미의 좁은 정체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 실용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보다 보편적인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민족을 정의하는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중 시민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출생, 종교, 조상의 요인과 마찬가지로 언어, 국적 소지, 장기거주, 제도와 법 존중, 소속감 등의 요인이 증시되고 있다. 특히 시민적 요인 중에 소속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기거주는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sup>199)</sup> 외국인 100만 시대를 앞둔 현재의 한국인에게 민족을 정의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탈민족주의적 통일, 새로운 한반도 거버넌스, 네트워크적 동아시아 지역 등의 논의가 일어나기도 한다.<sup>200)</sup>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기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인식함과 더불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시민사회, 개인, 기업, 언론 등 많은 행위자의 네트워크적 연결성이 중요하며,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통일성을 가지게 하는 조정작업이 중요하다.<sup>201)</sup> 21세기 국제정치 전망

199) 윤인진(2005), 「민족문제의 재성찰 : 민족주의와 국민정체성」, 『한국사회학회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광복 6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200) 박명규(2008),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41집 ; 최형익(2006),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2호, 10쪽 ; 백승욱(2007), 「동아시아 속의 민족주의 : 한국과 중국」, 『문화과학』 통권 52호 ; 고성빈(2007),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 이광일(2007), 「동아시아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진보좌파의 대응」, 『문화과학』 통권 52호.

201) 하영선·김상배 편(2007),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

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도 비국가 행위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중심의 공동체 전략을 탈피하여, 다차원적·거버넌스적 공동체전략 혹은 네트워크 형성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문〉

- 강택구(2007), 「탈냉전기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제3호.
- 강택구(2008), 「동아시아 지역내 강대국 간 경쟁과 세력전이 : 21세기 중국의 대일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2호.
- 고성빈(2007),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 고야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 구범모·백종국(1990), 「한국의 후발산업화 연구에 관한 문헌비평」, 『한국정치학회보』 제24권 1호.
- 국민호(2007), 「동아시아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동양사회사상』 제15집.
- 김경일(2005), 「대동아공영권의 이념과 아시아의 정체성」,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김기석(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김기석(2007), 「일본의 동아시아 통합전략」, 『국가전략』 13권 1호.
- 김기석(2008), 「일본의 동아시아 통합전략 : 미국,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편,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 김명섭(2005), 「동아시아냉전질서의 탄생」,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김석근(2006), 「유교자본주의? 짧은 유행과 긴 여운 그리고 남은 과제」, 『오늘의 동양사상』 제14호 2권.
- 김영작(2006),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상 : 이론, 전략적 방법에 관한 시론」,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김예림(2007),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 해방-한국전쟁 후

- (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 김유은(2004),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 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 김진영(2007),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4호.
- 남궁곤(2006), 「도이치(Karl Deutsch)의 고전적 통합이론에 의한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실천과정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 노기명(2002), 「이승만 정권의 태평양 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 제11권.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200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상』, 동북아시아위원회.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2006), 『참여정부의 동북아시아 구상』, 동북아시아위원회.
- 딜릭 아리프, 김영희 역(1993),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 지역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창작과 비평』 통권 73호.
- 마상윤(2007), 「한국의 지역주의 구상」,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지식마당.
- 박명규(2008),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41집.
- 박명림(2006a), 「한국인의 지역인식과 구상 (2) : 김대중의 사례」,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 박명림(2006b), 「노무현의 동북아구상연구 : 인식, 비전, 전략」, 『역사비평』 통권 76.
- 박사명(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 박인휘(2003),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안보전략」, 『世界地域研究論叢』 제20집.
- 박인휘(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과 제도화 : 유럽공동체의 교훈과 지역 정체성 창출방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 박재규 외(1985), 「아시아태평양문제 기초연구 : 지역협력체 구상을 위한 방법론적 시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권 1호.

- 박재욱(2006), 「일본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 전략과 시사점」, 『국제문제연구』 2006년 겨울호.
- 박준영(1983),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적 의의 재조명」, 『사회과학 논집』 3, 이화여자대학교.
- 박진희(2006),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구상」, 『역사비평』 통권 76호(가을).
- 박태균(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통권 76호(가을).
- 배공찬(2005a),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 분석 :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편, 『주요국제문제분석』.
- 배공찬(2005b), 「동아시아공동체의 발전과정 :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백승욱(2007), 「동아시아 속의 민족주의 : 한국과 중국」, 『문화과학』 통권 52호.
- 백영서(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 백영서(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 백영서 외(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손열 외(2006),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 왕임동(1986), 「아시아태평양 협력체 구상과 동남아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 윤민진(2005), 「민족문제의 재성찰 : 민족주의와 국민정체성」, 『한국사회학회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광복 6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 윤태영(2005),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 이광일(2007), 「동아시아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진보좌파의 대응」, 『문화과학』 통권 52호.
- 이남주(2005),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이동연(2007), 「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 : 비판적 검토」, 『문화과학』 통권 52호 (겨울).
- 이동원(2001), 『행동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다』, 중앙M&B.

- 이동휘(2005), 『북핵 6자회담의 과제 : 다자협상분석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 이수훈(2004), 「동북아시아대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동아일보사.
- 이숙종(2006), 「동북아 민족주의의 미래 : 시론적 탐색」,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올아카데미.
-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22.
- 장인성(2005),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과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 26집 2호.
- 전재성(2007),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 전제국(1999), 「아시아적 가치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1호.
- 정문길 외(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정문길 외(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정용화(2006), 「한국의 지역인식과 구상 (1) : 동양평화구상」,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 지역의 인식, 구상, 전략』, 지식마당.
- 조윤영(2006),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 가능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 최영중 외(2005),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영호(1999),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 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동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2호.
- 최원식(1995),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동아시아 :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최원식(2001), 「한국과 동아시아」,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원식(2004),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 동아시아론 보유」,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장집(2004),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와 지평」, 『아세아연구』 제47권 4호.
- 최형익(2006),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

와 인권』 제6권 2호.

하영선 외(1996),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전망과 과제」, 『지역연구』 5권 3호 (가을).

하영선 편(2008),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김상배 편(2007),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동아일보사.

한상일(2005), 「동아시아공동체론 :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4권 1호.

한석희(2004), 「中國의 浮上和 東아시아 秩序 變化 : 中國 第4世代 指導府의 平和發展戰略을 中心으로」, 『新亞細亞』 11(3).

현광호(2006), 「유길준과 안중근의 동아시아 인식 비교」, 『역사비평』 가을호.

### <중문>

江澤民(2002),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 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江澤民(2006), 『江澤民文選』 第三卷, 北京 : 人民出版社.

穀源洋(2006), 「亞洲發展與區域合作的互動」, 『亞太研究論叢』 第三輯.

課題組(2000), 「世界主要國家綜合國力評估」,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全球戰略大格局 : 新世紀中國的國際環境』, 北京 : 時事出版社.

關世傑(1996), 「試論21世紀東亞發展中的文化問題」, 『國際政治研究』 第2期.

金燦榮 主編(2006), 『多變主義與東亞合作』, 北京 : 當代世界出版社.

唐世平(2001), 「再論中國的大戰略」, 『戰略與管理』 第4期.

唐世平·張濶崙(2004),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 2004年 第6期.

唐世平·曹筱陽(2002), 「尋求中美日相互安全的基點」, 『戰略與管理』 第1期.

羅榮渠(1997), 『現代化新論繼篇 : 東亞與中國的現代化進程』,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劉江永·閻學通(2004), 「關於建立東亞安全共同體的戰略設想」, 『復印報刊 國際政治』 第7期.

劉江永·閻學通(2005), 「加強東亞安全合作的建議」, 閻學通·金德湘 主編, 『東亞和平

與安全』,北京:時事出版社。

劉少華(2007a),「東亞區域合作的路徑選擇」,『國際問題研究』第5期。

劉少華(2007b),「論東盟在東亞區域合作中的領導能力」,『當代亞太』第9期。

劉昌黎(2007),「東亞共同體問題初探」,『國際問題研究』2007年 第2期。

李榮林(2005),「中國-東盟自由貿易區與東亞區域經濟一體化」,『當代亞太』第8期。

李恆(2005),「東亞區域合作:雙邊自由貿易協定還是區域經濟一體化?」,『當代亞太』第1期。

門洪華(2001),「國際機制與中國的戰略選擇」,『中國社會科學』第2期。

門洪華(2004),「中國和平屈起的國際戰略框架」,『世界經濟與政治』2004年 第6期。

門興華(2004),「地區認同與亞洲區區主義」,『現代國際關係』2004年 第5期。

門洪華(2005),『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北京:北京大學出版社。

朴鍵一(2003),「北京六方會談與朝鮮核問題前景」,『當代亞太』第10期。

龐中英(2001),「中國的亞洲戰略:靈活的多邊主義」,『世界經濟與政治』第10期。

龐中英(2003),「地區化,地區性與地區主義論東亞地區主義」,『世界經濟與政治』2003年 第11期。

北京外國問題研究會 編(2006),『亞洲區域合作路線圖』,北京:時事出版社。

蘇浩(2006),「東亞開放地區主義的演進與中國的作用」,『世界經濟與政治』第9期。

楊貴言(2002),「東亞概念辨析」,『當代亞太』第2期。

易培強(1998),「關於“東亞模式”的思考」,『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第4期。

閻學通(1996)『中國國家利益分析』,天津:天津人民出版社。

閻學通(2007),「東亞和平的基礎」,王緝思 總主編,『中國學者看世界:閻學通 主編 國際安全卷』,北京:新世界出版社。

閻學通·週方銀 編(2004),『東亞安全合作』,北京:北京大學出版社。

葉自成(2004),『新中國外交思想:從毛澤東到鄧小平』,北京:北京大學出版社。

王聯合(2006),「東亞共同體:構想,機遇,挑戰」,『世界經濟與政治論壇』第2期。

王毅(2006),「思考二十一世紀的新亞洲主義」,『外交評論』2006年 第3期。

王逸舟(1995),『當代國際政治析論』,上海:上海人民出版社。

王正毅(2003),「亞洲區域化:從理性主義主向社會建構主義」,『世界經濟與政治』2003年 第5期。

溫家寶(2004. 11. 29),「加強合作,互惠共贏」,溫家寶總理在第八次東盟與中日韓領

導人會議上的講話。

- 牛海彬(2005),「亞洲區域主義的建構主義解讀」,『現代國際關係』2005年 第12期。
- 熊海堂(1995),『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南京:南京大學出版社。
- 陸建人(2005),「論中國的區域合作政策」,『當代亞太』第10期。
- 張蘊嶺(2006),「新東亞地域主義的興起」,『亞太研究論叢』第3輯。
- 張蘊嶺(2008),「對東亞合作發展的再認識」,『當代亞太』第1期。
- 程極明(1998),「關於“東亞模式”的思考」,『國外社會科學情況』第3期。
- 鄭先武(2004),「安全共同體理論和東盟的實踐」,『世界經濟與政治』第5期。
- 鄭先武(2007),「東亞共同體願景的虛幻性析論」,『現代國際關係』第4期。
- 曹雲華(2005),「論東亞一體化的動力與源泉」,『當代亞太』第8期。
- 朱鋒(2003),「六方會談後的朝核危機:問題與前景」,『現代國際關係研究』第9期。
- 朱鎔基(2001. 11. 5),「加強東亞合作,促進共同發展」,朱鎔基總理在第五次東盟與中日韓領導人會議上的講話。
- 中共中央文獻研究室(1994),『毛澤東外交文選』,北京: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2007),『十六大一來中亞文獻選編』,北京: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8),『鄧小平思想年譜』,北京: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00),『十五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2002),『中共十三屆四中全會以來歷次全國代表大會中央全會重要文獻選編』,北京:中央文獻出版社。
- 中國科學院 編(2008),「提出中國國際現代化的‘和平鴿’戰略設想.中科院發布」,『中國現代化報告 2008』。
- 秦亞青(2005),「東亞共同體建設進程與美國作用」,『外交評論』第6期。
- 楚樹龍(1999),「中國的國家利益,國家力量和國家戰略」,『戰略與管理』第4期。
- 肖承鋒(2004),「從新地區主義視角看中國多邊外交戰略」,『國際問題論壇』,春季號。
- 肖歡容(2003),「中國的大國責任與地域主義戰略」,『世界經濟與政治』第1期。
- 崔立如 主編(2006),『東北亞地區安全政策及安全合作構想』,北京:時事出版社。
- 馮詔奎(2004),「東亞共同體:要過十道」,『世界知識』第10期。
- 現代國際關係研究所東盟課題組 編(2004),「中國對東盟政策研究報告」,『現代國際關係』第10期。
- 胡錦濤(2007),「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

斗」(在中共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胡安鋼·門洪華 主編(2005), 『中國：東亞一體化戰略』, 杭州：浙江人民出版社.

『人民日報』.

『中國青年報』.

## 〈일문〉

姜尙中(2001), 『東北アジア共同の家をめざして』, 東京：平凡社.

高埜健(2001), 「ASEANの擴大大國關係：地域秩序へのイニシアチブと限界」, 山影進 編, 『轉換期のASEAN：新たな課題への挑戦』,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高原明生·藤原歸一·李鐘元(2003), 「東アジアの平和構想」, 金子勝·藤原歸一·山口二郎 編, 『東アジアで生きよう』, 東京：岩波書店.

菊池努(1995), 『APEC：アジア太平洋新秩序の模索』,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菊池務(2001. 5), 「東アジア地域主義の可能性：ASEAN+(日中韓)の経緯と展望」, 『國際問題』 494.

菊池努(2005), 「東アジア共同體構想：背景と展望」, 黒柳米司 編, 『アジア地域秩序とASEANの挑戦』, 東京：明石書店.

金子勝·藤原歸一·山口二郎 編著(2003), 『東アジアで生きよう!：經濟構想·共生社會·歴史認識』, 東京：岩波書店.

大庭三枝(2001), 「地域主義と日本の選択」, 末廣昭·山影進 編, 『アジア政治經濟論：アジアの中の日本を目指して』, 東京：NTT出版.

大庭三枝(2003), 「通貨·金融協力とFTAに見る日本の東アジア地域形成戦略」, 山影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大庭三枝(2004), 『アジア太平洋地域形成への道程：境界國家日豪のアイデンティティ模索と地域主義』, 京都：ミネルヴァ書房.

渡邊泰造(2003), 「共同體意識から見る東アジア協力と日本の進路」, 山影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渡邊利夫(2004), 『東アジア市場統合への道』, 東京：勁草書房.

渡邊利夫(2005), 『日本の東アジア戦略—共同體への期待と不安』, 東京：東洋經濟新聞社.

末廣昭(2005), 「アジア有限パートナーシップ論：日本の東アジア關與の新しいかた

- ち, 渡邊昭夫 編, 『アジア太平洋連帯構想』, 東京: NTT出版.
- 毛里和子(2007), 「東アジア共同體を設計する: 現代アジア學へのチャレンジ」, 毛里和子 編,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1: 新たな地域形成』, 東京: 岩波書店.
- 毛里和子 外(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東京: 岩波書店.
- 木宮正史(2001), 「一九六〇年代韓國における冷戦外交の三類型: 日韓國交正常化, ベトナム派兵, ASPAC」, 小此木政夫・文正仁 編, 『國家・市場・國際體制』,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防衛問題懇談會(1994),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 21世紀に向けての展望』, 東京: 内閣官房内閣安全保障室.
- 防衛廳(2006), 『防衛白書 2006: 平成18年版 日本の防衛』.
- 防衛廳(2007), 『防衛白書 2007: 平成19年版 日本の防衛』.
- 白石隆(2004), 『帝國とその限界: アメリカ・東アジア・日本』, 東京: NTT出版.
- 保城廣至(2001), 「岸外交評價の再構築: 東南アジア開發基金構想の提唱と挫折」, 『國際關係論研究』 17.
- 福田康夫(2008. 5. 22), 「太平洋が内海となる日: 共に歩む未來のアジアに五つの約束」(國際交流會議 主催『アジアの未來』晚餐會演説).
- 北岡伸一(2004), 『日本の自立: 對米協調とアジア外交』, 東京: 中央公論新社.
- 寺田貴(2001), 「ASEAN+3の可能性を探る: 東アジア地域主義の成立に向けて」, 『外交フォーラム』 14(7).
- 寺田貴(2002), 「日本のAPEC政策の起源: 外相三木武夫のアジア太平洋圏構想とその今日的意義」, *Review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No.23.
- 山本吉宣(2007), 「地域統合理論と東アジア共同體」, 毛里和子 編,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1: 新たな地域形成』, 東京: 岩波書店.
- 山本武彦(2007), 「日本の東アジア共同體外交と共同體構想」, 毛里和子 編,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1: 新たな地域形成』, 東京: 岩波書店.
- 山景進(2003),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ASEANパートナーシップ」, 山景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山沢逸平(2005), 「環太平洋連帯構想はどれだけ進展したか」, 渡邊昭夫 編, 『アジア太平洋連帯構想』, 東京: NTT出版.
- 森嶋通夫(2001), 『日本にできることは何か—東アジア共同體を提案する』, 東京: 岩

波書店.

- 西口清勝·夏剛 編(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西原正(1994), 「アジア・太平洋地域と多國間安全保障協力の枠組み: ASEAN地域フォーラムを中心に」, 『國際問題』 415.
- 船橋洋一(2007. 4. 16), 「日本・世界: 6者, 日本はもっと關與を」, 『朝日新聞』.
- 小島朋之(2000. 5. 23), 「北東アジアの多國間安全保障體制構築を」, 『世界週報』.
- 小原雅博(2005), 『東アジア共同體: 強大化する中國と日本の戰略』,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小泉純一郎(2002), 「共に歩み共に進むコミュニティ」(シンガポール演說).
- 松本健一(2005. 5. 26), 「新しいアジア構想を」, 『朝日新聞』.
- 神谷萬丈(2003), 「安全保障の概念」, 防衛大學校安全保障學研究會, 『安全保障學入門』, 東京: 亞紀書房.
- 五百旗頭 編(2006), 『眞戦後日本外交史』(新版), 東京: 有斐閣.
- 五十嵐武士(1999), 「日米安保體制の再定義と東アジア」,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歴史的文脈と未來の構想』,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外務省(1978), 「福田總理大臣のマニウにおけるスピーチ」.
- 外務省 編(2003), 『外交青書: 2003』, 東京: 日本外務省.
- 伊藤憲一·田中明彦 監修(2005), 『東アジア共同體と日本の針路』,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 日本經濟團體聯合會(2003. 1. 1), 「活力と魅力溢れる日本をめざして」.
- 赤根谷達雄(2004), 「日本の安全保障に關する理論的考察」, 赤根谷達雄·落合浩太郎. 『日本の安全保障』, 東京: 有斐閣.
- 田中明彦(2003), 「東アジア」という新地域形成の試み: ASEAN+3の展開」,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編, 『アジア學の將來像』,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田中明彦(2007), 『アジアのなかの日本 日本の〈現代〉2』, 東京: NTT出版社.
- 鄭階娥(2002), 「1960年代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と日本の外交政策: アジア開發銀行(ADB)本店所在地決定過程を中心に」,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科, 『比較社會文化研究』 11.
- 曹良鉉(2006), 「1977年福田起夫首相東南アジア歴訪と日本の東南アジア政策形成: 『福田ドクトリン』をめぐる通説の批判的檢討」, 國際關係論研究會, 『國際關係論研

究』22號.

佐島直子(2003), 「東アジアの地域化と日本の安全保障對話・防衛交流」, 山景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佐藤考一(2003), 「ASEANを中心とした廣域安全保障協力と日本」, 山景進 編, 『東アジア地域主義と日本外交』,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天兒慧(2004. 6. 16), 「有識者集い 語り合う場を」, 『朝日新聞』.

太田博(2001), 「海洋國家日本の構想: 世界秩序と地域秩序」, 伊藤憲一 編, 『海洋國家日本の構想: 世界秩序と地域秩序』, 東京: 日本國際フォーラム.

波多野澄雄(2004), 「“歴史和解”への道標: 戦後日本外交における“歴史問題”」, 編添 谷芳秀・田所昌幸 編, 『日本の東アジア構想』,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坂本多加雄(2001), 『國家學のすすめ』, 東京: ちくま書房.

和田春樹(2003), 『東北アジア共同の家: 新地域主義宣言』, 東京: 平凡社.

丸山直起(1973), 「地域サブシステムの展開」, 『國際政治』 48.

榮澤幸二(1995), 『‘大東亞共榮圈’の思想』, 東京: 講談社.

經濟産業省(2006), 『グローバル經濟戰略』.

讀賣新聞20世紀取材班 編(2001), 『20世紀 大東亞共榮圈』, 東京: 中央公論新社. 『朝日新聞』.

『外交青書』.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vision2025.html>(2003년 1월 3일 검색)

#### <영문>

Beeson, Mark(2003a), “ASEAN Plus Three and the rise of reactionary regionalis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5(2).

Beeson, Mark(2003b), “ASEAN+3 and the Rise of Reactionary Regionalis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5(2).

Bowles, Paul(2002),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United)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2).

Bridges, Brian(2006), “From ASPAC to EAS : South Korea and the Asian

- Pacific Basin,” *Working Paper Series*, Center for Asian Pacific Studies, Lingnan University.
- Cantori, Louis J. and Spiegel, Steven L.(1970),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gions : a Comparative Approach*,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Capie, David(1994), “Rival Regions? East Asian Regionalism and It’s Challenge to the Asia-Pacific,” *Pacific Review*, 7(2).
- Caporaso, James A.(199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 The Search for Foundations,” John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ung, Tae Dong(1977), “South Korea and Southeast Asia : A Reassessment,” *Asian Perspective*, 1(1).
- Cumings, Bruce(1997), “Japan and Northeast Asia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Peter Katz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 Japan and Asia*, Ithaca : Cornell Univ. Press.
- Deng, Yong(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rlik, Arif, ed.(1998), *What Is In a Rim?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Pacific Region Idea* 2nd ed., New York : Rowman & Littlefield.
- Dueck, Colin(2006), *Reluctant Crusaders : Power, Culture, and Change in American Grand Strateg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ast Asia Study Group(EASG)(2002),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 East Asia Vision Group(EAVG)(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 Fairbank, John K, ed.(1970),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ggard, S.(1969),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Americas,” Mansfield, Hellmann, Donald C., “Emergence of an East Asian International Sub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3.
- Haggard, Stephen(1997),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Mansfield,

- Edward D. and Milner, Helen V.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 Baogang(2004), "East Asian Ideas of Regionalism : A Normative Critiqu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8(1).
- Higgot, R. A.(1998), "The Asian Economic Crisis :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3(3).
- Higgot, Richard and Stubbs, Richard(1995), "Competing Conceptions of Economic Regionalism : APEC versus EAEC in the Asia Pacific,"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
- Hughes, Christopher and Fukushima, Akiko(2004), "U.S.-Japan Security Relations : Toward Bilateralism Plus?," Krauss, Ellis S. and Pempel, T. J. eds., *Beyond Bilateralism : U.S.-Japan Relations in the New Asia-Pacific*,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i, Victoria Tin-Bor(2004), "Toward a Dynamic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Insights from Comparing the Ancient Chinese and Early Modern European Syst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1).
- Hui, Victoria Tin-Bor(2005),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d, Markus(2003), "ASEAN Plus Three : Towards a New Age of Pan-East Asian Regionalism? A Skeptic's Appraisal," *The Pacific Review*, 16(3).
- Ikenberry, G. John(2004), "America in East Asia : Power, Markets, and Grand Strategy," Krauss, Ellis S. and Pempel, T. J. eds., *Beyond Bilateralism : US-Japan Relations in the New Asia-Pacific*,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ng, Hoon and Mori, Yuichi eds.(2004), *Cooperation Experiences in Europe and Asia*, Tokyo : Shinzansha.
- Jin, Zhang Yong(2001), "System, Empire and State in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5).
- Job, Brian L.(2003), "Track 2 Diplomacy : Ideational Contribution to the Evolving Asia Security Order," Alagappa, Muthiah ed., *Asian Security*

- Order :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1997), "Introduction :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Katzenstein, Peter J. and Shiraishi, Taka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2000), "Regionalism and East Asia" *New Political Economy*, 5(4).
- Katzenstein, Peter J. and Shiraishi, Takashi eds.(1997), *Network Power : Japan and Asia*,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1990), "Multilateralism :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XL vo. 4.
- Koizumi, Junichiro(2002), "Japan and ASEAN in East Asia : A Sincere and Open Partnership."
- Kurlantzick, Joshua(2007), *Charm Offensive :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Lanteigne, Mark(2005), *China and Interantional Institutions : Alternative Paths to Global Power*, N. Y : Routledge.
- Leonard, Mark(2008), *What Does China Think?*, N. Y. : Publicaffairs.
- Lijun, Sheng(2003), "China-ASEAN Free Trade Area : Origins, Developments and Strategic Motivations," *ISEAS Working Paper*.
- Lincoln, Edward J.(2004),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 Manning, Robert and Stern, Paula(1994), "The Myth of the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Nov/Dec).
- Mansfield, Edward D. and Milner, Helen V. ed.(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Columbia :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rtin, Lisa L.(1992), "Interests, Power, and Multilater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4).
- Medeiros, Evans S. and Fravel, Taylor M.(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82(6).

- Menon, Rajan(2007), *The End of Allianc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Nakagawa, Roji(2005), "The Revival of 'Northeast Asia' in Japan : Why Have Japanese Opinion Leaders Begun to Speak of 'Northeast Asia'?"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Vol. 3.
- Paul, T. V., Wirtz, James J., and Fortmann, Michel eds.(2004), *Balance of Power :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th Century*,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 Pempel, T. J.(2005), *Remapping East Asia :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 Peou S.(2002), "Regional community building for global security governance," Rittberger, V. ed.,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21st Century*, Tokyo :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Rapkin, David P.(2001),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Power to Block : The APEC and the AMF Cases," *The Pacific Review*, 14(3).
- Ravenhill, John(2000), "APEC Adrift : Implications for Economic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cific Review*, 13(2).
- Ravenhill, John(2001), *APEC and the Construction of Pacific Rim Regional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venhill, John(2002), "A Three Bloc World? The New East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2).
- Reischauer, Edwin O. and Fairbank, John K.(1969), *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Rozman, Gilbert(1998), "Flawed Regionalism : Reconceptualizing Northeast Asia in the 1990s," *The Pacific Review*, 11(1).
- Rozman, Gilbert(2004),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zman, Gilbert, Togo, Kazuhiko, and Ferguson, Joseph eds.(2007), *Japanese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 (Strategic Thought in Northeast Asia)*,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 Ruggie, John Gerard(1992), "Multilateralism :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 Samuels, Richard J.(2007), *Securing Japan :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2004), "China Engages Asia :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9(3).
- Stubbs, Richard(1999),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Comparative Politics*, 31(3).
- Stubbs, R.(2002), "SEAN Plus Three :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Asian Survey*, 42(3).
- Sutter, Robert(2006. 9. 8), "Why Rising China Can't Dominate Asia" *PacNet*, No. 45.
- Terada, Takashi(2005), "Creating an East Asian Regionalism," *The Japanese Economy*, 32(2).
- Terada, Takeshi(1999), "Genesis of APEC : Australian-Japan Political Initiatives," *Pacific Economic Papers*, No. 298(December).
- Terada, Takeshi(2003), "Constructing an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 From EAEC to ASEAN+3," *The Pacific Review*, 16(2).
- Walt, Stephen M.(2005), *Taming American power :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ew York : Norton.
- Webber, Douglas(2001),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The Pacific Review*, 14(3).
- Yahuda, Michel(1996),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Asia-Pacific, 1945~1996*, London : Routledge.
- Zhang, Yong Jin(2001), "System, Empire and State in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5).



#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나종석 · 권용혁 · 이진원

I. 머리말

II. 한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III. 일본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IV. 실증적 자료로 본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정체성 문제

V. 실증적 자료로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VI.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비전과 제언



#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니중석 · 권용혁 · 이진원

## I. 머리말

21세기 초 세계질서는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과거 미소의 냉전구조는 와해되고 미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는 양상 속에서도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다. 이와 더불어 세계를 자국에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 준다. 세계질서의 복잡성과 다층성은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전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발전, 러시아의 재부상, 일본의 이른바 정상국가화 내지 보통국가화의 흐름 등으로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크게 요동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더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변화가 대단히 복잡하며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동아시아 및 아시아의 부활을 넘어서 21세기는 중국 혹은 아시아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변

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지역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여러 동아시아 국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일단 도외시하더라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화’라는 단어 못지않게 ‘동양’ 혹은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지식사회 및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이론’이 하나의 유행이론이 될 정도로 동아시아는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동북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이나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이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지역통합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개별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계화가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통합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온존하는 남북대결이 상징하듯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냉전 시기의 적대적 대립의 잔재를 극복하고 보다 항구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패권주의적 경향을 제어할 세력균형의 현실정치적 맥락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거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가속화에 적응할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통합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목하는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질서 구상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존재한다. 이는 근대 서구의 문명적 패러다임을 극복할 대안질서 창출의 매체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로 표출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조건의

하나로 문화적 공통성의 존재 여부 및 동아시아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동아시아적 정체성 형성의 이념적 지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세계화·정보화·민주화로 야기된 거대한 전환(transformation)의 시대에 근대 국민 국가 질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로 상대적인 문화적 동질성 형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그 동질성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성찰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동아시아 이론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공동변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초국가적 지역 질서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이다. 정체성은 각 개인이나 제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아시아적 질서와 제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질서 속에서 의미 있는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런 공동체는 형성될 수도 없고 설령 형성된다 해도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해 동아시아 지역 주민 사이의 동아시아적 정체성이 충분할 정도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공동체는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평화로운 공존이나 지역협력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적실하며 학문적으로도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명료하게 해야 할 과제이다.<sup>1)</sup>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서구와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의 특수성에서 구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미 동아시아적 문화적 동질성이나 정체성이 존립하고 있다는 관점은 동아시아적 현실에 대한 대단히 일면적인 접근방식의 산물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 연구는 오히려 서구와의 접촉과정에서 동아시아 사회가 경험한 구조적 변동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문제의식의 틀 내에서 동아시아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문화적 영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와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론 및 동아시아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차별화되는 문제의식을 추구한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공동체를 미래의 기획으로서 바라보는 이 연구는 기존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국가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를 고안해 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새로운 어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할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E. 사이드의 말대로 이론, 즉 이야기(story) 내지 설화(narrative)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sup>2)</sup>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공통적 사유구조, 즉 푸코가 에피스테메(episteme)라고 불렀던 지식체계가 고정불변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변형되어 가는 것이라는 역사적·계보학적 관점을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sup>3)</sup>

1) 김기봉(2006), 『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민병원(2008), 「동아시아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2)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2004),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1쪽.

그러나 푸코적인 권력·지식의 연계 이론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배적인 행위와 사고방식의 자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주도적 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새롭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지배적 이론의 배후에 놓여 있는 생산적인 권력의 망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푸코의 권력·지식 이론은 권력에 의해 억압받지 않은 주체적인 자아실현이라는 이념을 포기하지 않지만,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푸코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유통되는 지배적인 행위와 사고방식, 관습이 다른 사고방식 및 행위양식에 비해 더 선호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둘째, 동아시아공동체를 ‘미래의 기획’으로 바라보는 이 연구는 문화와 정체성을 바라보는 종합적 관점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존 동아시아 문화이론과 차별성을 보여 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가 전제하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관점은 서구에서 발전한 특정한 유형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푸코와 하버마스의 이론의 통일 내지 종합을 추구한다. 이때 우리는 헤겔에서 시작되어 장 폴 샤프트르, 찰스 테일러, 악셀 호네프 등에 의해 정교하게 발전된 인정투쟁이론의 통찰을 적극 수용한다. 왜냐하면 이 인정투쟁 모델은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을 받아들이면서도 보편적 규범에 대한 추구를 타자와 차이에 대한

3) 미셸 푸코 저, 홍성민 역(1997),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답』, 나남출판.

4) 낸시 프레이저 저, 정일준 편역(1999), 「푸코는 소장 보수주의자인가?」, 『푸코-하버마스 논쟁재론.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새물결, 245쪽.

전체주의적 억압과 배제의 시도로 기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 모든 집단과 인간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 인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을 모색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하나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가능성을 진단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분석틀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이론의 새로운 지평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는 데 권력과 문화 내지 권력과 지식의 연계 이론의 장점을 수용하여 문화 및 정체성이 권력의 구성물임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문화적 정체성이나 가치 및 규범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문제와 분리시켜 바라보는 관점의 협애함을 넘어서 이 둘 사이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 관점은 권력과 지식의 연계성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된 차원의 것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보편성을 띤 사회구성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정치질서인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도외시되고 망각된 탈국민국가적 흐름과 그에 결부된 동아시아적 모색에 대한 재평가는 기존 국민국가 중심의 틀을 내부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형시킬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 비판과 해체의 관점은 당위론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을 강변하지 않고 기존의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이론의 방향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이론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기존의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비판작업이 없다면 세계를 다르게 보고 인지하는 활동의 출현은 물론이고 보다 바람직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작업은 불가능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권력과의 연관성에서 보고 그것을 인간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

본다는 것을 전통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의 문제를 고민할 때, 문화를 권력의 산물로 보는 태도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교류의 실체나 공동의 문화적 요소를 완전히 허구적인 것으로 치부한다는 결론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과의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망은 분명 인간의 일상적 삶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이 일상적 삶이 전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오로지 역사에 뿌리를 둔 전통으로서의 문화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수정가능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고정불변인 실체적인 것으로 신화화하는 태도이다.

셋째, 동아시아공동체를 ‘미래의 기획’이자 역사적 과제로 바라보는 이 연구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정체성 문제, 특히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이념, 가치, 논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중심적 동아시아 이론과 차별화된다. 즉,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을 과거의 문화적 전통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동아시아 3국의 가족, 기업, 시민사회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비교연구 및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여러 이론 작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파악한 바로는 유교문화적 동질성이 미래지향적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맥락에서 이 연구는 기존 동아시아 문화이론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동아시아공동체를 미래의 기획으로 바라보면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보편지향적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취하는 연구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과제는 그 학제적 성격상 두 가지 연구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유교적 가치의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적 자료분석을 바

탕으로 하는 철학적 반성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작업은 그 성격상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성격을 띤다. 인문학적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현장연구의 목적이나 범위가 설정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내실 있는 비교연구나 인문학적 반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II. 한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소비에트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냉전이 해체된 후 한국에 동아시아에 대한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sup>5)</sup> 그 후 그에 대한 많은 학문적 논쟁과 의미 있는 학문적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학계를 벗어난 정치·경제적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눈에 띄게 신장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일제강점기 시기에 존재하였던 아시아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제외하고 탈냉전 이후 등장한 여러 갈래의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지형을 그리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작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의 길잡이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

5)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도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였다. 그런 점에서 요즘 널리 관심을 끌고 있는 동아시아 이론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관심의 부활이라는 편이 더 적절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존재하였던 한반도, 중국, 일본에서의 아시아 지역주의의 여러 흐름에 대해서는 최원식·백영서 편(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참조.

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 이론의 흐름과 경향에 대한 박승우의 체계적인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sup>6)</sup> 그는 「동아시아 이론의 현황과 문제」라는 글에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동아시아 이론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네 가지란 ① 경제공동체 이론, ② 지역 패권주의 이론, ③ 동아시아 정체성 이론, ④ 대안체제 이론이다. 박승우처럼 한국에서 등장하는 여러 동아시아 지역주의 이론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최영종의 정리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이론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지역통합이론을 ① 기능주의적 접근법, ② 현실주의, ③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 ④ 구성주의로 나누어 각각의 이론적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을 탐구한다.<sup>7)</sup>

박승우가 정리한 여러 이론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경제공동체 이론은 자본주의적 세계화 추세의 심화 및 냉전체제 이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영향력 증대, 유럽연합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 등 지역주의 흐름의 강화, 1990년대 말 동아시아에 몰아닥친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공동체 이론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 건설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추구를 통해 거세계 몰아치는 전 지구화의 흐름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초국가적 기제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 이 이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다.

6) 박승우(2008), 「동아시아 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309~346쪽.

7) 최영종(2005),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19~65쪽.

지역 패권주의 이론은 전후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출현한 정치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협력질서의 형성가능성(불가능성)을 보는 관점이다.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는 우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활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을 보면 지역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흐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전후체제를 청산하고 이른바 정상국가로의 길을 추구하면서 군사적 재무장을 정당화함은 물론 타 지역에까지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달성에 고무된 자신감의 표출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질서 창출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 패권주의 이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등장한다. 하나는 중국과 일본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패권주의적 전략으로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를 박승우는 패권주의 이론이라 부른다.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일본과 중국의 패권추구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역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는 국가(특히 중국의 경우)에 대한 대항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이 세력 균형이론의 관점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동아시아 정체성 이론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한 계기로 박승우가 열거한 것으로는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과 자신감, 아시아적 가치론 내지 유교자본주의론 등과 같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을 설명하

러는 사회과학의 유행, 리관유(李光耀)와 마하티르 등의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의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과 우월성 강조” 등이 있다.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활기를 띤 동아시아 정체성 이론의 특성은 이 이론이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 문화권’ 이론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이런 입장에서 서구와 다른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는 동아시아에 독특한 유형의 유교자본주의나 유교민주주의 같은 정치·경제적 제도를 모색하는 이론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특수한 문화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동아시아 정체성을 이미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체제 이론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대안체제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로 바라는 관점이다.” 박승우는 현재 이 관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이론의 성장배경에는 냉전질서의 와해로 진보적(좌파적) 지식인들의 상실된 의제설정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의제가 필요하였다는 역사적 조건이 존재한다. 즉, 사회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라 근대 서구문명의 극복이라는 의제를 통해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생긴 진보진영의 의제상실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서구 근대를 극복할 대안체제로 사유하는데 전후 일본의 중국문학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발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대안체제 이론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및 동아시아공동체는 근대 서구문명을 대신할 공간으로 사유된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일종의 미래의 기획이자 방법 혹은 과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유교 문화적 동아시아 정체성 이론과는 대조적이다.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박승우의 분류법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 박승우는 여러 이론을 네 영역으로 분류하지

만 이들 영역 사이의 내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여러 차원의 것을 그저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둘째, 박승우는 경제적·정치군사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을 동아시아 정체성 이론과 대안체제 이론으로 세분한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동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지역공동체로 보면서 이 지역에 특수한 정치경제체제의 형성을 도모하는 입장을 ‘동아시아 정체성 이론’으로, 동아시아에서 서구 근대의 내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체제를 찾고자 하는 입장을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이론’ 또는 ‘대안체제 이론’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 관점은 우선 문화에 대한 이론비판 혹은 계보학적 이론의 흐름이 지니는 고유한 측면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대안체제 이론이라는 용어의 불명료함이 존재한다. 박승우의 설명을 보면 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서구 근대의 극복의 틀에서 사유하는 관점을 대안체제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그는 유교자본주의 및 유교민주주의 이론을 이 이론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로 탈근대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문명의 원리를 추구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연구만을 대안체제 이론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 및 유교민주주의 이론을 보면 이 이론 역시 일정 정도 서구 근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적 가치론에 입각한 아시아적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를 제시하려는 이론 역시 일정하게 서구 근대의 대안질서를 동아시아에서 구한다. 다만 이 이론은 이미 현존한다고 여겨지는 유교문화적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서구 근대의 문제점을 극복할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있다. 반면에 탈근대적 기획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

은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가 추구할 가치나 규범, 그것의 제도적 실현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이다.

마지막으로 분류법의 비체계성과 불충분성으로 박승우는 자신이 수행하는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권력·이론 비판, 즉 동아시아 이론의 오리엔탈리즘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작업의 의미와 위치를 동아시아 이론 분류 체계 외부에 속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를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이론을 크게는 세 가지로, 즉 ① 기능주의적 이론, ② 문화 이론, ③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기능주의적 이론에 ‘경제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과 ‘정치군사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을 포함시킨다. 정치군사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은 정치군사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문화 이론은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별한다. 그것은 바로 ‘실체론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계보학적(이론비판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그리고 구성주의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이다. 마지막 유형으로 채택된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은 물론 크게 보면 구성주의적 이론의 하나의 하위 유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구성주의적 이론이 반드시 서구 근대를 극복하는 방향을 취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또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탈근대 기획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탈근대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흐름이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리는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을 독자적 유형으로 분류한다.

## 1. 경제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동아시아공동체를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로 나누어 생각할 때 경제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sup>8)</sup> 동아시아 경제공동체<sup>9)</sup> 형성 논의에서 한국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질서 형성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절, 정부는 온통 세계화 이론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1990년 초에 전 말레이시아 수상이 제기한 동아시아경제협력의회(EAEC) 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동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질서의 제도화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10)</sup> 또 다른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 국가 사이의 지역연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지역협력의 증대된 관심은 1998년 동남아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정례화로 가시화되었다. ASEAN+3 정상회담이 정례화된 이래로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8) 배궁찬(2005), 「동아시아공동체의 발전과정 : ASEAN+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88쪽부터.

9) 경제공동체는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로 나뉜다. 즉, 경제공동체는 그 통합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대(FAT),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및 완전한 통합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김유은(2005),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관계이론」,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24쪽].

10) 박승우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촉발 계기로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이의를 표한다. 그가 보기에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계기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보다 더 큰 구조적 변동에서 구해져야 한다. 박승우가 염두에 둔 구조적 변동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 혹은 자본주의의 세계화 흐름과 냉전질서의 해체 및 동아시아 정치경제체제로의 중국의 편입이다[박승우(2005), 「동아시아 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312쪽].

질서를 창출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주도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창설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 EAC) 건설을 지향할 것을 역설하였다.<sup>11)</sup>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 몇 명을 들자면 문우식,<sup>12)</sup> 오승렬,<sup>13)</sup> 이남주,<sup>14)</sup> 이창재,<sup>15)</sup> 최태욱<sup>16)</sup> 등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빠지지 쉬운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경제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의 문제점은 대략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사명은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사이의 전쟁과 분쟁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믿거나 민주주의의 확대로 평화지향적 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믿는 자유주의적 시각 혹은 기능주의적 시각은 동북아에 현실적합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즉, “지역적 평화의 경제적 조건으로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그 정치적 조건으로 민주주의를

11) 이재현(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역내 리더십」,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110쪽부터.

12) 문우식(2005), 「동아시아 역내통화금융협력의 추진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191~218쪽.

13) 오승렬(2005), 「변환기의 동아시아 경제협력-‘대중화경제권’의 등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283~327쪽.

14) 이남주(2005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지속가능한 개방전략 : FTA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4, 45~72쪽.

15) 이창재(200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전망과 추진방안」,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121~147쪽.

16) 최태욱(2005), 「한미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193~210쪽.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보다 더 효과적인 장기적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해도 박사명은 상호의존적 시장경제의 창출과 같은 “국제관계의 정합적(positive-sum) 측면을 부각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진정으로 국가 사이의 평화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경제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잘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른 영역, 예컨대 정치 영역이나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통합 움직임을 산출하지는 못한다. 그뿐 아니라 경제공동체 형성의 움직임 자체도 해당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지도력이 없다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 중심의 통합은 다른 영역에서의 통합의 움직임과 함께하려는 노력과 다른 영역과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17)</sup> 김유은에 따르면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는 유럽연합의 경험에 입각하여 지역통합 연구자들은 대부분 일차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추후에 안보공동체에 대해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경제공동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지역통합의 가장 중요한 모델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정치 및 안보 공동체 논의로 흘러간 유럽연합의 경로와는 달리 ASEAN이 결성된 주도적 동기는 이 지역의 불안정을 완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시킨다.<sup>18)</sup>

경제 중심적 이론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기능적 사회통합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익지향적 행위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

17)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는 글로는 김유은(2005), 앞의 글, 221쪽부터.

18) 김유은(2005), 앞의 글, 222쪽부터 참조.

이런 이익지향적 행위 구조의 장기적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나 정체성 형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차원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익지향적 행위가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자기파괴적 성향을 지닌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바이다. 도구적 합리성의 전면화가 결국은 자연의 파괴와 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켜 인간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 역시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도덕적 조건인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적이고 엄격한 직업윤리는 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성공과 더불어 등장하는 물질적 삶의 증대가 바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개신교적 도덕윤리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sup>19)</sup> 그런데 문화적 차원에서의 공유된 의식 없이는 지역적 질서의 하위체계인 경제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듯이 기능적 재생산과 구별되는 사회통합의 또 다른 축인 사회적 연대는 가치와 규범을 통하지 않고는 적절하게 확보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집단적 의식은 “이익지향적 행위들의 집적 효과를 조정하는 시장과 같은 체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대체될 수 없다.”<sup>20)</sup>

19) M. Weber(1988),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Tübingen, p. 204.

20)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의 역(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1』, 나남출판, 191쪽.

## 2. 정치군사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sup>21)</sup>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서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안보적 협력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왜 동아시아이고 어떤 동아시아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평화보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아시아 이론의 주요한 요소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은 냉전이 해체된 후에 역내 평화를 위기에 빠뜨리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였다. 탈냉전시대에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었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1993~1994년 북핵위기 이후 현재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북미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핵위기 외에도 1995~1996년의 타이완 해협

21) 기능주의적 이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정치군사 중심적 이론’에서 이 이름이 불러일으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정치학계에서 기능주의 혹은 신기능주의적 관점은 경제협력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이 확산되면 그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다른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기능주의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는 기능주의를 근대 세계에서 등장한 정치 혹은 국가적인 행정권력의 자립화 및 경제적 시장질서의 자립화로 대표되는 사회분화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자신의 내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기능적인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나 행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은 바로 언어를 매개로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행위와 구별되는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정치군사적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중첩성이다. 즉, 안보공동체 논의는 군사적인 협력체제인데 왜 정치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사적 행위 주체와 협력주체가 주로 독립적인 주권국가라는 점 때문에 정치군사적 용어라는 합성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국가 중심과 동맹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국제정치 관계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동아시아 이론에서 정치군사 중심적 이론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현실주의적 관점을 긍정하는 태도만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관점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의 긴장고조,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의 갈등, 조어도(釣魚島, 일본명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사이의 영유권 분쟁은 탈냉전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안보적인 차원에서 불안정함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22)</sup>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중국은 군 현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일본 역시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도 잠재적인 경쟁국가의 등장 차단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약 65%를 점하고 있으며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다른 지역의 평균 3~4%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sup>23)</sup>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질서는 현재 현실주의적 경쟁구조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수단인 세력균형, 동맹 등의 현실주의적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볼 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이다. 그럼에도 냉전질서 해체 이후의 변화된 동아시아 상황을 볼 때 과연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가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동아시아의 패권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군사

22) 이남주(2005b),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국민국가들의 협력인가, 국민국가의 극복인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403쪽.

23) 이상현(2008), 「동아시아 안보공동체-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256쪽.

24) 조윤영(2005), 「안보공동체 이론과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가능성」,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322쪽.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본이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이론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중국이나 일본의 패권주의적 성향에 대한 대항기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창비팀을<sup>25)</sup>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는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의 주된 걸림돌을 중국이나 일본의 패권주의적 성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세계질서 재편 전략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를 대표하는 학자는 최장집이다.<sup>26)</sup> 그는 현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을 동아시아 각국이 보여 주는 민족주의적 성향에서 구하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이보다는 “냉전 시 형성된 대립관계를 다른 형태로 유지온존”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민족주의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보는 탈민족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탈민족이론은 동아시아가 처해 있는 특수한 현

25) 창비팀이란 용어는 백낙청, 백영서, 최원식 등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러 인문학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지식인이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최원식과 백영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론을 주장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백영서는 자신의 동아시아론을 개인의 작업이자 집단작업의 소산이라고 한다.

26) 최장집의 논의는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는 동아시아 질서를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국민 국가 사이의 공존의 질서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의 주된 관심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안보문제를 조망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논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전망과 이런 전망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던져 주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남주(2005b), 앞의 글, 420쪽부터].

실에 눈을 감고 있는 공허한 이론인 셈이다.<sup>27)</sup> 역사학자 김기봉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전제조건으로 “동아시아의 탈미국화와 탈민족주의”를 제안한 바 있다.<sup>28)</sup>

정치군사적 현실주의 시각의 긍정성이 없지 않다. 그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기보존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여러 국가 사이의 상호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 지역적 협력질서에서 오는 이익과 국가이익의 상충 내지 괴리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 사이의 장기적인 협력질서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군사적, 기능주의적 관점의 한계는 분명하다. 최영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주의나 세력균형은 지역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외교적 협력 또는 교류의 증대라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제도적 통합이나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는다.”<sup>29)</sup> 그러므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맥락에서 국가 사이의 근원적인 대립과 갈등을 상정하고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지역적 현실에 비추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박사명의 지적은 타당하다.<sup>30)</sup>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주의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벌어지고

27) 최장집(2004),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아세아 연구』 제47권 4호(겨울), 107쪽부터.

28) 김기봉(2006), 앞의 책, 91쪽. 물론 그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반미를 표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29) 최영종(2005), 앞의 글, 32쪽.

30) 박사명(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293쪽.

있는 것은 당연하다.<sup>31)</sup> 예를 들어 조운영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는 전통적 세력균형 또는 양자외교로 풀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유용한 기제이다”라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sup>32)</sup>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에서 보듯이 안보공동체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조율과정이나 군사적인 세력균형을 맞추는 틀을 넘어서기 위하여 공동체 내에 상호신뢰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런데 부정부적 국제상황에서 국가 사이의 불신을 줄이고 상호협력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장기적인 평화유지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공동체 형성조건에 국한해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미국 패권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1995년 2월 발표된 「동아시아전략보고(East Asia Strategy Report)」에서 아시아 중시전략을 표방하고 아시아에서의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미일안보동맹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의 등장을 막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전략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sup>33)</sup>

조운영이 인정하듯이 탈냉전시기에 안보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자주의적 안보유지가 주된

31) 이상현(2008), 앞의 글, 249~281쪽 ; 조운영(2005), 앞의 글, 293~326쪽.

32) 조운영(2005), 앞의 글, 310쪽부터. 김영작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영작(2006),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상 : 이론, 전략적 방법에 관한 시론」,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33) 이남주(2005b), 앞의 글, 404쪽.

흐름이고 “현실주의적 기제인 패권, 자력구제, 세력균형 등이 아시아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sup>34)</sup>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벗어나 동아시아의 협력질서를 군사적 차원에서 형성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어렵고, 그런 작업이 설령 규범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안보를 담당하고 조율할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제적 제도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는 또 이 지역 국가와 시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 지역적 차원의 공동의 의미 지평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함을 보여 준다. 이런 작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능적인 차원에서 안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결코 이 지역 내 국가 사이의 신뢰증진과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교류, 상호의존, 상호협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에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혹은 합리적 제도주의)’를 종합하는 구성주의 이론이 있다. 이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힘의 배분이나 물질적인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관념이나 규범, 정체성 등이다. 구성주의 시각은 행위자들의 선호도를 ‘외부(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행위자들의 선호도가 내생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구성주의는 “행위자들이 사회화 과정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체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sup>35)</sup>

초국가적 제도와 질서를 형성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 과정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적 자치의 원리

34) 조운영(2005), 앞의 글, 316, 321쪽.

35) 최영중(2005), 앞의 글, 36쪽.

와 매개될 수 없는 국제적 혹은 초국가적 제도나 기구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고, 그것은 잘못하면 개인의 인권과 시민의 자율적 통치원리를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 토론과 속고의 과정이 배제된 제도나 질서의 정당성을 기능주의적인 효율성이 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유럽의 탄생』의 저자인 장 바티스트 뒤로젤(Jean Baptiste Duroselle)이 지적한 것처럼 유럽이 역사적으로 추구하였던 네 가지 유형의 통일실험 중 ‘무력에 따른 통일’, ‘원칙에 따른 통일’,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 추구는 모두 실패하였다. 성공한 실험사례는 바로 ‘상호동의에 따른 통일’을 추구하는 모델이었다.<sup>36)</sup>

### 3. ‘유교문화권’ 이론

왜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논의에서 문화적 접근이 중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경제 및 정치군사 중심적 접근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나 정치·군사적 영역이 독자적인 것으로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은 근대사회의 복잡성의 증가현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는 흔히 근대화의 과정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 베버의 이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대화 내지 근대화의 과정이 합리화 과정이라는 점을 “역사철학적 사유의 전제 및 진화론의 기본과정” 없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막스 베버였다.<sup>37)</sup> 이때 베버가 염두에 둔 합리성이란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체계적 사유, 목표를 성취하는 데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단

36) 장 바티스트 뒤로젤 저, 이규현·이용재 역(2003), 『유럽의 탄생』, 지식의 풍경, 351~355쪽.

37) 베버의 합리화 이론에 대해서는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2006), 앞의 책, 1권, 239쪽부터 ; 2권, 472쪽부터.

을 분석하는 것, 조직적인 행위, 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추리를 위해 전통적인 믿음을 거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sup>38)</sup> 혹은 인간의 행위에 국한해 볼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한에서 그런 행위를 합리적이라 부른다. 이런 점에서 합리성은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변형하거나 조정하려는 효율성의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대에 등장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과 세계를 재편하는 합리화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사물화(Verdinglichung)하는 것으로 혹은 인간의 소외의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베버는 근대사회의 합리화 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쇠우리(iron cage)’로 표현되는 관료체제의 증가 및 이익중심적이고 계산지향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진화로 참다운 자유와 인간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sup>39)</sup>

현대화 과정이 산출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 글의 주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근대사회는 그 이전 사회와는 달리 경제나 행정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하위 체계로 구성되고 각각의 하위체계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움직이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율적 체계라는 현상을 띤다. 사회에 대한 체계 이론적 접근 방식은 사회를 특정한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하는 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기능적으로 자립화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작동하는 중요한 하위체계는 바로 경제와 공적 행정시스템이다. 경제적이고 행정적

38) 존 시튼 저, 김원식 역(2007), 『하버마스과 현대사회』, 도서출판 동과서, 20쪽.

39) 베버의 의미상실과 자유상실에 대한 설명과 비판으로는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2006), 앞의 책, 503쪽부터 참조.

인 하위체계는 주로 사회의 물질적인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근대사회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복잡성이 증가된 사회에서는 특수한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하위체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베버는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이해관계 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화폐가치를 지향하는 기능적 조직”으로 정의한다.<sup>40)</sup> 화폐를 매개로 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나 권력을 매체로 한 관료적인 행정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근대사회는 사회적 통합과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근대사회는 사회구성원의 공동의 이해, 가치 및 규범 등의 공유를 통해서만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근대 이전의 미분화된 사회에서처럼 종교나 혹은 신화적 사유체계가 사회통합을 전적으로 떠맡을 수도 없다. 그래서 화폐의 논리나 권력의 논리가 전적으로 모든 사회를 규정하는 경향 속에 근대사회의 파괴적 속성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화폐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를 매개로 한 사회적으로 분화된 하위체계의 적절한 기능과 효율적인 작용은 근대사회의 통합과 재생산의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사회의 통합에서도 기능적으로 분화된 하위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듯이 국제관계에서도 혹은 지역통합의 과정에서도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하위체계의 형성 노력은 불가결하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이 정치안보적 차원에서의 협력질서의 가능성이나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는 현재 경제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초국가적인 지역공

---

40) M. Weber(1958),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ited and translated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 331.

동체는 시장의 단일화로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럽연합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체제, 사회생활, 문화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일정한 상호 수렴 없이 이러한 공동체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다.<sup>41)</sup> 특히 국가기구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이외에 민간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최근 이에 대한 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론이 다양한 입장과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sup>42)</sup> 이처럼 정치군사적 협력이나 경제적인 협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학적 흐름 중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그에 결부된 독특한 정치체제 형성의 문화적 배경 내지 원천으로서 유교문화의 영향에 주목하는 이론은 1980년대 말 ‘아시아적 가치론’과 더불어 전면에 등장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경제발전이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적 가치논쟁은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유교의 가족위주 사상 또는 가정윤리질서라는 동아시아에 특유한 문화적 전통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시아적 발전 모델’ 개념을 도입하고 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유교적 가치를 지적하였다. 이때 유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교문화에 내재된 강

41) 전재성(2008), 「EU와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67쪽부터.

42)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 현황과 이들 국가의 시민사회 사이의 연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권용혁 외(2006),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참조.

한 리더십, 검약과 절제의식, 높은 교육열, 가족적 인간관계, 협동과 근면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였다.<sup>43)</sup> 또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한 싱가포르 전 수상 리콴유의 표현을 빌리면 “근면과 성실에 대한 믿음, 대가족 속에서의 효도와 충성, 또 무엇보다 학문과 배움에 대한 존경” 등은 서구와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으로 이 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sup>44)</sup>

1990년대 말에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sup>45)</sup>을 그 이전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이전에는 동아시아에서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칭송하던 것이 이제는 아시아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달리 말해 “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내재된 정실인사, 부패, 뇌물, 기업운영의 불투명성, 연구주의, 정경유착” 등이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sup>46)</sup>

동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

43) 이승환(1999), 「‘아시아적 가치’의 이론학적 분석」,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314쪽.

44) 리콴유(1999), 「문화는 숙명이다」,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25쪽.

45) 유교적 전통과 결부되어 아시아적 발전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이론은 허만 칸(Herman Kahn)이나 에스라 포겔(Ezra Vogel)과 같은 학자에 의해 이미 1970년대 말에 제기되었다[이승환(1999), 앞의 글, 314쪽]. 이들 학자 외에도 전후 미국을 대표하는 일본학 연구자인 라이샤워는 1973년에 이미 유교적 가치가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과 타이완,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제발전의 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과 중국 등도 경제발전의 공간이 제공된다면 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뚜웨iming 저, 김태성 역(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313쪽 참조.

46) 이승환(1999), 앞의 글, 315쪽 ; 김충렬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동양사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김충렬(1995), 「21세기와 동양철학」, 한국철학회 편, 『문화철학』, 철학과현실사, 31쪽].

회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주요한 문화적 요인은 바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족주의 전통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근면과 검소, 학문과 배움에 대한 존경 등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으로 열거된 것들은 사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동아시아인의 독특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주장되는 가족 중심의 유교적 가치의 변형이다. 리관유에 따르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서구적 개념과 동아시아적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동아시아인들이 개인을 ‘가족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sup>47)</sup>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가치 논쟁’ 또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동아시아 가족에 대한 논쟁이라고 규정하는 조은의 입장은 정당하다.<sup>48)</sup>

물론 서구의 근대적 가치와 동양의 전통적 가치 사이의 대화 시도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동양의 가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분석과 동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관점이다. 동양의 가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은 동양적 가치가 어떻게 가족 내부에서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억압질서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재석은 이미 1960년대에 동양의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가족주의는 사회통합과 민주적인 사회질서확립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49)</sup>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의해 실시된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다.<sup>50)</sup>

47) 리관유(1999), 앞의 글, 22쪽.

48) 조은(2000), 「‘동아시아 가족’이 있는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175쪽.

49)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50) 조은(2000), 위의 글.

그러나 동양적 전통과 가치가 지니는 의미는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이나 폭로 작업으로 완전히 소진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은 인간의 삶의 역사성에 대한 차원을 망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양의 전통에 대한 어떤 불변적인 생각에 경도되어 있는 셈이다. 즉,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치관을 오로지 서구의 근대 원리의 관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바로 유교적 가치관이 서구 민주주의 원리와의 양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적 전통과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 사이의 친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비록 유교이념에 기초를 이루는 위계질서나 효와 충에 대한 강조가 비민주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치 역시 민주주의적인 공동체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유교문화의 모든 면이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근본이념 속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부합되는 정신적 일면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51)</sup>

51) 안병주(1995), 「한국사회와 유교문화」, 한국철학회 편, 『문화철학』, 철학과현실사, 92쪽 참조; 리관유의 입장에 대한 김대중의 이의제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김대중은 리관유의 동아시아 전통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문화적인 전통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주의적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와 변명자의 저항이”라고 강조한다(리관유(1999), 앞의 글, 51쪽부터 참조); 두웨이밍에 따르면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내세운 맹자의 사상은 “국민에 의한”이라는 현대적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두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앞의 책, 222쪽). 김철신은 최근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통사상이었던 유교, 불교, 도교 사상 내에서 민주주의 사상과 친화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을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있다. 물론 그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유가사상이 봉건질서와 반민주적이고 신분제적인 위계질서로 구성된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가의 인(仁)과 서(恕) 사상이 보편적인 인간존중 및 평등이념의 풍부한 단초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

우리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전통을 서양의 인권 및 민주주의 이념과의 대립 속에서 유지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전 수상인 리관유는 서구 사회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차이점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1인 1투표 제도에 대해서조차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이렇게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서구와는 다른 관점, 즉 개인이 가족 속에 존재하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서구적 민주주의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sup>52)</sup>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과 관변 엘리트에 의해 제시되는 이른바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이 자유주의적인 가치인 개인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서구 사회를 타락시킨 요인으로 비판한다.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와 경제적 번영을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실로 존재하는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특징이 “수원-후원의 공동체주의, 권위에 대한 존중, 일당 지배, 그리고 강한 국가”라는 점을<sup>53)</sup>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유교적 가치가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동원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서구의 근대적인 이념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유교적인 전통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신(2007),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주의 강의 2 : 사상』, 오름, 289쪽부터.

52) 리관유(1999), 앞의 글, 22쪽부터 참조.

53) 김영명(2000),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체제」,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324쪽부터.

서구의 근대적 이념인 인간의 자율성 이념과 이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문화적 유산이다. 보편적 권리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과 사회의 모든 모습을 다 해명해 주지는 않는다 해도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리관유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구의 근대화의 모습을 오로지 “과학과 기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좁게 제한하는 것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일면적이고 편협한 접근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에서 서구가 동양을 타자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자화된 동양을 무시하고 자신보다 문명화가 덜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폭력적인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를 동양적 가치와 대립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서구를 타자화함으로써 동양적 가치의 정체성을 타자화된 서구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구성하려는 시도 역시 위험한 것이다. 더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동양의 여러 나라 역시 유럽이나 미국 등과 견주어 여러모로 서구적 근대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흡수해 왔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자기파괴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유교적 전통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려는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지만,<sup>54)</sup> 자유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유교민주주의는 아직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유교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회

54) 대니엘 벨(2000), 「아시아적 공동체주의」, 『유교민주주의, 왜&어떻게』, 전통과 현대, 15쪽부터 ; 함재봉(2000),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통과 현대.

의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적 중심사상인 유교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교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유보다는 권위를, (개인의) 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이며 이런 사상이 지배적인 문화는 “민주적 규범의 확산을 방해하고 민주적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그 결과 그러한 제도의 출현 및 그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든다.”<sup>55)</sup> 이처럼 유교적 사상과 이에 기초한 문화는 사회에서 민주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민주적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헌팅턴은 유교민주주의를 동근 삼각형과 같은 불가능한 접합에 지나지 않는 ‘형용 모순’<sup>56)</sup>으로 평가한다. 유교와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철저히 거부하는 헌팅턴의 입장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sup>57)</sup> 유교와 민주주의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는 유교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에는 틀림없다. 헌팅턴의 주장은 리관유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이 둘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은 서구의 그것과 달라 동아시아에 서구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결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팅턴과 달리 유교와 민주주의의 조화가능성을 추구하는 함재봉이나 유석춘의 노력<sup>58)</sup> 이 그 자체로 중요한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이들은 서구 개인

55) S. Huntington(1991), *The Third Wave*,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 301.

56) S. Huntington(1991), p. 307.

57) 헌팅턴의 입장에 대한 상세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정인(2004),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제7장 참조.

58) 유석춘·장미혜(1999), 「연고집단과 사회발견」,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23쪽 부터 ; 강정인 역시 유교적 전통을 서구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에 대해서는 강정인(2000), 「유교연구의 현황 : 문명의 충돌과 아시아적 가치」, 『유교민주주의, 왜&어떻게』, 전통과 현대, 75쪽.

주의의 폐단이나 서구적 근대사회가 파편화된 사회나 소비지향적인 물질만능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교적 전통이 강조하는 가족중심적 가체체제나 공동체적 가치 및 규범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유교적 인문정신을 통해 서구의 후기 산업사회가 처한 문제점, 예컨대 지나친 개인주의 및 물질만능의 삶의 방식의 확산과 그 결과 초래된 “도덕의 진공상태, 자아의 파편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현대 유학의 대표적 학자인 뚜웨이밍 [杜維明]의 입장<sup>59)</sup>과 상당히 유사하다.

유교적 전통을 토대로 서구적 근대의 문화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대안적 유교자본주의 및 유교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하였는지는 의문이다.<sup>60)</sup> 유교적 민주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모습을 좀 더 성공적인 모습으로 전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유석춘의 글이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유석춘은 서구의 인권개념의 개인관을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서의 개인관과 대비시키고 있다. 즉, “서구의 인권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는 무관하며 성이나 인종 혹은 계급적 위치 등과 같은 세속적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설정하는 데 반하여, 유교적 전통에서 본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가 부여한 역할과 분리되어 파악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서

59) 이승환(1999), 앞의 글, 316쪽.

60) 유교전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전통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임혁백(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298~302쪽.

구적 인권개념이 전제하는 개인은 “고립되고 추상적인 개인이나 자유롭고 자율적인 자<sup>1)</sup>”로서의 개인이지만 유교적 전통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개인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다. 이처럼 유교적 전통에서 본 개인은 ‘사회적 역할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특정한 역할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인간 자체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sup>61)</sup> 이렇게 유석춘은 서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관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동양적(유교적) 인간관을 대비시키면서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형성된 연고집단의 문화 역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sup>62)</sup>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석춘은 “개인을 공동체에 강하게 결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 질서를 하나의 대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sup>63)</sup>고 결론을 내린다.

한국의 연고문화를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문화가 가져온 파괴적 양상을 치유하는 데 창조적으로 활용하지는 문제의식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더불어 연고문화와 서구에서 기인하였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로 받아들여진 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상호결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연고문화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현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해체의 현상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서구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의 지나친 파편화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족주의 문화 및 이와 연결된 연고중심의 사회가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음은 다음 여러 경험적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61) 유석춘·장미혜(1999), 앞의 글, 133쪽부터.

62) 유석춘·장미혜(1999), 앞의 글, 155쪽.

63) 유석춘·장미혜(1999), 앞의 글, 156쪽.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가족해체 현상은 두드러진다. 일단 여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은 제외한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38.0%이고 따로 사는 경우는 60.2%로 나타났다. 부모가 따로 사는 비율은 2002년 56.7%와 2006년 56.3%였으나 올해 들어 60%를 넘었다.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3.6%로 ‘가족’이라고 응답한 40.7%보다 더 많았다.<sup>64)</sup>

또한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2006년 당시 1.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1980년대에 노인 인구의 81%가 자녀와 함께 살았으나 2004년 현재는 44%로 감소하였다.<sup>65)</sup> 2008년에는 한국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가 부모의 재산에 좌우된다는 통계조사가 나왔다. 즉, 한국에서 부모의 재산 여부에 의해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의 변동폭이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에 의한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한국의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sup>66)</sup> 이런 현상 외에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현상 등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해체 외중에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한국에서의 가족주의 문화나 효의 중요성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교문화의 가족주의적 성향이나 공동체적 성향이 한국사회의 해체 경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의 가족해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그

64)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http://www.nso.go.kr/>.

65) 닐 하우(Neil Howe) 외, 『한국의 고령화』, CSIS, 2007년 3월 21일 보고서.

66) 홍진수, 「동방불효지국?」, 『경향신문』(2007. 12. 11).

것이 단순히 서구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의 확산과 그로 인한 각 개인의 인권 의식의 확산의 결과로 보는 것은 단견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공적 영역의 활성화가 미미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독특한 현상이고 그 결과 시민사회나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많은 일을 가족 홀로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한국사회의 가족해체를 초래한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시민사회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모든 일을 가족에게 떠넘긴 결과 가족이 담당할 의무나 행위가 너무나 과도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한국사회에서의 출생률 저하나 이혼율 증가 현상의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주의 문화의 지나친 과대화는 한편으로는 공공영역을 담당할 시민사회나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건전한 의미에서의 공적 영역의 활성화가 없는 상황과 과도한 가족주의 문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고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용하려면 연고문화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가족해체가 사회의 파편화 및 원자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서구적인 근대에서 잘 구현되어 있는 시민사회 및 국가의 균형발전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서양과 동양의 개인관을 대립적으로 보는 유석춘의 관점은 그 자체로 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는 공식적으로 서구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유교적 전통에서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인간관이 어떻게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의 긍정이라는 서구적 시각과 종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분리된 상황에서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긍정하는 서구적 인간관이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서구의 지성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은 서구적 개인주의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승인은 인간이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로 긍정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성, 인종, 계급, 민족 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갖가지 배제나 억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주장은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성과 계급의 차이도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중심적 오리엔탈리즘의 유산임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주장들은 ‘유럽’과 구별되는 ‘아시아’의 문화적 유산에 의존함으로써 아시아의 오늘보다는 과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종종 보인다. 그러할 경우, ‘아시아’는 가장 고질적인 미국,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의 편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유럽의 ‘타자’로서의 위치로 말이다.”<sup>67)</sup> 딜릭이 보기에 아시아적 가치론은 표면적으로는 유럽중심주의를 거부하지만 이런 거부의 몸짓에서조차 유럽중심주의는 성공적으로 자기를 관철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세계를 유럽 중심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수반되었던 시간성과 공간성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68)</sup> 따라서 유교적 혹은 아시아적 가치론은 실상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원적으로 대립하여 아시아를 유럽의 타자로 보는 유럽중심주의적인 오리엔탈리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전적으로 내면화한 관점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in reverse) 혹은 자아 오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이라고 불린다.<sup>69)</sup>

67) 아리프 딜릭(2000),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99쪽.

68) 아리프 딜릭(2000), 위의 글, 107쪽.

69) 아리프 딜릭(2000), 앞의 글, 82쪽.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역오리엔탈리즘을 동의어

동아시아의 유교문화를 창조적으로 전환시켜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커다란 지적 영향을 준 뚜웨이밍은 “시장경제, 민주정치,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서구적 현대성(modernity)의 네 가지 핵심요소로 파악하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는 유교문명의 현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70)</sup>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파악하는 유교는 관계의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나 자신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20여 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이 문제를 연구”하였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유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과제”로 본다.<sup>71)</sup>

물론 서구적 개인주의가 안고 있는 원자론적 관점이 타자와의 적극적인 관계가 가지는 내재적인 가치를 망각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성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적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 종교,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즉 인간이

로 사용하는 딜릭과 달리 박승우는 이 두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자아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는 서구를 강자와 문명으로, 동아시아를 약자와 미개로 설정하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역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는 아시아가 서구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바라보면서 아시아를 서구와 대등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관점이다. 즉, 역오리엔탈리즘에서는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같이 서구와 동양을 이원적인 대립으로 보지만 서구를 ‘모방과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역오리엔탈리즘은 서구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서구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관점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자기예찬’이라는 것이다[박승우(2008), 앞의 글, 325쪽].

70) 뚜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앞의 책, 146쪽부터 .

71) 뚜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앞의 책, 229쪽.

특정한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주체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존재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유석춘의 논의는 유교민주주의라는 이론으로서 구적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서구적인(경제적인 의미의 근대화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의 맥락에 국한해 볼 때) 자세를 견지하면서 동양의 권위주의적인 질서나 문화를 긍정하는 자세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평가받기는 힘들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애정으로 갖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시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 대해 역사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강조가 다른 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동해서도 안 된다. 전통에 대한 이러한 자기폐쇄적인 접근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는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전통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변화된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전통에 대한 독단적 승인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곧바로 여러 형태의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또 다른 야만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릴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 발생한 한국 가족생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전통적 가족에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통과의 해석학적인 과정이 지닌 인간의 삶에서의 보편적 성격은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완전히 무화되거나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해석학적 보편성 주장은 전통의 억압적인 기능이나 현재의 권력 관계에서 관찰되는 억압적인 기능에 대한 지적으로 부인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해석학적 보편성, 즉 인간의 삶의 고유하고도 본래적인 존재방식으로서의 이해와 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전통의 지평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전통에 대한 과거 회귀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태도와 동시에 전통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일면성을 넘어서 전통과의 창조적인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며, 따라서 근대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기에 철폐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책임하게 파괴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물론 전통과 권위와 같은 주제는 보수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전통과 권위가 전적으로 없어져야 할 그 무엇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과 권위를 억압이나 권력과 혼동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런 전통에 대한 오류는 서양의 근대 계몽주의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 즉, 전통과 억압적인 것을 동일시하고, 전통을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계몽주의는 전통이 인간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건임을 망각한 데에서 오는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역사성을 무시하는 계몽주의의 치명적인 편견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sup>72)</sup>

우리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물음을 둘러싼 논쟁의 현재 구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이유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동양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이데올로기적인 함축에 대한 지적이 지닌 합리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전통과의 창조적인 비판적 이해의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신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소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매개로 비로소 자기에게로 귀환할 수 있다는 점에 존립한다. 즉, 이질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질적인 것을 자신과 친숙하게 만드는 과

---

72) H. G. Gadamer(1986), *Wahrheit und Methode*, Gesammelte Werke, Tübingen, Bd. 1, p. 275.

정을 통해서 정신이 비로소 정신일 수 있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신의 본질이다.<sup>73)</sup>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행의 지평을 보다 보편적인 곳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서구의 눈으로만 우리를 바라보는 일면성과 함께 우리의 전통을 서구와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배타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유교가 정치적 권위주의와의 친화성을 갖고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서구의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의 긍정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서구 근대가 보여 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화를 시장만능주의 및 과학기술 문명의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정복이라는 반생명적 태도의 지평 위에서 구성한 서구 근대의 문제점과 한계를 냉철하게 비판하는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하다. 또한 서구와 동양의 창조적 융합을 추구하려는 이중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때이다.<sup>74)</sup> 이때 비로소 서구와 동양의 진지한 만남의 모색은 오늘날 동아시아 3국의 다양한 수준에서 증진되는 협력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서구의 근대 이념을 매개로 한 근본적으로 재해석된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은 21세기의 인류의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내는 아주 소중한 문화적인 원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동아시아적 정체성 형성의 문제의식의 틀에서 볼 때 유교적 자본주의 및 유교민주주의 이론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아

73) 이 부분은 필자가 헤겔의 교양개념에 대한 가다거의 해석에 의거하고 있다[H. G. Gadamer(1986), p. 19].

74) 유학전통 사상에서 강조되어 온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적 인문주의를 생태적 사유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뚜웨이밍 저, 김태성 역 (2006), 앞의 책, 제11장 참조.

시아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은 역(뒤집어놓은)오리엔탈리즘적 요소가 있다. 둘째, 그것은 아시아적 가치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지속적으로 존립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선협적으로 단언하는 비학문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적 가치 이론은 문화를 고정불편적인 실체로 보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태도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문화의 구조적 변동 현상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실증적 차원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뒤에서 독자적인 장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4. 계보학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권력과 이론의 연계성에 대한 푸코의 지적은 이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한다. 동아시아 이론의 역사는 이론과 권력의 작용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푸코적인 문제의식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대동아공영권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양국이 어떻게 명명하는가는 이론 및 용어가 독자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또 다른 얼굴임을 보여 준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후에 이 전쟁을 아시아 지역의 해방을 위한 ‘대동아전쟁’으로 미화하였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태평양전쟁’으로 명명하였고 일본과의 전쟁을 문명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또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전시 내각 정보국이 ‘극동(極東)’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은 용어가 권력과 어떤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되고 유포되거나 배제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1941년

12월 16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극동’이라는 용어가 원래 ‘Far East’의 번역어로 영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관념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를 일본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며 참을 수 없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주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용어 사용을 금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미국은 일본 점령군을 ‘극동군 사령부(Far East Command)’로 표기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판결하는 군사재판을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for the Far East)’으로 명명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극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그 용어 사용을 결정하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sup>75)</sup>

동아시아 지역 이론에서 푸코와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로 대표되는 탈식민주의 이론과 오리엔탈리즘 이론이다. 그런데 사이드 역시 푸코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는 에드워드 사이드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학문용어이다. 이 개념은 서양인들이 비서구문화, 특히 동양을 ‘미개’하고 ‘후진적’이며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평가하고 묘사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유방식이자 지식체계를 의미한다.<sup>76)</sup> 사이드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타자의 구성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역사적 구성물인 우리-타자 의식의 상호공속성의 배후에서 동양에 대한 사유방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내는 지배적 권력의 모습을 드러낸다. 푸코의 이론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사이드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산출하는 권력의 생산성을 서구가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 가공해 낸 동양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식을 ‘오리엔탈리즘’으로 명명하여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비

75)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신지역주의 선언』, 일조각, 63쪽부터.

76)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2008),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569쪽.

판하는 데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서구의 동양의 지배는 날것의 적나라한 폭력적 강제도 동원되었지만 그와 함께 문화적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피하는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특수한 사유방식을 만들어 유포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화적 헤게모니의 획득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핵심을 구성한다.

정체성의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 투쟁이자 학문적인 활동의 결과인지를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영토를 지배하려는 투쟁은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이고,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투쟁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다. 비판적인 학자의 임무는 한 가지 투쟁을 또 다른 투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투쟁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현실성과 후자의 투쟁이 가지고 있는 명백히 이론적인 정교성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연관짓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방식은, 모든 문화의 발전과 유지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상이한 자아(alter ego)'의 존재를 요구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동양이든 서양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의 집합적 보고인 이들 세계는 결국 하나의 구조이다—은 그 실재성이 언제나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차이점을 연속적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해야 하는 반대향과 '타자'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시대와 사회는 '타자들'을 재창조한다. 그렇다면 자아와 '타자'의 정체성은 정제된 것이기는커녕, 모든 사회의 개인과 제도를 포괄하는 하나의 투쟁으로 벌어지는 매우 공들인 역사적, 사회적, 학문적, 정치적 과정인 것이다.<sup>77)</sup>

푸코와 사이드의 이론은 정체성 형성 작업이 단순히 이론적 작업에 멈추지

---

77)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2008), 위의 책.

않는다는 점, 즉 이론적 모색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성하는 데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과거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여러 이론의 한계점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일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공동체를 새로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관점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특정한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 다양한 이론의 형식을 띠고 나타나는 동아시아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작업 없이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과거 대동아공영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푸코의 권력·지식의 연계를론에 입각한 이론 비판이나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거의 모든 동아시아 이론 분석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철학자인 이승환의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비판 역시 푸코와 사이드의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박승우의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역사학자 김기봉은 역사교과서 분쟁을 예로 들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투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 역시 푸코·사이드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sup>78)</sup>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역사학자 임지현의 작업 역시 상당 부분 푸코·사이드적인 관점에 기대고 있다. 즉,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포럼’은 ‘국사’의 신화를 해체하는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단체인데 이 포럼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사’라는 텍스트를 둘러싼 정치적·문화적 권력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동아시아의 국가권력을 적대적으로 잇는 ‘국사’의 연쇄고리”를 파괴하는 것이다.<sup>79)</sup>

78) 김기봉(2006), 앞의 책, 133쪽 참조.

79) 임지현(2004), 「‘국사’의 안과 밖-헤게모니와 ‘국사’의 대연쇄」,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기획, 휴머니스트, 32쪽.

그러나 푸코적인 권력·지식의 연계 이론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배적인 행위와 사고방식의 자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주도적 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새롭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지배적 담론의 배후에 놓여 있는 생산적인 권력의 망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푸코의 권력·지식 이론은 권력에 의해 억압되지 않은 주체적인 자아실현이라는 이념을 포기하지 않지만,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푸코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유통되는 지배적인 행위와 사고방식, 관습이 다른 사고방식 및 행위양식에 비해 더 선호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0)</sup>

그런데 한 개인이나 사회의 정체성에서 이런 타당성 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 및 인격적 정체성의 재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세계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상호이해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정당한 질서라는 믿음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는 ‘이해와 협의를 지향하는’ 발화행위이다. 그것은 의사소통 없이 확정된 어떤 목적의 전략적 성공을 지향하는 행위로서의 ‘성공지향적’ 행위와 달리 언어적으로 제기된 타당성 요구를 해결할 것을 지향하는 행위이다.<sup>81)</sup> 따라서 어떤 상호작용이 이해와 협의를 지향하는 언어사용에 의해 조정

80) 낸시 프레이저 저, 정일준 편역(1999), 앞의 글, 245쪽.

81) 도구적 합리성과 구별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정식화하고 이를 비판사회이론의 중추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버마스의 “가장 창의적이고 중심적인 공헌”이다[존 시튼 저, 김원식 역(2007), 앞의 책, 101쪽].

될 때, 그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의사소통 행위’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때 ‘아니오’라는 부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논증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 나은 논증’을 위한 경쟁과정 속에서 서로 자기중심적인 세계이해를 탈중심화하는 학습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경우에 따라 논쟁이 되는 사안의 내용 자체에 대한 합의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만 이해와 협의를 지향하는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절차와 관련된 합의일 수 있다.<sup>82)</sup> 이렇게 하버마스는 공동의 의미세계를 전제하는 사회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권력관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의 지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권력차원을 소홀히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물론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의사소통 모델 역시 상호주관적 이해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갈등이나 투쟁적인 차원을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이상적인 선언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sup>83)</sup> 하버마스 이론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상호이해 과정 없이는 문화 및 사회, 개인의 인성은 결코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없다는 그의 지적은 옳다.<sup>84)</sup>

82)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2006), 앞의 책, 424쪽부터.

83) 존 시튼 저, 김원식 역(2007), 앞의 책, 178쪽부터.

84) A. Honneth(1986), *Kritik der Macht, Reflexionsstufen einer kritischen Gesellschaftstheorie*, Frankfurt am Main ; 존 시튼 저, 김원식 역(2007), 앞의 책,

계보학적 동아시아 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푸코의 이론이 지닌 장단점을 간단하게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이론은 기존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데, 이런 한계는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한국의 여러 계보학적 이론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 5. 구성주의적 문화 이론

최근의 동아시아 이론을 살펴보면 경제적 협력이나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차원의 협력체 가동 등 주로 기능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및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틀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존의 접근방식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적 관계는 경제나 행정적 체계의 기능적 분화와 그 효율적인 작동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가 전적으로 이들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사회적 관계는 인간을 한갓 사물처럼 객체로 전락시키는 도구적 행위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집단적인 연대성의 지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상호이해 추구적인 소통을 통해 구성되고 유지된다.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소통 행위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공통의 의미세계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85)</sup>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조건으로서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제도나 구조를 포함한 관계망에만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동아시아 정체성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 이론처럼 기존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의 동아시아 이론을 보면 실체론적 문화 이론에서 구성주의적 문화 이론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구성주의적 문화 이론이란 문화적 정체성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된 것을 재발견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으로 동아시아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규범,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이를 공유된 의식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을 일컫는 것이다. 물론 이 관점이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으로 공유된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란 전통과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미래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성주의적 문화 이론은 주어진 과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미래의 비전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체의 논의, 토론의 과정에 더 많은 초점과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론은 인간의 관념이나 가치, 규범 등으로 이루어진 정체성 형성의 노력이 바로 공동체 형성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일 뿐 아니라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최장집은 탈냉전과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정체성의 부활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부활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체성이 지닌 특별한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냉전으로 분할된 지역임을 부정하

85)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2006), 앞의 책.

고, 어떤 것을 공유하는 지역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세계의 패권국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그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부여한 명칭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 스스로가 갖는 내적 요구와 필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범주를 호명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에 대항하는 안보가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86)</sup>

조희연과 박은홍은 ‘자본의 아시아’와 같은 자본주도형 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의 움직임을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인정하면서 어떤 성격을 띤 아시아를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적 아시아가 아니라 ‘사회적 아시아’, 즉 정치적 자유와 함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화를 지향할 것을 주창한다. 이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중국의 중화주의 및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패권적 아시아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아시아’, ‘사회적 아시아’를 지향하는 아시아주의”라고 이해한다.<sup>87)</sup>

사회적 아시아를 구현하기 위해 그들은 “아시아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또한 조희연과 박은홍은 상상으로서의 아시아를 구성하는 과정을 새로운 아시아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구성될 정체성이 지향할 방향을 “탈민족주의·탈국가주의적 인식의 강화”에서 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국 중심의 질서와 세계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성된 질서를 극복할 “아시아의 저항적 재구성”을 강조한다. 즉, 그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아시아의 재구성” 과정은 “지배적

86) 최장집(2004), 앞의 글, 98쪽.

87) 조희연·박은홍(2007), 「사회적 아시아(Social Asia)를 향하여」, 『동아시아와 한국-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도서출판 선인, 294쪽.

인 서구적 정체성에 의해 주변화된 억압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sup>88)</sup>

미래의 기획된 프로젝트로서 동아시아 문화 이론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동아시아 ‘문화네트’ 이론이 존재한다. 그 입장에 따르면 문화공동체라는 개념 대신에 ‘문화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이 동아시아 문화 이론의 중심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는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감대와 공통성이 대단히 취약해졌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모형으로서 미래의 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된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된다.<sup>89)</sup> 그러나 ‘문화네트워크’ 이론이 문화의 정치적 함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화와 정치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수용하면서도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소통적인 합리성을 매개로 한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구축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제시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여러 동아시아 문화 이론 역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 사이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존재한다.<sup>90)</sup> 이는 동아시아 지역 상호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가 추진되어야만 정치 및 경제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이 상호불신의 장벽이 높다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확장하여 다른 문화와의 소통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은 문화적 협력과 교류가 각 국가의 권력추구에 의

---

88) 조희연·박은홍(2007), 위의 글, 295쪽부터.

89) 민병원(2008), 앞의 글, 363쪽부터.

90) 최송화 편(2004),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법문사.

해 추동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문화와 정치권력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sup>91)</sup> 예를 들어 문화적 공동체 형성의 주된 내용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는 점, 따라서 문화적 공동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문화적 상호 이해와 교류의 확장이라는 당위적 주장은 한계가 있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동아시아와 동양과 같은 새로운 어휘를 창안하였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sup>92)</sup>

## 6.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

동아시아 이론이 다시 활발해진 요인으로 전형준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상·문화적 요인을 들고 있다.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 이론은 첫째로 20세기 말에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성공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후기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서구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 경향이 확산됨

91)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92) 스테판 다나카(1995),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70~175쪽. 지리문화적 실체로서의 동양이 기본적으로 20세기 일본에 의해 창안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테판 다나카는 동양이라는 한자말은 18세기 이전 중국 상인들이 자바 주변 해역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로써 서구 근대의 이성중심주의를 반성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새롭게 주목하는 이론이 활발하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93)</sup>

탈근대기획이라는 틀에서 동아시아 지역문제를 천착하는 흐름을 대표하는 집단은 백낙청, 백영서, 최원식 등의 인문학자로 구성된 ‘창비’팀이다. 백영서, 최원식 등은 한국사회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전후 일본의 저명한 중국학자이자 루쉰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sup>[竹内好]</sup>의 아시아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세계에는 서로 긴밀히 연관된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일정한 지역적 교류 등의 실체 같은 것이 있고, 특히 근대에 들어와 제국주의와 냉전이 조성한 시공간적 상황 속에서 갖게 된 공통의 경험은 이 지역을 역사적 실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동아시아가 역사적 실체로서 허용하고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과제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을 ‘실천과제(또는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라고 부르고자 한다. 새로운 동아시아는 목하 형성 중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비판적 토론의 산실이 되어 온 창비는 우리의 논의를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위한 성찰의 기회를 얻고자 비판적 지성 6인이 발신하는 동아시아의 비전에 주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 출생자인 이들은 타이완, 중국 대륙, 일본, 미국에 흩어져 활동하지만, 그 시야는 전공학문 영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 드리워진 식민주의와 냉전 그리고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이 자신의 사상모색의 기반인 개별 정치사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각

---

93) 전형준(1997), 「같은 것과 다른 것-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279쪽부터.

을 견지하되 그것을 동아시아적·전 지구적 근대성의 맥락과 연결하여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근대질서, 나아가 근대 세계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미래, 전 지구적 희망의 근거지로서의 새로운 동아시아의 상을 모색해 온 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자기 사회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과제, 전 지구적 과제가 하나의 유기적 총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지식인이 펼치는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기존의 술한 동아시아론과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sup>94)</sup>

백영서는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기획에 기본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이 기획에서 동아시아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 국민국가의 중간 매개항”으로 자리 매김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그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지역적이면서도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변혁에 개입하려는 지향”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 동아시아공동체의 추구가 편협한 지역주의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95)</sup> 창비팀이 내세우는 탈근대적 상상의 일환으로서의 동아시아론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달리 역시 동아시아를 “실현되어야 할 계획”으로 보면서 이 계획이 의미를 지니려면 “현대의 문제 일반”에 대한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96)</sup>

창비팀의 동아시아 이론은 다른 동아시아 담론에 비해 장점이 많다. 그것은 전통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담론의 실천지향적 성격을 통해 권력과 지식의 연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문제의식을 자신의 동아시아 이론 속에 함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비의 동아시아론은

94) 야마무로 신이치 저, 임성모 역(2003), ‘동아시아 비판적 지성’ 기획 위원, 「기획의 말」,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6쪽부터.

95) 정문길 외 편(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71쪽.

96) 정문길 외 편(1995), 위의 책, 110쪽.

근대에 대한 일면적인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양자택일이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분단체제와 같은 한국적 현실상황의 비판적 극복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탈근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을 전개하려는 시도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맹목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보기에 창비팀에 의해 주도되는 동아시아 이론은 우선 서구적 근대의 대안적 질서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제안하는 데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이 이론은 미국적 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현존하는 질서의 문제점과 모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제외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문명의 대안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띠어야 할지 그리고 그런 이념적 지향이 존재한다면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제안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창비팀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백영서는 동아시아 기획에서의 동아시아의 의미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 국민국가의 중간 매개항”으로 이해한다. 이런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인될 수 없겠지만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세계시민주의에 열려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창출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국민국가적 차원에서의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즉, 국민국가에서 지역적 질서로 상승하려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역사적 성공과 그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의 민주적 재구성이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기본적 가치 및 규범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

론 역시 역오리엔탈리즘적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sup>97)</sup> 박승우에 따르면 대안체제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서구 근대의 극복 노력은 서구 근대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시도로 독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런 해석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지만,<sup>98)</sup> 대안체제 이론의 주창이 서구와 동양의 이항대립적 구도를 대체할 일관된 논리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당하다.<sup>99)</sup>

그런데 왜 창비팀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대안체제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이 거대이론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이 이론을 실현할 구체적 방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선 대안체제 이론이 그 자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주지하듯이 서구 근대 문명이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예를 들어 환경파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지만 서구 근대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즉, 탈근대적 대안은 암중모색의 차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탈근대적인 대안체제를 동아시아의 형성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 고민하는 지식인들이 지니는 문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97) 박승우(2008), 앞의 글, 327쪽.

98)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제를 대안체제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천착하는 창비팀의 주요 학자 중 하나인 백영서는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를 제시한다. 즉, 근대성이 억압과 동시에 해방의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입장이 『창작과비평』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그는 주장한다[백영서(2000a),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비, 7쪽부터].

99) 박승우(2008), 앞의 글, 334쪽.

많은 노력이 수행되어야 함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대안체제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구 근대를 극복하려는 진보적 지식인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창비팀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은 세계체제 이론의 대가인 월러스틴과 오리엔탈리즘 비판의 대표적 학자인 사이드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드는 푸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상대주의적 성향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는 계몽과 해방의 이념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그는 계몽과 해방이라는 거대이론의 폭력성과 억압성, 그것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려는 포스트구조주의와는 달리 계몽과 해방 이념의 유효성을 긍정한다. 즉, 그는 자신의 시도를 ‘휴머니즘’으로 표현하면서 “계몽과 해방에 대한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sup>100)</sup> 월러스틴 역시 강자들이 내세우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편주의를 ‘유럽적 보편주의(european universalism)’라 부르면서 참다운 의미의 보편주의인 ‘보편적 보편주의(universal universalism)’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드와 월러스틴이 모두 공개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월러스틴은 말한다. “기존 세계체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세우려면, 우리는 보편적 보편주의, 즉 성취할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거리는 보장은 없는 보편주의를 선언하고 제도화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sup>101)</sup> 그럼에도 이 둘은 참다운 보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월러스틴은 주장한다. “전 지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100)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흥규 역(2008), 앞의 책, 598, 613, 621쪽.

101) 이매뉴얼 월러스틴 저, 김재오 역(2008), 『유럽적 보편주의 : 권력의 레토릭』, 창비, 9쪽부터.

아직까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sup>102)</sup>

창비의 동아시아 이론은 서구 근대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데에서는 무기력한 진보적인 서구 이론의 한계점을 거의 넘어서지 못하였다. 특히 창비를 대표하는 지성인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세계체제론의 주창자인 월러스틴의 시각과 창비의 동아시아론 사이의 한계점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창비팀의 ‘대안체제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은 서구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sup>103)</sup> 전형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이론이 서구중심주의적 편향을 극복하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서구에서 등장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모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서구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한다.<sup>104)</sup> 이런 지적은 기본적으로 대안체제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해당된다고 해도 그리 과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의 대안과 방향을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임지현 유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거친 탈민족주의 내지 탈국민국가 중심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 강조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 방안으로 ‘순화된 애국주의’를 제안할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적 틀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 지구적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특수성의 영역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특수성을 보편성의 영역과의 연관성의 차원에

102) 이매뉴얼 월러스틴 저, 김재오 역(2008), 위의 책, 56쪽.

103)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심도 깊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04) 전형준(1997), 앞의 글, 284쪽.

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 한 가지 대안은 과거사 정리를 통한 정체성 형성의 방안으로 국사 중심의 역사교과서를 재구성할 때 순화된 애국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략적이거나 윤곽을 그려 보고자 한다.

### III. 일본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일본에서 등장한 여러 동아시아공동체 이론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전에 우선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의 공동체 논의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듯이 일본은 19세기 비서구국가 중 자력으로 근대화 성공한 예외적 국가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입구(脫亞入口)’라는 표어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서구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일본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기 보다는 대미 중시 정책을 일본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런 선진국 지향의 외교정책은 사실상 ‘탈아입구’ 사상의 지속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 보수지도자는 동아시아와의 화해를 통한 지역협력 질서를 창출하기보다는 동양에 초연한 입장을 보였다.<sup>105)</sup>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이론을 적극 주장하는 대표적 일본학자로 손꼽히는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는 일본이 그동안 동아시아 지

105) 손열(2008),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과 공동체론」,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169쪽.

역통합의 흐름을 적극 주도하지 못한 최대 이유를 “미국에 대한 배려와 일본 엘리트들의 의식 속에 깔려 있는 ‘탈아입구’ 사상”에서 구할 정도이다.<sup>106)</sup>

그러나 2000년 이후 일본에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본정부도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및 지역화<sup>107)</sup>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이 통화문제를 통한 지역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런 촉구에 일본과 중국이 호응하고 나서 ASEAN+3(한국·중국·일본) 포럼을 통한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형성되게 되었다. 2002년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일본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커뮤니티(an East Asian community)’ 구상을 주장하였다. 이 구상은 일본이 그동안 취해 온 다자 간 자유화 정책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향한 커다란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는다.<sup>108)</sup> 일본정부는 2005년 10월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서 열린 지역주의의 원칙에 기초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ASEAN, 한·중·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이 각종 기능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을 확보하고 이를 광범위한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확보한다.

둘째, 일본은 기능적 협력 촉진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다양성(경제발전단계, 문화, 민족, 종교, 정치이념, 안보정책

106)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김문정 역(2007), 『동아시아공동체』, 울력, 18쪽.

107) 21세기 초 세계경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U와 NAFTA로 대표되는 대규모 지역통합이 확산되는 상반된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08)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김문정 역(2007), 앞의 책, 51쪽.

등을 감안하면 EU와 같은 정치적 제도나 틀의 도입은 아직 먼 장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단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FTA/EPA 등)을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보편적 가치의 존중, 글로벌한 룰의 준수를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는 민주주의 및 자유인권 등 이른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WTO 등 글로벌한 룰을 중시하는 지역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기본 입장이다.<sup>109)</sup>

일본정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존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 지역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sup>110)</sup>

일본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도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니시구치 기요카츠(西口清勝)와 가코우(夏剛)가 함께 펴낸 책에서 보면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견해가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다. 첫째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대중관계를 발전시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견해와 거의 같다. 둘째는 첫 번째 견해와 마찬가지로 미일동맹 기축론을 주장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이 비현실적이라는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가치관체제를 달리하는 중국의 존재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일동맹 기축론을 재검토하여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야

---

109) 西口清勝·夏剛(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ミネルヴァ書房, 8~9쪽.

110) 손열(2008), 앞의 글, 181쪽부터.

한다는 견해이다.<sup>111)</sup>

첫 번째 견해, 즉 미일동맹을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대중관계를 발전시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그룹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에 관한 산학관의 ‘올 재팬’의 지적 플랫폼으로 설립 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동아시아공동평의회(2004년 5월 설립, 회장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의장 : 이토 겐이치 일본국제포럼 이사장)’가 있다. 이 평의회는 2005년 8월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현상, 그 배경과 일본의 국가 전략」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일본의 전략원칙’에서는 일본의 국익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① 안전보장, ② 번영, ③ 가치를 들고 있다.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이 그룹이 주장하는 것은 ‘부전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공동체는 반드시 “미일동맹을 견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인 ‘번영’에서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하여 사람, 물건, 자금, 정보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의 잠재성이 높은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면에서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 East Asian Free Trade Area)’의 실현을 주장한다. 마지막 키워드로 제시된 것은 ‘가치’인데, 앞으로 형성될 “동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인이 보전하는 가치관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동아시아공동체는 “자유나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공동체여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111) 西口清勝·夏剛(2006), 앞의 책, iv쪽.

‘동아시아공동평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의 제2부는 정책제언의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이 평의회는 무역, 투자,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에 기초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12)</sup> 이와 같이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는 정책보고서 제언은 사실상 일본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관한 입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입장과 거의 유사한 입장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의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에 관한 것이다. 평의회는 주요 인물인 이토 켄이치와 다나카 아키히코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표하고 있다. 이토 다나카(2005)는 일본이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미일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구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동아시아가 열린 틀을 갖고 번영하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무역투자관계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토와 다나카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자유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라는 여러 가치를 실행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목표와 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대미관계를 기본적으로 놓고 중국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평화적으로 지내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며 자유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나라로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sup>113)</sup>

일본에 존재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논자의 한 사람으로 우선 와타나

112) 西口清勝·夏剛(2006), 앞의 책, 6~8쪽.

113) 西口清勝·夏剛(2006), 앞의 책, 8~9쪽.

베 도시오<sup>[渡辺利夫]</sup>의 견해를 살펴보자. 와타나베는 우선 동아시아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체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경제적 차이가 공동체 형성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그는 한·중·일 3국의 정치관계가 긴장되어 있고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그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뒤에 그 은밀한 주체로서 중국이라는 지역강대국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를 움직이는 최대의 배후요인이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라는 것이다.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하는 것은 일본을 동아시아공동체에 끌어들이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켜 양국을 격리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그는 동아시아공동체는 실현불가능하고 또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에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통해 대국화하려는 중국에 대항하여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스스로 존재를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와타나베의 주장의 핵심은 동아시아 통합체는 FTA와 EPA(경제동반자협정)라는 기능적 제도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리모토 나오키즈<sup>[栗本尚一]</sup>도 와타나베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구상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은 공동체를 형성할 만한 공통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동체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 중 하나는 그 공동체에 일체성 내지 일정 정도의 동질성을 부여하는 기본적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역시 와타나베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착실하게 발전해 온 데 반해, 중국은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치체제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중국과 일본 양국이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시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견해 외에도 일본에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3의 견해가 있다. 이를 대변하는 학자로는 니시구치 기요카츠와 다니구치 마코토 등이 있다. 니시구치 기요카츠는 환경, 에너지, 농업, 통화,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국가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만 따라간다면 동아시아에서 고립화를 초래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길이 막혀 버릴 위험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sup>114)</sup>

다니구치 마코토도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길은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21세기의 세계경제는 확대된 EU와 NAFTA와 현재 약진하고 있는 아시아로, 새로운 3극 구조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이 계속 미국의 영향력만 고려하여 지역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역통합의 흐름에서 낙오되고 고립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을 발전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다니구치에 따르면 미일동맹도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기에 일본도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처럼 다니구치는 미일동맹에 대해 재검토하여 일본의 대 중국 및 대 아시아 정책을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15)</sup>

---

114) 西口清勝·夏剛(2006), 앞의 책, v쪽.

지금까지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일본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총론적인 세 가지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일본 내에서 주장되고 있는 다양한 동아시아 이론을 유형별로 세분하여 정리할 것이다.<sup>116)</sup>

## 1. 경제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EU의 역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유럽과 동아시아는 역사, 문화, 종교 등 여러 영역에서 차이가 있기에 이 두 지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길에서 지역통합에 관한 많은 통찰을 배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여러 일본학자들은 동아시아와 유럽연합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도 지역통합의 실현가능한 길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강화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요시토미

115)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김문정 역(2007), 앞의 책, 20쪽부터.

116) 앞으로 언급된 여러 이론 중 상당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피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을 경제 중심적, 정치안보 중심적, 문화 중심적 이론으로 세분하여 다룬다. 달리 말하면 경제 중심적 이론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이론을 보면 정치나 문화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여러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일단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각 이론이 어떤 관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바라보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관점과 대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이론이 개척될 필요성도 보다 쉽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식적인 틀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여러 이론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이 장에서는 각 이론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동아시아공동체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마사루(吉富勝)는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각국의 소득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지원하는 제도 인프라 수준 또한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유럽연합을 본보기로 하여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EU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그는 본다. 그는 동아시아 독자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을 찾아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sup>117)</sup> 이종원은 냉전 종결 이후에 한·중·일 사이의 사회경제적 통합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통합은 교류 등의 형태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융합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볼 때 동아시아공동체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학자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서도 경제적인 협력관계의 증진이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118)</sup>

다니구치 마코토는 동아시아는 이 지역의 상황에 어울리는 지역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아시아는 유럽연합보다 완만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완만한 형태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FTA를 비롯한 폭넓은 경제제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설립한 후, 최종적으로는 정치, 안전보장 면의 지역협력이 가미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

117) 吉富勝(2006), 「東アジア共同體への道」,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會報』 940.

118) 이종원(2005. 5), 「동아시아공동체와 동북아시아」, 『月刊 社會民主』 600號.

고 역설한다.<sup>119)</sup>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볼 때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제적인 통합은 한국·중국·일본이 하나가 되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이 세 국가의 경제적 비중이 워낙 크고 인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에 일본에게 ASEAN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파트너이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일본에게 더 중요한 파트너는 한국과 중국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2003년 12월 일본-ASEAN 특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ASEAN 중시 정책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고 중국에 소외감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니구치 마코토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협조적 분업체제 확립’을 통한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특수한 형태의 원만한 분업체제를 형성해 왔다. 즉,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일본산업이 동아시아의 NIES(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에게 따라잡히면서 고도화된 산업으로 이행하는 구조조정에 의해 형성되었다. NIES는 ASEAN 4(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의해 따라잡히면서 이를 극복하게 위해 더 높은 단계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캐치업(catch-up)’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특유의 협조적 분업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협조적 분업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면 동아시아 경제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sup>120)</sup>

119)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김문정 역(2007), 앞의 책, 90쪽부터.

120)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김문정 역(2007), 앞의 책, 119쪽부터.

## 2. 정치군사 중심적 동아시아 이론

일본의 정치군사 중심적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동아시아공동체는 결국 중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안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관점을 제외하더라도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양국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문제평론가인 고모리 가즈요시<sup>[古森義久]</sup>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요괴’이자 일본이 직면한 ‘악’이라고 묘사한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반일교육을 받아 일본인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2005년도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반일 폭력시위는 이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한국 사람 사이에서도 반일감정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과 단일의 통합국가가 되는 공동체를 구상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추진하는 동아시아공동체는 미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중국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결국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미국을 아시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외교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고모리 가즈요시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지닌 문제점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패권을 형성하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말고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일본에 아주 위험한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기반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강조한다. 동아시아공동체는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유럽연합과 비교해 보아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인 격차는 클 뿐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체제의 상이성도 존재하기에 공동체를 형성할 여러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구상의 진전에 따라 일본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일본에 대거 유입되는 사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는 강조한다.<sup>121)</sup>

하타케야마 노보루(畠山襄)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환상을 버릴 것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취할 방안으로 공산주의 국가이자 독재국가인 중국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FTA 혹은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인 공동체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중국을 배제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본이 이 지역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이기에 중국과 함께하는 공동체란 모순이며 그런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민주화되고 그 후에 민주주의 국가 동맹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 이런 하타케야마 노보루의 주장은 일본의 보수적인 정치인과 지식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sup>122)</sup>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중국을 배제한다거나 중국의 패권추구적 의도를 염려하는 견해와는 달리 기쿠치 츠토무(菊池努)는 “왜 지금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을 보면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

121) 古森義久, 「“東アジア共同體”という妖怪～日本が直面する悪夢とは-」, <http://blog.livedoor.jp/lancer1/archives/50279670.html>.

122) 畠山襄(2005. 9), 「東アジア共同體の幻想を捨てよ」, 『中央公論』.

의적인 세계화의 파괴적 성격을 조절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그는 강조한다. 둘째, 그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단독행동주의에 대한 염려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그는 중국경제의 역동성을 주목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123)</sup> 이처럼 기쿠치 츠토무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나 학자들과는 달리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행동방식과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위해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학자인 이종원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는 이런 안보적인,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도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도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동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한 주변국가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에게 필요하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의 민족주의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는 일본의 민족주의는 표적 없는 민족주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4)</sup>

---

123) 西口清勝·夏剛(2006), 앞의 책, v쪽 재인용.

124) 이종원(2005), 앞의 글.

### 3. ‘유교문화권’ 이론

정치군사 중심적 이론에서처럼 일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입장은 긍정과 부정으로 확연하게 갈린다. 즉, 유교문화권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동아시아 지역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존재하여 공동체 형성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 병존한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문화적인 조건이 불변적인 성질의 것인 양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는 유럽의 경우보다 문화, 종교,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더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이 양국은 언어적으로 매우 이질적이다. 즉, 중국과 일본은 다른 어족에 속하며 전혀 다른 문법체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중일고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공통성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양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커다란 왕래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125)</sup>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는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에서 ‘아시아공동체’를 제창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을 몰락에서 구해 낼 유일한 구제책은 ‘동북아시아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나라가 역사·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고 인종적으로도 가까운 이웃 나라라는 점을 들어 이 구상은 상당히 실현가능하다고 그는 보았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특수한 문화적 공동성이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이

---

125) ANECDOTA, 「EUと東アジア共同體」, <http://homepage3.nifty.com/ryuota/eastasia.html>.

다.<sup>126)</sup>

나카지마 미네오(中嶋嶺雄)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화적·문명적 위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실현불가능한 환상으로 치부한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라 불리는 이 지역은 ‘유교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분류에 기초하면 일본은 물론 중국, 한반도, 타이완,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가 동아시아에 포함된다. 이 범위는 동시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과 중복된다고 그는 본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륙성, 한국의 반도성, 일본의 도서성이 눈에 띈다고 나카지마 미네오는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륙국가인 중국의 우주관은 ‘음양이원론’이다. 이 음양이원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죽더라도 악은 악이라는 발상이다. 즉, 악인은 영구히 악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죽으면 모두가 신이 된다”라는 생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사관에서 그는 야스쿠니신사 문제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야스쿠니 문제를 논할 때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배경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반도국가이다. 그는 반도성의 특징을 ‘소중화사상’으로 본다. ‘소’이기 때문에 조공국이었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국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즉, 한국은 반도국가로서 중국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카지마 미네오는 일본은 도서성을 띠는 국가로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 문물을 받아들여 자국에 맞게 변화시키는 독특한 창조성을 갖고 있는 국

---

126) 모리시마 미치오, 장달중 외 역(1999),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일조각.

가이다. 중국과 한국은 ‘한의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일본에 한을 갖고 있다. 전후 60년 동안 몇 번이나 스스로 국가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자성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였어도 부자가 되어 번성하고 있는 일본을 선망하며 한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수치의 문화’를 가진 국가라고 그는 분석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그는 ‘매운맛’에 비교한다. 즉, 중국은 언제까지나 집요한 ‘라유(辣油)의 매운맛’이다. 한국은 화하고 매워지는 ‘고추의 매운맛’이다. 일본은 맵지만 깔끔하고 바로 없어지는 ‘와사비(山葵)의 매운맛’이다. 이런 지리적 특성과 어울리는 문화적 차이로 한·중·일 3국 사이에는 ‘문화적·문명적 위화’가 존재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sup>127)</sup>

나카지마 미네오의 입장은 현존하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숙명론에 가깝다. 또 과연 한국, 중국, 일본이 정말로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이질적인 국가인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뚜웨이밍은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로 유교의 전통을 강조한다. 그는 한국의 유교자본주의 및 유교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의 유학이 베트남, 조선, 일본 등지로 전파되어 유교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대단히 유기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 베트남, 조선, 일본 등의 행정관리와 사회윤리, 심지어 심리습관과 언어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유가사상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본다.<sup>128)</sup> 뚜웨이밍은 일본의 교토대학 퇴임 교수인 시마다 겐지를 유가

127) 中嶋嶺雄(2006. 2), 「東アジア共同體は幻想だ」, 『Voice』.

128) 뚜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앞의 책, 300쪽.

와 동아시아 문명의 관계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로 칭한다.<sup>129)</sup> 유교문화권이 얼마나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문화적 동질성을 설명해 주는지라는 문제를 도외시하더라도 나카지마 미네오의 문화적 숙명론은 문제가 있다.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각국의 뜻있는 사람과 정치지도자들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어울리는 동아시아공동체 의식을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아시아공동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4. 계보학적 동아시아 문화 이론

푸코 및 사이드 등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의 문화 및 일본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은 일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일 한국인 2세인 강상중, 시카이 나오키(酒井直樹),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논의를 일본 민족주의 비판 및 동아시아 이론에 대한 성찰에 국한하여 살펴보자. 예를 들어 고야스 노부쿠니는 1990년 냉전 해체 이후 일본 지식인 사회에 불기 시작한 동아시아에 관한 이론의 부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1930~1940년대 일본에서 정치적 주제이자 이론적 주제였던 ‘아시아’가 다시 지식인들의 지적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전의 ‘동아’의 관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가 보기에 일본 지식인 사회는 전전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도구로 쓰였던 ‘동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않은 채 덮어두었다가 다시 냉전해체의 상황에서 끄집어 내어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역사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놓

---

129) 푸웨이밍(1995), 「유가철학과 현대화」,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367쪽부터.

여 있는 것도 바로 과거 일본의 ‘아시아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따라서 진정한 아시아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일은 근대일본의 아시아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고서는 실현불가능하다. 과거의 아시아 문제에 대한 자기 검증 없이 아시아 문제에 다시 개입하는 것은 전전의 일본제국주의의 전철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염려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야스 노부쿠니는 20세기 제국일본의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을 일본의 근대지성사를 계보학적으로 성찰한다. 이제 아시아를 새롭게 말하려면 제국일본과 함께했던 동아 개념의 계보를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의 죽음을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sup>130)</sup>

고야스 노부쿠니에 따르면 1945년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이상은 와해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아’ 역시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일본은 전전의 ‘동아’를 대신할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질서유지의 전략적 관점에 따라 동아시아를 대하였을 뿐이라고 그는 분석한다. ‘동아’란 개념은 1945년 이후 일본사회에서 일종의 터부로 간주되었기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용어였다. 이렇게 동아시아를 일종의 공백 상태로 둔 것은 일본 국가의 정치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 지식인의 인식적 차원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고야스 노부쿠니는 말한다. 따라서 그는 근대일본에서 형성된 ‘동아’ 개념의 형성과 변화의 추이를 사상사적으로 반성한다. 그의 작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동아’와 ‘유학’의 상관성에 대한 반성이다. 유학의 역사를 문화적인 지역 개념인 ‘동아’와 결합함에 따라 그는 “‘중국유학사’라는 문화일원론적 기술”을 극복하고 ‘유학의 다원

130) 고야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동아·대동아·동아시아-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특히 151쪽.

성'을 해명하려고 한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그는 “실체적 ‘동아’에서 방법적 ‘동아’”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sup>131)</sup> 이처럼 그는 푸코와 사이드의 문제의식을 일본지성사에 적용하여 일본의 ‘동아’ 개념의 기원을 계보학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제국의 침략의 이념으로 동원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는 일본제국을 정당화하였던 ‘실체’로서의 ‘동아’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동아 개념, 즉 ‘방법적’ 동아 개념을 구성해 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32)</sup>

강상중의 동아시아 이론은 여러 차원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베버, 푸코, 사이드 등의 영향을 받아 일본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려는 집요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그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사이드의 지적 충격은 대단하였다. 즉, 사이드는 “실로 강력한 청소기로” 그의 “머릿속에 쌓인 먼지를 빨아들이듯 그때까지 안개에 싸인 것만 같던” 그의 “의문을 말끔히 거두어 가 주었다”고 그는 고백한다.<sup>133)</sup> 다른 한편으로 강상중은 동아시아 문제를 근대가 잉태한 모순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는 2001년 일본 중의원의 헌법 조사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동북아 공동의 집’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경쟁에 일본이 미국 중심의 자세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틀을

131) 고타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위의 책, 167쪽.

132) 고타스 노부쿠니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방법으로서의 동아라는 관점은 다케우치 요시미가 주창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기초로 구성된 역사비판을 위한 방법적 관점’이다. 고타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앞의 책, 26쪽.

133)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6쪽.

해체하고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sup>134)</sup>

강상중은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다루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라는 ‘이야기’도, 민족주의라는 ‘대항 이야기’도 “민족이나 국민, 문화나 계급, 성(젠더)이나 인종 등에 따라 구획된 집단 사이의 범주적 차이를 분절화하거나 그것을 억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단지 민족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반복·확대하고 창출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sup>135)</sup> 예를 들어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는 사회 내부의 경계 설정을 통해 이질적인 집단을 선택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재일 한국인은 완전 시민권을 향유하는 일본인과 완전히 비시민권 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중간적인 영역에 배치되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36)</sup>

## 5. 구성주의적 동아시아 이론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요구하는 정체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공유된 문화적 전통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있다. 우리는 이를 구성주의적 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여러 동아시아 이론은 다양한 차원을 지니고 있기에 계보학적 동아시아 이론 속에 구성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 계보학적 동아시아 이론에서 소개된 강상중 역시 문화와 권력의 상

134)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135)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위의 책, 197쪽.

136)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앞의 책, 219쪽부터.

관성을 해명하면서 특정한 지역과 나라에서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문화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가 문화를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문화비판을 통해 기존질서의 내부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타자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지배적인 문화질서에서 소외된 집단이나 개인에게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강상중 역시 ‘문화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성을 고정불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이란,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에 의해 자기 위치를 설정당하는 동시에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할 경우, 그 방식들에 대해 부여하는 명칭”으로 정의한다. 즉, 강상중이 볼 때 “차이의 경계는 다른 준거점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자리매김되어 가는 것이다.”<sup>137)</sup>

가즈에 게이타로(吉澤啓太郎) 역시 동아시아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하나로 문화적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EU와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의 공유가 도움을 주었다. 그 세 가지는 ‘공통의 위협’, ‘공통의 이익’, ‘공통의 가치관’이다. 달리 말하면 서로 같은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공통의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형성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인데, 그가 보기에는 동아시아에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의 중심에 있는 한·중·일 3국에만 국한해 보아도 이 나라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밀접하지만 공동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나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37)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앞의 책, 221쪽부터.

고 그는 결론짓는다.<sup>138)</sup>

오자키 시게아키(尾崎重義)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념과 행동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평화, 안전, 번영’을 공동체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원칙으로 ‘열린 지역주의(아시아주의)’, ‘반패권주의’, ‘점진주의’ 등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평화, 안전, 번영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철저한 화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중일전쟁을 정리하는 문제에서 철저한 양보 및 사죄와 성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런 자세는 물론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그는 잊지 않고 지적한다.<sup>139)</sup>

마스타 유지(増田祐司)는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위해 이 지역의 핵인 동북아 지역의 ‘공동지(公同知)’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으로 긴장과 갈등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런 상호불신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역사 동안 누적된 교류로 형성된 사고방식에서의 공동성에 주목한다.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의 기초인 동양문명은 근대화를 선도한 서양문명에 상대되는 것이지만 아주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역사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동양문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관련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는 바라본다. 예를 들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

138) 主計啓太朗, 「東アジア共同體からの可能性」, <http://gyosei.mine.utsunomiya-u.ac.jp/since2002koki/gen07/genreport/0812kasuda.html>.

139) 尾崎重義, 「東アジア共同體構想の現實化」, <http://www.nishogakusha-u.ac.jp/pdf.e7-32.pdf>.

면 일본과 미국 사이의 교류는 일본의 근대화 이후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교류사는 2,000년이 넘는다. 이런 교류사의 경험으로 한자 문화, 불교 등 중국과 일본의 사고방식에서 공통된 것이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공유된 사고방식인 ‘공동지’를 재발견하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즉, 그는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적 공간을 확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좀 더 새로운 ‘공동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40)</sup>

대중문화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아오키 다모츠(青木保)이다. 그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한·중·일 3국과 타이완 등을 포함하는 협의의 동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연합국(ASEAN) 국가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의의 동아시아 문화에서 한자문화권 내지 유교문화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유교문화권이 역사상 과거의 시점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모르지만, 유교문화권이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는 이 지역의 문화적 통합의 기초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표현한다. 유교 외에도 언어도 서로 이질적이기에 대중문화의 역할과 영향력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sup>141)</sup>

아오키 다모츠는 동아시아 지역은 언어, 종교 등 여러 영역에서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다양성 속에

140) 増田祐司(2007. 3), 「21世紀世界システムにおける東アジア統合と共同體」, 『綜合政策論叢』第13號, 島根縣立大學 綜合政策學會.

141) 青木保(2005a), 「東アジア共同體の文化的基盤」, 『國際問題』538.

서도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즉,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문화교류도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혼성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진단한다. 예를 들어 ‘한류’를 비롯하여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는 ‘문화교류’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결국 끊임없이 ‘문화교류’를 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하여 서로 어딘가에서 공통의 문화를 생활화하여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의식이 양성되는 것을 그는 기대하는 것이다.<sup>142)</sup>

## 6. 탈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론

일본인 중에서도 동아시아 이론을 탈근대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이 있다. 서구 근대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일본 지식인 중에서 다케우치 요시미는 선구적인 인물에 속한다. 한국에서의 여러 동아시아 이론을 설명하는 곳에서 지적하였듯이 그의 이론은 한국의 동아시아 이론의 형성과 확산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143)</sup> 다케우치 요시미(1910~1977) 외에도 와다 하루키나 강상중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 역시 탈근대적 기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sup>144)</sup> 이들 역시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와 서구 근대

142) 青木保(2005b), 「東アジア共同體意識の醸成を目指して」, 『外交フォーラム』 207號.

143) 다케우치 요시미는 중국에서도 크게 수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쓴거 저, 윤여일 역 (2007),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그린비, 11쪽 참조.

144)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다케우치 요시미나 탈근대적 동아시아 이론가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서구 근대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탈근대적’이라는 용어가 근

가 잉태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아시아의 협력질서 형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중국의 루쉰 문학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종말을 고한 전전의 일본의 아시아주의의 맥을 창조적으로 이어가고자 애쓴 인물이다. 달리 말하면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이데올로기로 단죄된 전전의 ‘근대의 초극’ 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다케우치 요시미가 「근대의 초극」이라는 글에서 말하였듯이 ‘근대의 초극’이라는 논의는 전쟁 시기 일본 지식인의 유행어였다. 또한 ‘근대의 초극’이란 말은 ‘대동아전쟁’의 상징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용어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하였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런데 다케우치 요시미는 근대의 초극의 의미를 다시 주제로 삼아 그 의미를 다시 해부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근대의 초극’이라는 시도에서 부정적인 것만 보려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sup>145)</sup> 그리하여 그는 사상으로서의 ‘근대의 초극’의 의미를 그것이 수행한 전쟁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다 해명할 수 없다고 본다.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글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구의 우수한 문화가치를 보다 대규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양을 한 번 더 동양에 의해 다시 싸안아서 역으로 서양 자신을 이쪽에서 변혁한다는 이

---

대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지, 그런 자세가 반드시 서구 근대의 긍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5)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64쪽부터.

문화적인 퇴감기 또는 가치상의 퇴감기에 의해 보편성을 이루어 냅니다. 동양의 힘이 서양이 만들어 낸 보편적인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 서양을 변혁합니다. 이것이 동과 서의 오늘날의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상의 문제인 동시에 문화상의 문제입니다. 일본인도 이러한 구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퇴감기할 때에 자신 속에 독자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그러한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방법으로서, 다시 말해 주체 형성의 과정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저로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sup>146)</sup>

위의 인용문이 보여 주듯이 다케우치는 아시아의 문제 혹은 동양의 문제를 매개로 하여 서구 근대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서구의 근대를 넘어서는 것은 단순히 서구 근대를 도외시하거나 추상적으로 거부의 몸짓을 보이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아시아를 말한다는 것은 서구의 근대를 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동양을 가능케 한 것은 유럽”이기 때문이다.<sup>147)</sup> 그런데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서구의 동양에 대한 침략과 저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서구 근대의 극복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서구에 대해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서구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달리 말하면 ‘저항’을 지속하면서 “유럽적인 것에 매개”되어 유럽적인 것을 뛰어넘는 “비유럽적인 것”을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서구 근대의 극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148)</sup> 다케우치에 따르면 저항은 동양이 자신을 근대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장래를 더 높

146)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위의 책, 168쪽부터.

147)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앞의 책, 26쪽.

148)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앞의 책, 22쪽.

이 평가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서구에 저항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서구를 모방하는 길을 걸은 데 반해 중국은 서구에 저항하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해서 그는 일본문화를 ‘전향문화’로, 중국문화를 ‘회심문화’로 규정한다. “전향이 밖을 향해 움직인다면 회심은 안을 향해 움직인다. …… 회심은 저항에 매개되고 전향은 무매개이다.”<sup>149)</sup>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사상은 다케우치가 패전과 함께 일본에서 상실된 “아시아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자세”<sup>150)</sup>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기획의 성과이다. 아시아를 생각할 때 그는 결코 그것이 이미 실체로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양을 되안아서 서양이 만들어 낸 평등과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보다 더 드높이는 과정에서만 아시아주의가 가능하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아시아주의는 결코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쉰거가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다케우치 요시미는 “동양 대 서양, 전통 대 근대와 같은 추상적인 이항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인물이다.<sup>151)</sup>

다케우치는 아시아의 문제를 통해 일본의 방향을 아시아를 벗어나려는 것 으로부터 아시아의 일원으로 아시아를 변형하게 하는 흐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근대사가 보여 주듯이 일본은 “아시아를 연대의 대상에서 점차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시아를 말하면서 일본을 다시 아시아 쪽으로 근접시켜 “연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가 바로 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인 셈이다.<sup>152)</sup>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개념은 논쟁 중이다. 예를 들어 강상중

149)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앞의 책, 54쪽.

150)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앞의 책, 205쪽.

151) 쉰거 저, 윤여일 역(2007), 앞의 책, 367쪽.

152)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앞의 책, 214쪽부터.

은 쏜거와 달리 다케우치의 사상을 동양과 서양을 대립 개념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다케우치의 사상은 전전에 ‘근대의 초극’을 주장한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대신에 그는 아시아 내지 동양을 복권시키려는 탈근대 사상은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케우치가 보여 준 것처럼 “탈근대의 가능성으로서의 서구 이외의 지정문화를 서구라는 특권적인 문화의 지위로까지 끌어올리거나 ‘보편주의’ 문화가 몸담을 또 하나의 장으로 특권화함으로써 서구중심주의를 해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의문”의 대상으로 전도되고 말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sup>153)</sup>

강상중의 평가와는 달리 고야스 노부쿠니는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개념을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동아’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다. 그는 문화개념으로서의 ‘동아’ 개념을 복권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한다. 그가 염두에 두는 ‘문화로서의 동아’ 개념은 중화주의적인 문명의 일원론적 지향을 상대화하려는 용어이다. 즉,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다원적인 문화 발전을 인정하는 문화사적 지역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동시에 자민족중심주의를 상대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처럼 고야스 노부쿠니는 ‘동아시아’라는 문화적인 지역 개념을 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다중다층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관계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동아시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실체화하지 않으면서 생활자가 상호교류할 수 있는 관계틀로서의 지역 개념, 이를테면 방법적인 지역 개념으로 만들어 가는 길”을 통해 일본제국의 패권주의로부터 더럽혀진 ‘동

153)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앞의 책, 178쪽부터 참조.

야'를 극복하지는 것이다.<sup>154)</sup>

중국에서 다케우치 요시미의 문제의식을 계속하여 발전시키려고 하는 지식인으로는 쑨거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중 한 명인 백낙청 역시 '근대의 초극' 논의를 파시즘과 연결시키는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이론을 '근대의 초극'에 대한 '좀 더 자상하고 내재적인 비판'이라고 본다.<sup>155)</sup> 최원식은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교토학파를 중심으로 한 '근대의 초극' 논의를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이 논의는 "대동아공영권을 명목상으로는 승인하는 듯하면서 실질적으로 천황제 파시즘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근대의 초극' 논의가 비록 아시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미화하여 전쟁의 이데올로기로 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근대를 넘어설 새로운 세계 형성의 원리를 모색하고자 한 문제의식은 일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최원식은 말한다.<sup>156)</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히 논쟁적인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생각은 아시아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준거점이 되고 있다.

와다 하루키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 역시 일정 정도 탈근대적 기획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동북아시아가 대단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역이며 극심한 대립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실현되어야 할 '공동의 집'에 대한 구상을 '꿈'과 같은 일로 본다. 그는 '동

154) 교야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앞의 책, 96쪽부터.

155)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127쪽, 각주 16.

156) 최원식(1995),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100쪽부터.

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구상을 "현실타개를 위한 개혁노선의 목표임과 동시에 하나의 유토피아"로 규정한다. 이 새로운 유토피아는 20세기 말에 종언을 고한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를 대신하는 것이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한 전통적인 유토피아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으로서의 새로운 유토피아는 개방적인 형태의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또한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유토피아를 냉전 이후 미국이 단독으로 지배하는 세계질서, 세계화 및 빈부격차의 증대, 민족적 대립감정의 격화 등 좋지 않은 여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sup>157)</sup>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경험한 지역이면서 지금도 국제적인 위기의 현장인 이 지역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극복하면서 공존공영의 공동의 집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집, 즉 전 지구 공동의 집"도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은 훌륭한 유토피아이고 한 번 진지하게 꿈꾸어 볼 만한 유토피아이다. 이렇게 와다 하루키는 신지역주의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하려고 한다.

---

157)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2004), 앞의 책, 273쪽부터.

## IV. 실증적 자료로 본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정체성 문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여러 동아시아공동체 이론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는 유교문화가 과연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이론에 대한 유형별 분석에서 우리는 유교문화에 기초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일단 이론적 접근방식에 그친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탁상공론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해 유교문화적 맥락에 기초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주의적 사유방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교문화적 공동성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본질적이고 불변적인 것처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제시되는 실증적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 형성, 특히 지역적 정체성 형성 모색의 기초적인 자료 역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형성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문화적 공동체 및 공동의 정체성 형성 노력은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없이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다.

## 1. 실증적 연구분석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도 앞에 많은 난관이 존재함에는 분명하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통합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런 통합에 추진력을 부여할 공동의 문화적 동질성 내지 문화적 공동의식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할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일정한 일체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할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광익은 경제공동체 및 안보공동체 형성을 추동시키는데 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sup>158)</sup>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단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확정해야 한다. 박승우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동아시아 이론을 주도한 여러 인문학자에게 동아시아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포함하는 범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sup>159)</sup> 박사명은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범주로 바라볼 것과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확산되는 시장경제의 발전,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냉전체제의 해체 등 역동적 정치변동과 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

158) 김광익(2005),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의 필요성과 가능성」,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329쪽.

159) 박승우(2008), 앞의 글, 309쪽, 각주 1 참조.

북아와 동남아를 뚜렷하게 경계짓는다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동아시아를 이렇게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동북아는 동아시아의 소지역으로 이해된다.<sup>160)</sup>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공동체 형성에서 위로부터의 제도적 협력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국민국가들을 넘어 지역적 협력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역적 정체감 형성의 노력이 더욱더 배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제통합과 안보통합의 움직임도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 과제는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동아시아가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공동의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이 지역의 문화적 통합 및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하면 최근 아시아적 가치 이론에서 보듯이 유교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정하듯이 동아시아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그것도 서구적 근대화의 파괴적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고귀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동아시아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망각되었거나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의 내면화로 소홀히 되거나 배제되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유교문화적 전통을 다시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아시아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동아시아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

160) 박사명(2008),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 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14쪽까지; 박사명(2006), 앞의 책, 275쪽.

경우 이 지역은 문화적 공동성보다는 이질성과 다양성이 먼저 눈에 띈다. 흔히 “불교, 유교, 쌀 문화, 가족주의, 민속 혹은 풍속의 상사성”이 동아시아적 문화전통의 공동성으로 언급되지만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공통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차이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김광역은 동아시아 지역은 문화적 공통성보다는 이질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다.<sup>161)</sup> 그리고 설령 유교문화적 전통이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규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정체성 형성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즉, 동아시아가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통의 문화적 유산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모색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바람직하면서도 충분한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사회가 서구에 비해 집단주의적·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유교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이 어느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결과는 ‘한·중·일 3국 의사소통 구조 분석’이라는 전체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 2004년, 2005년에 한·중·일 3국에서 각 500명씩 동시에 실시한 가족, 기업, 시민사회 관련 설문조사에 의거한 것이다.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기본적인 분석틀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석틀로 설정된 것이다. 둘째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위계적인가 아니면 수평적인가에 따라

161) 김광역(2005), 앞의 글, 350~352쪽.

‘권위주의’와 ‘평등주의’라는 대립쌍을 채택하고, 마지막 세 번째 틀은 의사소통의 방식이 사적이며 상황적인지 아니면 공식적인지에 따라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범주이다.<sup>162)</sup>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분석틀을 이 두 개념이 보여 주는 특성을 이념형적으로 서술하면 표 1과 같다. 서구 근대의 인간관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근대적 자유 및 권리 개념이 도출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는 자아의 내면적 양

〈표 1〉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비교<sup>163)</sup>

집합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가족의 충성과 보호</li> <li>• 정체감의 근원이 사회적 연결망</li> <li>• ‘우리’라는 사고방식의 교육</li> <li>• 조화추구</li> <li>• 집단이익 우선</li> <li>• 집단의 의견 중시</li> <li>• 고맥락의 의사소통</li> <li>•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이념 우세</li> <li>• 사회의 조화와 합의가 궁극적인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신과 직계가족</li> <li>• 정체감의 근원은 개인</li> <li>• ‘나’라는 사고방식의 교육</li> <li>• 정직추구</li> <li>• 개인이익 우선</li> <li>• 개인의 의견 중시</li> <li>• 저맥락의 의사소통</li> <li>• 평등보다 개인의 자유이념 우세</li> <li>• 개인의 자아실현이 궁극적인 목표</li> </ul>

162) 이재열(2002), 「신뢰와 사회적 자본 : 개념적 정리」, 浩山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편, 『성찰의 사회학』, 박영사, 216~220쪽. 기본적 분석틀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원칙의 특성	집합주의/인격주의	개인주의
관계의 구조	위계적 관계	수평적 관계
관계규제의 규칙	사적이며 상황적 규제	공적으로 제도화

세 가지 분석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권용혁(2004),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가족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34쪽부터.

163) 이 표는 기어트 호프슈테더 저, 차재호·나은영 역(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06, 115쪽 표를 재구성.

심을 도덕의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관용의 원리 등이 파생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권리의 긍정 속에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다. 반면에 동양적 인간관은 상대적으로 관계적이며 집합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된다.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윤리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윤리가 자리잡기 쉽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문화에서 개인은 독립된 존재로 간주되기보다는 항상 가족, 공동체, 국가, 우주 등의 맥락에서 인식된다.

평등주의 대 위계주의라는 분석틀은 사회에서의 권력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홉스테드에 따르면 ‘권력거리’는 “한 나라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이다. 위계적 질서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권력거리’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이런 사회에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과 동등하지 않으며, 아랫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대등한 위치에서 말하기 매우 어려워한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를 홉스테드는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2. 자료분석

한국·중국·일본의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를 관심의 강도(관심 없음 0~관심 있음 10)에 따라 조사한 설문의 응답자 반응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는 대답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나 세계에 비해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 전통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표 2)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작은 사회 비교 : 일반적 규범, 가족, 직장, 정치

집합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불평등의 최소화</li> <li>• 약자와 강자 사이의 상호의존</li> <li>•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동등한 관계</li> <li>• 조직 내 위계의 임의적 역할 불평등</li> <li>• 조직 내 권력분산</li> <li>• 부하직원과의 상의</li> <li>• 임금격차가 작음</li> <li>• 권력의 행사는 합법적이어야 함</li> <li>• 동등한 권리</li> <li>• 다수결원칙에 토대를 둔 다당정치</li> <li>• 중도파가 강하고 좌우파 양극단이 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불평등의 당연시</li> <li>•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의존과 반의존</li> <li>•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복종</li> <li>• 조직 내 위계의 존재적 불평등</li> <li>• 조직 내 권력집중</li> <li>• 부하직원에 대한 지시</li> <li>• 임금격차가 큼</li> <li>• 정당성이 힘에 앞섬</li> <li>• 특권</li> <li>• 발탁을 토대로 한 전제 내지 과두정치</li> <li>• 중도파가 약하고 좌우파 양극단이 강함</li> </ul>

※ 자료 : 기어트 호프슈테더 저, 차재호·나은영 역(1996), 앞의 책.

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한국·중국·일본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 세계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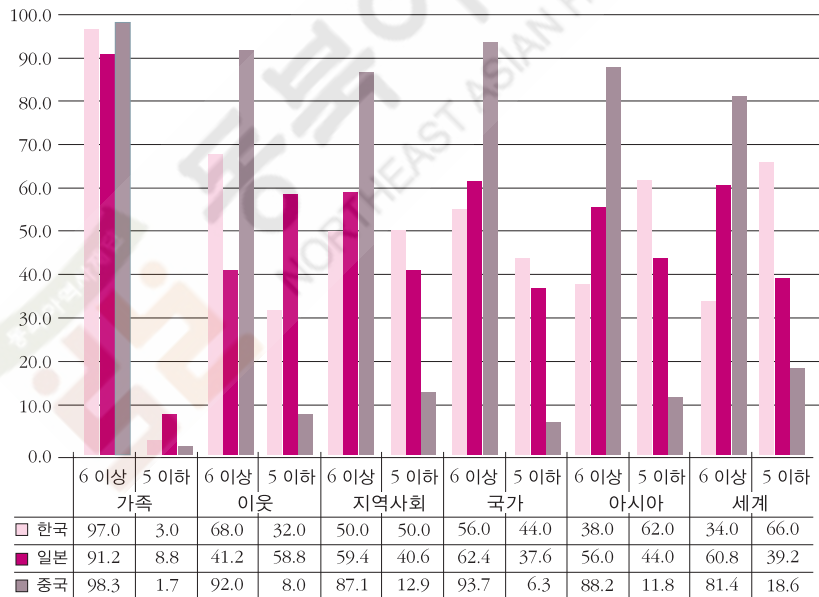


그림 1. 한·중·일 3국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 세계에 대한 관심도 분포

가족에 대한 관심도는 한국이 97%, 일본이 91.2%, 중국이 98.3%로 3국 모두 매우 강하다. 가족에 대한 관심도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에 대한 관심도의 강도를 보면 3국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가장 관심도가 높은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에 대한 관심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중국이 92%로 아주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68%, 일본은 41.2%로 비교적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각각 87.1%와 93.7%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50%, 국가에 대해서는 56%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59.4%, 국가에 대한 관심도는 62.4%에 이르고 있다. 실증자료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및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강도에서는 3국 모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관심의 강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구성원이 보이는 관심도를 종합하면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은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 아주 관심이 많은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가족 이외에는 관심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런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마 정치 및 사회체제의 상이성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과 다른 정치 및 사회 체제를 지닌 중국에서 중국이 국가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경향이 한·중·일 3국 국민 모두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경향은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관심의 강도를 놓고 보면 자신을



그림 2\_ 한·중·일 관심도 비교(관심도 1~10 중 6 이상)

둘러싼 공동체에 대해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족이 관심사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구성원이 가족을 중시 여기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가계나 혈연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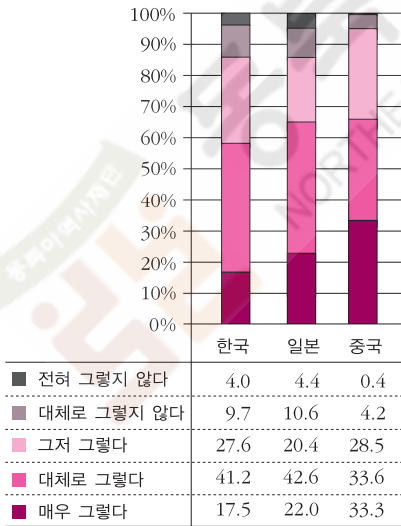


그림 3\_ 가계나 혈연의 중요도에 대한 답변 분포도

3국 모두 사회생활에서 가계나 혈연의 중요성을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로 대답하고 있다.

즉, 대략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생활에 가계나 혈연의 중요성 여부에 대해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북아 3국 모

두 5%에 이르지 않는다.

실증자료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족 및 이웃 등의 여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과연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일본, 중국에게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세대별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그림 4A 참조), 이웃(그림 4B 참조), 지역사회(그림 4C 참조), 국가(그림 4D 참조)에 대한 관심도를 1에서 10까지의 강도로 볼 때 답변의 강도와 비율의 평균을 산출해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20대에서 50대까지 세대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보아 동북아시아 3국이 상당히 서구적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비교적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나 혈연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동아시아 3국 모두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매우 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3국은 기본적으로 집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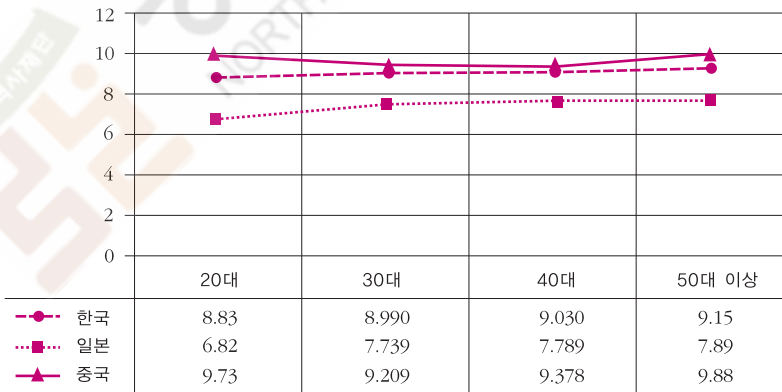


그림 4A\_ 가족에 대한 관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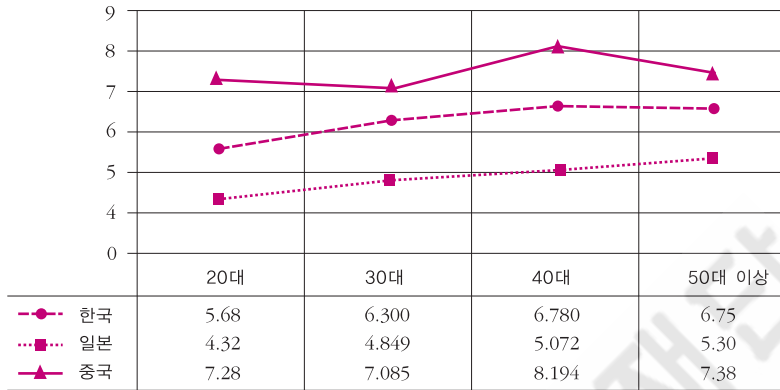


그림 4B\_ 이웃에 대한 관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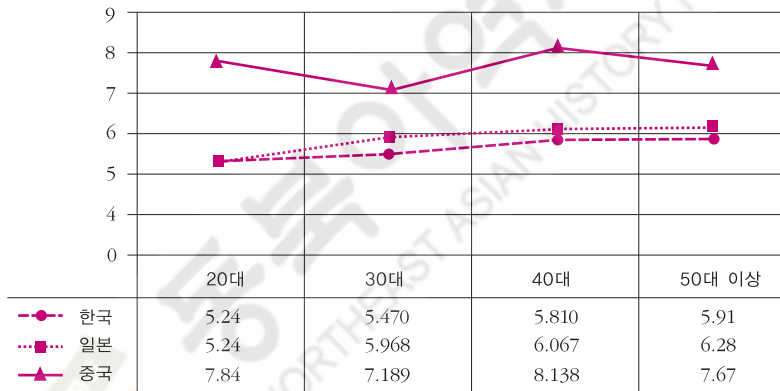


그림 4C\_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비교

의적 성향을 띤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가족 속의 개인을 생각할 경우에는 3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해를 희생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가 가족의 이익이 개인적 이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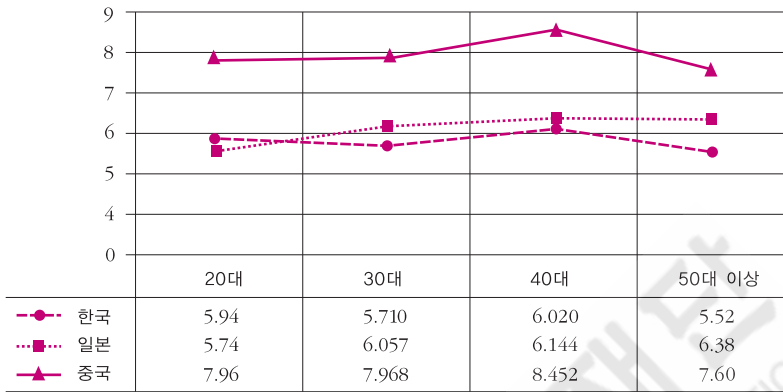


그림 4D\_ 국가에 대한 관심도 비교

앞선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2개국과 비교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각각 18.1%, 58.7%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각각 8.8%, 27%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23.5%와 25.8%이다(그림 5 참조). 이 실증적 조사결과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이 흔히 전체주의적 사회라고 분류되는 중국보다도 가족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가족의 화목보다 더 중요하다”는 문항은 동아시아 3국의 개인주의 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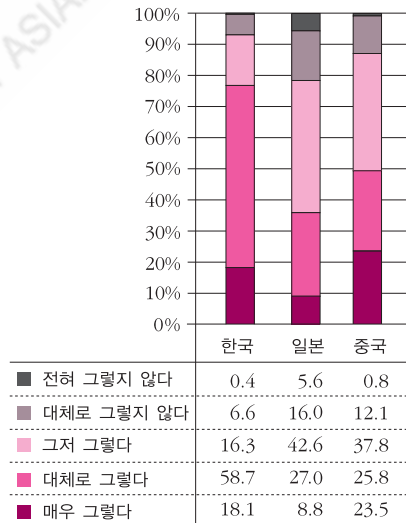


그림 5\_ 가족과 개인의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응답 분포도

한 것이었다.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가족의 화목보다 우선하는지를 묻은 결과를 보면 3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가족의 화목보다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쳐 26%인 반면에,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1.1%이다. 반면 일본은 가족 개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화목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22.8%였으며, 가족의 화목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24%였다. 중국은 3국 중에서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아서 35%였으며, 가족의 화목에 우선순위를 둔 의견은 37.6%였다. 3국 중 중국과 일본은 가족 개개인의 권리를 가족의 화목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한국만 과반수가 가족의 화목을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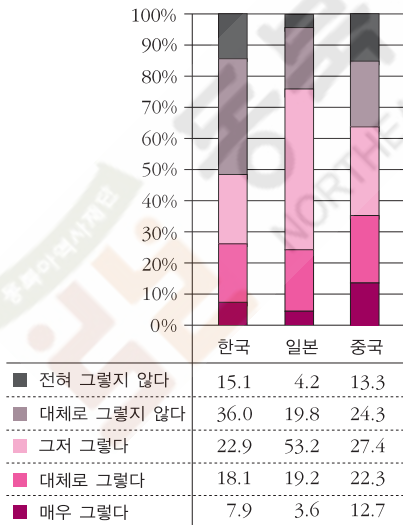


그림 6\_ 가족 개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화목의 충돌 문제에 대한 응답 분포도

“나의 의견이 집안 어른의 의견과 대립될 경우라도 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중·일 3국은 다소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 어른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으로 “나의 의견이 집안 어른의 의견과 대립될 경우라도 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대답한 비율이 각각 12.8%와 41.2%로 3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대답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답한 비율이 각각 3.5%, 14.5%였다. 일본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대답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답한 비율이 각각 11.4%와 37.6%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4%와 9.4%에 불과하였다. 즉, 일본은 나의 의견이 집안 어른의 의견과 대립될 경우라도 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9% : 10.8%인 데 반해, 한국은 그 비율이 18% : 54%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의견보다 집안 어른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31.1% : 31.9%로 그 차이는 거의 없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인이 가족의 의사소통에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매우 낮고, 일본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자신의 주장을 가족의 의사소통에서 관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이 가족 내에서 자율적인 의사표현의 존중과 관련해서 비교적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조).

가족공동체 내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분석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는 특정한 인물이나 지위에 대해 순응하고 그런 인물이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행동하고 평가하는 행동방식을 말한다. 그 바탕에는 대등한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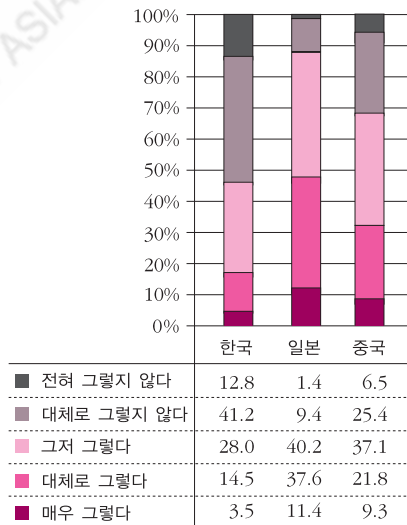


그림 7. 자기 의견 고수에 '가정 내 의견충돌'에 대한 응답 분포도

인 소통이나 상호이해 지향적인 대화에 의해 사안을 평가하고 해결하려는 행위유형보다는 권위를 지닌 사람에 대한 복종과 동일시를 더 우선시하는 심성과 행위양식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특정 사회나 그 구성원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가족에서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함은 가장인 아버지와 그 외의 구성원 사이에는 일정한 위계질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가장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가족구조는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질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3국 중 가장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국가는 한국이며 중국이 중간, 일본이 3국 중 권위주의적 요소가 가장 적은 국가로 나타났다. “가족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답변한 비율이 8.8%와 43.7%로

50% 이상이 가장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각각 4.8%와 16%였다. 일본은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답변한 비율이 2.4%와 17.2%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15.8%와 24.8%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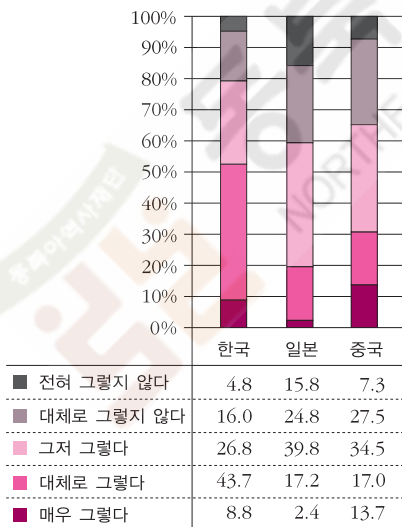


그림 8\_ 가장의 권위 인정에 대한 응답 분포도

보다는 다소 많고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일본보다 조금 적었다. 즉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가족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은 한국 52.5% : 20.8%, 중국 30.7% : 34.8%, 일본 19.6% : 40.6%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가족 내의 위계질서에 대한 생각도 3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가장의 권위에 대한 승인의 정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가족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서처럼 한국이 위계질서를 가장 존중하고 있으며 다음이 중국 그리고 일본이다. 한국, 중국의 비율과 일본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의 위계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항목에 한국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75.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각각 0.7%, 6.8%로 대단히 낮게 나왔다. 반면 일본은 가족 내 위계질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답변한 비율이 각각 26.4%, 22.8%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 내 위계질서를 당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를 보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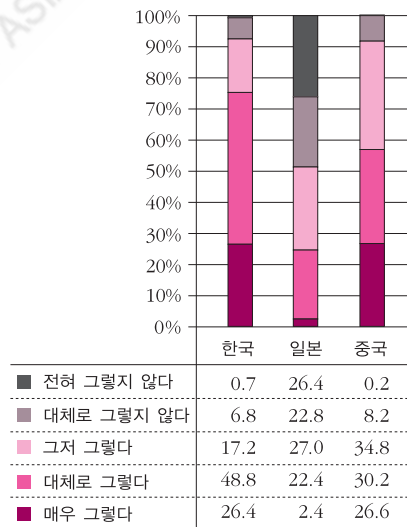


그림 9\_ 가족 내 위계질서에 대한 응답 분포도

여 24.8%였다. 중국은 가족 내 위계질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보다는 약하지만 그 경향이 한국과 비슷하다. 즉, 중국은 56.8%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8.4%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9 참조).

가족 내에서의 권위에 대한 충성도와 위계질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매우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의 유형이 동일하게 한국이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질서적인 성향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그 중간이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적인 문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임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가족, 이웃 등 여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대별 차이 여부를 검토해 보았던 것처럼 개인주의 및 권위주의적 성향을 세대별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그림 10 참조). 우선 ‘사회생활에서 가계나 혈연이 중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보면 한국(그림 10A 참조)과 중국(그림 10C 참조)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중요성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그림 10B 참조)은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20대의 경우 사회생활에서 가계나 혈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나 중간적 입장인 “그저 그렇다”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하면 73%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중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해를 희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세대별 차이는 전체적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 11 참조). 한국(그림 11A 참조)의 경우 모든 세대가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아 “그저 그렇다”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한 일본(그림 11B 참조)과



그림 10A\_ 가계나 혈연의 중요도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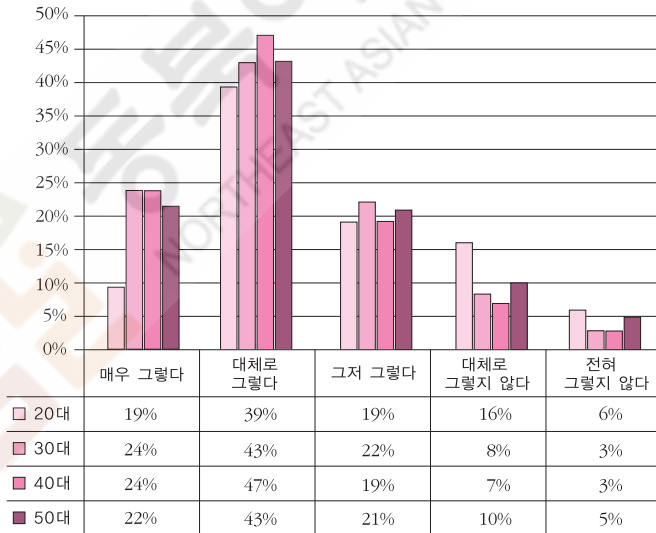


그림 10B\_ 가계나 혈연의 중요도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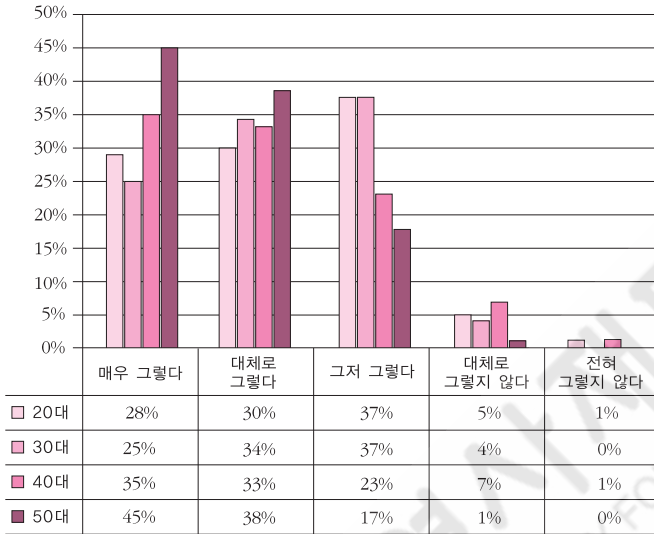


그림 10C\_ 가계나 혈연의 중요도에 대한 중국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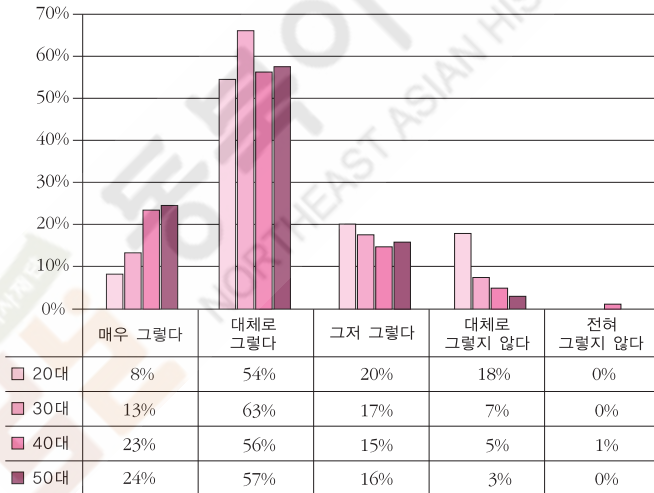


그림 11A\_ 가족과 개인의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중국(그림 11C 참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세대가 젊을 수록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한 비율이 나이가 많은 세대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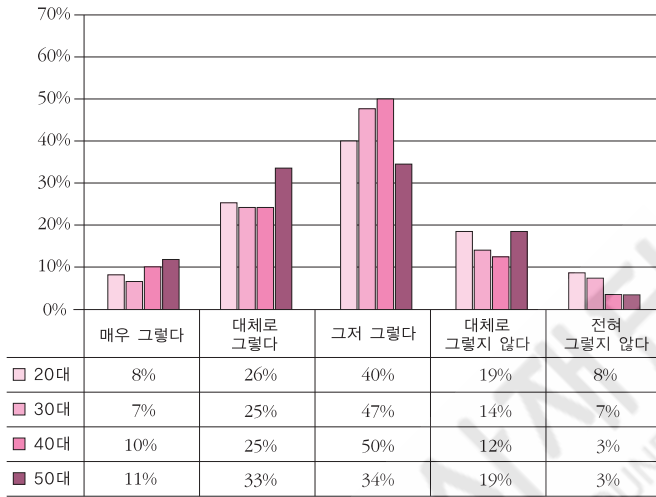


그림 11B\_ 가족과 개인의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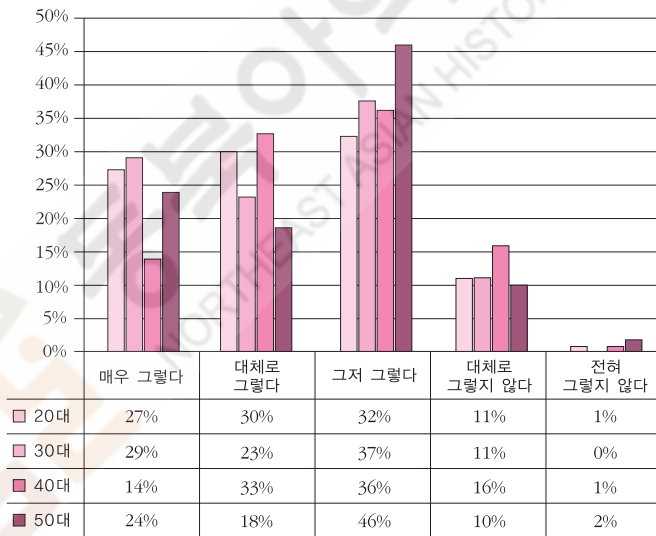


그림 11C\_ 가족과 개인의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응답

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중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세대 간의 차이에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권위를 존중하고 위계질서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 한국사회가 일본과 중국의 패턴과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일본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고 가족 및 여러 공동체에서의 의사결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한국사회가 변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가족의 화목보다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각국의 세대별 경향은 전반적인 경향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그림 12 참조). 즉, 한국(그림 12A 참조)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같이 가족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것이 모든 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그림 12B 참조)의 경우를 보면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 입장이 모든 세대에 걸쳐 가장 많다. 그러나 중국(그림 12C 참조)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개인의 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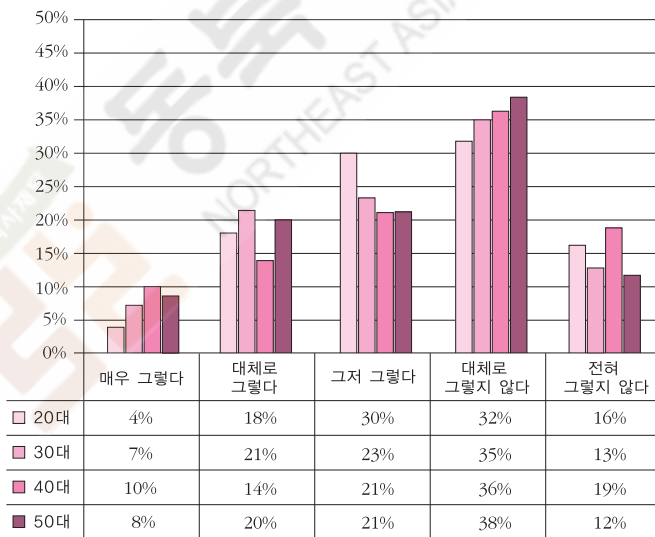


그림 12A\_ 가족 개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화목의 충돌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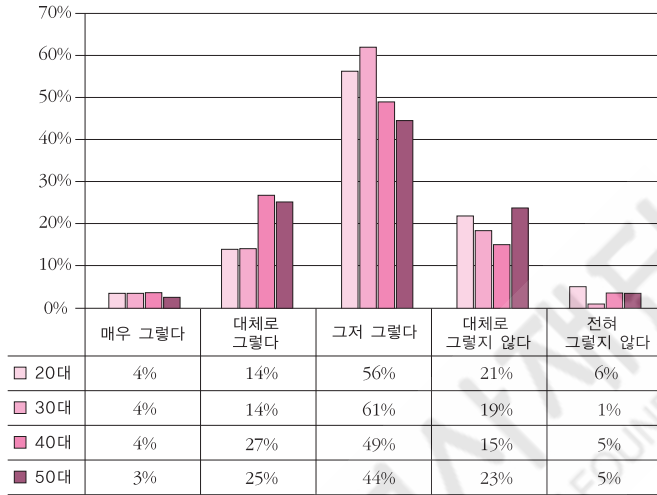


그림 12B\_ 가족 개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화목의 충돌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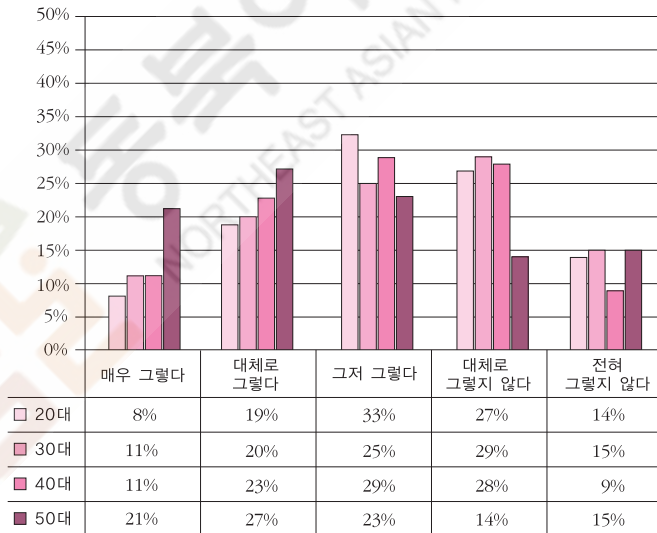


그림 12C\_ 가족 개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화목의 충돌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응답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대와 30대는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인 입장이나 가족의 화목을 중시하는 답변이 많은 반면에, 40대와 50대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답변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나의 의견이 집안 어른의 의견과 대립될 경우라도 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질의에 대한 각국의 세대별 경향은 전반적인 경향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3 참조). 다만 한국(그림 13A 참조)의 경우 20대는 나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에 대체로 그렇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세대별로 보면 가장 높은 답변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일본(그림 13B 참조) 및 중국(그림 13C 참조)에 비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적 문화 및 그와 연관된 가치관의 변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가족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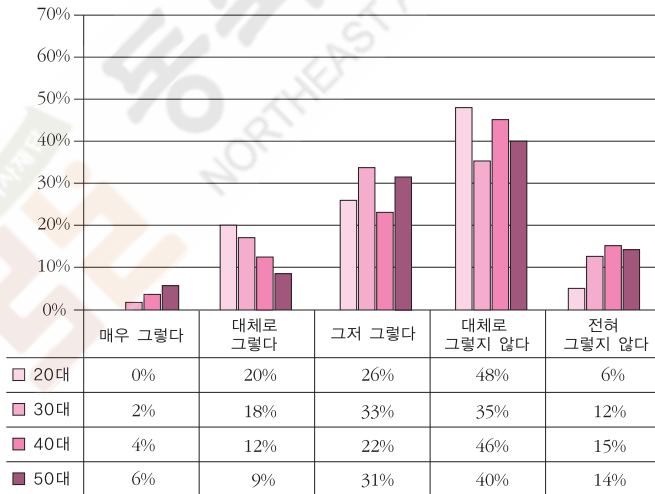


그림 13A\_ 자기 의견 고수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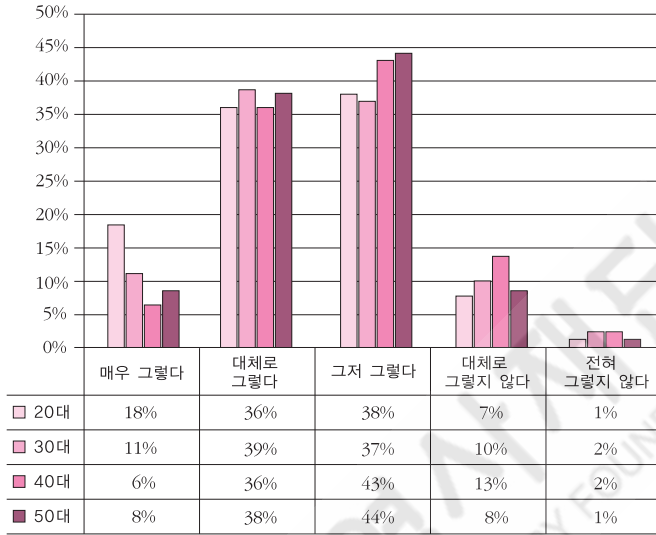


그림 13B\_ 자기 의견 교수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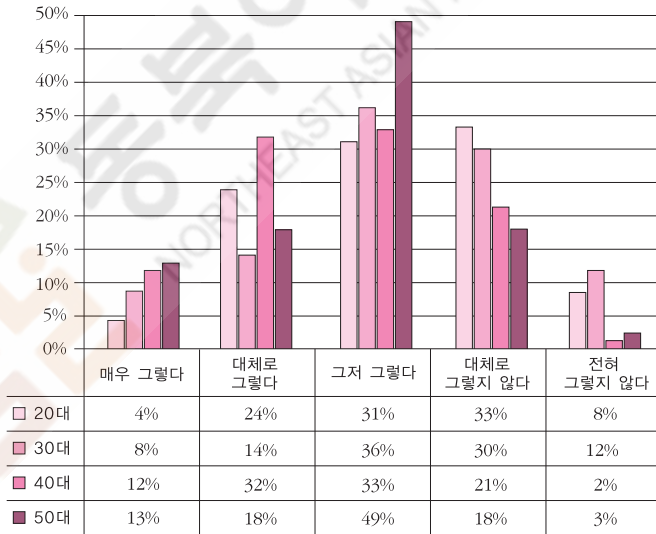


그림 13C\_ 자기 의견 교수에 대한 중국인의 응답

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각국의 세대별 경향을 보자(그림 14 참조). 한국(그림 14A 참조)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에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20대의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대체로 그렇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대의 경우 권위주의적 가족문화와 위계적 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그림 14B 참조)과 중국(그림 14C 참조)의 경우에도 20대와 30대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변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3국 모두 세대가 젊을수록 가족의 권위주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3국 모두 서구적인 개인주의 및 평등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유교문화적 특성으로 알려진 가족 및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의 위계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존중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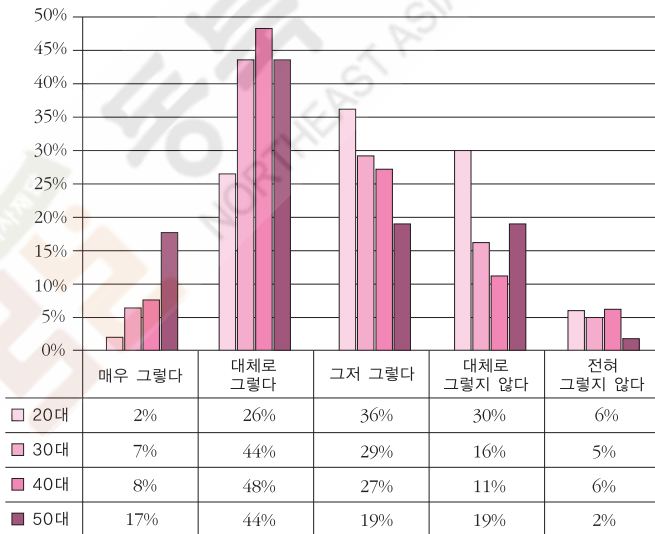


그림 14A\_ 가장의 권위 인정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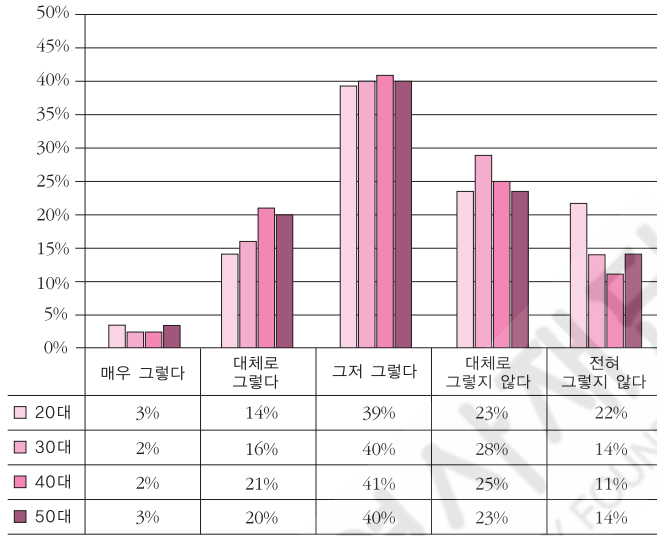


그림 14B\_ 가장의 권위 인정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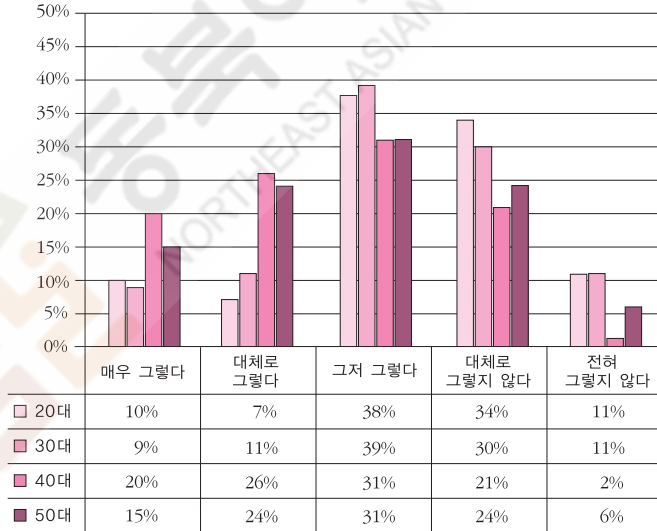


그림 14C\_ 가장의 권위 인정에 대한 중국인의 응답

다”는 문항에 대해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그림 15 참조). 한국(그림 15A 참조)의 경우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20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2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답변한 비율도 각각 16%와 32%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일본(그림 15B 참조)의 경우는 모든 세대를 거쳐 “가족 내의 위계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그림 15C 참조)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사실은 아마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서구화의 길을 보다 일찍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역사적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가족, 이웃, 국가 등의 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태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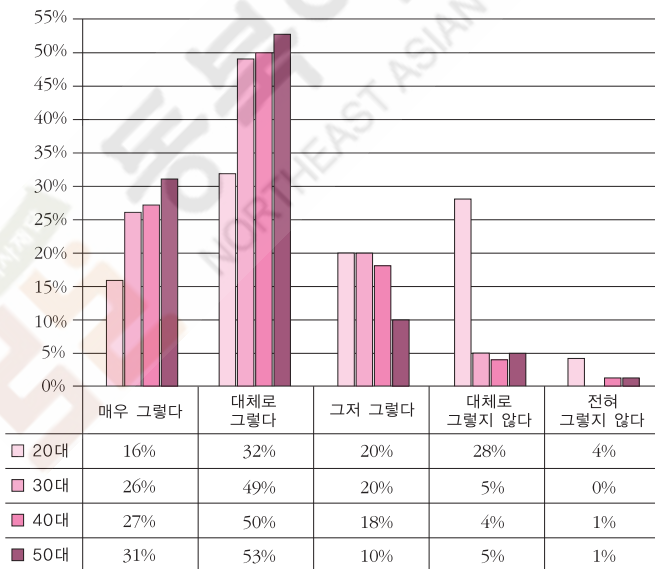


그림 15A\_ 가족 내 위계질서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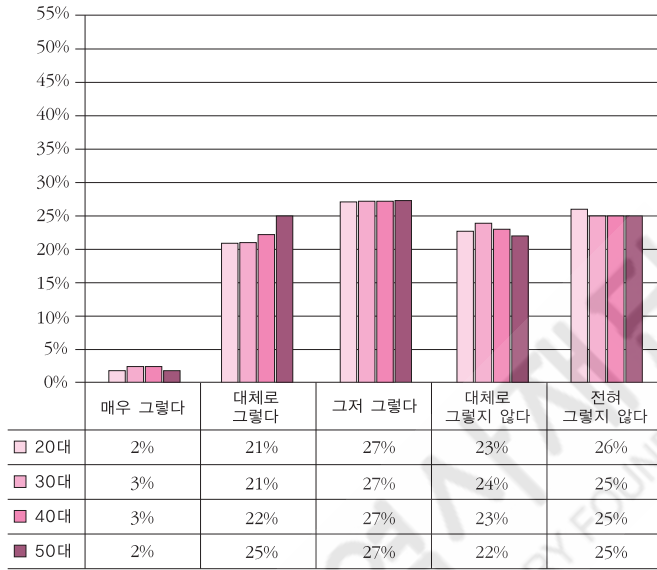


그림 15B\_ 가족 내 위계질서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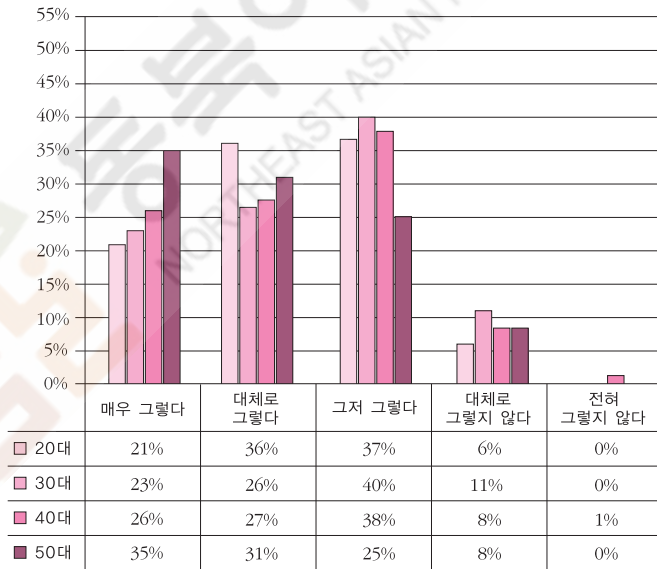


그림 15C\_ 가족 내 위계질서에 대한 중국인의 응답

인주의 및 권위주의의 성향에서 드러나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가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의 문제에 대해 함축하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듯이 유교윤리가 동아시아의 정체와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서양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판단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유교윤리와 일본, 타이완, 한국, 최근의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기적적인 경제성공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하였다.<sup>164)</sup> 아시아적 가치가 동아시아 경제성공의 문화적 토대라는 점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교문화에서 구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에 서구와는 다른 문명, 즉 서구에서 실현된 근대적 유형의 사회와는 다른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첫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중·일의 내적 특이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 동아시아 문화 이론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공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유교 및 불교 등 종교적인 차이성도 존재할 뿐 아니라, 같은 유교문화권이라고 해도 유교를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3국은 가족제도, 상속제도, 문화주체의 관점에 대한 태도에서도 상이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가족주의 문화라 해도 그 내부를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보여 주는 것과 유사하다. 즉, 한·중·일이 유교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 의미 있는

---

164) 막스 베버의 동양에 대한 입장이 과연 적절하였던 것인가에 대한 최근의 글로는 김요기(1995), 「유가윤리와 경제발전-베버 학설의 새로운 탐색」,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391쪽부터.

차이를 보여 준다. 이는 동아시아공동체 및 이를 지탱해 줄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유교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로 실증연구가 함축하는 또 다른 사항은 유교자본주의 및 유교민주주의의 이론의 현실적합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보면 한·중·일 3국 모두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인 역할을 긍정하기보다는 개인주의 및 탈 권위주의적 행위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교문화의 특성인 위계질서, 충 및 효에 대한 강조는 이미 상당 부분 해체되어 있다. 가족중심적 문화를 유교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임을 강조하는 아시아적 가치 이론은 문화를 고정불변적인 실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의 구조적 변동 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유교문화적 이론이 안고 있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은 유교문화와 결부된 아시아적 가치가 어떻게 민주주의 및 개인주의적 가치와 창조적으로 종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동아시아가 20세기에 보여 준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정치체제에서의 변동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도 크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불리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부장주의 및 권위주의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 및 가치의 다원화와 민주주의로의 변화의 흐름이 역류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마지막 문제, 간단하게 말해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상호 결합의 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유교적 가치가 서구화로 생긴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존의 유교문화적 이론은 한·중·일 3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포함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은 역오리엔탈리즘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서구적 근대와 더불어 형성되는 가치관과 전통적 유교문화적 가치관 사이의 대립을 어떤 방식으로 종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V. 실증적 자료로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유교적 문화가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갖는 함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은 상당할 정도로 도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추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유교적 문화의 동질성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동아시아공동체 및 그것의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의 현황과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한·중·일 3국만으로 동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공동체 성립의 성공 여부는 동북아시아 3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어떤 오해나 장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 1.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

한·중·일 3국 간의 상호인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서로에 대해 평화적인가 아니면 호전적인가 하는 문항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하는지 살펴보자. 즉, 3국은 서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상호 간에 평화적인가 호전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평화적이지도 호전적이지도 않은 중간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다소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중국에 대해 평화적이라기보다는 호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도 중국이 일본에 대해 호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적인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1로, 호전적인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7로 보았을 때 중간적 입장을 4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부터 3을 평화적인 쪽으로 보고, 5부터 7을 호전적인 쪽으로 본다면 응답비율은 표 3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48%가 호전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화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18%였다.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해 54.8%가 호전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반면, 14.2%만이 평화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이 한국을 생각할 때, 한국이 중국에 대해 호전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비율

〈표 3〉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평화적/호전적)

평화적이다/호전적이다	1	2	3	4	5	6	7
한국 → 일본	2.0	10.0	20.0	31.0	22.0	13.0	3.0
일본 → 한국	2.4	7.2	18.4	34.2	18.6	10.6	8.6
한국 → 중국	1.0	3.0	14.0	36.0	26.0	19.0	3.0
중국 → 한국	8.7	17.3	30.2	24.1	12.3	6.8	0.6
일본 → 중국	1.8	3.8	8.6	31.0	24.6	16.2	14.0
중국 → 일본	4.8	12.9	28.4	24.0	14.5	12.1	3.2

이 19.7%, 56.2%가 평화적인 쪽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46.1%가 평화적인 것으로, 29.8%가 호전적인 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중·일 상호 간 “평화적이다/호전적이다”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그림 16 참조).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그림 16A 참조) 세대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평화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그림 16B 참조)도 세대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즉,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호전적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평화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그림 16C 참조)의 상호인식의 경우, 세대별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본의 20대에 비해 30대가 중국을 더 호전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50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호전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호전적이라는 인식보다는 평화적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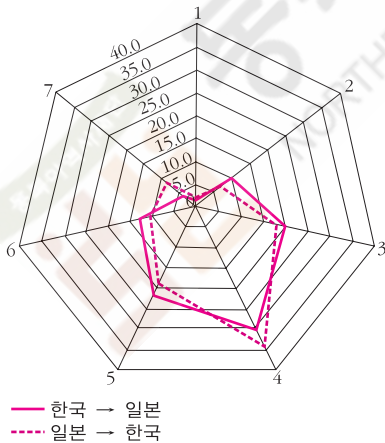


그림 16A\_ 한일 간의 상호인식(평화적/호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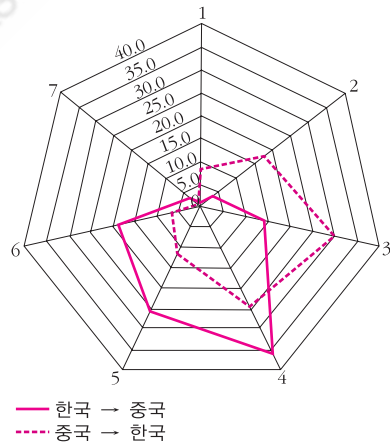


그림 16B\_ 한중 간의 상호인식(평화적/호전적)

는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호 간의 경계심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서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자.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성격은 “평화적인지 아니면 호전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해 “정직하다/부정직하다”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부정직하다는 인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하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1로, 부정직하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7로 보았을 때 중간적 입장을 4로 볼 수 있으며 1부터 3을 정직한 쪽으로 보고, 5부터 7을 부정직한 쪽으로 분류하였다. 응답비율은 표 4와 같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정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15%인 데 비해 50%가 부정직한 쪽에 대답하고 있다. 일본은 38.8%가 중국을 부정직하게 인식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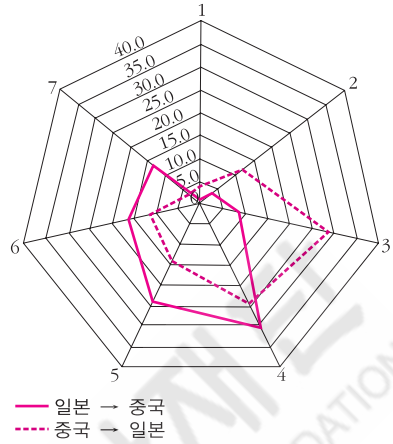


그림 16C\_ 중일 간의 상호인식(평화적/호전적)

〈표 4〉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정직/부정직)

정직하다/부정직하다	1	2	3	4	5	6	7
한국 → 일본	4.0	12.0	18.0	35.0	18.0	9.0	3.0
일본 → 한국	4.2	11.2	21.0	42.6	11.6	3.8	5.6
한국 → 중국	1.0	4.0	10.0	35.0	29.0	17.0	4.0
중국 → 한국	13.9	8.1	17.9	28.4	21.6	9.7	0.4
일본 → 중국	2.8	7.1	16.6	34.4	16.0	12.4	10.4
중국 → 일본	14.1	6.9	16.8	24.6	27.7	8.1	1.8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정직하다는 쪽에 대답한 비율이 39.9%로 부정직하다는 쪽에 대답한 비율인 31.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부정직하다고 보는 인식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즉, 일본이 중국을 부정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8.8%이고, 중국 역시 일본을 부정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7.6%이다.

“정직하다/부정직하다” 문항에 대해 과연 세대별 반응의 차이는 존재하는가?(그림 17 참조) 한국, 일본, 중국의 세대별 상호인식의 차이는 대체로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였다. 다만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그림 17A 참조)에서 중간적인 입장인 정직하지도 부정직하지도 않다는 응답의 비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간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 4에 대답한 비율은 50대 이상이 32%, 40대 34%, 30대 36%, 20대 39%로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계심보다는 한국과 중국(그림 17B 참조), 중국과 일본 사이(그림 1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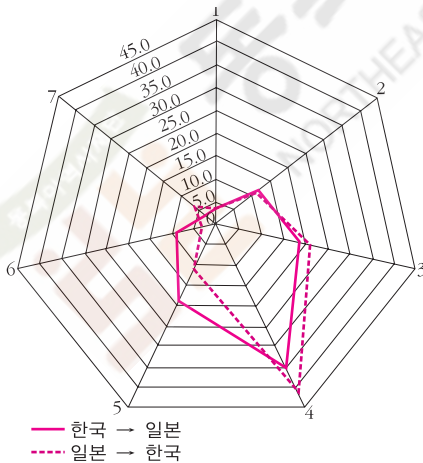


그림 17A\_ 한일 간의 상호인식(정직/부정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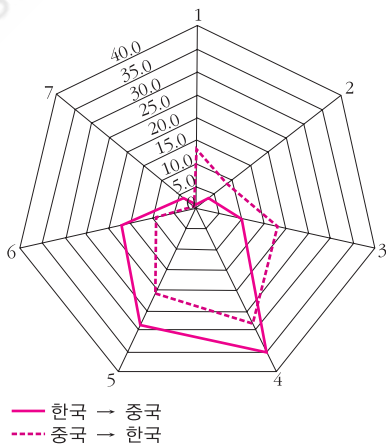


그림 17B\_ 한중 간의 상호인식(정직/부정직)

참조)의 경계심이 더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이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서로 간에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의 결과를 보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은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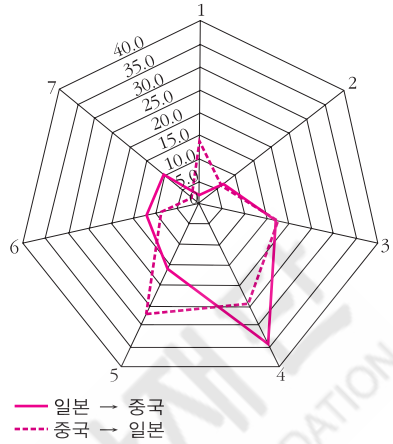


그림 17C. 중일 간의 상호인식(정직/부정직)

로 간에 의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의리가 있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1로 의리가 없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7로 보았을 때, 중간적 입장을 4로 볼 수 있으며, 1부터 3을 의리가 있다는 쪽으로 보고 5부터 7을 의리가 없다는 쪽으로 볼 경우 그 비율은 표 5와 같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의리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일본에 대해 36% 그리고 중국에 대해 45%가 의리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15.8% 그리고 중국에 대해 33.6%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표 5〉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의리)

의리가 있다/ 의리가 없다	1	2	3	4	5	6	7
한국 → 일본	2.0	8.0	18.0	36.0	18.0	13.0	5.0
일본 → 한국	4.2	15.4	27.2	37.4	7.0	4.0	4.8
한국 → 중국	1.0	5.0	12.0	37.0	28.0	13.0	4.0
중국 → 한국	14.1	7.4	16.7	22.3	27.9	10.8	0.8
일본 → 중국	3.0	11.0	17.6	34.8	14.8	10.4	8.4
중국 → 일본	11.9	9.1	15.1	24.0	25.2	13.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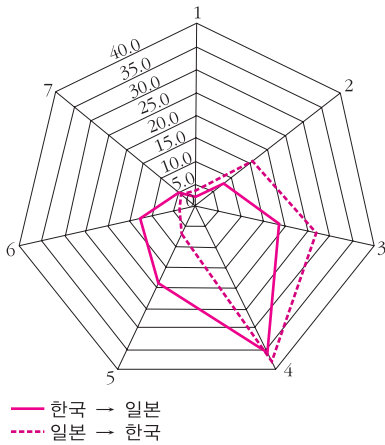


그림 18A\_ 한일 간의 상호인식(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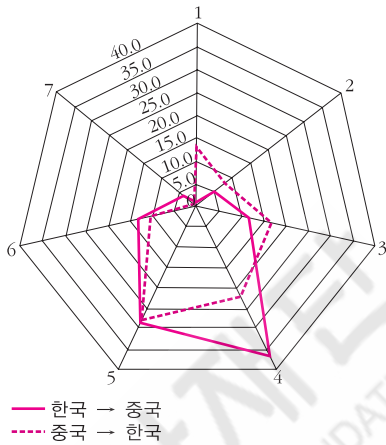


그림 18B\_ 한중 간의 상호인식(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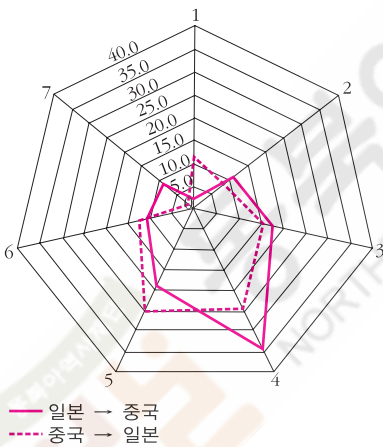


그림 18C\_ 중일 간의 상호인식(의리)

럼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의리가 있다/의리가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 세대별 차이의 여부를 살펴보면 그림 18과 같다. 세대별 경향 중에 특이한 점은 한국의 젊은 세대일수록 일본에 대해 의리가 없다는 쪽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18A 참조). 일본에

대해 의리가 없다는 쪽이 강한 5~7까지 대답한 한국의 비율은 50대 이상이 33%, 40대가 34%, 30대가 35%인 것에 비해 20대의 경우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의리가 없다는 쪽으로 대답한 비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19%, 40대가 19.4%인 것에 비해 30대는 12.6%이고 20대는 12%였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극복할 여러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중·일 3국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대한 대답의 분포를 보면 표 6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대해 다소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1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을 7로 보았을 때 중간적 입장을 4로 볼 수 있으며, 1부터 3을 믿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고 5부터 7을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볼 경우,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믿을 수 없다는 쪽의 대답이 과반수가 훌쩍 넘는 58%로 나타났다.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쪽의 대답이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불신 쪽이 일본에 대해서는 신뢰 쪽이 약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을 믿을 수 있다는 쪽이 34.1%로 믿을 수 없다는 쪽이 44%로 나타난 반면, 일본

〈표 6〉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신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1	2	3	4	5	6	7
한국 → 일본	2.0	8.0	20.0	33.0	18.0	13.0	7.0
일본 → 한국	2.4	11.8	19.2	41.4	12.2	4.6	8.4
한국 → 중국	1.0	3.0	8.0	30.0	27.0	21.0	10.0
중국 → 한국	12.4	7.0	14.7	21.9	28.7	13.9	1.4
일본 → 중국	0.6	6.0	16.0	29.4	19.4	13.8	14.8
중국 → 일본	12.1	7.8	20.1	23.3	21.1	12.7	2.8

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는 쪽이 40%로 믿을 수 없다는 쪽이 36.6%로 나타났다.

경계심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신뢰도에 관한 분석결과도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국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신뢰보다는 불신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없다”의 항목에 대해 세대별 반응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그림 19 참조). 간단하게 말해 전체적인 경향과 세대별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세대에 걸쳐 한국과 일본(그림 19A)은 상호 믿을 수 없다는 경향이 다소 강하며, 중국(그림 19B, 19C)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세대에서 믿을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경계심과 신뢰도를 포함하고 한·중·일 3국의 공동체 형성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호사회에 대한 폐쇄성과 개방성에 대한 대답을 보면 표 7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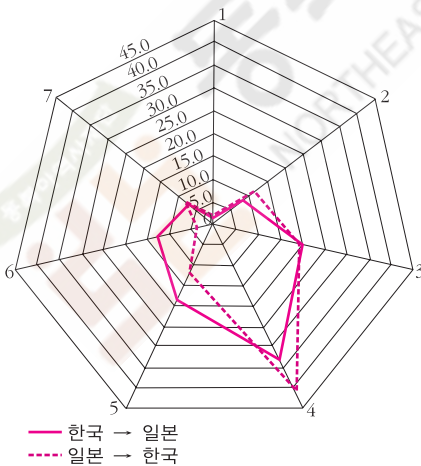


그림 19A\_ 한일 간의 상호인식(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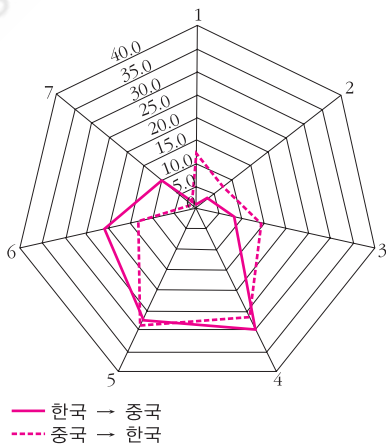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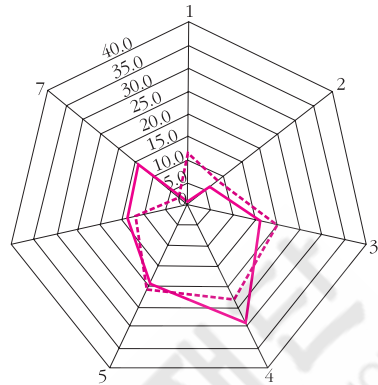


그림 19B\_ 한중 간의 상호인식(신뢰)

다. 즉,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만 개방적이라는 대답을 한 분포가 넓고, 그 이외에는 폐쇄적이라고 대답한 분포가 넓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폐쇄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도 한국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본과 중국은 서로 간에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인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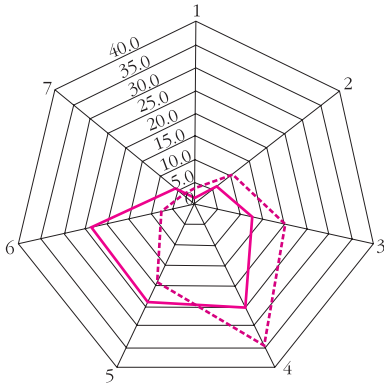
— 일본 → 중국  
 - - - 중국 → 일본  
**그림 19C\_ 중일 간의 상호인식(신뢰)**

다. 즉, 일본이 한국을 폐쇄적이라고 본 응답비율이 35.6%인 데 비해 중국이 폐쇄적이라고 본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폐쇄적이다/개방적이다”에 대한 항목에서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20 참조). 일본의 한국(그림 20A)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는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쪽에서 개방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쇄적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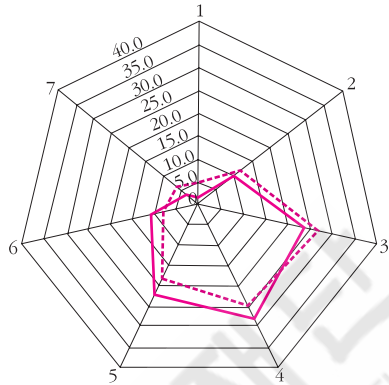
〈표 7〉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폐쇄/개방)

폐쇄적이다/개방적이다	1	2	3	4	5	6	7
한국 → 일본	2.0	6.0	13.0	25.0	24.0	24.0	6.0
일본 → 한국	4.6	10.2	20.8	34.8	19.0	7.6	3.0
한국 → 중국	2.0	10.0	24.0	28.0	22.0	11.0	3.0
중국 → 한국	5.1	11.7	26.7	24.8	17.6	7.7	6.5
일본 → 중국	9.2	17.4	20.0	27.2	6.4	6.4	3.4
중국 → 일본	5.9	12.8	19.6	26.9	21.7	8.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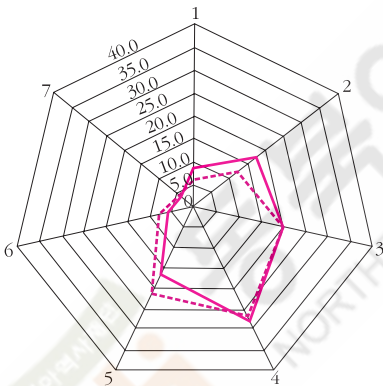
— 한국 → 일본  
- - - 일본 → 한국

그림 20A\_ 한일 간의 상호인식(폐쇄/개방)



— 한국 → 중국  
- - - 중국 → 한국

그림 20B\_ 한중 간의 상호인식(폐쇄/개방)



— 일본 → 중국  
- - - 중국 → 일본

그림 20C\_ 중일 간의 상호인식(폐쇄/개방)

인식이 강한 1~3까지 대답한 비율과 개방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5~7까지 대답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37%와 27%였고 40대가 32.7%와 29.4%, 30대가 37.4%와 26.6% 그리고 20대가 36%와 37%로 변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로 갈수록 폐쇄적이라는 인식보다는 개방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국의 상호 인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중·일이 서로 간의 경계심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이 더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3국 사이의 인식의 차이 역시 다소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경계심이 적

고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경계심도 강하고 신뢰도도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사회경제체제를 갖고 있어 경계심도 약하고 다소의 신뢰를 줄 수 있지만, 반면에 중국은 상이한 정치제도 및 사회경제체제를 갖고 있어 강한 경계심과 불신 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

일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65)</su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공동체는 필요한가?”라고 묻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5%인 데 비해, 반대는 66.99%로 반대의견이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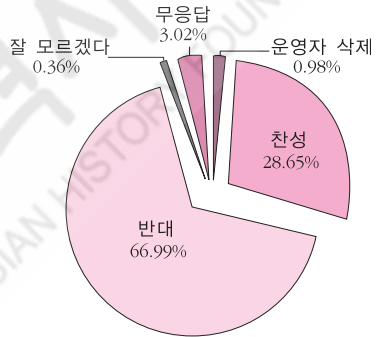


그림 21\_ 일본인의 동아시아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응답

왜 반대하는가를 분석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림 22을 보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라는 공통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가 거론된다. 민주주의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동아시아공동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10.68%였다. 그다음이 “공동체라는 이념을 내

165) <http://www.yoronchousa.net/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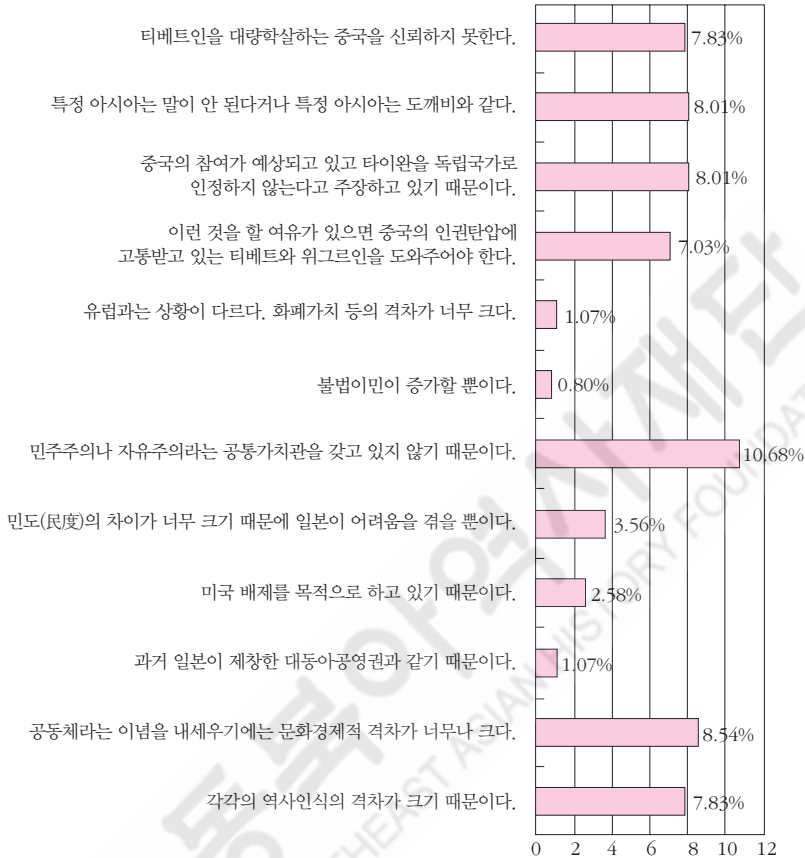


그림 22. 일본인이 동아시아공동체를 반대하는 이유

세우기에는 문화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8.54%였다. “중국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고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항목과 “특정 아시아는 말이 안 된다거나 특정 아시아는 도깨비와 같다” 등의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동일하게 8.01%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대동아공영권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우월감 등이 동아시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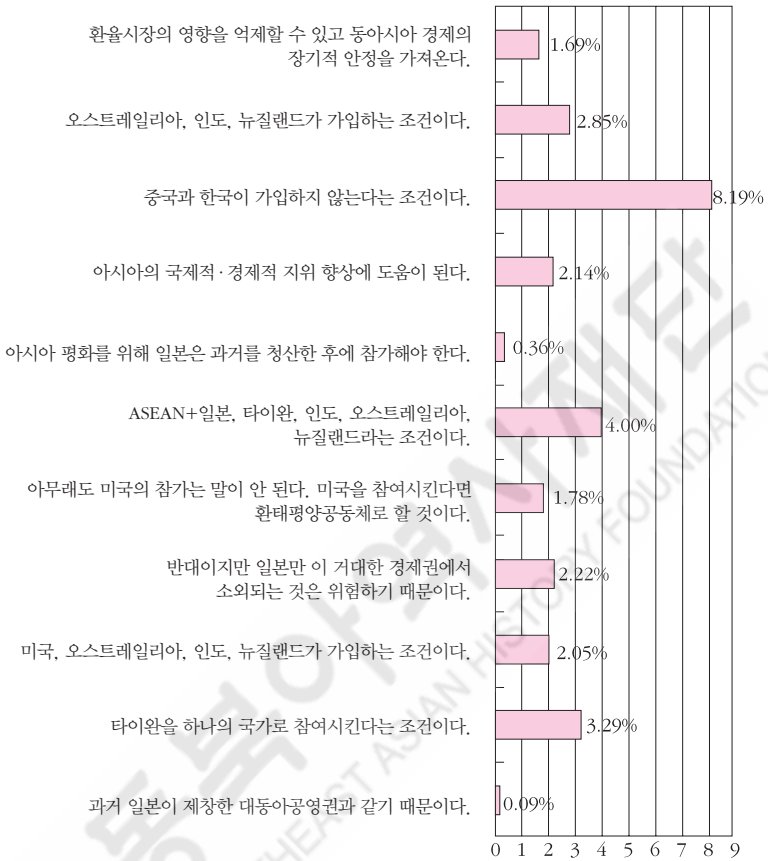


그림 23\_ 일본인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찬성하는 이유

요성을 반대하는 이유로도 나타났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자(그림 23 참조). 찬성 이유를 보면 반대 이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찬성을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항목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였다. 그 비율은 8.19%로 다른 찬성 이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찬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이 바로 “ASEAN+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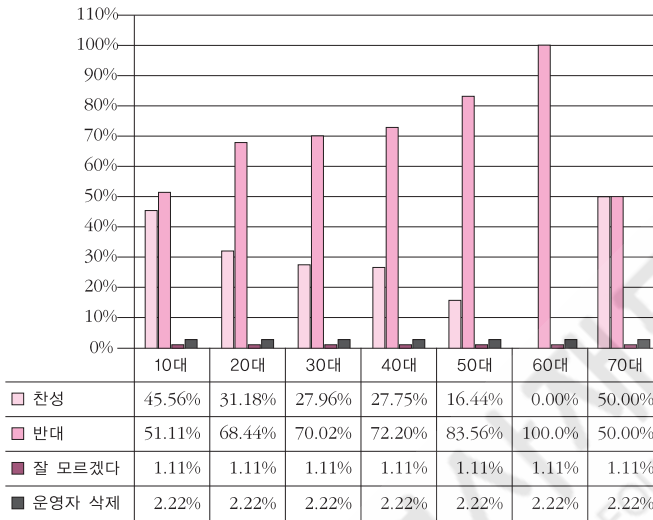


그림 24\_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인의 응답(세대별)

타이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린 것이었다.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인 “아시아의 국제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을 찬성 이유로 생각하는 비율은 2.14%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3국만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찬성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그림 24 참조). 찬성비율은 30대 27.96%, 20대 31.18%, 10대 45.56%로 나타났고, 반대비율은 30대 70.02%, 20대 68.44%, 10대 51.11%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특히

정체성 형성에 관련하여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해 보도록 하자.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수적 조건 정체성 형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략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의 정체성은 현재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주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나 문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갈등이 심각하다면 정체성이 생겨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을 염두에 둘 때 그 지역의 과거문제가 중요하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예로 든다면 과거 역시 각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어떤 구상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정체성 형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적 동질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과거 역사적 전쟁이나 침략, 지배와 피지배로 인해 형성된 심각한 대립과 반목의 기억을 어떻게 치유하고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의 불행했던 경험에 대하여 합당한 방식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의 성공 여부는 과거 및 현재와 연관된 문제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실현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체성 형성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미래 전망의 희망에 관한 생각이다.

이런 세 가지 축,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앞의 실증적 연구로부터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상이한 정치 및 경제 체제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사회주의를 채택

하고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정치구성의 기본원리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과 다원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및 일본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적 정체성 형성을 모색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달리 말하면 일본인들이 보여 주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가치관의 문제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일본인들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부정적 이유를 보면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미국의 배제 등이 대부분인데, 이는 일본의 보수적인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의 입장과 비슷하다. 이와 동시에 일본제국주의가 이 지역에 가한 과거의 불행한 기억으로 인해 형성된 방해물에 대해 일본인들이 그리 높은 감수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자료에 의거해 보면 대동아공영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겨우 1.07%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다.

둘째, 실증적 연구 결과는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문화적 동질성의 상징처럼 여겨진 유교문화적 요소도 많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말 이래 동북아시아 3국이 겪었던 침략과 지배의 경험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에 대해 지닌 불신, 경계심,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조건 중 하나는 과거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가해자 입장이었던 일본의 경우에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국가와의 화해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과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공동체의 형성 여부가 결정될 것임이 분명하다. 과거사에 대한 참다운 정리 없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동아시아의 공존번영의 이념을 내세워 자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 하였던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악몽을 떠올릴 것은 분명하나, 이는 결국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일본인인 다카하시 데즈야 역시 19세기 후반 이후의 현대사에서 발생한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단절의 극복을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상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본다. 그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동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내는 과제로서 “첫째, 과거에 일본제국이 조선반도나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식민지배나 군사점령을 하여 커다란 피해를 주었음에도 패전 후 일본이 그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그 단절을 극복하지 않은 채 다시 역사교과서 및 역사인식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66)</sup>

셋째, 문화적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질성과 차이성이 큰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공동체 형성의 노력은 더욱더 어렵다. 더구나 현재 한·중·일 3국 상호 간에 신뢰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상호불신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상호이해와 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노력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보다 보편주의적인 가치나 규범을 정교화하려는 작업이다. 동아시아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이념과 규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

166) 다카하시 데즈야(2004. 10. 25), 「단절의 세기를 넘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218쪽.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VI.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비전과 제언

우리는 앞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미래의 기획’이자 역사적 과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의 기획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서구 근대의 물결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갈등과 대립은 물론이고 냉전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가 초래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 질서의 구상을 모색해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서구의 근대화의 물결 앞에서 식민지 침략과 전쟁,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신과 증오, 적대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아시아 지역, 냉전이 붕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과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 세계화와 지역화의 증충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격적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의 흐름이 거세게 분출되는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복잡한 모순을 동아시아적 시각 속에서 해결해 보려는 지적 모색을 미래의 기획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라 명명한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데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공동체에 필요한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성찰작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각 개인의 행동에서도 세계관과 가치가 차지하는 역할이 지대하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과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동아시아공동체의 가치지향성에 대한 논의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영역은 동아시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다.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에서 등장한 여러 동아시아 이론은 동아시아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서 추구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런 공통으로 공유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덧붙여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주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체성 형성을 둘러싼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모색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내세우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명백히 하고 이를 그 구성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시켜 유럽연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담당할 주체에게 능동적인 참여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아시아공동체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은 대화의 시도이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이론적 대안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지’를 철학적 사유와 참다운 앎을 향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지의 지는 우리가 아직 참다운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앎이기에 다른 견해가 옳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 타자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지식이 유한하다는 자각이야말로 지식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이런 자각을 통해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과 연관된 가치 물음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바로 대화의 교류를 통해 바로 더 나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공통의 가치와 이해가 더욱 굳건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한다.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모순과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은 바로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한 타자에 대한 겸손한 개방성과 대화적 이성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일 것이다. 아마 이런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타인과의 대화와 교류를 감행하는 용기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는 모든 가치와 의미에 대한 차가운 냉소주의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규범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규범에 대한 여러 기본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런 원리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정신을 서구 근대의 창조적 극복이라는 인류사적 문제와 연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가치지향성을 서구 근대 및 동양 전통의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의 길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서구 근대 및 동양 전통에 대한 이중의 “그렇다”와 이중의 “아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서구 근대의 철저한 부정임과 동시에 그것의 철저한 긍정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적 전통에 대한 철저한 비판임

과 동시에 그것의 창조적 긍정의 길을 걷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의 길을 걷는 동아시아공동체는 동양과 서양은 물론이고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인 융합을 지향하는 바,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구상은 새로운 21세기 문명을 창출하는 모색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의 길을 통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 서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긍정하면서 타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폐쇄적이고 이원적인 대립구도의 산물인 동과 서의 동시파괴 내지 해체를 도모하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동양과 서양의 동시 긍정 및 동시 해체를 바탕으로 서구 근대의 파괴적 성격을 치유하고 그것이 초래한 위대한 성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문명의 대안을 동아시아 지역의 구상을 통해 구체화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의 정신은 서구 중심주의 및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거부로 표현된다. 동시에 이 연구는 서구 중심주의 및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이 또 다른 역오리엔탈리즘, 즉 21세기 버전의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재판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서구 유럽이 내세우는 이른바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주의적 가치 배후에 은폐된 자민족중심주의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인권의 정치에서 미국이 사용하는 비일관성과 이중잣대에 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다고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저 유럽이나 미국의 세계패권질서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서구 근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해 서구 근대의 물결을 극복하는 과정은 그것이 안고 있는 긍정성과 파괴성의 야누스적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서구 근대가 생태계 및 유럽 문명 이외의 타자에 대해 보인 근거없는 우월성과 파괴적인 모습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견지하면서도 서구 근대가 내세운 원리가 지닌 보편적 성격을 마냥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구 근대의 원리를 무엇으로

보는가? 서구의 근대가 “관용, 개인적 자유, 민주주의, 인종적·성적 평등, 표현의 자유, 성적 해방, 지식에의 보편적 권리” 등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는 조너선 이스라엘(J. Israel)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sup>167)</sup>

서구 근대가 가져온 파괴적인 성격,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결부된 서구 시장사회의 전면화가 초래한 생태계 파괴 및 인간성 파괴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교, 도교, 유교<sup>168)</sup> 등 동양의 위대한 지적 자산과 전통 등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즉, 동양의 전통 속에 면면히 유지되어 온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생각이나 불교에서 천명된 생명존중사상 등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서구 근대의 파괴적 양상 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서구 근대를 극복하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철저하게 재구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서구 근대는 자연을 한갓 동원가능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의 의미로 전락시켰고, 그런 자연에 대한 지배와 파괴 위에 인간의 평등과 자유의 이념을 발전시켰다는 이중성을 안고 있다. 이런 이중성을 극복한다는 것,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지배 및 피지배의 관계를 넘어 새로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혁하는 과제는 서양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관념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양 전통 속에 놓여 있는 위계

---

167) J. Israel(2006), *Enlightenment Contested, Philosophy, Modernity, and the Emancipation of Man 1670~1752*,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 11. 위에서 언급된 가치들은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가치들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형성하는데, 즉 근대성을 형성하는 데 혁명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급진적 계몽주의(radical Enlightenment)의 흐름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 즉 스피노자, 피에르 벨(P. Bayle),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 디드로의 중요성을 조너선 이스라엘의 연구는 탁월하게 입증하고 있다.

168) 유학의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뚜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앞의 책, 335쪽부터 참조.

질서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권위주의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쉽게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개혁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sup>169)</sup> 서구 근대의 보편주의가 안고 있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작업을 모든 가치에 대한 냉소적인 거부나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상대주의의 추인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sup>170)</sup>

물론 자연에 대한 지배 속에서 추진된 서구 근대는 인간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할 것을 내세우면서도 자연에 대한 지배를 넘어 인간에 대한 지배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자연파괴가 인간파괴, 즉 전쟁을 통한 인간파괴와 경제적 격차를 통한 인간사회의 내적 분열을 서구 근대가 극복하고 있지 못한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전쟁과 경제적 격차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구 근대가 내세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더욱더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리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현대인류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본다. 현대 인류가 나아갈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과 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동아시아공동체의 가치지향에 대한 모색에서 주도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지배 및 피지배, 전쟁을 통한 인류의 파괴 양상, 경제적 격차로 인해 초래된 인류공동체의 내적 분열과 소외의 양상이라는 서구 근대가 낳은 세 가지 근본 모순을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은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추구해

---

169) 유학의 권위주의, 전제주의, 남성 중심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투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앞의 책, 255쪽부터 참조.

170) 이매뉴얼 윌러스틴 저, 김재오 역(2008), 앞의 책, 81쪽.

야 할 몇 가지 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공동체는 근대 국민국가의 배타성을 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질서로 변형하려는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가 배타적이고 호전적이고 팽창적인 흐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근대 유럽에서 탄생한 주권적 국민국가는 세계질서에서 여전히 강력한 행위자로 행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국민국가의 주권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 더구나 근대의 국민국가가 민족주의적인 배타성과 결부될 때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난 인류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의 모색에서는 국민국가의 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겠지만 그 틀을 내적으로 유연하게 하고 타 공동체에 대해 보다 열린 질서로 변형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현 단계 일본과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경우 3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의 지식인에게는 ‘아시아적 전망’, 특히 동아시아 상황 속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서구와 직접 대면하는 중국이란 관점은 강하지만, 중국의 주변 이웃의 일부인 동아시아 여러 사회에 대한 수평적 관심은 희박하다.<sup>171)</sup> 중국의 민족정책은 한족(漢族) 중심의 ‘일민족 돌출형 다민족국가’관으로서<sup>172)</sup> 이것에는 주변민족에 대한 수평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적응에 몰두하면서 독자적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를 꿈꾸는 태도도 그렇고 자본주의 도입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빚어진 체제위기를 애국주의나 사회주의 정신문명에 의존해

171) 백영서(2000b),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56쪽.

172) 백영서(2000b), 위의 글, 69쪽.

해소해 보려는 당의 방침도 폐쇄적이면서 강한 중국을 지향한다. 이러한 중국 내부의 문화전통과 현재적 문제해결 방식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은 동북아를 그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질서 모색보다는 예상되는 내부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동아시아 각국과 관계맺는 방식에서는 폐쇄적인 국가중심주의에 갇혀 있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힘이 대내외적으로 미약하다. 과거사 반성이나 교과서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아직도 협소한 인종 중심, 자국 문화 중심의 공동체적 사유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서구지향적인 문화와 미국 의존적인 경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중심의 논의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3국의 교역증대와 상호보완 관계 유지가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도 상호작용하고 있다.<sup>173)</sup>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주장하려면 이러한 근대적 민족주의, 근대화론, 전통의 재부활 시도 등이 갖는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공동의 유산의 발굴과 현재적 해석,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대의 틀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의 폐쇄적인 전통과 문화 중심적이거나 국가 중심적 내셔널리즘을 일정 부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다원적으로 공존하면서 느슨하게 서로 결합하는 열린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

173) 신용대 외(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을유문화사 참조.

국이 내부적으로 다원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허용하고 인정·배려하는 시민 사회의 열린 규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함을 뜻한다.<sup>174)</sup>

내부적으로는 다양성을 허용하고 밖으로는 공격적이지 않은 유연한 혹은 수용적인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우리는 뒤에서 누스바움(M. Nussbaum)이 제창한 ‘순화된 애국주의(purified patriotism)’ 논의를 통해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공동체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동아시아 협력질서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질서가 전 지구적 차원의 관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동아시아 협력질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의 길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세계공동체의 이상에 열려 있지 않은 지역공동체는 1930년대 독일이 구상한 ‘제3제국’ 및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개별국가든 지역공동체든 “세계주의적 관점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중첩되는 운명공동체와 다차원적/다층적 정치라는 특징이 있는 지구화 시대의 정치적 도전에 궁극적으로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sup>175)</sup>

셋째, 유연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매개로 한 미래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는 생태, 평화, 소통 및 연대성의 원리를 지향해야 한다. 생태적 이념은 과학기술 문명과 결합된 서구 근대의 생명파괴적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화의 이념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죽임과 수탈과 생명파괴의 현상이 인간사회에서 드러나는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

174) 이러한 논점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은 강상중(2000), 『「일본의 아시아와 지역통합」,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77쪽 ; 민두기(2001),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61~62쪽.

175) 데이비드 헬드 외 저, 조효제 역(2002), 『전지구적 변환』, 창비, 713쪽.

전제조건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분단체제 및 항상적인 전쟁구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질서의 구축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전제조건만이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극복한 후에 동아시아공동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극복 및 통일실현을 바라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이 보여 주는 것처럼 유럽연합의 발전이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불신과 두려움을 없애 주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노력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sup>176)</sup>

그리고 소통의 원리는 모든 문제를 관련 당사자의 대화와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대화와 상호이해 과정을 생략하거나 상호이해 지향적인 소통의 장(공론장)을 억압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뿐 아니라,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폭력적인 방식에 호소해서라도 해결해 보려는 모든 유형의 시도를 근본주의적 시도로 간주하고 이를 비판한다. 근본주의적 태도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질병보다 더 큰 야만과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호한 비판적 거리 취함이 요구된다. 개인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질성을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극복가능하다는 점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대화적 혹은 소통적 이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이 대화적 이성이 지닌 해방적인 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적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구

176) 최원식(2008), 「포스트 65를 점검하는 메모」, 한일, 연대 21 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22쪽 참조; 김기봉(2006), 앞의 책, 98쪽부터 참조.

상을 구체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바로 동아시아공동체 및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소통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연대성을 형성해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소통의 가능성은 현대사회의 합리화의 과정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구사회의 현대화가 소크라테스 및 플라톤에까지 소급되는 과학기술적인 합리성의 전면적인 등장과 관철의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하이데거의 현대성 비판과 그의 다양한 포스트모던적 변주들에 비판적 거리를 취한다.

생태, 소통, 평화와 더불어 우리가 내세우는 마지막 원리인 연대성의 원리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할 동아시아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진정한 자기실현의 지평임을 자각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동하여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구체화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국가의 틀 내에 국한되어 있는 민주주의적 자치의 이념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보편주의적 이념이 공허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공동체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와의 귀속성과 소속감의 내재적 의미를 창출할 것을 지향해야 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동아시아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규범 및 원칙을 구체화하려면 우선적으로 각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을 상호 인정하고 상호 공존하게 하는 느슨한 형태의 열린 네트워크형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호 안전보장과 평화적인 교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 기본이 될 것이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각국의 국민국가적 우월성보다 상호중첩적이고 다원적인 지역문화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계나 다원적 가치의 충돌을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각각의 공동체가 타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며 내적·외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가치충돌을 처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77)</sup>

이 작업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국민국가적 형태를 넘어서서 작동하는 또 다른 지역공동체의 모습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예로 든다면, 유럽인은 유럽연합 형성 과정에서 유럽의 정체성과 이념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왔다.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유럽의 정체성은 각자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유럽의 전통과 문화라는 보편성 위에 또 하나의 보다 열려 있는 이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럽 내의 전통과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전통과 문화를 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비유럽적인 문화와 전통이 현재의 유럽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유럽연합이 다른 지역의 공동체와 공존, 공영하면서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요구되는 동북아의 통일과 정체성에 필요한 보편적 기준은 3국의 전통과 문화 안에 안주함으로써 그 이외의 세계를 배척하는 폐쇄적인 것일 수는 없으며 인류라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보다 확장된 형태의 공동체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sup>178)</sup>

177) 의사소통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철학적 논의는 권용혁(2001), 「세계화와 보편 윤리」, 사회와 철학연구회 편,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125~135쪽 참조.

178) 지명관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론을 제창하면서 하나의 예로 「3·1독립선언문」을 재음미할 경우 그 안에는 당시 구미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구원을 주장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높은 통일성 창조를 위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지정문화적인 것을 추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지정학적 우위와 그 침략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사용될 보편적인 가치의 세계를 함

이것은 위로부터의 국가 간의 협상과 협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이 공동체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중첩적인 교류와 개방적인 공론장에서의 무제한적인 토론과 심의를 기반으로 형성될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 대응의 현실적 필요성과 시대적 당위성이 강조되고 그 이념적인 형태가 제안된다 해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연관되어 그려질 경우에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물론 거꾸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연합이 성사되려면 지역연합을 형성하는 기본 시각과 틀에 대한 구상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 없이 진행되는 국부적인 협력관계는 20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적 유산인 특정 국가 중심의 패권주의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가 퇴조하면서 지역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대응축으로 만들려면 상호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동아시아관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중화주의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20세기 이전의 두 개의 패권주의적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21세기형 질서에 걸맞은 동북아 질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 중심주의를 벗어나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는 시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는 전통에 대한 현

---

계를 만들어 가야 하며, 그 내용은 내셔널한 것과 인터내셔널한 것과의 갈등 속에서 자기 인식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넘는 해방과 자유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지명관(2000), 「전환기의 동아시아」,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37~38쪽].

대적 해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자유로운 지적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기존의 국가주의의 약화 내지는 해체를 통한 분석의 기초단위의 세분화와 이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인정, 다양한 균형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을 기점으로 3국 협력관계를 구상해 본다면 가장 접근가능한 시도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를 벗어나 이들 사이의 완충적인 지대 및 시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국가주의나 단일민족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를 기본시각으로 삼을 수 없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국, 일본 중심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시각보다 더 개방적이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연대를 고려할 경우 특정 민족국가 의 우월성보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광범위한 연대를 위해서는 다민족, 다문화뿐만 아니라 중첩적인 소속의식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연합의 형태를 넘어서서 보다 개방적인 공동체로서의 세계주의를 염두에 둔다면 다중문화적 사회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공동의 삶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계화와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국민국가 사이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연대를 위한 세계시민 및 세계시민사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주의적 시각은 세계를 그 단위로 하는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민주주의 개념은 세계적 연대를 수행하고 있는 초국가적 비정부조직(NGOs)뿐만 아니라, UN이나 국제사면

위원회와 같은 범세계적 관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매개로 한 세계시민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된다. “세계적 민주주의의 확장은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범세계적 경제불평등을 해소하며, 생태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sup>179)</sup>

동북아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념도 세계화 시대에 순기능을 하려면 이러한 세계주의적 시각과 그에 상응하는 민주주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에서의 교류만으로 이러한 공동체적 이념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치체제, 사회생활, 문화영역에서의 교류와 상호수렴이 필수적이다. 국가기구와 기업 간 교류 못지않게 민간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연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시민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 활성화의 기반으로서의 네트워크형 의사소통망 구성과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려면 동아시아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관계 확장 및 각국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이들 사이의 협력강화를 통한 중첩적인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초국가적 영역의 형성 및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내용과 기본전제가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념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한다면 공동체 구성원은 관계맺는 층위에 따라 자기정체성을 다양하게 확립함으로써 수평적·복합적 열린 네트워크형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건으로 민주적 요소를 보다 개방적으로 성찰하여 상호

---

179) 앤서니 기든스 저, 한상진·박찬욱 역(1998),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216쪽.

이해와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열린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열린 동아시아공동체의 지향점으로써 세계시민사회를 고려한 보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2.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의 전제로서의 과거사 정리 문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구상과 그에 어울리는 정체성 형성의 과제는 많은 난관이 있다. 김기봉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냉전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각국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자국의 욕망과 이해관계 틀 내에서 바라보는 자국 중심의 태도이다.<sup>180)</sup> 그는 전자의 예로 북한 핵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들고 있지만 보다 더 크게 보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지배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가하는 충격이 동아시아 지역에 온존하는 냉전 질서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현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언급되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불신과 경쟁관계는 이 구조에서 파생된, 그렇지만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규정할 주요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질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과거사 청산의 문제를 미래지향적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한·

---

180) 김기봉(2006), 앞의 책, 90쪽부터.

일 및 중·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가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임은 분명하다. 와다 하루키에 따르면 일본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주체적 태도를 취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주변국들이 품고 있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대일 불신감이다.<sup>181)</sup> 그런데 불행하였던 과거 역사적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기억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국사의 해체’ 혹은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라는 논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사의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국사의 해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달리 말하면 과거사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국사의 해체’ 이외의 길은 없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국사의 해체를 언급하는 학자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임지현과 일본학자 고지마 기요시 등이 주축이 된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은 근대 국민국가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해체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up>182)</sup> 고모리 요우이치 및 다카하시 데즈야 등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도 ‘자국사’ 혹은 ‘국민사’를 의미하는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려 할 것을 주장한다.<sup>183)</sup>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학자, 시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해 동안 협력해 만든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책이 국사의 해체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기존의 배타적 국사 중심의 역사서술을 넘어서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한·중·일 3국의 근현대사를 재구성함으로써 국사의 틀을 넘어서려는

181)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2004), 앞의 책, 146쪽.

182) 임지현·이성시 편(2004), 앞의 책.

183) 고모리 요우이치·다카하시 데즈야 엮음, 이규수 역(2001),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원래 이 책에서 다카하시 데즈야는 다카하시 데즈야로 되어 있지만 인용의 통일을 위해서 다카하시 데즈야로 변경하였다.

움직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84)</sup>

지금 여기에서 국사의 해체와 연관된 상세한 논의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럴 역량도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단 임지현과 고지마 기요시 등이 주축이 된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의 ‘내셔널 히스토리’ 해체 작업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임지현은 최근의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나 고구려사의 역사적 주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논쟁 등을 ‘국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무익한 논쟁으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는 자민족중심주의인 ‘국사’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역사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sup>185)</sup>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그와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 제시하는 것은 일단 “국가권력에 의해 전유된 특정한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셔널 히스토리”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작업이다.<sup>186)</sup> 즉, 근대 국민국가를 정당화하는 장치로서의 역사학 및 ‘국사’의 틀에 놓여 있는 국민국가의 억압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지울적 개개인을 국민 또는 민족공동체와 일체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을 좌절시키고, 근대 국민국가가 전유한 과거의 기억을 전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과거사의 문제를 제대로 푸는 작업이다.<sup>187)</sup>

임지현이 제기하는 국사해체 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민주주의 및 인권과 국민국가(민족국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그의 태도

184)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8), 『미래를 여는 역사』 개정판, 한겨레 출판.

185) 임지현(2004), 앞의 글, 30쪽부터.

186) 임지현·이성시 편(2004), 앞의 책, 470쪽부터의 부록 1.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취지문.

187) 임지현(2004), 앞의 글, 471쪽.

이다. 그는 국민국가의 억압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각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고 억압하고 획일화하는 권력으로 본다. 그래서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이른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주의 사이의 양립가능성을 회의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188)</sup> 임지현 이외에도 탈민족주의 이론을 대변하는 윤해동은 ‘열린 민족주의’ 내지 ‘공공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논자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주의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집단이기주의의 아주 노골적인 표현인데, ‘공공성’이라든지 ‘열려 있다’는 것과는 접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린 민족주의’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민족주의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민족주의를 열면 세계주의나 보편이 나올까요? 궁극적으로 공공성이랄까 시민성 같은 것은 세계주의 위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단위로 어떻게 가능할지…… 형용모순이죠.”<sup>189)</sup>

그러나 임지현과 윤해동의 민족주의에 대한 시각은 근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이론의 형성과 그것의 실현과정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민족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구현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근대 민족주의 국가의 형태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즉, 민족주의는 배타성 및 파괴성, 개성말살의 차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근대 민족주의는 계급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영토 내에 있는 인구 집단

188) 김동춘(2007),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도서출판 길, 513쪽.

189) 윤해동(2003), 『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72쪽.

인 ‘인민(the people)’을 집단적 연대성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창출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존엄성의 원천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집단적 정체성은 개성의 참다운 실현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였다.<sup>190)</sup>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실현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약성과 한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국가 자체를 억압성과 파괴성의 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거칠고 폭력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반응 중에서 국민국가의 종언에 대한 이야기 역시 선부른 것이다.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발발로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형성된(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민주적인 연대나 시민적 참여를 파괴시키고 전 세계에 걸쳐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되는 추세, 즉 국민은 결여된 채 세계시장만”<sup>191)</sup>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한다면, 국민국가를 억압적 질서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또 임지현은 “동아시아의 역사학을 잇는 ‘국사’의 연쇄구도”에서 일본의 민족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는 “가해자·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식론적 공범관계”라고 주장한다.<sup>192)</sup> 즉, 그가 보기에 한국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민족주의는 권력이론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현상적으로는 첨예하게 충돌하지만, 사유의 기본적 틀과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공유”하기 때문에 ‘적대적 공범관계’ 속에 있다. 결국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서

190) 월 키피카 저, 장동진 외 역(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365쪽.

191) 세일라 벤하비브 저, 이상훈 역(2008), 『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현실사, 47쪽.

192) 임지현(2004), 앞의 글, 31쪽.

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하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살찌우고 강화” 시키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sup>193)</sup> 간단하게 말해 그에 따르면 “민족국가를 역사발전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한 역사서술은 사실상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 혹은 “민족국가를 위한 역사적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sup>194)</sup> 그가 생각하는 국가권력과 민족국가는 어떤 국가권력이며 어떤 민족국가인가? 히틀러식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식 국가권력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 혹은 미국식의 국가권력인가? 이런 물음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국사의 서술방식과 이해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국사 일반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사의 서술이 타국 및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으로 서술될 것이라는 가정이 지나친 일반화라는 점 등을 알고 있다. 근대 민족주의 및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서술은 내부적으로는 내부의 소수집단에 대한 증오나 원한 등을 피하고 외부적으로는 평화지향적이고 세계 시민사회 형성에 호의적인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지현의 국사해체 이론은 저항의 민족주의 및 지배 및 침략지향의 민족주의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진보적 지식인의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넘어서려는 움직임과 차이를 보인다. 일본 진보적 지식인의 일본 자민족중심주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라는 책을 썼다. 그런데 이 제목을 설명하면서 그 제목을 제안한 사람인 다카하시 데츠야는 그 제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자국민 중심의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자의 위치

193) 임지현(2004), 앞의 글, 26쪽.

194) 임지현(2004), 앞의 글, 16쪽.

나 비판의 맥락과 동떨어진 채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내셔널리즘의 구조적 문제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타 민족, 타 국가로부터 억압받고 민족성이 말살당하는 위치에 처한 사람들의 ‘저항 내셔널리즘’을 지배층의 내셔널리즘과 동일하게 논할 수 있겠는가? 국민국가에 귀속해 그 은혜를 향유하고 있는 자가 국민국가를 갖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국민국가에 대한 희구를 내셔널리즘이라 하여 잘라 버릴 수 있을까? …… 그래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자’는 운동은 결코 단순한 운동일 수 없다.”<sup>195)</sup>

셋째 임지현의 국사해체 이론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이론의 역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이론은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가 마치 개별 민족국가 내부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차원에서 이질성과 다양성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대단히 일면적이다. 예를 들어 이런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민족주의’의 가치를 내세운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나 일제식민지 해방투쟁의 역사에서 등장한 저항적 민족주의와 남북분단 이후 남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적인 자주적 근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였던 민족주의를 박정희식 민족주의나 북한의 민족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김동춘은 북한 민족주의와 박정희식 민족주의 사이의 동일시에 대해 비판한다.<sup>196)</sup>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한계는 그 이론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초래할 수

195) 고모리 요우이치·다카하시 데즈야 엮음, 이규수 역(2001), 앞의 책, 7쪽.

196) 김동춘(2007), 앞의 책, 510쪽 참조.

있는 정치적 효과 및 권력효과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다른 견해로부터 올 수 있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임지현의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권력·지식 연계설을 통해 설명해 보자. 그의 이론은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유포되고 확산되는 것일까? 그의 이론은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거북해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일본 전 항공막료장의 주장, 즉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한 반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국가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어느 국가도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 타 국가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자명한 것으로 가정하는 이른바 인식론적 지평을 전제한다. 임지현은 이런 인식론적 지평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적대적 공범관계’라고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살찌우고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적이지만 실제로는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의 적’이다.”<sup>197)</sup>

임지현은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민족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반론을 ‘감정적’ 반발로 치부한다. 즉 “‘국사’해체는 적의 공격적 민족주의 앞에서 우리 민족의 방어논리를 무장해제시킬 뿐이라는 감정적 반발이 역사적·비판적 성찰성을 압도하는 것이다.”<sup>198)</sup> 그는 이런 식의 글쓰기를 반복한다. 즉, 상대방의 비판적 논의를 감정적이라 단정

197) 임지현(2004), 앞의 글, 26쪽.

198) 임지현(1999), 앞의 책, 31쪽.

하면서 이의제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 이는 바로 뒤에서 따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다. 국사 중심의 역사를 넘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국사를 해체한 후에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민족주의적 역사 이론 못지않게 폭력성과 억압성을 띠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윤해동이 주장하듯이 세계주의나 보편주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민족주의를 개방적으로 재구성해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나서 시민성은 세계주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유일한 세계국가를 전제하는 것이다. 만약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현된 유일한 세계공화국의 상태를 꿈꾼다면 시민성이라는 용어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시민성과 인간성은 본래 구별되는 것이다. 이 둘의 일치는 논리적으로 단일한 세계공화국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구평화론을 주장한 칸트조차 세계공화국이 가장 야만적인 정치제도가 아닐지 의문시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sup>199)</sup>

민족주의를 집단이기주의로 맹공격하고 철저하게 비판하는 것 역시 분별력과 균형감각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민족주의 대 세계보편주의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국가적 민족주의 대 세계보편주의적 이상의 대립은 그리 설득력 있는 논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이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폭력성과 배타성을 염려하고 있는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만을 위험한 이념으로 세계시민주의나 탈민족주의 이념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설득력 있는 이론적 태도로 보지 않는다. 민족주의를 포함한 모든 이념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199) 칸트의 영구평화 이론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석(2007), 『차이와 연대-현대세계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 도서출판 길, 제11장 참조.

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는 야만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문명의 상징으로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행위이다. 달리 말하면 인류 평화와 세계공화국의 실현이라는 고상한 이상이 가장 야만적인 전쟁과 약탈과 살육을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편적인 것으로 설정된 이상이 사실상 인간을 야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통찰은 인류역사에서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류에 반하는 범죄의 논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야만적인 전쟁의 수단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슈미트(Carl Schmitt)의 반론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sup>200)</sup> 이는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슈미트는 하이데거와 더불어 히틀러에 적극 동참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영국의 근대 회의주의적 철학자인 흄(D. Hume)의 주장을 언급하고자 한다.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가장 보편주의적인 종교임을 선언하는 바로 그 유일신 신앙이 타 종교에 대한 가장 극악한 탄압과 배타적 태도로 전락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유일신 체계는 유일신과 이성의 완벽함, 선을 가정하고 있기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종교적 의식에서 어리석고, 불합리하며, 비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뿐 아니라 정의와 자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일신교의 이 같은 장점은 실제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으며(사실상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인류의 사악과 편견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으로 인해 감소되기까지 한다. 만

200) 인도주의적 개입 이론에 대한 슈미트의 반론에 대해서는 나종석(2005), 「하버마스 인가 아니면 슈미트인가?—인도주의적 개입과 근대 주권국가 사이의 긴장」, 『사회와 철학 9』, 63~98쪽 참조.

약 신앙의 대상이 유일한 것이라면 다른 신에 대한 경배는 불합리하고 불경한 것이 될 것이다. 솔직히 이처럼 신앙의 대상이 단일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앙과 제례의 단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되며, 이는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반대자를 이단으로 몰아 인간적인 복수심은 물론 신적인 복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구실이 된다. 각각의 종파는 신이 자신들의 신앙과 경배를 전적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무도 동일한 신이 상이한 심지어는 상반된 제의와 원리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연히 서로 적대관계에 놓여 종교적인 열성과 적대감을 갖고 가장 사납고 잔인한 모든 인간적 감정을 서로에게 쏟아 붓는다.<sup>201)</sup>

탈민족주의 이론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결합되는 현상을 도외시한다고 해도 임지현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동아시아의 ‘국사(national history)’ 패러다임의 해체를 주장하면서도 ‘해체한 다음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말하면서 “20세기의 유토피아적 기획이 그러하였듯이, 잘 기획된 대안이 의도하지 않는 또 다른 헤게모니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sup>202)</sup> 이 주장을 읽어 보면 어떻게 임지현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임지현의 국사 패러다임의 해체작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곧바로 20세기의 역사에서 참담한 패배로 끝난—이상적인 인류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 시도가 역설적이게도 유례가 없는 아만을 초래한—현실공산주의자들의 유토피아적 기획과 동일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는 비판작업이 가져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가능성

201) 데이비드 흄 저, 이태하 역(2004), 『종교의 자연사』, 아카넷, 100쪽부터.

202) 임지현(2004), 앞의 글, 32쪽.

중 최악의 것이 유일하고 필연적인 것인 양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고 있다.

### 3. 순화된 애국주의 : 자민족중심주의와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 매개체

#### 1) 근대 국민(민족)국가의 양면성

동아시아를 새롭게 사유하는 작업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역주의 모색과 패권주의의 각축장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주의 모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런 노력을 이끌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이를 현실 속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방해가 되는 한·일 간 혹은 중·일 간의 화해나 이 지역 국가 사이의 과거사 정리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거꾸로 이 지역에서의 과거사 정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색 역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의 정리 문제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동아시아의 관점이 곧바로 국민국가나 민족주의의 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학자 사이에서도 국사서술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 뒤에는 이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방해하고 갈등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자민족중심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sup>203)</sup>

---

203) 이남주(2005b), 앞의 글, 399쪽 참조.

이남주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 국민국가 사이의 협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학자도 다수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는 이런 학자로서 한국의 최장집, 중국의 왕후이, 일본의 와다 하루키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근대의 국민(민족)국가 및 민족주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근대 국민국가의 해체나 그 틀의 지나친 파괴는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과도하게 국민국가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국가의 종언을 통해서만 동아시아공동체를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이 모든 형태의 지역주의 사상이나 세계시민주의 사상을 위협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국민국가인가 아니면 동아시아공동체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 양자택일의 관점 대신에 우리는 국민국가와 매개될 수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세계 공동체에 열린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는 작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국민국가의 틀의 변형가능성을 탐구해 볼 것이다. 국민국가와 동아시아지역공동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의 사례로 언급될 만한 것이 바로 순화된 애국주의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탈민족주의 이론과 국사해체의 문제점을 그것이 실상은 '악한 국민국가' 대 '선한 탈국사 이론' 혹은 '탈민족주의(탈식민이론)' 등의 이원적 대립구도에 빠져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못지않게 위험한 요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우리는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세계공동체에 열린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은 보편주의적 인권에 대한 승인을 위해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 및 민족국가적 정체성을 악으

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국가적 틀 내에서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단정을 통해 지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위험성만 강조하는 입장도 아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좀 더 섬세하고 복잡한 이론을 제안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세계시민사회로 나가는 매개로서의 순화된 애국주의(purified patriotism)를 살펴보면, 지역적 사유에 배타적이고 닫힌 민족주의뿐 아니라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에 대한 거칠고 과도한 비판으로 인해 겉으로는 동아시아의 관점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역주의 사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검토해 볼 것이다.

김기봉은 민족주의 자체를 넘지 못한 채 이루어진 동아시아공동체는 과거 일본의 아시아주의나 대동아공영권의 재판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sup>204)</sup> 그러나 이 관점은 역시 절반의 진실만 보여 준다. 우리가 보기에 동아시아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시민공동체에 기여할 방향으로 국민국가의 틀을 개방적으로 변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지역공동체와 매개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국민국가의 틀을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탈민족이론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공동체 이론 역시 공허한 말장난에 그치고 말거나 해체된 국민국가의 틀을 대신하여 제3의 곳에서 출현하는 제국주의적 혹은 패권주의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전락할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국가의 틀을 과격하고 거칠게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개혁·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4) 김기봉(2006), 앞의 책, 208쪽.

국민국가의 종언이나 민족주의 자체의 종언이라는 과장된 주장을 하기보다는 현대사회에서 근대 국민국가 및 민족주의가 처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생태적 문제와 같이 개별 국민국가의 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구화에 부응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가 아직 출현하고 있지 않은 역설적 상황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벤하비브(S. Bebbahib)의 주장처럼 후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지혜는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특수한 공동체에 대한 연대적 의무를 매개할 수 있는 통찰이다.<sup>205)</sup>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면 이는 결국 과거의 불행하였던 침략 전쟁과 제국주의 지배의 경험을 공동으로 청산하는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우선 근대 민족(국민)국가의 특성을 그것이 안고 있는 이중성을 통해 살펴보자. 근대 국민국가의 이중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 측면 중 어느 한 측면만 부당하게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임지현 유의 탈근대, 탈민족주의 이론은 바로 이런 오류의 한 사례이다. 이 이론의 일면성은 그것이 근대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양면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임지현의 글을 읽다 보면 민족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느껴진다. 민족주의 대 탈민족주의는 거친 이원적인 대립쌍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임지현 유의 탈민족주의 이론은 우선 근대 국민(민족)국가의 양면성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

205) 세일라 벤하비브 저, 이상훈 역(2008), 앞의 책, 39쪽.

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임지현 역시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종족적인 혹은 인종적인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공공적인 혹은 시민적인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로 세분한다. 그리고 그는 전자, 즉 종족적인 민족주의에서 후자인 시민적 민족주의로의 이동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06)</sup> 이렇게 본다면 그 역시 지나치게 인종적이고 단일한 혈통을 강조하면서 타자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올 한국사회의 특정한 형태의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그는 1990년대에는 여전히 ‘건강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취하면서 어떤 민족주의냐가 문제임을 역설한다.<sup>207)</sup> 그러나 그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민족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 역시 내보인다. 아마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그의 책 제목이 이런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sup>208)</sup>

주지하듯이 현대 국제정치사회는 국민(민족)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을 통해 전면적으로 등장한 이 국가 형태는 근대 국가의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국제정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국민국가는 ‘국민(nation)’의 발명 내지 고안을 통해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하버마스는 지적하였다. 주지하듯이 이런 주장을 하는 하버마스는 민족주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고 기본적으로 세계시민주의자이다. 하버마스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

206) 임지현(1999), 앞의 책, 8쪽 참조.

207) 임지현(1999), 위의 책, 57쪽, 각주 6 참조.

208) 국사의 해체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임지현은 현재 1990년대 추구하였던 건강한 민족주의의 길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민'에 소속한다는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적 정체성은 그동안 서로 낯설었던 그 구성원 사이의 '연대적 연결을 창출'하므로 정치적으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sup>209)</sup> 달리 말하면 근대의 국민국가는 민주적 원리를 승인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확인함과 더불어 인민의 자유로운 통치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동력을 자율적 개인을 국민의 일원으로 변형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통의 혈통 및 공통의 언어와 역사적 경험 등을 중심으로 자각적인 국민의식, 즉 '같은 인민(국민)에 속한다는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인민주권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보편주의적 도덕원리의 법적 표현인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sup>210)</sup> 그리하여 근대의 민주적 입헌국가는 민족주의와 결합해 전개되어 왔다고 하버마스는 지적한다. 이렇게 국민국가의 역사적 성과를 설명하면서 하버마스는 민주적 공화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에 주목한다.

물론 하버마스는 이 결합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공화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긴장과 모호한 결합이 바로 근대 국민국가의 내적 모순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버마스는 이해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Nation[국민(민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공적 시민의 의욕된 Nation(국민)은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인 반면, 동포들의 탄생적 Nation(민족)은 사회적 통합을 받쳐 준다. 시민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한다. 동포들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한다. 평등한 권리공동체의 보편주의와 역사적 운명공동체의 특

209)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황태연 역(2000), 『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141쪽.

210)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황태연 역(2000), 위의 책, 143쪽.

수주의 사이의 긴장이 Nationalstaat(국민국가이기도 하고 민족국가이기도 한 이 단어)의 개념 속에 박혀 있다.”<sup>211)</sup>

하버마스가 주장하듯이 개인의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라는 규범적인 이념, 즉 인권과 인민주권은 민주적 입헌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렇지만 이 규범적 이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살아 숨 쉬는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 여기에서 바로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 민족주의적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즉, “입헌국가의 법적 구성 속에는 자연주의적 인민(민족)개념으로 메워져야 할 개념적 간극이 있다. 순수하게 규범적 개념만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실증법의 수단을 통해 구성해 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이…… 사회적 경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다”<sup>212)</sup>(번역을 일부 바꾸었음).

하버마스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이념이 지향하는 보편주의와 일정한 한계와 경계를 통해 구성된 ‘인민’ 내지 ‘국민’의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의 보편주의적 성향과 인민주권의 행사에서 나타나는 배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 사이의 긴장은 부인할 수 없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보편적 인권관에 내재해 있는 팽창적이고 포괄적인 도덕적·정치적 보편주의와 개별주의적이고 배제적인 민주적 제한이라는 두 요소 사이의 해결불가능한 모순”이 존재한다.<sup>213)</sup> 우리는 근대 국민

211)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황태연 역(2000), 앞의 책, 145쪽. 민족주의와 공화주의의 공생이 일시적인 것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공화주의적 국가의 탄생에서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163쪽)라는 하버마스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212)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황태연 역(2000), 앞의 책, 145쪽부터.

213) 세일라 벤하비브 저, 이상훈 역(2008), 앞의 책, 42쪽.

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려면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가능하였던 민주적 자치와 인권의 보호, 사회적 연대망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진지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탈국민국가적 이론은 사실상 근대 국민국가의 업적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버마스처럼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와는 달리 좀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민족의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을 살펴보자. 자유주의 이론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윌 킴리카(Kymlicka)는 현실세계의 대부분의 자유민주의 국가들이 채택해 온 사회적 통합에 대한 접근방식을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의 접근방식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의 실제 관습을 탐구해 보면, 이들 국가는 “국민성(nationhood)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연대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근대의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는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국민’을 형성하며, 따라서 단일한 정치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고 각자가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한다.”<sup>214)</sup> 이렇게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민족주의’를 통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단일한 국민공동체라는 개념을 창조하였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만들기(nation-building)’를 통해 아주 놀랄 정도로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킴리카는 주장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는 그 정의상 ‘비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여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형용모순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에 반대하면서 킴리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회통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

---

214) 윌 킴리카 저, 장동진 외 역(2006), 앞의 책, 364쪽.

의의 실제적 실천을 검증해 볼수록, 사람들은 국민 정체성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다 주목하였으며, 국민성이라는 이상들이 정의와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sup>215)</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근대 민족국가는 결코 그런 악마적 요소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붕괴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아렌트의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긍정성을 우리는 아렌트가 말하는 무국적성(statelessness)과 제국주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권의 근본적인 박탈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자신의 견해를 의미 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 행위로 만드는 그런 장소의 박탈로 표현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그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때, 자유와 정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인 시민의 권리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상황이 출현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sup>216)</sup>

---

215) 윌 김리카 저, 장동진 외 역(2006), 앞의 책, 370쪽. 물론 김리카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윌 김리카 저, 장동진 외 역(2006), 앞의 책, 371, 373쪽부터 참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혹은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때 바로 보편적 인권이 송두리째 파괴된다는 점을 위의 아렌트의 글은 감동적으로 전해 준다. 당연한 말이지만 특정한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다수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특수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언제나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고 이질적인 것을 파괴하는 모습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그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특수한 공동체의 다수성은 인류의 영원한 존재조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특수성을 매개로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탈민족주의 이론이 보여 주는 것처럼 특수한 형태의 집단성을 싸잡아 비판하고 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에서 구해질 수 없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아무런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아렌트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평등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평등해지는 것이다.”<sup>217)</sup>

특수성이 항상 악은 아니다. 그것이 악인 경우는 보편성과의 연결성을 상실하고 특수성 자체를 이상시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특수성 없는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진실이다. 우리는 나무 일반이 존재함을 경험할 수

216)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532쪽.

217)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2006), 앞의 책, 540쪽.

없다. 다만 이 나무 저 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나무임을 인식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일반이나 인류라는 이름이 지니는 보편적 의미는 그 자체 모든 역사적 맥락이나 특수한 차원을 지워 버리고 없애 버리는 텅 빈 공간에서 구해 질 수는 없다. 우리가 왜 인민의 이름으로 혹은 역사발전의 이름으로 자행된 과거 좌파의 폭력성에 동의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삶과 생명을 유린하는 것을 보아 왔고 또 그런 개별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특수한 집단, 예를 들면 근대의 국민(민족)국가의 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근원적으로 박탈당한 사람이 명목상으로는 인간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존재, 즉 아렌트의 용어를 빌리면 자신을 의미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삶의 '장소'로부터 '박탈'된 자임을 경험한다. 이런 인식 없이는 왜 정체성의 문제나 차이의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은 왜 그리고 어떤 동아시아공동체 내지 세계시민공동체인가 하는 물음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 2) 순화된 애국주의

순화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 대 탈민족주의'라는 거친 이원적 대립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론적 대안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순화된 애국주의는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동질성만을 배타적으로 선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이질적인 것 혹은 타자적인 것으로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절멸 내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매개된 특수한 민족적 집단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순화된 애국주의는 국민국가의 틀을 유연하게 하고 지역적 및 세

계시민적 질서와 결합될 수 있는 정서와 태도를 배양하는 데 유용한 토대 구실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국민국가 시대에서 탈국민국가적인 세계화의 시대로 넘어서는 과정이 보여 주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국가의 틀이 파괴되면 자연스럽게 인류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역사가 보여 주듯이 우리는 사람들이 추상적인 인류에 대한 충성과 헌신, 도덕적 의무보다는 그들이 속한 특수한 집단이나 동료에게 도덕적 감정을 보여 왔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감정이나 배려 및 연대의 책임감이 특정한 집단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인류 전체로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과정이 매우 더디고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시민 동료의 도덕적 연대나 책임감 역시 대단히 어려운 역사적 성취였으며 그런 성취는 안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을 고민할 때 그런 역사적인 성취를 거칠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격분과 열광은 사려 깊음, 신중함, 통찰력이 100년이나 걸려 이루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30분 만에 무너뜨린다”는 보수주의자 버크(Burke)의 지적을 한갓 보수 반동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sup>218)</sup>

순화된 애국주의로 되돌아 가자. 순화된 애국주의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법학·윤리학 석좌교수인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주장한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이 순화된 애국주의라는 용어는 독일 민족주의의 형성에

---

218) 앤서니 기든스 저, 김현옥 역(1997), 앞의 책, 39쪽.

지대한 영향을 준 헤르더(Herder)의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순화된 애국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계시민주의자(cosmopolitan)의 믿음과는 달리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세계라는 목적을 향하는 보편적 감정을 강화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순화된 애국주의는 인간에게 품위 있는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세계정의를 향한 노력에 유익한 심지어 본질적인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이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 위해 그녀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민족주의자인 마치니(Guiseppa Mazzini)의 애국심에 대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① 전 인류의 좋음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 ②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그들의 관심에 있어서 다소 편협하고 특수주의적이며, 전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강한 애착을 품을 수 없다.
- ③ 그러나 인간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과거의 투쟁과 헌신에 대한 기억의 체현(體現)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품을 수 있다.
- ④ 국가가 그렇게 강한 애착을 직접적으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원이 유는 그것이 공동의 기억, 수난의 사건 그리고 공동의 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⑤ 만약 그런 애국심이 인간의 자유와 필요처럼 진정 중요한 것에 옳게 겨냥된다면, 그것들은 지나치게 만연한 이기주의로부터 사람들을 거칠게 끌어내 그들이 전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확대된 관심에 대비(對備)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자기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습관을 줄 것이다.
- ⑥ 인간들은 세계적 관심의 토대로 애국심을 배양해야 한다.<sup>219)</sup>

219) 마사 누스바움 저, 강준호 역(2008),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제1강연 순화된 애국주의는 가능한가?」, 2008년 8월 25일 고려대 강연문.

위의 요약이 보여 주듯이 마치니는 민족주의가 인간을 편협한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세계적 관심으로 이르는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누스바움이 지적하듯이 사랑의 일종인 애국주의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한 특수적인 집단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함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좋은 애국주의가 악한 것으로 변질되는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독립적인 사법부, 권력의 분립과 전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민자 권리의 보호, 외국문화와 국내 소수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활발한 비판문화가 선한 애국주의를 지탱시켜 주는 중요한 제도이자 장치이다.

누스바움은 순화된 애국주의의 역사적 사례를 검토한다. 그가 순화된 애국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든 인물은 링컨, 킹, 간디, 네루 등이다. 링컨이나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순화된 애국주의는 노예제 및 인종차별주의의 부정의를 종식시키는 시도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폭력의 방식을 통해 식민지 조국을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민족해방의 시도 등을 순화된 애국주의의 사례로 들고 있다. 누스바움이 설명하듯이 인도 독립의 날에 행해진 네루의 연설 속에는 인간 포용과 평등에 헌신하려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의 충족에 헌신하려는 순화된 애국주의의 정신이 매우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 연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인도와 인도 국민에 대한 봉사과 인류의 더욱더 큰 목적을 향한 헌신을 맹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인도에 대한 봉사란 고통받는 수백만에 대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기회불평등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인간의 야망은

모든 이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눈물과 고통이 있는 한, 우리의 과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꿈은 인도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세계를 위한, 오늘날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매우 촘촘하게 얽여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위 연설문이 보여 주듯이 네루는 인도의 독립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인류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인도인이 겪는 고통과 좌절의 극복을 위한 투쟁이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전체 인류에 대한 형제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수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결코 다른 집단이나 인간에 대한 배타적인 증오 및 억압, 그것을 넘어 타 집단에 대한 절멸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는 특수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인간의 편협한 이기주의의 틀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나가는 매개로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무차별적으로 옹호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의 긍정성을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공동의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물론 모든 사물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화된 애국주의 역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심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가 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애국주의를 보편주의적인 원칙과 결부시키려는 노력일 것이고, 이런 노력이 실현된 사례를 통해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고양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보편성과 결부될 수 있는 애국주

의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으로 링컨, 간디, 네루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 정의나 평등의 이념과 결부된 도덕적 감정을 함양하기 위해 좁은 이기심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전한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선용하는 지혜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주의적 원리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애국주의가 전적으로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순화된 애국주의, 유연한 국가주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 방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가 내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설정된 국가 정체성 내용 중 단일 인종, 단일 문화, 자기보존적 집단주의 등의 폐쇄집단적 특징을 타 인종, 타 문화, 타 집단과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개방적인 형태로 변경할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구성원의 자유 및 평등권 보장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21세기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인종, 문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한 민족적·집단적 정체성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와 책임의 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이른바 국가구성원에게 ‘헌법 애국주의’를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순화된 애국주의, 유연한 국가주의는 각국의 헌법에 의거해 국내적으로도 그 국가주의적 폐쇄성을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둘째, 21세기 세계에는 각 국민국가가 그 자체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평화, 인권, 경제위기 등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자 간 협력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영역이다. 동아시아 지역도 환경, 인권, 경제위기 등과 관련해서 국가 간, 지자체 간, 시민단체 간 열린 소통구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별 열린 네트워크형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공동질서를 다층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순화된 애국주의, 유연한 국가주의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셋째, 현재 다양한 국가 간 중첩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동아시아 3국만 예로 들자면, 한·일, 한·중, 중·일 결혼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예술 및 스포츠 교류, 역사 및 문화 교류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각국이 상호중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공동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영역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력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다음에 제시할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유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 현재적 공감대 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 미래지향적 공동체 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도 폐쇄적 국가주의나 세계시민주의로는 그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써 순화된 애국주의, 유연한 국가주의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구체화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순화된 애국주의, 유연한 국가주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각 단계별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4. 정책적 제언

이제까지 검토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제언은 시계열적으로,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영역으로 나누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유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

첫째,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유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으로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이 연구가 제시한 순화된 애국주의의 원칙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역사학자, 시민, 교사가 함께 만든 『미래를 여는 역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한·중·일 3국의 역사에 대한 단순비교의 틀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 전제로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려면 국민국가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넘어서는 방안의 하나가 한·중·일 3국의 근현대사에 나타난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의 흐름을 중층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술지침이 순화된 애국주의의 흐름을 비교하는 것이다. 순화된 애국주의는 국민국가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침략적 제국주의를 구조적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을 허용할 뿐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의 정신을 좀 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즉 동아시아의 지평이나 인류공동체의 지평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순화된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우선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 관련 이론서 및 철학서의 총서

발간을 통해 민족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간디, 네루, 마치니, 마틴 루서 킹, 동아시아 3국에서의 민족주의 흐름 및 이를 상징하는 지도자들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면서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연구결과를 대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상중은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연관된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셋째, 순화된 애국주의를 매개로 한 공동의 역사적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동의 기억현장이나 역사적 장소를 발굴하여 이를 교육의 장 및 한·중·일 3국의 교류의 매개로 활용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근대 국민(민족)국가의 경험을 상대화하고 이 지역의 공동성을 드러내는 한·중, 한·일 교류사나 상호 영향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과거 삼국시대(가야 포함) 이래 상호교류의 기억복원 지원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직하다. 즉, 백제, 가야, 신라와 일본의 교류기록 복원 및 상호공유를 위한 지자체 및 학계 등의 연구발굴을 지원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공유기억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 및 연구소의 문화유적지 발굴 및 내용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병행한다면, 이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 및 한·중의 교류의 차원을 더욱더 내실 있게 해줄 것이다. 고등학생의 수학여행과 결부할 프로그램 개발도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 2) 현재적 공감대 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

첫째, 폐쇄적 국가중심주의를 열린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 틀을 유연하게 할 상호인식을 확보할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공동 교과서 연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내실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전달하는 연결망의 부족도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동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에 교사와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이들 통해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일본 차원으로 확장하면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중·일 청소년들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사건을 발굴한 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영화 제작,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공동 역사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교사가 일본 고등학교에서 공동 역사교과서를 교재로 역사교육을 한다면 이는 한·일 간의 교류차원에서나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미래지향적 공동체 인식 확보 및 확장을 위한 제언

첫째, 한·중·일 3국 공동체 구상을 위한 지식인 포럼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교류를 통한 지적 공유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아주 중요하다. 이들이 대학 내에서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공동연구를 할 기회를 활성화하여 상호교류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및 성인 등 각계각층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일 언어이해 및 3국의 역사나 현재 당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력양성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칭 ‘동아시아 인재 공동 육성 프로그램 제안’을 가동하여 동아시아 공동의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해결할 연구소나 단체를 한·중·일 3국이 함께 구성하여 이들이 상호의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일본인 학자 다니구치 마코토가 지적하듯이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협력이 필수이다. 특히 일본이 갖고 있는 고등 환경기술과 환경문제 해결의 노하우 등을 한·중·일 차원에서 공유하는 협력질서를 국가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공동체 인식 확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대학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적으로 동아시아 지식교류를 위한 국제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대학 간 학생 및 지식인 교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및 고유한 특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적 공통분모 형성과 동아시아적 자긍심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 플랜 구상으로는 개별 대학 간 1 대 1 학생교환 프로그램보다는 다자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각국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작업이 진행되려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급인력 스카우트 경쟁에서 벗어나, 한·중·일 3국을 포함해 아시아 대학이 인재를 공동으로 키워 서로 교환한다면 소모적 쟁탈전 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를 우리는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랜’에서 볼 수 있다. 에라스무스 플랜은 유럽연합(EU)이 경제, 군사, 정치 영역에 이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 내 대학교류 프로그램이다. 1987년 출범 당시에는 지역대학 간 학생 및 교수 교환, 상호 학점인정, 공동 커리큘럼 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그 영역을 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에라스무스 플랜은 ‘소크라테스 플랜’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유럽연합은 대학 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31개 EU 회원국 대학생 150만 명이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따고 있다. 지금까지 약 160만 명의 대학생, 지식인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2년까지 30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도 아시아 판 에라스무스 플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흐름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넷째, 한·중·일 각국의 시민사회 및 지식인 집단이 서로 협력하여 생태, 평화, 소통 및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를 둔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할 미래세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초등교육에서부터 다문화교육, 평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 3국도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에 기여할 교육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미래세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이나 교사 및 학자 등의 공동 양성 등을 한·중·일 3국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문〉

- 강상중(2000), 「'일본의 아시아'와 지역 통합」,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2004),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 강정인(2000), 「유교연구의 현황: 문명의 충돌과 아시아적 가치」, 『유교민주주의, 왜&어떻게』, 전통과 현대.
- 강정인(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 강정인 외(2004), 『나는 몇 퍼센트 한국인일까』, 책세상.
- 고병익(1995),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소원과 통합」,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고병익(1996),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지성사.
-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2001), 「日本 昭和시기 '東亞'의 理念」, 성대 동아시아 학술원 창립총회 발표문.
- 고야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2005), 『동아·대동아·동아시아-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 국민호(1997), 「동아시아 경제 발전과 유교」, 『한국사회학』 제31집(봄호).
- 권용혁(2001), 「세계화와 보편 윤리」, 사회와 철학연구회 편,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 권용혁(2003),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사회와 철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이학사.
- 권용혁(2004),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가족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 권용혁(2005),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기업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기업문화를 말한다』, 이학사.
- 권용혁 외(2006),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 권희영(2001), 「한국 근대화와 가족주의 이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백산서당.
- 기어트 호프슈테더 저, 차재호·나은영 역(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김광역(1999), 「동아시아 이론의 실제-그 분석과 해석」, 『동아시아 연구 : 글쓰기에서 이론까지』, 살림.
- 김광역(2005),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의 필요성과 가능성」,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기봉(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 김동춘(2007),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기업사회의 변환과 과제』, 도서출판 길.
- 김석근(1999), 「IMF,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지식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 김성철(2001), 「한국 기업과 가족주의-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영에의 적용」, 한국정신문화연구회 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백산서당.
- 김성한(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미국」,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김승일·이은우(2002),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지식마당.
- 김영명(2000),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체제」,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김영작(2006),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상 : 이론, 전략적 방법에 관한 시론」,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김요기(1995), 「유가윤리와 경제발전-베버 학설의 새로운 탐색」,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김용운·진순신의 밀레니엄 대담(2000),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문학사상사.
- 김유은(2005),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관계이론」,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은실(2000), 「'동아시아 이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김철신(2007),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민주주의 강의 2 : 사상』, 오름.

김충렬(1995), 「21세기와 동양철학」, 한국철학회 편, 『문화철학』, 철학과현실사.

김혁래(1997), 「한국 가족자본주의와 기업조직」, 『전통과 현대』(겨울호).

나종석(2004), 「한국 가족 내에서의 자유·평등 원리와 가족 유대성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나종석(2005a), 「하버마스인가 아니면 슈미트인가?-인도주의적 개입과 근대 주권 국가 사이의 긴장」, 『사회와 철학 9』.

나종석(2005b), 「한국의 기업 민주주의와 능동적 신뢰」, 『한중일 기업 문화를 말한다』, 이학사.

나종석(2006),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규범적인 미래지향성에 대한 일고찰」,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나종석(2007), 『차이와 연대-현대세계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 도서출판 길.

낸시 프레이저 저, 정일준 편역(1999), 「푸코는 소장 보수주의자인가?」, 『푸코-하버마스 논쟁재론.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새물결.

닐 하우(Neil Howe) 외, 『한국의 고령화』, CSIS, 2007년 3월 21일 보고서.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김문정 역(2007), 『동아시아 공동체』, 울력.

다카하시 데즈야(2004. 10. 25), 「단절의 세기를 넘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백지운 역(2004),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대니엘 벨(2000), 「아시아적 공동체주의」, 『유교민주주의, 왜&어떻게』, 전통과 현대.

데이비드 헬드 외 저, 조효제 역(2002), 『전지구적 변환』, 창비.

데이비드 흄 저, 이태하 역(2004), 『종교의 자연사』, 아카넷.

독일연방정치교육원 편, 최경은·권선형 역(1999),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연세대학교 출판부.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동아시아 비판적 지성 기획위원(2003), 「기획의 말」, 야마무로 신이치 저, 임성모 역,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 동아시아연구센터(2003a), 『설문 조사 분석 자료집 : 한·중·일 3국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비교』, 울산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동아시아연구센터(2003b), 『심층 면접 자료집 : 한·중·일 3국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울산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푸웨이밍 저, 김태성 역(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 리관유(1999), 「문화는 숙명이다」,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 마사 누스바움 저, 강준호 역(2008),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제1강연 순화된 애국주의는 가능한가?」, 2008년 8월 25일 고려대 강연문.
- 모리시마 미치오 저, 장달중 외 역(1999),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일조각.
- 문옥표(2001), 「일본의 가족 : 전통적 제도와 현대적 변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백산서당.
- 문우식(2005), 「동아시아 역내통화금융협력의 추진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미셸 푸코 저, 홍성민 역(1997),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출판.
- 미셸 푸코 저, 이승철 역(2005), 『푸코의 말스』, 도서출판 갈무리.
- 민두기(2001),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민병원(2008), 「동아시아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2007), 『민주주의 강의 2 : 사상』, 오름.
- 박사명(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 박사명(2008), 「동아시아 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박승우(2005), 「동아시아 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박승우(2008), 「동아시아 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배궁찬(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과정 : ASEAN+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백영서(2000),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백영서 외(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희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차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2001),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2003),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이학사.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샬탈 무페 저, 이행 역(2006),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석현호·유석춘 공편(2001),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진통과 현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2002),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세일라 벤하비브 저, 이상훈 역(2008), 『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현실사.

손열(2008),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과 공동체론」,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스테판 다나카(1995),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신용대 외(2000), 『한·중·일 경제 협력의 발전 방향』, 을유문화사.

쑤저 저, 윤여일 역(2007),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그린비.

아리프 딜릭(2000),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앤드류 갬블 저, 김준수 역(2005), 『정치와 운명』, 울력.

앤서니 기든스 저, 김현옥 역(1997),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앤서니 기든스 저, 한상진·박찬욱 역(1998),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앤서니 기든스 저, 박찬욱 역(2000), 『질주하는 세계』, 생각의 나무.

야마무로 신이치 저, 임성모 역(2003),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2004),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에드워드 W. 사이드 저, 박홍규 역(2008),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오승렬(2005), 「변환기의 동아시아 경제협력-‘대중화경제권’의 등장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 와다 하루키 저, 이원택 역(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신지역주의 선언』, 일조각.
- 왕후이 저, 이옥연 외(2003),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 울리히 벡 저, 정일준 역(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황태연 역(2000), 『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2006), 『의사소통행위론 1/2』, 나남출판.
- 윌 김리카 저, 장동진 외 역(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유석춘(1997), 「동아시아 ‘유교 자본주의’ 재해석 : 제도주의적 시각」, 『전통과 현대』 (겨울호).
- 유석춘(1997), 「‘유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 현대』(여름호).
- 유석춘·장미혜(1999), 「연고집단과 사회발전」,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 윤해동(2003), 『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식민지의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 이광규(1990),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 이근관(2002),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편,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 이남주(2005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지속가능한 개방전략 : FTA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4.
- 이남주(2005b),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국민국가들의 협력인가, 국민국가의 극복인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 이매뉴얼 윌러스틴 저, 김재오 역(2008), 『유럽적 보편주의 : 권력의 레토릭』, 창비.
- 이상현(2008), 「동아시아 안보공동체-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이성규(1995), 「증화사상과 민족주의」,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이승철 외(2005),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승환(1999), 「‘아시아적 가치’의 이론학적 분석」,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 이승환(2004), 『유교 이론의 지형학』, 푸른숲.
- 이유선(2006),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시민사회」,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 이재열(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식민지, 계급, 인격』

- 윤리』, 전통과 현대.
- 이재열(2002), 「신뢰와 사회적 자본 : 개념적 정리」, 호산(浩山)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성찰의 사회학』, 박영사.
- 이재현(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역내 리더십」,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이종원(2005), 「동아시아공동체와 동북아시아」, 『月刊 社會民主』 600號.
- 이진원(2002), 「한일 자유무역시대 성립의 정치 사회적 조건」, 『동서연구』 14권.
- 이진원(2005a),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 『일본학보』 62권.
- 이진원(2005b), 「한중일기업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기능성」, 『일본학보』 65권.
- 이창재(200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전망과 추진방안」, 『동아시아 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태환(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중국」,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 임지현(2004), 「국사」의 안과 밖-헤게모니와 ‘국사」의 대연쇄」,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임혁백(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 임현진(2001), 『21세기 한국 사회의 안과 밖』,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 바티스트 뒤로젤 저, 이규현·이용재 역(2003), 『유럽의 탄생』, 지식의 풍경.
- 전재성(2008), 「EU와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전형준(1997), 「같은 것과 다른 것-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 정문길 외(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정문길 외(2000), 『동아시아의 귀환 :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비.
- 정재서 편저(1999), 『동아시아 연구 : 글쓰기에서 이론까지』, 살림.
- 조운영(2005), 「안보공동체 이론과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가능성」,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조은(2000), 「‘동아시아 가족」이 있는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집.
- 조희연(1998a),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 조희연(1998b),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 조희연(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조희연·박은홍(2007), 「사회적 아시아(Social Asia)를 향하여」, 『동아시아와 한국-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도서출판 선인.
- 존 시튼 저, 김원식 역(2007), 『하버마스와 현대사회』, 도서출판 동과서.
- 지명관(2000), 「전환기의 동아시아」,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송화 편(2004),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법문사.
- 최영중(2005),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동아시아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원식(1995),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최원식(2000), 「한국 발흥 또는 동아시아 발흥 대안?: 한국과 동아시아」,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원식(2004), 「에필로그.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동아시아학 보유」,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원식(2008), 「포스트 65를 점검하는 메모」, 한일, 연대 21 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 이파리.
- 최원식·백영서 편(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 최장집(1994), 「한중일 동양 3국의 동족비교」, 『한국사회학』 1.
- 최장집(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장집(2004),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아세아 연구』 제47권 4호.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최태욱(2008), 「한미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지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통계청(2002), 『간추린 통계 2002』, 통계청.
-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구승희 역(200),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 하영선(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한경구(2000), 「동아시아의 경영 문화 : 가능성과 한계의 모색」,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1),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백산서당.

하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한승완(2006), 「한중일 시민사회와 ‘동북아정체성’의 형성」,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8), 『미래를 여는 역사』, 개정판, 한겨레.

함재봉(2000),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통과 현대.

함재봉 외(2000), 『유교민주주의, 왜&어떻게』, 전통과 현대.

호산(浩山)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2002), 『성찰의 사회학』, 박영사.

홍진수(2007. 12. 11), 「동방불효지국?」, 『경향신문』.

## 〈일문〉

ANECDOTA, 「EUと東アジア共同體」, <http://homepage3.nifty.com/ryuota/eastasia.html>.

古森義久, 「“東アジア共同體”という妖怪～日本が直面する悪夢とは-」, <http://blog.livedoor.jp/lancer1/archives/50279670.html>.

尾崎重義(2007), 「21世紀世界システムにおける東アジア統合と共同體」, 『綜合政策論叢』 第13號, 島根縣立大學 綜合政策學會.

尾崎重義, 「東アジア共同體構想の現実化」, <http://www.nishogakusha-u.ac.jp/pdf/e7-32.pdf>.

西口清勝·夏剛(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ミネルヴァ書房.

畠山襄(2005), 「東アジア共同體の幻想を捨てよ」, 『中央公論』.

主計啓太郎, 「東アジア共同體からの可能性」, <http://gyosei.mine.utsunomiya-u.ac.jp/since2002koki/gen07/genreport/0812kasuda.html>.

中嶋嶺雄(2006), 「東アジア共同體は幻想だ」, 『Voice』 2月號.

青木保(2005a), 「東アジア共同體の文化的基盤」, 『國際問題』 538.

青木保(2005b), 「東アジア共同體意識の醸成を目指して」, 『外交フォーラム』 207號.

〈영문 및 독문〉

- Gadamer, H. G.(1986), *Wahrheit und Methode*, Gesammelte Werke, Tübingen, Bd. 1.
- Honneth, A.(1986), *Kritik der Macht. Reflexionsstufen einer kritischen Gesellschaftstheorie*, Frankfurt am Main.
- Huntington, S. P.(1991), *The Third Wave*,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srael, J.(2006), *Enlightenment Contested : Philosophy, Modernity, and the Emancipation of Man 1670~ 1752*,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Krugman, P.(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 Krugman, P.(1998), "Asia : What Went Wrong," *Fortune*, March 2.
- Rosemount, H. Jr.(1988), "Why take Rights Seriously? A Confucial Critique," Rouner, Loroy(ed.) *Human Rights and the World's Religions*, Notre Dame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Weber, M.(1958),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edited and translated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M.(1988),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Tübingen.



#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 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이남주 · 배기찬

I. 머리말

II. 동북아 3국 간 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III.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과 민족주의

IV. 동북아 갈등 및 민족주의 대응방안

V. 맺음말



#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 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이남주 · 배기찬

## I. 머리말

###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영유권갈등, 역사갈등 등 동북아의 여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sup>1)</sup> 동북아에는 각종 갈등

- 1) 이 연구는 부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북아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까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는 있지만 동아시아 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 한·중·일의 3국 간 협력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3(한·중·일 3국)”과 같은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지역협력을 매개로 3국 간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연구는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산재해 있는데, 이 산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역내 국가 간의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종 갈등이 일시 잠복하다가도 한·중·일 3국 정권의 성향과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계기에 따라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 갈등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동북아에서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영토, 역사, 정치갈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동북아에서 경제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07년 현재 중국은 한국,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각각 6위(1599억 달러), 3위(2360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이다. 한·중·일 사이의 인적 왕래 규모는 2004년 1년 동안 1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북아에서는 영유권문제,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정부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중 사이에도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하는 소재가 되고 있다. 최근까지 설문조사는 대부분 최근 동북아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문화갈등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설명은 물론이고 현실주의적 설명으로도 해석하기 어렵다.<sup>2)</sup>

---

2) Michael Yahuda(2006), "The Limit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 Sino-Japanese Relations," Johnston, Alastair Iain and Ross, Robert S. eds., *New Direction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ung-In Moon and Seung-won Suh(2008), "Politics,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Order," G. John Ikenberry and Chung-In Moon eds.,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Lanham,

그동안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은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유럽식 통합모델을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유럽식 통합은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발전이나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협력이 국제관계의 부정부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 혹은 경제협력이 이러한 지역협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지역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군사적 영역에서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모두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 ‘확산(spill-over)효과’가 지역통합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동북아와 동아시아 모두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북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sup>3)</sup>

최근 동북아에서 각종 갈등의 증가는 일견 경제협력의 증진이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결국은 힘의 분포가 국제관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설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과 같은 현실주의적 요인이 동북아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3) 물론 현재 자유주의적 전망이 완전히 빛나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유권갈등, 역사갈등, 정치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대규모 군사충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에서 전쟁역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설명이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아 국가들은 현실주의적 설명이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일본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한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역사문제 및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일본의 역사문제 등에 대해 과도한 반응(overreaction)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영유권 및 역사갈등의 증가는 현실주의적 논리만으로는 해석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 갈등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연구하는 데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이나 현실주의적 접근이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 문제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국민국가로서의 이들의 정체성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민족주의이다.

우선, 동북아에서 경제·사회 협력의 확산효과가 약한 것은 교류와 접촉의 증가가 정체성의 충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동북아 국가에서는 냉전체제하에서 정상적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움직임과 만날 경우 신뢰와 이해의 증진보다는 불신과 적대감의 증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한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지역협력의 진전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혹은 안보공동체와 같은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기도 어렵다. 일부에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대결구도와 같은 신

냉전체제의 형성을 예상하기도 하나 민족주의 사이의 충돌은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라 지역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경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의 한족 진출은 양국 사이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해양세력 내에서도 한·일 사이의 민족주의적 갈등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구도를 구축하는 것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반도 통일과 같은 변수도 안정적인 세력균형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민족주의라는 요인이 유럽과 같은 지역질서의 모델이나 세력균형 질서와 같은 안정적인 지역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역내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 갈등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편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제기된 다양한 동북아/동아시아공동체론은 민족주의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나 사회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이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역협력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유럽식 통합모델을 동북아/동아시아공동체가 추구할 방향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동북아 현실이 민족주의, 특히 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 광범한 합의가 형성되었던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를 위협하는, 즉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균열을 초래하는 갈등은 자

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동북아 갈등 중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 것이 많다.<sup>4)</sup>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 문제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개별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원인이나 추세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민족주의가 지역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 내지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협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국가정체성과 같이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우에는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결국 갈등해결에 대해 비관적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북아 갈등이 모두 존재론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로 보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익, 국제정치적 변화 혹은 국내정치 및 국내갈등의 외부효과의 결과인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야기하는 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위해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면 이 갈등은 존재론적 차원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갈등보다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개별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등의 유형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

4) 존재론적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Brent J. Steele(2007),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lf-Identity and the IR State*, New York: Routledge 참조.

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족주의의 극복방안을 연구 목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여기서 극복은 민족주의 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거나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성(完整)한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정치이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가 동북아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진행될 때 ‘탈민족주의’와 ‘대결적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편향을 극복하고 ‘공존적 민족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내용은 동북아의 갈등요인, 민족주의의 강화와 갈등확산 메커니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존 동북아 갈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기초로 동북아 갈등의 목록과 각 갈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할 것이다. 사실 동북아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sup>5)</sup> 이 연구의 갈등사례에 대한 설명은 이들 연구에

5) 김승렬 외(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 배진수(2005), 「동북아 영토·역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NGO대안」, 『국제문제연구』 겨울 ; 배진수(2007), 「동북아 영유권 분쟁과 그 의미」, 동북아시아대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 손기섭(2005), 「고이즈미 내각기의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갈등사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갈등사안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갈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사례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동북아 갈등을 유형별로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가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드는 데 어떤 함의를 주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 강화와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영토문제, 일본의 역사문제를 제외한 다른 갈등사안은 대부분 탈냉전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갈등사안도 탈냉전기에 더욱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사안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의 강화와 연관된 현상이다.

문제는 동북아에서 단순히 민족주의를 비판하거나 탈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sup>6)</sup>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문제가 각국 내에서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시민과 같은 전망만으로는 민족주의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민족주의를 단순히 부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동북아 갈등의 확산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 어떤 내용과 방식의 민족주의가 동북아 갈등의 확산을 초래하는가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있어야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

---

중일 '72년체제'의 갈등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45(4) ; 송석원(2006), 「한일 역사주권 논쟁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문제연구』 봄 ; 유철중(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6) 임지현(2008),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와 탈민족적 상상력」, 비판사회학회 학술심포지움, '지구화 시대 탈국가적 상상력'(2008. 1. 11~12) ; 박용희(2008), 「분쟁'의 역사학에서 '공존'의 역사학으로」,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기초로 갈등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인, 해결의 난이도, 갈등의 강도라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갈등의 유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각 특징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부, 1.5트랙(track), 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과 각각의 역할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갈등의 해결을 위해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즉, 이 연구는 갈등요인, 민족주의, 대응방안 등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갈등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확산 메커니즘을 어떻게 관리하고 차단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갈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없으며 각각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어떻게 발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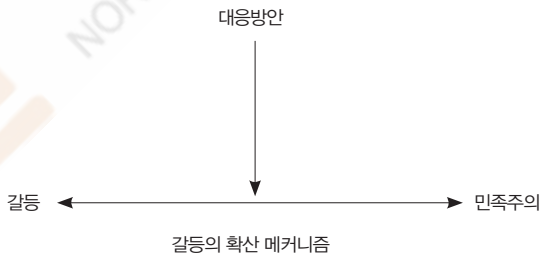


그림 1\_ 연구의 구성

## II. 동북아 3국 간 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 1. 갈등유형의 구분

일견 동북아 갈등은 대부분 민족주의적 충돌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그 해결방향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sup>7)</sup> 그러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동북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해결방안이 중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논의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일본의 우파들은 동북아/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미일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sup>8)</sup>

민족주의와 동북아 갈등의 관계를 단선적 인과관계로 보는 한 이러한 이상적 낙관주의와 현실적 비관주의 사이의 동요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족주의와 갈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주의의 강화가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단선적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원인에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민족주의와 갈등 사이에 상호작용도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민족

7) 임지현(2008), 앞의 글;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2004a),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신지역주의 선언』, 일조각; 강상중 저, 이경덕 역(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이파리.

8) 中西輝政(2004), 「保守に油断はないが」, 『諸君』 2004年 8月.

주의가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족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역으로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현실적인 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갈등을 원인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표 1).

첫째는 존재론(ontology)적 갈등이다. 이는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국민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북아 국가가 아직도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유형에 속하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영토와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목표와 지역질서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의

〈표 1〉 갈등유형 구분 I: 원인

갈등원인	주요 사례	갈등해결에 대한 시사점
존재론적 갈등	영유권갈등(영토 및 도서), 국민국가로서의 안정성 확보(타이완)	국민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움
국내정치외부의 외부 효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갈등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합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게임규칙 개발
경제적 이익충돌	해양경계	이익의 교환을 통한 해결추구
국제정치적 갈등	군비증강, 전략문제(핵, 군사협력 등)	국가 간 신뢰구축을 위한 안보협력을 통한 해결추구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둘째는 국내정치의 외부효과에 의한 갈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갈등은 대부분 정치세력들이 국내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한 결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수립과 관련된 문제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갈등 중 고대사와 관련된 갈등이나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문제는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의 충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세력에 의해 심각한 갈등요인, 정체성의 충돌문제로 진화되어 왔다. 이 경우 정치세력의 이익함수를 변화시키고 이들의 행위패턴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갈등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는 경제적 이익갈등이다. 무역마찰이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제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발전하고 있고 또 민족주의와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영유권문제 중 해양경계를 둘러싼 갈등은 영유권갈등에 속해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으로 간주되고 민족주의적 정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관련성이 더 강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갈등은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반드시 갈등당사자들의 입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규칙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

넷째는 국제정치적 갈등이다. 동북아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 힘의 균형의 논리에 따라 지역질서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였던 냉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체제가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북핵 문제, 중·미 및 중·일 사이의 경쟁에 따른 정치·군사적 갈

등 등이 힘의 균형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한 국가에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안보협력을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이 역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나 갈등의 강도를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그런데 갈등의 중요성과 강도가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의 유형분류만으로는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2절 이하에서는 위의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갈등사안의 등장과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각의 갈등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와 최근의 갈등증가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존재론적 갈등은 영유권갈등을, 국내정치적 외부효과는 역사갈등을, 경제적 이익충돌은 해양경계 문제를, 국제정치적 갈등은 동맹관계의 변화와 군비증강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 2. 영유권문제

### 1) 독도 및 동해표기 문제

우선 독도문제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한 뒤 한일의정서가 체결되고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전략적 차원에서 9월 1일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 망루를 각각 설치하고, 이어 9월 24일에는 일본군함 나타카호가 독도망루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를 떠났다. 그로부터 5일 뒤인 9월 29일 일본의 어업가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일본정부를 통해 '독도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는 참이었

으나 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케 가네유키(附付兼行)의 사주를 받아 결국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905년 1월 1일에는 일본군이 뤼순(旅順)을 함락시킴에 따라 러시아 발틱함 대와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1월 10일 내무대신은 총리대신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불과 2주일여 지난 1월 28일 일본내각은 전격적으로 독도편입을 결정하였고 뒤이어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침탈을 완료한 셈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반도 침탈양상은 동해의 명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그릇 알려진 배경에서도 나타난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인 1929년에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각국의 해로 안전 등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초판을 발간하였는데, 당시 일본에게 주권을 침탈당한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바다의 명칭이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되었던 것이다.<sup>9)</sup>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1952년 이래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 유지되었고 일본정부도 영유권에 대한 선언적 주장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이 문제가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8월 일본 외무성은 2005년도 외교중점 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로 내걸고,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해 호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대해 보여 온 일시적 문제제기와 현상외면의 태도와는 달리 일본이 독도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여론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 2월 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

9) 배진수(2007), 앞의 글.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전 주한 일본대사도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하였다.<sup>10)</sup>

이에 대해 한국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2005. 3. 23)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박한 외교전쟁’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2005. 10), 독도 인근에 측량조사선 파견을 추진하자(2006. 4),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문」(2006. 4. 25)을 통해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06년 9월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바뀐 이후 한·일 간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의제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3월 17일 도쿄(東京)에서 있었던 북방영토문제교육자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현재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오키나와(沖縄)와 북방영토에 국한해 업무를 담당하고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내각부 개편 시 영토담당대신이라고 하면 영토문제에 대해 통일된 대처가 가능하다”고 언

10) 송주명(2007),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구조적 갈등과 새 외교의 단초」, 『국제문제 연구』 겨울.

급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격렬한 갈등양상이 진정되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내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갈등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는 1895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 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으며, 1972년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협정의 결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관할에서 일본영토로 복귀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타이완은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일본에 양도한 것에 항의하였다.

중국 측은 이 지역은 1534년 중국이 처음 발견한 이래 중국의 고유영토로 청일전쟁 당시 시모노세키 평등조약(下關條約)에 의해 일본에 강제 할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자인 일본과 미국의 불법이양과 복귀를 통해 현재 일본관할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이 지역이 청일전쟁 당시 강제 할양된 것이 아니라 원래 무주지였던 것을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정식으로 오키나와현에 편입조치한 것이며 미국과의 이양 및 복귀절차도 적법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1972년 본격적인 영유권갈등으로 발전한 이후 주변의 조업문제, 일본 측의 등대 등의 설비 건설 그리고 중국 측 인사들의 상륙시도 등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3월에는 7명의 중국인이 이 섬에 상륙하고 일본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자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자국민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후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영유권을 확인하는 결의를 전원일치로 가결시켰다. 결국 일본은 7명을 강제퇴거 시켰으나 일본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역사상·국제법상 공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며, 중국정부도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합의해결을 주장하였다.<sup>11)</sup>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양측은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양자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오위다오수호운동인 ‘바오다오운동(保釣運動)’에 대해서 국내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려해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저지해 오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도 1978년 일본 방문 당시 주권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고 공동개발 등의 협력을 진행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영유권문제는 심각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고 현상유지라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다만 이 문제가 민감한 민족주의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1970년대부터 대륙 인사, 타이완 인사 그리고 화교들이 공동행동을 하는 대표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sup>13)</sup> 이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입장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들의 활동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열도 주변의 자원개발이 양자합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 추진될 경우에도 심각한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 3) 타이완 문제

타이완 문제는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이 각각 중국을

11) 손기섭(2005), 앞의 글.

12) 배진수(2007), 앞의 글.

13) 이 운동에 대해서는 홍콩의 保釣行動委員會([www.diaoyuisland.org](http://www.diaoyuisland.org)), 대륙의 中國民間保釣聯合會([www.cfdd.org.cn](http://www.cfdd.org.cn))의 활동을 참고.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갈등에서 타이완에 새로운 독립된 주권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둘러싼 갈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987년 타이완에서 계엄령이 해제되고 점진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출현한 변화이다.

1987년 장징궈(蔣經國)를 계승해 총통으로 선출된 리덩후이(李登輝)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은 계속 인정하고 대륙과의 협상을 추진하기도 하였다(1993년의 汪辜會談).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대륙에 대한 통치권 주장을 포기하고 중화민국을 타이완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우선 1991년 헌법개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란집단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륙에 대한 주권행사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총통직선제의 도입, 타이완성정부의 사실상 폐지로 타이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타이완의 중화민국(中華民國在臺灣)’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1993년 UN 복귀를 시도하고, 1995년 6월 개인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1999년에는 ‘양안관계는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1999. 7. 9)’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외교를 강화하였다.

2000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후보인 천수이벤(陳水扁)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다. 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한 이후 타이완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만드는 것을 주요 정치목표로 삼아 왔다. 1991년 10월 당강을 수정해 “독립적이고 주권자주적인 타이완공화국을 건립한다(建立獨立主權自主的臺灣共和國)”라는 이른바 독립강령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후 당내 온건파는 집권에 성공한 이후 독립을 선포할 이유도 없고 또한 선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독립강령을 완화시켰으나 이들이 독립을 지향하는 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천수이벤은 2000년 5월 총통취임연설에서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면, 본인은 임기 내에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국호를 변경

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지 않고,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일과 독립(統獨)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4불(四不)’을 주장하며 양안관계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쉐이벤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002년에는 양안관계를 ‘일국일변(一國一邊)’으로 규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백하게 거부하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취임연설에서 헌법개정을 두 번째 임기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 제정이라는 주장은 대륙에 의해 과거의 입법원에서의 헌법개정과는 달리 법적인 독립을 완성시키는(法理獨立) 움직임으로 간주되었으며 대륙은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대륙은 타이완, 특히 민진당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200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추진세력에 의한 분열행위, 타이완의 분열을 초래하는 중대사건 발생, 평화통일조건의 완전한 소멸 시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 비평화적 방식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를 위한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타이완 문제는 2008년 4월 선거에서 대륙과의 대화정책을 추구하는 국민당의 마잉지우(馬英九)가 당선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마잉지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거부하지 않는 대신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각자 다른 해석(중화인민공화국인지 아니면 중화민국인지)을 인정하자는 원칙을 내세웠다. 중국으로서는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타이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민진당의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잉지우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08년 4월 12일에는 타이완 부총통 당선자인 샤오완창(蕭萬長)이 보아오(博鰲) 포럼에 참석해 후진타오(胡錦濤)와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6월 11~14일 베

이징에서 대륙의 천윈린[陳雲林]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해협양안교류기금회 이사장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양안교류를 확대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양측은 7월 4일부터 직항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하루 3천명 중국인의 최장 10일간 타이완 관광이 가능하도록 합의하고, 양안의 수도인 베이징과 타이베이에 양측 신문사 특파원이 상주하고 1년 안에 양 기구의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정부 간 상시 대화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 천윈린이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항공교류, 해운교류, 우정교류, 식품안전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12월에 통상(通商), 통우(通郵), 통항(通航)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대삼통(大三通)’이 실현되었다.

이처럼 상황은 최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문제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다시 양안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남아 있다.

### 3. 역사문제

#### 1)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 내에서 일어난 역사교과서 왜곡시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955~1957년, 2기는 1979~1986년, 3기는 199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이다.

1기 : 1955년 자민당의 전신인 일본민주당은 총선에서 ‘자주헌법 제정’, ‘자위군 창설’, ‘국정교과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사회과 교과서에 편향적인 기술이 많다고 주장

하면서 기존의 검정합격교과서를 비방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1956년 문부성은 교과서조사관제도를 신설하고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검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57년 검정에서 일본의 침략기술을 문제로 삼아 소학교 교과서의 3분의 1,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을 불합격시켰다.

2기 :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국교를 정상화하고,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난징<sup>[南京]</sup>대학살 등 일본의 가해사실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자 우익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1982년 자민당은 가해나 침략을 기술한 교과서를 학교에서 추방하기 위해 ‘교과서 통제법안’의 상정을 시도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문부성도 검정과정에서 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바꿔 쓰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이 큰 파동을 일으키자 일본정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에 ‘근린조항’을 추가해 일단락되었다.

3기 : 1990년대 들어 조선 등 식민지 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해 성노예로 부리고 이에 군·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sup>[河野洋平]</sup> 관방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자민당 내 우익은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른바 4대 지침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자존·자위 전쟁이고 아시아해방전쟁이며, 난징대학살과 종군위안부는 날조되었으며, 최근 교과서는 있지도 않은 침략이나 가해를 쓰고 있어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국민의 공통의 인식, 상식으로 하기 위해 학자들이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6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종군위안부 기술이 일제히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익세력은 1996년 12월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발족

시켰고, 2001년에 자신들이 집필한 후소사(扶桑社) 판 중학교용 교과서 『최신 일본사』를 검정용으로 제출하였다. 이 교과서는 137곳의 수정요구를 받았고, 수정을 거처 출판하였으나 일본 내외의 반대운동으로 중학교에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갈등은 진정되었으나 우리 정부의 요청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역사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전례를 남겼다.<sup>14)</sup>

## 2)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야스쿠니신사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를 비롯,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 처형되거나 옥사한 전범 14명을 포함(1978년 비밀리에 합사했음)해 메이지유신 이후 전쟁에서 사망한 정부군 240만 명의 전사자를 위령하는 시설이다. 일본 내 우익은 1980년부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를 요구하였고, 1985년 8월 나가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이 신사를 공식 참배하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1996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사적 참배가 있었으나 2001년 4월 신임 고이즈미 총리가 총재선거과정에서 ‘8·15 참배’를 공약하고 이후 매년 공식 참배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고이즈미의 참배결행은 제2차 세계대전 및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전전 일본의 대외침략적 발전노선 전반을 긍정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정통 내셔널리즘의 역사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sup>15)</sup>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대안으로 ‘비종교 국립추도시설’이 합의되었고, 일본 관방장관의 자문기관에서도 그 필요

14) 조성렬(2004), 「일본의 과거사문제 인식평가와 외교적 대응방향」, 『국제문제연구』 봄.

15) 송주명(2007), 앞의 글.

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말 고이즈미는 “그 어떤 것도 야스쿠니를 대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추도시설 구상을 무산시켰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중국은 2001년 8월의 고이즈미 참배 이후 양국 간 정상교류를 중단하였고, 2005년에는 중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2005년 4월 초 중순에 걸쳐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도시 전역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발생하였고 그 강도와 규모는 중·일 양국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는 후진타오 주석 및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증지를 요구하였으며 반일시위 격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다가[町村信孝] 외상이 폭력시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보다 큰 근본원인은 일본의 역사문제로 일본정부가 역사인식, 야스쿠니, 교과서문제 등에서 중국인민 및 아시아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sup>16)</sup> 한국도 2005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서틀정상외교의 중단을 선언하였고 외교부 또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나아가 2006년 8월의 참배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2006년 9월 고이즈미의 뒤를 이은 아베 총리의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현재는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

16) 손기섭(2005), 앞의 글.

### 3) 중국 동북공정 문제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2002년부터 5년간 추진한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학술연구 프로젝트로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였다. 그 핵심 목적은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였던 민족과 역사는 모두 중국민족이고 중국사라는 관점에서 동북지역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이러한 변강공정을 실시한 하나의 이유는 중국 주변국가가 주장하는 역사논리, 즉 남북한의 ‘만주고대사=한국사’, 베트남의 ‘남월사=베트남사’, 중앙아시아 국가의 ‘서역사=중앙아시아사’, 몽골의 ‘원사=몽골사’ 등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중국의 역사적·민족적·국가적 정체성 확립이 곤란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 이유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중국 전역에 적용함으로써 중화민족 형성과 범주, 중화민족 영토의 성격과 영역, 중화민족 국가의 성격과 정체성 등에 대한 일관된 논리구조를 갖추려는 것이었다. 즉, 동북공정의 운영원칙으로 내세운 5대 의식<sup>17)</sup> 중 첫째가 정치의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동북공정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내용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사로 인정하였던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해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의 역사적 상관성을 차단하는 것에 있었다. 즉,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사=중국사’로 주장함으로써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

17) ①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의식, ② 동북변경에 대한 연구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적 시각과 세계 및 동북아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전국(全局)적 의식, ③ 국가, 인민, 역사에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 ④ 연구결과물을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품(精品)의식, ⑤ 자율과 성실의 원칙으로 연구하는 성실의식[馬大正(2003), 『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16쪽].

것이다.

이 문제는 2004년 7월 『인민일보(人民日報)』,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관영언론이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고 보도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양국 외교부 간 구두합의(2004. 8.)<sup>18)</sup>로 1차 파동이 일단락되었으나 2006년 9월 중국 측의 동북공정 연구과제의 내용 일부가 국내언론에 보도되면서 두 번째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강릉단오제의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무형문화유산등록(2005. 11)에 대한 일부 중국인의 불만, 2006년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의 백두산 세리머니, 우리 방송사의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등 역사물 제작 방영을 둘러싼 감정대립 등이 양국 우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제11차 5개년(2006~2010) 사업 계획’에서 변경안정 문제를 21세기 중대한 전략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동북지역 연구를 신장(新疆) 연구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 연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북공정과 관련해 역사와 지리 등 기초연구 외에,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동북지역에 미칠 영향 등 응용연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을 천명하였다. 중국이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및 정당성 문제를 고대사 등의 역사서술을 통해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 문제는 다시 갈등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sup>19)</sup>

18) 한·중 간 5개항의 구두양해사항 합의(2004. 8. 23) ① 중국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 ②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방지에 노력하고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에 노력, ③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문제화 방지, ④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⑤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한 해결.

#### 4) 일본의 헌법개정문제

1947년 제정된 현행 일본헌법은 전쟁포기 및 전력불보유, 교전권의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에 의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후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점령기에 미국이 강요한 헌법이란 측면에서 헌법제정 직후부터 헌법개정론이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자민당 창당 이래 자민당은 헌법개정을 당의 주요한 정책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여론 및 야당의 반대, 개헌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 실패,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의 부재 등의 문제로 자민당의 헌법개정 시도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까지의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헌법 전문의 정신인 평화국가 이념과 안보 및 방위 정책의 핵심인 헌법 제9조를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수정할 것인가가 개헌논의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국가’에서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1991년의 걸프전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활용해 온 해석 개헌을 넘어서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성립한 주변사태법(周邊事態法) 및 유사(有事)법제,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통한 동맹의 강화,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의 입법조치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1990년대 개헌논의의 급진전에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 이외에도 국내정치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냉전의 해체로 인한 보수세력의 약진과 진보세력의 퇴조, 경기침체와 민족주의적 성향의 강화 등의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도 헌법개정 논의의 급진전에 일조하였다. 결국 탈

---

19)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의 견해는 한국학자와 중국학자 사이의 토론을 요약한 박자영(2004), 「상호주의를 넘어서-어떤 동아시아론인가」, 『황해문화』 겨울 참조.

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일본사회의 총체적 보수화, 정치세력의 우경화는 일본정치의 '보수대연합'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국내외의 흐름 속에서 2000년 중·참 양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개헌론은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헌법조사회 활동을 통해 정리된 헌법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황제와 천황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조사회에서는 천황제의 존폐문제를 헌법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둘째, 헌법 제9조 및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헌법 제9조는 전쟁포기와 비무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9조에 대해 헌법조사회에서는 1항의 전쟁포기 이념을 향후에도 견지하여 평화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자위권과 자위대의 헌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위권의 행사나 자위대의 법적 통제에 대해서도 헌법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자위권의 행사로서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활동 참가문제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규정을 헌법 제9조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셋째, 헌법에 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의견과 관련 규정을 헌법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헌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고 긴급,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헌법조사회의 개헌논의를 정리하면 1990년대 중반 이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위해 헌법상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과 자위대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행동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헌법조사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표출되었다. 개헌을 위한 주요 절차로서 2007년 5월 국민투표법이 성립되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법이 발효되고 3년 안에는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0년이 되면 헌법개정이 가능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일본의 전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논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지만 향후 개헌논의가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이는 동북아에 심각한 갈등사안이 될 것이다.

#### 4. 경제적 이익의 충돌 : 해양경계문제

도서 영유권 문제가 아닌 해양경계문제가 민감한 갈등의제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1982년 채택된 결과이다. 이 법은 1994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이를 1996년 1월 비준하였다.

---

20) 전진호(2007), 「21세기 일본의 국가이념과 헌법조사회」, 『일본연구논총』 25집.

이 협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해양을 육지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접근으로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경제적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계확정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우선 도서를 포함한 육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선(baseline)으로부터 해양경계를 정하는 원칙 때문에 기존의 도서 영유권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더욱 첨예한 문제로 만들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을 영해 및 접속 수역(각각 기선으로부터 12해리와 24해리),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EEZs,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등으로 나누는 데 인접 국가 사이에 그 수역이 겹칠 경우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출현하게 된다.<sup>21)</sup>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신설된 제도로, 연안국의 영해 밖에 인접한 200해리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b)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과 탐사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c)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제55조, 제56조, 제57조).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은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문제(항해, 상공비행, 해저 케이블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제3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대륙붕의 존재도 해양경계와 관련된 논란을 복잡하게 만든다. 대륙붕은 연

---

21) Jean-Marc F. Blanchard(2003), "Maritime Issues in Asia : The problem of Adolescence," Muthiah Alagapa ed., *Asian Security Order :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433 ~ 434.

안국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외측까지의 해저 및 지하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자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륙붕의 범위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영해기 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인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설정하고,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0해리 또는 수심 2,6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해저지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

동북아의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해양경계문제가 갈등요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겹치는 것이다. 서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동해와 남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동중국해에서는 한·중·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친다. 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경우 중간선을 경계로 한다는 일반원칙이 있으나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중간선원칙에 대해 중국은 대륙과 섬이 같은 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고, 국가의 인구와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기계적인 중간선이 아닌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등의 경계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중간선원칙에 따른 동등한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국가에 귀속된다는 대륙붕조약(자연연장설)을 내세워 서해와 동중국해의 대부분의 대륙붕 지역이 중국에서 연장된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은 서해와 동중국해 방면으로 대륙붕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에게 유리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이 이론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한국은 1974년 일본과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해 중간선을 넘은 수역의 대륙붕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양보한 것은 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표된 이후 한·중·일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정 이전까지 임시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협정을 체결해 어업과 관련된 각국의 권리를 임시로 정하고 있다. 중일어업협정은 1997년 11월에,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에,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에 각각 체결되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갈등이 당장 표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원개발(유전·가스전의 탐사 및 개발 등)을 시도하는 것에 따른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북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석유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으로 한·중·일이 자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 동중국해의 해양경계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4년 5월 중국이 상하이 남동쪽 450km, 일본 오키나와에서 400km 떨어진 춘샤오[春曉] 가스유전에 대한 채굴시설 건립에 착수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일본정부는 2004년 7월부터 동 수역 주변의 지층구조를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3차원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중국해 중간선 부근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계속하는 중국에게 그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일본 민간기업이 신청한 시굴권을 인가하는 수속에 착수하였다.<sup>22)</sup> 이 지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는 아니지만 중간선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해저자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핑후[平湖]유전, 바자오팅[八角亭] 해저 가스전에 대한 중국의 개발이 문제가 되었다.

---

22) 손기섭(2005), 앞의 글.

서해에서는 1973년에 한국의 서해 대륙붕 2광구 개발에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이어도에 설치한 과학시설에 대해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어도를 도서로 인정하지 않는 양국의 합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곧 철회되었으나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어도가 중간선에서 한국 쪽에 있지만 아직은 경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정체성 문제와 깊이 관련된 도서 등의 영유권갈등과는 달리 자원개발 등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공동개발과 같은 해결방식이 시도되고 제안되고 있으며, 영유권갈등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008년 6월 중국과 일본정부는 동중국해 지역 천연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일 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도 공동개발 대상으로 하고 중국이 이미 단독 개발하는 춘샤오를 포함한 가스전 개발에 일본 측이 출자, 이에 근거하여 이익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뚫차오(斷橋)와 룡징(龍井) 등 가스전 주변 해역도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 쌍방 민간회사에 천연가스 채굴을 맡길 계획을 밝혔다.

물론 2009년 들어 위의 유전과 인접한 텐와이텐(天外天) 유전에 대한 중국의 개발에 일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경우 도서의 영유권분쟁의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5. 국제정치적 갈등

### 1)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정치·군사적 갈등

냉전 이후 동북아의 불안요인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국 사이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미·중, 중·일 관계가 이에 속하는 문제이다.

미중관계는 1990년대 이후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양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89년 톈안먼 사건과 소련의 해체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인권 등의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였다. 1998년 클린턴 미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성명을 통해 미중관계를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라고 선언하면서 양국관계는 1989년 톈안먼 사건의 그늘을 벗어나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듯 보였으나 2000년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부시는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라고 규정하였고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반테러 전선 구축이 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미중관계는 다시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양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양상은 다시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포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일동맹의 강화이다. 1990년대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미일동맹은 일시 그 미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재확립되고 아울러 ‘1997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수립으로 군사적 협력범위가 질적·양적으로 강화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는 부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고이즈미·부시에 의해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2월 19일의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는 양국이 추

〈표 2〉 미·일의 공통 전략목표

<b>지역의 전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li> <li>• 핵·탄도미사일·불법활동·일본인 납치 등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 평화적 해결추구</li> <li>• 세계 및 지역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의 환영, 중국과의 협력 관계의 발전</li> <li>•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li> <li>• 러시아의 건설적 관여의 촉진</li> <li>•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통한 러일관계의 완전 정상화</li> </ul>
<b>세계의 전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의 추진</li> <li>• 국제 평화협력활동 및 개발지원에서의 미일 파트너십 강화</li> <li>•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삭감과 불확산의 추진</li> <li>• 테러의 방지 및 근절</li> <li>• 일본의 UN안전보장상임이사회 진출 실현 및 안전보장상임이사회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추구</li> <li>•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li> </ul>

※ 출처 : 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2005. 2. 19)

구해야 할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 발표하였다.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 측에서 볼 때 동북아의 핵심적인 갈등요인인 중국과 타이완 문제가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문제 등이 공통의 전략목표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목적 아래 주일미군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중간 보고서 「미일동맹 :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완료될 경우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강화, 방공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기지 이전과 부담경감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를 추구하며 ‘동아시아 미일 공동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sup>23)</sup>

이러한 미일동맹의 강화는 중일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중국의 위협을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연결시키려는 동기에 따라 미일안보동맹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sup>24)</sup> 최근 중·일 간의 역사갈등, 일본의 UN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시도와 관련한 갈등이 고조된 배경에는 이러한 상호불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갈등이 당장 냉전시기와 같은 대립구도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호신뢰의 부족은 지역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불안요인은 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원인도 냉전체제의 붕괴가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이 영구분열책이라고 비판하였던 UN동시가입을 받아들였던 것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나아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으나 1992년 한중 수교로 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sup>25)</sup> 특히 미국과 남한은 북

23) 배정호(2006),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가을.

24) 강택구(2008), 「동아시아지역 내 강대국 간 경쟁과 세력전이 : 21세기 중국의 대일정책」, 『국제정치논총』 48(2).

25) 김일성은 한중 수교를 앞두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첸치첸(錢其琛) 당시 외교부장과의 만남에서 한중 수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발전을 조절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한중 수교가 장기적으로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감추지 않았고, 이후 북중관계도 냉각기로 들어섰다. 이 만남에 대해서는 첸의 회고록을

한의 붕괴가능성을 고려해 교차승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하였으나 합의가 실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북한은 결국 핵개발의 길로 나아갔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경우 해결에 근접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중관계, 미일관계의 불안정성과 한반도의 통일 등의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북아 국가 사이에 정치·군사적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동북아 내의 군비증강이다.

## 2) 동북아의 군사력 상황과 군비지출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군비증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4년 255억 달러, 2005년 299억 달러, 2006년 350억 달러로 증액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방부는 이런 중국정부의 공식적 수치는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령 「2006년 중국 군사력보고서」에서 2006년 중국의 실질방위비가 중국 공식 발표액보다 2~3배 많은 약 700억~10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국제전략연구소(ISS)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220억 달러에 달한다(표 3 참조).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 지출면에서 중국이 이미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2위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였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방현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연안해

---

참조[錢其琛(2003), 『外交十記』, 世界知識出版社, 157~160쪽].

〈표 3〉 한·중·일의 군사비 추이<sup>26)</sup>

(단위 : 10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12,7	11,9	13,1	14,6	16,5	20,3	23,7
중국	42,0	43,6	69,0	75,5	87,2	104,0	122,0
일본	45,3	40,5	39,2	42,8	45,2	43,9	41,1

※ 주 : 중국의 추정치는 발표군사비 항목 외의 지출을 군사비에 포함한 후에 구매력평가(PPP)를 적용

군에서 원양해군으로의 전환, 공군력 증강, 전략무기 증강 등으로 이어지는 군사분야 혁신작업을 대폭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현대화에서 특히 미국의 MD정책에 맞선 전략무기 개발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7)</sup> 중국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19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 9.5%를 훨씬 상회하는 연평균 16%의 ‘공식 국방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1~2005년간(2003년 제외) 세계 최대의 재래식 무기수입국이다. 이러한 군비증가율은 당장 분쟁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주변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비증강에 우려를 표명해 왔고 2005년도 방위백서에 ‘중국의 위협’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이러한 행위는 양국의 안전과 신뢰관계 조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의심과 대립감정을 조장하여 중일관계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일본은 GDP 1% 방위비 한계선(1985, 1986년 제외)을 지켜오고 있어 한국이나 중국 일각의 일본 군사대국화 주장과는 달리 되레 미국으로부터 ‘안보 무임승

26) Christopher Langton(2007), *The Military Balance(IISS)*, New York : Routledge.

27) 김재관(2006),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 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6(3).

28) 손기섭(2005), 앞의 글.

차'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오고 있다. 다만 근년 들어 일본은 전수방위의 평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방비 절대액은 오랫동안 높은 순위(2006년 411억 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해 주변국에 위협적인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을 가장 역설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률이 연 8.7%에 이를 정도로 국방에 대한 재정투자를 많이 하였다. 이는 중국, 일본 등의 군사비 추이와 비교할 때, 중국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낮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군비증액, 일본의 우경화와 MD체제 구축, F-22 전투기의 도입추진 등 동북아의 군비증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 관계의 재편 등이 군비증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동북아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군비증강이 과연 상대국을 위협으로 인식해서 추진되는 군비경쟁인지의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동북아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력의 투사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미국, 일본, 타이완이 연계되는 중국봉쇄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일 양국 차원에서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등을 둘러싼 영유권분쟁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상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일 양국의 군비증강이 서로에게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한반도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군비축소를 하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동북아의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6자회담이 성공하여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면 군비축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sup>29)</sup>

---

29) 배기찬(2008), 「동북아시아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1).

### III.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과 민족주의

#### 1.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강화 추세와 원인

한·중·일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여러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강화는 국가에 의해 먼저 촉진되었는데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愛國主義教育)’의 실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중국에서는 건국 이후 다양한 사상운동과 사상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사상운동은 대부분 사회주의적 이념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대에도 ‘자산계급자유화사상 반대’ 혹은 ‘정신오염의 제거’ 등의 기치 아래 서구식 자유주의나 개인적·물질적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사상운동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애국주의 교육은 이와는 달리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국제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를 대신하거나 보완해 국가정당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념적 원천으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지도이념이 개혁개방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사상’에서 최근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의 주요 사상, 과학발전론과 화해사회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sup>30)</sup>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틀을 정한 것은 덩샤오핑의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이다”라는 정의이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계획경제나 생산수단의 공유화라는 전통적 경제모형을 폐기하였고,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개혁과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는 중국에서 국가정당성의 강화를 위한 신념체계로서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는 경제적 실적이 악화될 경우 사회주의가 국가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중국에서 이념적 공백상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소련 사회주의 붕괴 과정에서 각 연방이 독립하면서 소련 자체가 해체된 것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문제를 갖고 있는 중국에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큰 신생국들이 출현하고, 범아랍주의가 확산되는 등 중국 내 이슬람 세력의 독립운동을 강화시킬 만한 환경이 출현하였다. 중국 내에서도 1989년 톈안문 사건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중국 티베트에서 대규모 시위와 유혈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민족문제에 대한 창조적 이론으로 제시된 것이 페이샤오통(費孝通)의 다원일체(多元一體) 중화민족론이다. 그는 “이 민족 실체에 귀속하는 각 민족은 모두 이미 고락, 존망, 영욕, 운명을 함께하는 감정과 도의로서 보다 높은 민족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 이론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sup>31)</sup> 이는 중화민족을 다양한 민족이 동태적 과정을 거치면서 융합되면서도 개성을 지닌 다원적 통일체로 정의하는 것이다.<sup>32)</sup>

30) 이남주(2005a),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론의 변화와 발전」, 『현대중국의 이해』, 나남.

31) 費孝通(2003),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修訂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32) 사카모토 히로키 저, 양일모·조경란 역(2008),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품

그리고 중국 교육부는 1993년부터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애국주의 교육(愛國主義教育)’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 5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애국주의 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발표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간부, 학생,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으로 발전시켰다. 그 내용은 반제국주의 투쟁, 사회주의 건설 투쟁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당성, 이를 주도한 중국공산당 및 이를 통해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애국주의 교육은 ‘국가 주도 민족주의(state-led nationalism)’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sup>33)</sup>

그런데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헨안먼 사건 이후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서구사회의 비판이 강해졌고, 1993년에는 ‘2000년 올림픽’ 유치전에서 베이징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패배하는 사건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귀 협상에서 미국 등이 높은 입장료를 요구함에 따라 실패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리고 1995~1996년에는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의 교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타이완을 향한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는 등 타이

경, 246~250쪽. 페이샤오통의 ‘다원일체중화민족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조경란(2006),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7(3); 안치영(2008), 「중국의 민족문제: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브리프』 3권 2호 참조.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데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애국주의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원일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중화민족이 중국을 구성하는 통합된 국민이라는 실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로 이러한 이념적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술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3) Suisheng Zhao(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중국인 내에서 중국의 국가적 존엄성이 서구의 부당한 공격과 간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6년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中國可以說不)』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표면화되었다.<sup>34)</sup>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식인 내에서는 중국이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서구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서구화에 비판적인 다양한 주장이 출현하고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특히 대중적 차원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다시 전환국면을 맞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처음으로 보여 준 것이 1995년 5월 미국 미사일에 의해 주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이 피격된 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였다. 이는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가장 격렬하고 규모가 큰 대중시위였다. 2005년 4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일시위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주도 민족주의와 구분하여 대중적 민족주의(popular nationalism)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대중적 민족주의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종종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정책 혹은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sup>35)</sup> 뿐만 아니라

34) 宋强·張藏藏·喬邊(1996), 『中國可以說不』, 中國工商聯合出版社.

35) Joseph Fewsmith and Stanley Rosen(2001),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 Does 'Public Opinion'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대중적 민족주의는 종종 정당한 항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배외적 감정의 표출과 과격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중국 내 민족주의 강화 추세는 이 양자 사이의 상승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국가 주도 민족주의와 대중적 민족주의 사이에는 상승작용도 있지만 동시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가로서는 대중적 민족주의가 결국은 국내 통치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전환되었던 중국 근현대사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대중적 민족주의의 활용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반일운동이나 서구의 티베트사태 비판에 대한 항의운동은 1980년대 대학생들의 반일시위를 봉쇄하였던 것과는 달리 대중이 분노를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행동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러한 대중적 운동이 중국정부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대중의 불만이 중국정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운동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정부도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대중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국가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빠른 경제성장도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전후에도 천황제를 유지하고,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통해 일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로 일본은 비록 상징적 위치로 물러나기는 하였지만 천황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은 그 대가로 교전권을 포기하고 오키나와 등 일부 영토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군사적 측면에서 국가성을 상실한 대신 ‘일본, 주식회사(Japan, Inc.)’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교전권 포기과 신증상주의 경제정책 등을 축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력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점차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전쟁책임론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공헌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대일정책의 변화도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나가소네 전 총리이다. 1982년 11월에 취임한 그는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고(1985. 8. 15), 전후 일본이 견지한 GNP의 1% 이내라는 방위비 상한선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냉전체제의 해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새로운 전환국면을 제공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시작된 냉전체제의 해체는 일본 내에서 우파적 국가주의의 확산을 견제하던 사회당의 정치적 기반을 붕괴시켰고, 일본의 정치지형을 급속하게 우경화시켰기 때문이다.<sup>36)</sup> 그 결과 일본 내에서는 ‘보통국가론’과 같이 평화헌법을 국가성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37)</sup> 특히 2001년 4월 고이즈미가 총리에 취임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 헌법개정 논의, 자위대 해외파병, 총리의 신사참배, UN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시도가 진행되었다.

36) 권혁태(2005), 「일본의 헌법개정과 한일관계의 비대칭성」, 『창작과비평』 가을.

37) 와다 하루키 저, 이원택 역(2004a), 앞의 책.

전쟁이 종식된 지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일본이 패전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국가정체성을 전후 경제발전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전후의 긍정적인 성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위협요인을 과장하는 것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사실 일본 내 민족주의에는 매우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며 이들 사이에 마찰도 존재한다.<sup>38)</sup> 그러나 문제는 일본 내 민족주의의 강화과정에서 극우파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경향이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극우파가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일종의 우산역할을 해 준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최근 일본 여론에서 개헌론이 호헌론보다 우세하다. 여기에는 자위대의 존재와 전쟁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고 미국의 개입하에 만들어진 헌법을 전후 6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헌법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헌법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론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헌법개정론자들은 국민들의 개헌론에 대한 지지를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와 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 보면 일정한 정당성을 갖는 냉전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내용적으로는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38) Chung-In Moon and Seung-won Suh(2008), pp. 198~203.

한국의 민족주의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의해 확산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체제 시기부터 민주화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사이의 상승작용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민주주의적 요구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저항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는 민족주의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에너지를 동원하는 데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임지현은 한국에서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가주의라는 형식은 민족주의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대신 반공이념이 그 공백을 메웠다. 민족주의적 요구는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하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던 이승만과 달리 박정희는 한국과 일본을 반공전선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대가로 권력에 대한 승인을 받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한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유신 후반기 미군철수와 인권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5공화국까지 미국을 축으로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간접적 삼각동맹 구조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는 한국 내 민족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한일협상반대운동,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저항 등은 모두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이 되었다.

즉,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운동은 반일 민족주의나 통일지향 민족주의로부

터 상당한 동력을 제공받았고, 민주화운동의 발전은 다시 민족주의적 운동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 요구, 민족통일과 같이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억압되었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냉전체제의 해체는 민족주의적 요구에 대한 이념적 제약을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적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반미, 반일, 통일과 같은 전통적인 의제 이외에 새로운 의제가 추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간도와 백두산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와 반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종종 주변국가의 의도와 실력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대국주의적 지향 등이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중국이나 일본만큼 주도적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나 정치세력이 아래로부터 확산되는 민족주의를 이용하거나 민족주의적 경향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확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최근 동북아에서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는 냉전구도에서 제약을 당하였던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정체성을 추구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현상이다. 여기서 이 지역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 내에서 민족주의적 요구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정당성을 갖는다.<sup>39)</sup> 그런데 많은 논자가 동시에 지적하는 것처럼 민족주의는 ‘건강

39) 김명섭(2007. 5. 30), 「국가(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 방안」, 동북아시아대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 강정인(2007),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동북아시아대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 이남주(2005b),

한 국가정체성의 구성이라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공간을 벗어나려는 강력한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가 개인적 속성보다는 집단적 속성을 우선시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치보다는 혈통, 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관계를 규정하여 민족 간의 갈등이나 다른 정체성을 억압하려는 행동을 초래한다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sup>40)</sup> 실제로 동북아 국가 내에서 민족주의 강화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착종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는 민족주의적 과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통제해야 하는 모순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논리적 차원에서는 명확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무비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초래할 위험은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고 민족주의적 동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처방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대한 추상적 논쟁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동북아 국가가 서로 긍정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국민국가로서의 완성성(完整性)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이 추구하는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성성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동

---

「동아시아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40) 임지현(2001), 『이념의 속살』, 삼인.

북지방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러한 목표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공정이 이러한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 된다면 이 논쟁이 민족주의 사이의 충돌을 촉발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헌법 제9조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요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둘째, 정부 혹은 민간 차원의 대화를 통해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공자 출생지와 관련된 논란과 같이 사소하지만 국민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상호정체성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까지 여러 의제가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부 차원에서 공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논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불신에 입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분명한 근거와 상대방의 행위가 대외적으로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 발전적 대화가 가능하다. 즉,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의가 빠지기 쉬운 정서적 요인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혼동을 방지할 때 생산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가 동북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 2.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상호작용

민족주의와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과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 강화추세는 갈등요인을 증가시킨다. 다음 표 4는 ‘II. 동북아 3국 간 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의 내용을 토대로 1990년대 이후 동북아 내 주요 갈등사안을 출현 시기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동북아에서 민족주의적 갈등목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되는 갈등요인을 보면 대부분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의제이다.

〈표 4〉 갈등의 증가추세

	1989년 이전	1990~ 1995	1996~ 2000	2001~2005	2006~2008
존재론적 갈등 (영토갈등)	• 독도 • 센카쿠 열도 (다오위다오)		타이완	간도/백두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국내정치외부효과 (역사갈등)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 정치인 망언		일본 역사교과서 (국민의 역사)	• 일본 역사교과서 • 동북공정 • 일본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 일본헌법개정	• 동북공정 • 세계문화유산 등재 •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관련 폭력사태
경제적 이익 갈등			해양경계	춘샤오유전	• 이어도 • 동중국해 유전· 가스 개발
국제정치적 갈등			미일 안보 동맹	• 자위대 해외파병 • 일본의 UN안보리상임 이사국 진출 시도 • WMD • 중국의 군비증강	

사실 새로운 국가정체성 모색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동북아에서는 근대화와 동시에 국민국가 사이에 안정적인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들 사이의 많은 문제는 냉전체제하에서 해결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국민국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도,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와 같은 영토문제가 다시 민감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한 타이완 문제, 한반도 통일,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 제고와 같은 문제가 대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성을 고려해 새로운 협력의 틀 내에서 점진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제 이외에도 다른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이웃국가를 자극하는 행위나 다른 국가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으로부터 강한 민족주의적 반발을 초래하였고 지금까지도 양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지도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와 전쟁미화 발언, 주변국가의 동의 없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것도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주변 강대국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 및 현 동북아질서에 수용되기 어려운 대국주의적 열망의 표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원인제공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국들도 이에 과도하게 반응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중·일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 국가(adolescence state)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sup>41)</sup> 때문에 정

체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에 대한 외부의 영향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쉽다. 그리고 이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기존의 갈등요인을 더욱 강도 높은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억제될 수 있는 의제도 갈등요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는 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냉전시기에는 갈등이 주로 정부 간 혹은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 발생하고 이들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런데 탈냉전시기에는 갈등행위에 대중의 직접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와 결합된 양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민족주의적 요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독도,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등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직접개입 사례만 보아도 다음과 같다.<sup>42)</sup>

- 1996년 7월 14일 일본 우익단체의 등대 설치
- 1997년 5월 26일 홍콩과 타이완 시위대 200여 명을 태운 선박 28척의 상륙 시도
- 1998년 6월 24일 홍콩의 항의단체 회원이 탄 100톤급 선박이 일본 방위청 소속 함정의 저지로 충돌하여 침몰
- 2000년 5월 일본 우익민족주의자들의 상륙
- 2004년 1월 중국의 민간단체의 상륙 시도

---

41) Jean-Marc F. Blanchard(2003), pp. 433~434.

42) 배진수(2007), 앞의 글.

그리고 독도의 경우도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한국의 민간조직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중국의 반일시위도 중국에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영역에서 민간부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각국 정부에 점차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른바 뉴미디어의 역할이다. 뉴미디어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뉴미디어의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은 한·중·일의 젊은 세대 사이의 소통공간이 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무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3)</sup>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민족주의적 정서를 표출하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거의 걸러지지 않고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통적 언론매체도 이러한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의식해 민족주의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공격적 성향에 영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는 공격적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매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셋째, 민족주의는 상호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갈등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민족주의의 충돌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중·일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들은 1980년대 중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감정(70%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51% 대 45%로

---

43)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비우호적 감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우호적 감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넘어섰다.<sup>44)</sup> 그리고 2005년 한 조사에서는 일본인 중 32.4%만이 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sup>45)</sup> 2002년 중국사회과학원과 아사히 신문 등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중 일본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3.3%에 달하였다.<sup>46)</sup>

2008년 10월 실시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사에서도 한중관계가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라는 답이 59.9%로 2007년 34.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 응답자 가운데에는 16.6%만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답하였다.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의 비율도 2007년의 67.7%에서 2008년 76.8%로 상승하였다. 일본인 중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34.4%에서 45.6%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중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65.2%에서 37.4%로 감소하였으나 일본인 중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66.0%에서 75.8%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상호인식에서 국가 사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한·중 사이에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중·일 사이에는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상대

44) Michael Yahuda(2006).

45) *China Daily*(2005. 12. 26).

46) Dexiang Gao(2007), “China’s Political Communication on Sino-Japanese Relations : Memory, Chosen Traumas and Reconcili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Classical Chinese Garden*, Portland, Oregon USA([http://www.allacademic.com/meta/p204548\\_index.html](http://www.allacademic.com/meta/p204548_index.html)).

방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일 사이에도 역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강대국에 대해 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그러나 동북아에서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가전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태도이다.

또한 청년 세대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의 해결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이들은 앞선 세대와는 달리 현재 자신의 국가 주권과 자주권에 제약이 가해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혹은 냉전체제라는 역사적 유산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선 세대의 경우 전쟁과 같은 격렬한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 지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였으나 청년층의 경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 네트워크의 영향하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후 세대 그리고 물질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구성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세대 내에서 증가하는 민족주의 열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대중적 차원에서의 민족주의적 충돌이 정치 엘리트 사이의 충돌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적 경향은 갈등행위를 증가시키고, 갈등관리를 어렵게 만들며, 갈등해결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동북아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 각 수준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47) Chung-In Moon and Seung-won Suh(2008).

### 3. 각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및 문제점

동북아 내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갈등 사이의 상승 작용이 출현하자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로 악화일로를 치닫던 양자관계가 외교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자 2005년 아베가 총리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쳐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0월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일본방문, 2007년 12월의 후쿠다 총리의 중국방문이 각각 ‘얼음을 깨는 여행(破冰之旅)’, ‘얼음을 녹이는 여행(融冰之旅)’, ‘봄날의 여행(春天之旅)’ 등으로 불릴 정도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의 열망은 강하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고 중·일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사이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진행되어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한일서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중도 2008년 5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주의의 강화와 갈등확대 메커니즘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민족주의 사이의 충돌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각국 정부나 정치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는 대중적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경우에 따라 배외적 경향을 갖는 데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민족주의의

주된 동력이 정부 및 정치지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어떤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로부터 민족주의적 요구가 높아질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구분 없이 이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부도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막을 만한 분명한 대응방침은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를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 이를 방지하는 외교적 노력에 나서고는 있으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물론 한·중·일 정부가 동아시아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11월 'ASEAN+3'의 정상회담에서 위임받은 연구그룹이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 평화·번영·진보의 지역」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대동아공영권의 역사적 부채로 지역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을 축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던 일본, 역시 한미동맹 이외에 다른 외교적 지렛대를 갖지 못한 한국 그리고 주권안전을 외교정책의 절대명제로 삼아 온 중국이 지역공동체 논의에 참여한 것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sup>48)</sup>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아 갈등의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48) 일본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해서는 東アジア共同體評議會(2005), 『政策報告書 東アジア共同體の現状』, 背景と日本の國家戰略(2005年 8月) ([http://www.ceac.jp/j/pdf/policy\\_report.pdf](http://www.ceac.jp/j/pdf/policy_report.pdf)),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陳喬之 主編(2002), 『東亞區域經濟合作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 우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북아 갈등과 관련된 의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논의는 양자관계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은 ASEAN을 매개로 동아시아 협력에 참여하고 있고 한·중·일 사이의 협력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sup>49)</sup>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 각국은 지역주의를 진지하게 추구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만 참여하는 회의를 주장하였고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와 관련한 논란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ASEAN+3이라는 틀 내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모두 ASEAN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무대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갖는 문제점을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 시민사회 협력의 발전 양상이 이러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sup>50)</sup> 그러나 민간부문의 협력이 민족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동북아에서 시민사회 발전이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협력수준이 높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협력이 각 나라의 민족주의적 경향의 강화와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 역사교과서 작업이 중요한

49) 와다 하루키는 이러한 상황이 출현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일본에게 있다고 설명한다 [와다 하루키(2005),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역사문제」, 『창작과비평』 봄].

50) 백지운(2005),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민간연대'의 역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에는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 민족주의 문제를 우회하거나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 IV. 동북아 갈등 및 민족주의 대응방안

### 1. 동북아 갈등에 대한 종합평가와 갈등해결의 방향

‘II. 동북아 3국 간 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에서 갈등유형을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바 있다. ‘III.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과 민족주의’에서는 최근 동북아에서 갈등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논의를 기초로 원인, 난이도, 강도 세 가지 차원을 종합해 갈등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등해결의 난이도는 고·중·저로 구분하였다. 난이도가 ‘고’인 것은 국가가 갈등의 주요 주체가 되고 이들 사이의 요구가 양립불가능한 경우이다.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이 이에 속한다. 난이도가 ‘중’인 것은 위의 두 조건 중 하나가 결여된 경우이다. 즉, 갈등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거나 국가 사이의 갈등이라도 양측의 요구가 반드시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갈등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즉 민간이 주도하는 갈등의 경우에 국가가 이들 갈등 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의 난이도는 앞의 경우보다 낮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양측의 요구가 양

립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이 양립불가능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상대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같은 인식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상호인식의 변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역시 갈등해결의 난이도가 낮다. 난이도가 '저'인 것은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양측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다. 주로 경제적 영역의 갈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안보협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적 문제와 같이 국가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정치(high politic)에 속하는 문제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의 난이도를 중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갈등상황(conflict situation)이 갈등행위(conflict behavior)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분석에서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양립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갈등행위는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그러한 목표를 포기시키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sup>51)</sup> 갈등상황이 갈등행위로 전환되는 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족주의의 강화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갈등강도는 강·중·약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갈등강도가 '강'이라는 것은 갈등행위에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중'은 갈등행위에 주로 정부 차원의 항의(대사소환, 항의성명 등)와 같은 외교적·정치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약'은 갈등행위에 정부 차원의 자원이 직접 동원되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 역할(반대집회,

---

51) Jianwei Wang(2003), "Territorial Disputes and Asian Security-Source, Management and Prospects," Alagapa, Muthiah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표 5〉 갈등유형 구분 II : 난이도와 강도

갈등원인	갈등	갈등해결의 난이도	갈등강도
존재론적 갈등	독도	고	강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고	중
	북방도서	고	중
	타이완	고	강-중
국내정치의 외부효과	동해표기	중	중-약
	동북공정	중	중
	간도/백두산 문제	저	약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	중
	평화헌법	중	중
경제적 이익 갈등	인권문제	중	약
	춘샤오유전	저	중
	배타적 경제수역	중	중
국제정치적 갈등	북핵문제	고	강
	군비증강	고	중
	자위대 해외파병	고	중

불매운동 등)을 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갈등유형 구분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유형의 구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모든 갈등이 해결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중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사안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일단 갈등사안이 이 수준으로 발전하면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해결이 어렵다.

유럽에서 영토갈등 등의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국가 주권 내의 권한을 공동체로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국가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에서는 'III. 동북아 갈등의 확대 메커니즘과 민족주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모

든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방식의 문제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시아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은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갈등이 표면적으로 민족주의적 경향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존재론적 갈등으로 간주하는 편향도 피해야 한다. 즉, 현재 많은 동북아 갈등은 국민국가적 정체성 구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익의 조정, 신뢰의 증진 등의 방식을 통해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 즉 국민국가적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갈등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동북아의 갈등과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럽식 공동체 구상이 동북아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재 동북아에 존재하는 갈등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접근이 아니며, 동시에 모든 갈등사안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갈등 사이에 존재하는 성격 차이가 갈등해결에 제공하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표 5의 분류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해 갈등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찾고 일부 갈등의 경우 해결가능성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정부와 민간 모두 민족주의가 갈등의 확대재생산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 즉 갈등이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갈등해결의 난이도나 갈등강도가 모두 낮은 수준의 문제는 갈등해결이나 갈등예방을 시도할 수 있으며, 양자가 모두 높은 경우는 갈등해결보다는 관리에

〈표 6〉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의 분류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	갈등예방	갈등해결	현상유지	갈등관리
갈등사안	동북공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의 헌법개정 인권문제	춘샤오유진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동해표기	센카쿠 열도(다오위 다오) 북방도서 타이완	독도 북핵문제 군비증강 자위대 해외파병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갈등해결, 갈등예방, 현상유지, 갈등관리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갈등해결이 가능한 것은 주로 경제적 이익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의 경우는 이익의 교환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민감한 갈등사안 중에서는 한·일 사이의 동해표기 문제가 해결을 시도해 볼 만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2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다층적 접근’을 활용할 경우 동해와 일본해와 같이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명칭보다 중립적이고 양측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명칭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갈등예방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국내정치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이들 경우는 대부분 이익만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와 같은 정서적·인식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이에 속하는 갈등상황의 출현이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북공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국가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에 합의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다소의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그러려면 정치지도자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리고 민간부문에서의 협력도 갈등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이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갈등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의 경우에는 중국은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지만 당장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강도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 북방도서, 타이완 문제도 현재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갈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상유지만으로도 지역협력과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갈등강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갈등행위의 수준을 관리하는 것, 특히 갈등강도를 중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북핵, 독도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 2. 갈등문제에 대한 다층적 접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아 갈등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민족주의 강화추세가 계속 국가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 한반도는 국가규모의 차이, 분단 상황 등의 요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동북아 내의 다른 국가에 경쟁의식을 초래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내 협력을 증가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더 넓다.

그런데 동북아 갈등의 원인과 이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우선 국가 간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존재론적 차원과 관련된 문제, 정치적 파급력이 큰 문제의 경우에는 주권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유권자의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으나 그 역량이 동북아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단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1.5트랙은 정부와 민간이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각 뚜렷한 한계가 있는 동북아에서 양자의 한계를 보완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유력한 통로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지원이 있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 1) 정부 차원의 대응

갈등은 정부 차원의 갈등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과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우선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제의 난이도가 중간 이하인 것을 해결할 문제로 설정해 정부 차원의 공동 T/F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양경계 확정 문제는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최종적 해결을 하거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먼저 공동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성과를 기초로 최종적 해결을 모색한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동해표기 문제도

상대방의 양보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향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 국가에서는 모든 정부가 민족주의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민족주의적 정서와 밀접하게 연결된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대내적으로 민족주의적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다. 더라도 이것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역협력의 진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미완의 근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현대적 국민국가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에게는 통일, 중국에게는 타이완, 일본의 경우는 전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헌법개정 요구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과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민족주의적 과제가 다른 국가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부정하거나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이 지역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갈등의 해결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대내적으로 동북아/동아시아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국가 사이의 인적·경제적 교류의 규모만 보아도 전통적인 국가 간 관계만으로는 동북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지역적 정체성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의식과 민족주의적 정서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역내 갈등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갈등은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으로 전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공동체가 유럽공동체처럼 당장 국민국가의 핵심적인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넘긴다거나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폐쇄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공동체 의식과 민족주의적 정서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만약 정부가 국민국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 않게 동북아시아공동체, 세계시민과 같은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면 동북아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갈등해결의 난이도와 갈등강도가 모두 높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갈등이 군사적 갈등의 수준으로 진전된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도 진행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적대의식을 해소하는 것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도, 타이완, 북핵문제 등이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갈등해결은 어렵지만 적어도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 같은 대응원칙에 대한 합의는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문제에서 적극적인 돌파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을 목표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동북아 협력의 전체적인 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북방도서 문제로 4개 중 2개 섬 반환과 같은 절충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 특히 영

유권 갈등해결의 난이도와 갈등강도를 낮추는 효과도 낳을 것이다.

다섯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위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선언’을 채택하고 여기에 상징적 갈등사안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각국의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동북아시아공동체 의식의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는다면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동북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2) 1.5트랙의 활성화

동북아의 많은 갈등이 정부 차원의 문제와 민간 차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5트랙의 활성화는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는 동해표기와 같은 해결가능한 갈등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존재론적 갈등관리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우며, 그렇다고 민간부문에서 의미 있는 대응방안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1.5트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동북아 차원의 협력에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존재하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1.5트랙의 지역협력기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 이러한 트랙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참가자 사이의 신뢰가 증진되기보다는 상대방을 정

부나 민간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정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1.5트랙을 활성화하려면 단기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의 민간 차원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활동규범을 명확하게 한 기초 위에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활성화해야 한다. 갈등현안에 따라, 또 갈등영역(역사, 영유권, 정치, 외교안보 등)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의 정책담당자와 학자, 기자, NGO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해 장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영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한·중·일 3국의 인사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역외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인맥에 따른 정책협의에서 정책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차원의 정책공동체는 난이도가 중급 이상인 문제에서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는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 간의 학술교류,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도한 전략대화 등은 매우 소중한 경험인데 이러한 경험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하고 이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3’에서 운영하고 있는 1.5트랙을 동북아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EAF(East Asian Forum)가 대표적이며, NEAS(Network of East Asian Studies)와 NEAT(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도 1.5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ASEAN+3’을 매개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독자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듯이 이 공간을 활용해 동북아 국가 간 1.5트랙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후 독립적 활동의 틀을 만들어 가는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 3) 민간 차원의 교류증진

동북아 갈등이 정부에 의해 촉발될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활동의 의해서도 촉발되고 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즉, 민간부문은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악순환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다른 차원의 접근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존재론적 안보의제를 축소시키고 지역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크게 경제계, NGO, 언론계, 문화학술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제계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각종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면에서의 협력과 통합의 진전이 동북아의 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동아시아 역내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 나아가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제계도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보다는 지역 내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둘째, NGO는 국민의 ‘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와는 달리 보편적 가치와 진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갈등해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영토, 역사분쟁 해결에서의 NGO대안<sup>52)</sup>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간 NGO의 성격이나 발전수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중국이 NGO를 일종의 체제전복 역량으로 보는 한 이러한 협력은 어

---

52) 배진수(2005), 앞의 글; 배진수(2007), 앞의 글.

럽다. 따라서 개발, 빈곤, 사회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 NGO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역내에서 NGO 협력과 관련된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로 전쟁, 식민지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미래비전을 만들어 가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의 문화 혹은 역사 유산을 발견하고, 역내 협력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교재의 작성,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과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급속하고 거대한 정보화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갈등요인은 더욱 증폭되고 이것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언론이 상업적 필요에 따라 민족주의를 활용할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민간 차원의 협의제도 가동시켜야 한다.

넷째, 문화학술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럽통합에서도 각종 문화학술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듯이 동북아의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화학술적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각종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지식공동체, 나아가 상상과 비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현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지나치게 정부가 앞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류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원은 지원하되 교류 등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3. 코리아 이니셔티브

한국은 동북아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객관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 유리한 입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 국가 중 동북아 협력, 동아시아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기초 위에서 앞으로도 계속 동북아/동아시아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의 고민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장애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한반도 차원에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아래에서는 한국이 앞장서는 것이지만 동북아 협력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아래 구체적이고 당장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안을 정리하였다.

#### 1) 역사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 : 협력과 교류의 역사로서의 동북아 역사를 발굴하고 확산시키자

한반도는 제국적 질서를 형성한 중국과 제국질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일본에 의해 역사적 협공을 당해 왔다. 중국에 의해서는 대륙방면(북)에서, 일본에 의해서는 해양방면(남)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고, 이것은 고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결구도하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실현되기는 어려우므로 동북아/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당장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인식적 기초를 강화하는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역사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막고 “한·중·일 3국을 함께 묶어 역사인식을 함께하는 계기, 즉 미래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인식의 토대”, 즉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sup>53)</sup> 가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역사문제에 약자의식이나 피해자의식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와 교류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즉, 최근까지 역사문제와 관련된 교류는 이미 갈등으로 부상한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화해의 역사를 여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역사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교류의 역사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청년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미래의 동북아 협력의 주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 2) 영유권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 : 동해표기 문제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 동북아/환동해 협력면을 강화하자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는 현재 문제가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

53) 백영서(2005),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백영서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제제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수준은 ‘관리 차원’에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문제이다. 브레진스키가 평가한 바와 같이 일본이 중국의 급부상과 지역강대국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고려할 때 한국이 결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고 일본과는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면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한 ‘각박한 외교전쟁’을 불사할 것이다.<sup>54)</sup> 그러나 한·일 간의 협력,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협력에 의해 동해가 한·일 간의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바뀔 수 있다는 비전이 있다면 ‘현재를 위한 각박한 외교전쟁’은 ‘후대를 위한 갈등관리’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영유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환동해 협력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3) 정치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 : ‘동북아 지역선언’ 주도

일본의 헌법개정, 중국의 민족(통합)문제, 북한문제 및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미뤄져 온 과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동북아

---

54) 브레진스키 저, 김명섭 역(2004), 『거대한 체스판』, 삼인.

국가 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헌법개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간다면, 중국이 내부통합을 위한 조치가 주변국의 이익과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문제의 해결이 새로운 대국주의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갈등의 출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각국이 위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인류보편의 원칙과 선린우호의 차원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즉,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각국이 국내의 정치, 역사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은 적절한 시점(예를 들면 남북관계의 변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는 시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차원의 지역선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을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원칙에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동북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지역협력력이 제도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러한 선언이 채택될 수 있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민간 혹은 1.5 트랙 차원에서 이러한 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 4) 외교안보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연계

역사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안보문제에서도 한국은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갈등에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핵문제 등 북한문제로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한

반도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 그리고 동북아평화안보를 위한 6자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5년 9·19공동선언에서 합의하였고, 중국과 미국, 일본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 형성에서 우리는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과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발원지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한국외교가 대륙과 해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의 교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대체재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 양자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보완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이 동북아/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우리 스스로가 민족주의라는 좁은 틀을 벗어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지역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중국, 일본 등의 다른 역내 국가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한국/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동북아 협력을 촉진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해 갈 수 있다.

## V.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영유권갈등, 역사갈등 등 동북아의 여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북아의 갈등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이나 현실주의적 접근은 많은 한계가 있다. 자유주의적 접근은 동북아 내에서 경제협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실주의적 접근은 갈등의 증가추세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역내 국가가 힘의 균형 논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예를 들면 힘의 균형을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갈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이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중에서도 민족주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동북아 갈등 중에는 존재론적 안보와 연결된 갈등, 즉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이에 균열을 초래하는 갈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는 동북아의 현실이 민족주의, 특히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었던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 동북아 갈등이 모두 존재론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차원의 갈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민

족주의 혹은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로 보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익, 국제정치적 변화 혹은 국내정치 및 국내갈등의 외부효과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보다는 해결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분은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 갈등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위의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동북아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비롯된다. 최근 동북아에서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는 냉전구도에서 정상적 발전을 제약받았던 자주적인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별 국가 내에서 민족주의적 요구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건강한’ 국가정체성의 구성이라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공간을 벗어나려는 강력한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민족주의가 개인적 속성보다는 집단적 속성을 우선시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치보다는 혈통, 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관계를 규정하여 민족 간의 갈등이나 다른 정체성을 억압하려는 행동을 초래한다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세력이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자신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확대된다. 동북아 국가 내에서 민족주의 강화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착종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는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를 인정하고 고무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를 통제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즉,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는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고, 국민국가적 정체성 확립이 주요 과제인 상황에서 유럽식 통합모델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가 서로 긍정적 가치

를 발전시키고 평화적으로 국민국가로서의 완성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 국가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지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존재론적 차원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비존재론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 갈등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갈등유형을 갈등해결의 난이도와 갈등강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5 참조). 이러한 유형의 구분에 기초해서 그의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갈등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주로 경제적 이익충돌에서 비롯된 문제가 이에 속한다. 경제적 문제의 경우는 이익의 교환을 통해 타협점을 찾거나 양측의 이익을 같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 사이에는 동해표기 문제의 경우도 해결을 시도해 볼 만하다.

둘째, 갈등예방에 주력해야 할 경우이다. 주로 국내정치의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갈등들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들은 단순히 이익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와 같은 정서적, 인식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갈등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현상유지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이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갈등은 중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갈등의 강도가 높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현상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갈등의 강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갈등행위의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북핵문제, 독도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 글은 갈등해결에 대한 다층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존재론적 차원과 관련된 문제, 정치적 파급력이 큰 문제의 경우 주권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유권자의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 주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덜 받으며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역량이 동북아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차이도 크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 1.5트랙은 정부와 민간이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각 뚜렷한 한계가 있는 동북아에서 양자의 한계를 보완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유력한 통로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장기적 지원이 있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정부, 민간 그리고 1.5트랙을 통한 다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한국은 동북아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객관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 국가 중 동북아 협력, 동아시아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 동북아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이 앞장서되 동북아 협력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적극적 역할과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 제안을 제출하였다.

역사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는 역사문제에 약자의식이나 피해자의식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와 교류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는 일본과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환동해 협력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중단기적으로는 동해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이다.

정치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는 현재 민족주의가 동북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와 관련한 동북아 차원에 지역선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동북아 갈등과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다.

외교안보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는 무엇보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분단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지역협력의 주요 촉진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대륙과 해양의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외교적 대전략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참고문헌

〈국문〉

- 강상중 저, 이정덕 역(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이파리.
- 강정인(2007),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동북아시아위원회  
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 강택구(2008), 「동아시아지역 내 강대국 간 경쟁과 세력전이 : 21세기 중국의 대일정  
책」, 『국제정치논총』 48(2).
- 권혁태(2005), 「일본의 헌법개정과 한일관계의 비대칭성」, 『창작과비평』 가을.
- 김명섭(2007. 5. 30), 「국가(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 방안」, 동북아시아위원회  
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 김승렬 외(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 김재관(2006), 「미중양국의 패권경쟁 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국제정치논  
총』 46(3).
-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 문홍호(2006), 「전환기 중일관계와 타이완문제」, 『중소연구』 30(1).
- 박용희(2008), 「'분쟁'의 역사학에서 '공존'의 역사학으로」,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  
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 박자영(2004), 「상호주의를 넘어서-어떤 동아시아론인가」, 『황해문화』 겨울.
- 박재욱(2006),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전략과 시사점」, 『국제문제연구』 겨울.
- 배기찬(2008), 「동북아시아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1).
- 백영서(2005),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백영서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  
서』, 창비.
- 배정호(2006),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가을.
- 배진수(2005), 「동북아 영토·역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NGO대안」, 『국제문제연  
구』 겨울.
- 배진수(2007), 「동북아 영유권 분쟁과 그 의미」, 동북아시아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

- 단 주최 심포지움,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 백지운(2005),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민간연대'의 역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브레진스키 저, 김명섭 역(2004), 『거대한 체스판』, 삼인.
- 사카모토 히로키 저, 양일모·조경란 역(2008),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풍경.
- 손기섭(2005),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 '72년체제'의 갈등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45(4).
- 송석원(2006), 「한일 역사주권 논쟁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문제연구』 봄.
- 송은희(2007), 「중일협력과 갈등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주는 함의」, 『국제문제연구』 봄.
- 송주명(2007),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구조적 갈등과 새 외교의 단초」, 『국제문제연구』 겨울.
- 안치영(2008), 「중국의 민족문제 :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브리프』 3권 2호.
-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2004a),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 신지역주의 선언』, 일조각.
-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역(2004b),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역사문제」, 『창작과비평』 봄.
- 유철중(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 이남주(2004), 「중국 인권정책 변화에 대한 외부 요인의 영향」, 『인권과 평화』 4권 1호.
- 이남주(2005a),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론의 변화와 발전」, 『현대중국의 이해』, 나남.
- 이남주(2005b), 「동아시아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이원덕(2006), 「일본의 동아시아지역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22집.
- 임지현(2001), 『이념의 속살』, 삼인.
- 임지현(2008),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와 탈민족적 상상력」, 비판사회학회 학술심포지움, '지구화 시대 탈국가적 상상력'.

- 전진호(2007), 「21세기 일본의 국가이념과 헌법조사회」, 『일본연구논총』 25집.
- 조경란(2006),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7(3).
- 조성렬(2004), 「일본의 과거사문제 인식평가와 외교적 대응방향」, 『국제문제연구』 봄.

### 〈중문〉

- 馬大正(2003), 『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費孝通(2003),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修訂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宋強·張藏藏·喬邊(1996), 『中國可以說不』, 中國工商聯合出版社.
- 錢其琛(2003), 『外交十記』, 世界知識出版社.
- 陳喬之 主編(2002), 『東亞區域經濟合作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胡鞍鋼·門洪華(2005), 『中國：東亞一體化新戰略』, 浙江人民出版社.

### 〈일문〉

- 東アジア共同體評議會(2005), 『政策報告書 東アジア共同體の現状』, 背景と日本の國家戰略(2005年 8月)』([http://www.ceac.jp/j/pdf/policy\\_report.pdf](http://www.ceac.jp/j/pdf/policy_report.pdf)).
- 田中均, 「東アジア共同體3への展望」, 『日本記者クラブ研究會3「東アジア共同體」』(<http://www.jnpc.or.jp/cgi-bin/pb/pdf.php?id=140>).
- 中西輝政(2004), 「保守に油斷はないが」, 『諸君』 2004年 8月.

### 〈영문〉

- Armitage, Richard L. and Nye, Joseph S.(2007), *The U.S.-Japan Alliance :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Washington D.C. : CSIS.
- Blanchard, Jean-Marc F.(2003), “Maritime Issues in Asia : The problem of Adolescence,” Alagapa, Muthiah ed., *Asian Security Order :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wsmith, Joseph and Rosen, Stanley(2001),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 Does ‘Public Opinion’ Matter?,” Lampton, David M. ed., *The Making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o, Dexiang(2007), "China's Political Communication on Sino-Japanese Relations : Memory, Chosen Traumas and Reconcili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Classical Chinese Garden*, Portland, Oregon USA([http://www.allacademic.com/meta/p204548\\_index.html](http://www.allacademic.com/meta/p204548_index.html)).
- Hensel, Paul R.(2000), "Territory Theory and Evidence on Geography and Conflict," John Vasquez ed., *What Do We Know About War?*, Lanham, Maryland : Rowman and Littlefield.
- Langton, Christopher(2007), *The Military Balance(IISS)*, New York : Routledge.
- Moon, Chung-In and Suh, Seung-won(2008), "Politics,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Order," Ikenberry, G. John and Moon, Chung-In eds.,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Lanham,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 Steele, Brent J.(2007),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 Self-Identity and the IR State*, New York : Routledge.
- Vasquez, John A.(1995), "Why Do Neighbors Fight? Proximity, Interaction, or Territoriality," *Journal of Peace Research* 32(3).
- Wang, Jianwei(2003), "Territorial Disputes and Asian Security-Source, Management and Prospects," Alagapa, Muthiah ed., *Asian Security Order :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huda, Michael(2006), "The Limit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 Sino-Japanese Relations," Johnston, Alastair Iain and Ross, Robert S. eds., *New Direction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Zhao, Suisheng(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찾아보기

<ㄱ>

가계 278, 286, 288

가장의 권위 284, 285, 294, 295

가족 187, 207~209, 211, 214~217, 220, 270, 273~286, 288~292, 294, 296~299, 366~369, 371, 372

가족의 화목 281, 282, 290~292

가족주의 209, 214~217, 270, 273, 292, 298, 367, 372

가즈에 게이타로[主計啓太朗] 260

가치 186, 187, 190~193, 197, 203, 206~214, 216, 218, 219, 221, 223, 226, 229, 230, 234, 236, 238, 242~246, 251, 254, 260, 264~266, 272, 279, 292, 298~300, 311, 312, 316~323, 325~329, 336, 355, 366, 367, 369, 371

가치공동체 243

간디 357, 359, 362

갈등강도 439, 441, 442, 445~457

갈등상황 438, 441, 442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 441

갈등유형 387, 388, 389, 437, 439, 442, 457

갈등해결 384, 389, 390, 431, 434, 437, 438, 439, 440, 441, 443, 445, 446, 457,

458

갈등행위 430, 434, 438, 439, 442, 457

강상증 256, 258~260, 263, 267, 326, 362, 366

개방성 241, 308, 320

개인주의 213~215, 217, 219, 273, 274, 276, 281, 286, 290, 294, 296, 298, 299

경계 설정 259

경계심 190, 303~305, 308, 310~312, 316, 358, 359

경제공동체 62, 70, 74, 81, 99, 189, 194~196, 206, 248, 249, 271, 367, 371, 372

경제상회의 92

경제연대협정 86

경제장관 89, 91, 92

경제장관 회담 91, 92

경제장관회의 92

계몽과 해방 238

계몽의 변증법 197

계몽주의 221, 322

계보학 184, 192, 193, 223, 229, 256~259

고모리 가즈요시[古森義久] 250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256~258, 267,

268, 366  
 공동의식 260, 271  
 공동의 유산의 발굴 325  
 공동지 261, 262  
 공동 커리큘럼 363, 365  
 공산주의 188, 251, 343  
 공식성 274  
 공통의 가치관 245, 260  
 과거사 문제 64  
 과거사 청산 333  
 관심 182, 188, 190, 192, 194, 195,  
 200, 206, 230, 241, 242, 264,  
 275~281, 286, 300, 315, 319, 324,  
 356, 357, 365  
 교육 프로그램 363, 365  
 구성주의 189, 193, 203, 229, 230, 259  
 국가 181~184, 186, 188~190,  
 194~196, 198~204, 206, 207,  
 209, 211, 216, 217, 226, 230~232,  
 234~236, 239~241, 243~246,  
 249~252, 254, 255, 257, 262, 263,  
 267, 271, 272, 274~277, 279,  
 281, 284, 296, 312, 313, 316, 319,  
 324~332, 334~342, 344~352,  
 354~356, 358~365, 368, 371~373  
 국가이익 190, 201  
 국민공동체 351  
 국민국가 182~184, 186, 199, 200,  
 235, 236, 239, 271, 272, 324,  
 328~331, 334~341, 344~352, 355,  
 360, 361, 371  
 국민성 351, 352  
 국민의식 349  
 국민적 정체성 349  
 국민정체성 337  
 국제사면위원회 331  
 국제적 민족주의 339  
 국제체제 203  
 권력 185~187, 193, 198, 206, 220,  
 221, 223, 224, 226~228, 232, 233,  
 235, 238, 259, 274~276, 33~338,  
 340, 357, 370, 373  
 권력거리 275, 276  
 권력·지식 이론 185, 227  
 권위주의 209~211, 220, 222, 273,  
 283, 284, 286, 294, 296, 298, 299,  
 323  
 극동 223, 224  
 근대의 초극 264, 267, 268  
 기능적 협력 241, 242  
 기능주의 189, 193, 195, 198, 201, 204  
 기시 총리 78  
 기쿠치 츠토무[菊池努] 251, 252  
 김광익 271, 273  
 김기봉 184, 201, 226, 327, 333, 346  
 김유은 194, 196

<ㄴ>

나가지마 미네오[中嶋嶺雄] 254~256

냉소주의 320

냉전구조 181

네루 357, 358, 359, 362

논리 187, 198, 206, 237, 316, 336,  
340~342, 344, 346, 350

니시구치 기요카츠[西口清勝] 242, 246

<ㄷ>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244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 240, 241,  
246~249, 364

다양성 185, 186, 204, 242, 255, 262,  
272, 326, 339

다원일체(多元一體) 중화민족론 418

다자주의 29, 31~33, 40, 46, 50, 107,  
145, 146, 150, 151, 153, 155, 156

다카하시 테츠야[高橋哲也] 317, 334,  
338, 339, 368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191, 234, 258,  
263, 264~266, 268

대동아공영권 74, 75, 134, 223, 226,  
231, 257, 268, 312, 313, 316, 317,  
326, 330, 346

대안체제 189, 191, 192, 237~239

대안체제로서의 동아시아 237~239

대중문화 262

대화의 교류 320

대화적 이성 320, 327

독도문제 391~393, 452

독도 및 동해표기 문제 39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35, 44

동도서기 321

동반자 245, 246

동북공정 402~404, 426~429, 439,  
441

동북공정 문제 4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224, 259, 263,  
268, 269

동북아시아공동체 440, 445, 446

동아 256~258, 267, 268

동아시아 179, 181~195, 198~204,  
206~211, 213, 214, 218, 219,  
222~224, 226, 227, 229~264,  
267, 268, 270~275, 279, 280, 282,  
298~301, 311~321, 323~335, 337,  
338, 340, 343~346, 351, 354, 355,  
359~364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71

동아시아경제협의회 194

동아시아공동체 18, 20~23, 28, 29,  
32, 34~40, 46, 55~58, 60, ~68,  
70, 72, 85, 86, 88, 91~93, 97, 99,  
102, 105~107, 109, 110~118, 139,  
144~146, 151, 152, 154~156, 158,  
179, 181~189, 191, 193~195,

199~201, 204, 206, 207, 226, 229,  
230, 232, 235, 236, 240~248,  
250~254, 256, 259, 260~263, 270,  
271, 273, 298~300, 311~321,  
323~326, 327, 328, 332~346, 351,  
354, 355, 359~364, 377, 379, 383,  
388, 435, 436, 445, 451

동아시아공동체론 21, 88, 109, 111

동아시아 모델 44

동아시아 인재 공동 육성 프로그램 제안  
364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195, 243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  
EAS) 18, 38, 56, 64~68, 72, 86,  
87, 93, 99, 103, 117, 142

동아시아 지식교류 364

동아시아 커뮤니티 241

동아시아학 184, 373

동양 182, 188, 208~212, 214, 215,  
217, 219~222, 224~226, 233,  
234, 237, 240, 261, 265~267, 275,  
298~322

동양문명 261

동양의 전통 209~211, 299, 322

동질성 183, 184, 187, 191, 245, 253,  
256, 259, 270, 271, 300, 315~317,  
350, 354

동해 391, 392, 408, 439, 441, 444,  
446, 452, 457, 459

동해표기 391, 441, 444, 446, 452,  
457, 459

등한 권리공동체 350

뚜웨이밍 208, 210, 214, 219, 222,  
255, 256, 322, 323

〈르〉

리관유[李光燾] 191, 208~213

링컨 357, 3595

〈口〉

마스타 유지 261

마치니 356, 357, 362

마하티르 191

막스 베버 197, 204

매운맛 255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 253, 254,  
369

문화공동체 191, 194, 232, 271, 272,  
317, 325, 329

문화교류 232, 263, 364

문화교류 프로그램 364

문화네트워크 184, 232

문화적 공동성 253, 272

문화적 교류 253

문화적 동질성 183, 184, 187, 191, 253,  
256, 259, 270, 271, 315, 316, 317

문화적 정체성 185, 186, 192, 193, 227,

- 230, 259, 260, 272, 273, 346
- 미래의 기획 184, 185, 187, 191, 232, 318
- 미일동맹 27, 109, 117, 148, 149, 190, 241~243, 245, 246, 250
- 미일안보동맹 202
- 미일안보조약 76, 77, 109
- 민간교류 207, 332
- 민족주의 200, 201, 231, 239, 252, 256, 258, 259, 318, 324~326, 336~354, 356~359, 361, 362, 377, 379, 382~390, 395, 405, 417~421, 423~431, 433~437, 439~446, 448, 449, 453~459, 461
- 민주공화국 348
- 민주적 입헌국가 349, 350
- 민주주의 190~192, 195, 203, 210~215, 217, 220, 222, 231, 242~245, 251, 255, 259, 266, 275, 281, 299, 311, 312, 316, 319, 321, 322, 328, 331, 332, 335~337, 346, 351, 352, 359
- 〈ㄴ〉
- 박사명 195, 196, 201, 271, 272
- 박승우 189~194, 219, 226, 237, 271
- 박은홍 231, 232
- 반패권주의 47, 261
-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258, 264~268
- 배타적 경제수역 407~410, 439, 441
- 백낙청 200, 234, 239, 268
- 백영서 188, 200, 234~237, 324
- 벤하비브 347, 350
- 보통국가론 422
- 보편적 가치 218, 242, 266, 319, 336, 354
- 보편적 규범 185, 328
- 보편적 보편주의 238
- 보편주의적 가치 321
- 복잡성 181, 204, 206
- 부정직 303~305
- 북미자유무역협정 189
- 비정부조직 331
- 〈ㄷ〉
- 사물화 205
- 사이드 184, 224~226, 238, 256, 258
- 사회문화적인 동질성 350
- 사회민주주의 212, 214
- 사회윤리 255
- 사회적 아시아 231, 372
- 사회적 연대 197, 351
- 사회주의 191, 192, 233, 269, 315, 316, 324
- 3극 구조 246
- 상생의 관계 322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SCO) 59  
 상호교류의 기억복원 362  
 상호 방문 363  
 상호이해 187, 198, 227~229, 232, 263, 284, 317, 325, 327, 330~332, 363  
 상호인식 300~310  
 상호작용 227, 228, 325  
 생명존중 322  
 생사관 254  
 생태 222, 321, 322, 326, 328, 332, 347, 365  
 샤오캉[小康] 사회 54  
 서구 근대 191~193, 212, 215, 222~234, 237~239, 263~265, 274, 318, 320~323, 326  
 서양 211, 217, 221, 222, 224, 225, 261, 264~267, 298, 321, 322  
 세계 181~183, 185, 186, 189, 190, 194, 198, 199, 200, 205, 214, 216, 218, 222, 224, 225, 227~229, 231, 234~236, 238~241, 246, 251, 252, 257, 261, 263, 264, 268, 269, 274~277, 318, 321, 324, 326, 328~333, 336~338, 341, 342, 345~349, 351, 352, 354~358, 360  
 세계공동체 326, 345  
 세계공화국 341, 342  
 세계시민주의 236, 326, 328, 341, 345~348, 356, 360  
 세계주의적 관점 326  
 세계질서 181, 200, 235, 257, 269, 324, 330  
 세계화 182, 183, 189, 194, 214, 241, 251, 252, 263, 269, 318, 329~332, 337, 355, 366, 370, 372  
 세력균형이론 190  
 센카쿠 열도 394, 395, 416, 428~430, 439, 441, 442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갈등 394  
 소중화사상 254  
 소통 187, 197, 227~229, 232, 273, 274, 283, 284, 317, 326~329, 332, 360  
 수치의 문화 255  
 순화된 애국주의 239, 240, 326, 344~346, 354~362  
 시민사회 187, 207, 217, 219, 239, 260, 273, 326, 330~333, 338, 346, 364  
 신뢰 202, 203, 233, 246, 274, 305, 307~312, 315, 317, 327  
 신자유주의 181, 182, 189, 251, 337  
 신현실주의 203  
 신흥공업국가 207  
 심리습관 255

<○>

아리프 딜릭 218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18, 34, 57, 93

아시아 218, 256, 369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 ASEM) 18

아시아 인재 364

아시아적 가치론 190, 192, 207, 218, 226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18, 34

아시아통화기금(AMF) 84, 109, 111

아오키 다모츠 262

악셀 호네트 185

안보 183, 194, 196, 198~203, 206, 229, 231, 242, 247, 250, 252, 271, 272

안보공동체 194, 196, 198~202, 271

안보 문제 183

안전보장공동체 115

애국주의 239, 240, 324, 326, 344~346, 354~362

애국주의 교육 417, 419

야스쿠니신사 254, 317

언어행동 255

에라스무스 플랜 365

역사교과서 25, 110, 398, 399, 420, 424, 425, 427, 428, 434, 437, 442

역사문제 36, 109

역사적 운명공동체 350

역오리엔탈리즘 218, 219, 237, 299, 321

연고문화 215, 217

연대성 229, 326, 328, 337, 351, 365

열린 규칙 326

열린 네트워크 325, 328, 332, 360

영구평화론 341

영토분쟁 25, 154

오리엔탈리즘 193, 218, 219, 223, 224, 226, 237, 238, 257~259, 299, 321

오자키 시게아키[尾崎重義] 261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224, 263, 268, 269, 334, 345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 245

외무장관회의 38, 58

외상 74, 75, 77, 82, 83, 85, 90, 92, 96

외상회의 82, 83, 85, 92, 96

요시다 독트린 76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77, 240

요시토미 마사루[吉富勝] 247

월러스틴 238, 239

위계질서 210, 284~286, 290, 294, 296, 297, 299, 322

유교문화권 191, 204, 253, 254, 256,  
 262, 273, 298  
 유교민주주의 191, 192, 212~214,  
 220, 222, 255, 299  
 유교자본주의론 190  
 유기체 205  
 유럽연합 17, 19, 31, 151, 181, 189,  
 196, 207, 247, 248, 251, 319, 327,  
 329, 365  
 유럽적 보편주의 238, 370  
 유럽중심주의 218, 272  
 유럽통합 18  
 유석춘 213~215, 217, 220  
 유토피아 269, 343  
 6자회담 34, 38, 59, 60, 65, 89, 90, 96,  
 97, 101, 104, 116, 117, 131, 157,  
 158  
 음양이원론 254  
 의리 305, 306  
 의사소통 행위 227, 228  
 이념 183, 185, 187, 201, 210~213,  
 222, 227, 236, 238, 242, 244, 258,  
 261, 274, 311, 312, 317, 318, 322,  
 323, 326, 328~330, 332, 341, 342,  
 349, 350, 359  
 이니셔티브 450, 452, 454, 458, 459  
 이승환 208, 214, 226  
 이어도 410, 428  
 이웃 253, 275~277, 279, 280, 286,  
 296, 324  
 이종원 248, 252, 372  
 이질성 255, 262, 272, 273, 317, 327,  
 339, 349  
 이케다[池田勇人] 총리 79  
 이토 겐이치[伊藤憲一] 244  
 이항대립 237, 266  
 인간과 자연 322, 323  
 인권 204, 210, 211, 213~215, 217,  
 219, 220, 222, 242, 243, 312, 319,  
 321, 333~337, 346, 349, 350~353,  
 359, 360, 365  
 인민 337, 349, 350, 354  
 인민주권 349, 350  
 일당독재 246, 316  
 일본 179, 181, 182, 188, 190, 191,  
 199, 200, 208, 223, 224, 231, 233,  
 234, 240~268, 270, 271, 275~279,  
 281~298, 300~314, 316, 317, 319,  
 324~326, 331, 333~335, 337, 338,  
 340, 345, 346, 362~364  
 일제강점기 188  
 임지현 226, 239, 334~340, 343, 347,  
 348  
 <ㄱ>  
 장자민족중심주의 267, 318, 321, 335,  
 338, 344

자본주의 182, 189~192, 194, 197,  
 205, 206, 212, 214, 222, 230, 233,  
 235, 236, 252, 255, 298, 299, 324  
 자유무역협정 17, 19, 32, 37, 58, 92,  
 115  
 자유민주주의 210, 212, 214, 220, 244,  
 275, 281, 351  
 자유주의 181, 182, 189, 195, 196,  
 211, 217, 222, 251, 311, 312, 316,  
 337, 351, 352  
 장 폴 사르트르 185  
 재무상 93, 96, 99  
 재무상회의 93  
 재무장관 58, 89, 95  
 재무장관회의 58  
 저항의 민족주의 338  
 적대적 공범관계 338, 340  
 전 지구 공동의 집 269  
 전통 184, 187, 199, 202, 205, 207~  
 217, 220~223, 230, 235, 253, 255,  
 259, 266, 269, 272, 273, 275, 299,  
 300, 320~323, 325, 328, 329, 331,  
 359  
 전통문화 184, 187  
 전향문화 266  
 전형준 233, 234, 239  
 점진주의 261  
 정상국가 181, 190  
 정체성 179, 181, 183~187, 189~193,  
 197, 203, 212, 222, 225, 227,  
 230~232, 239, 240, 259, 260,  
 270~273, 298~300, 315, 316,  
 318~320, 325, 328, 329, 332, 333,  
 337, 346, 349, 352, 354, 355, 359,  
 361, 362, 364, 365  
 정체성 형성 179, 181, 183, 184, 186,  
 187, 197, 222, 225, 230, 239, 240,  
 270, 272, 273, 298, 300, 315, 316,  
 318~320, 333, 355, 359, 361, 362  
 제도주의 203, 371  
 조윤영 199, 202, 203  
 조희연 231, 232  
 존재론 383~385, 389~391,  
 426~429, 437, 439, 440, 442~446,  
 448, 455~458  
 존재론적 갈등 389, 391, 439, 440, 446  
 존재론적 안보 383, 384, 448, 455  
 중간지대론 47, 48  
 중국 190  
 중국위협론 30, 37, 60, 64  
 중화주의 231, 267, 330  
 지역공동체 17, 31, 38, 56, 61~63,  
 101, 105, 132, 155, 158, 183, 192,  
 193, 206, 230, 242, 260, 326, 329,  
 334, 344~346  
 지역사회 275~277, 279, 280  
 지역주의 17~19, 21, 23, 24, 29,

35~37, 39, 40, 46, 69, 72, 73,  
83~85, 87, 88, 105~112, 119,  
120~125, 128, 129, 132~134, 137,  
138, 140, 142, 148

지역통합 182, 189, 195, 196, 206,  
241, 246~249, 272, 326

지역 패권주의 189, 190

지역협력 182, 183, 190, 194, 195,  
202, 229, 240~242, 246, 248, 252,  
268, 270, 333, 334

지역협력체 202, 268

지역화(regionalization) 19, 38, 65,  
105, 106, 110, 241, 318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235

집합주의 273, 274~276, 279, 298

## <ㄷ>

차이 185, 186, 209, 211, 212, 218,  
225, 245~249, 254, 255, 259, 260,  
269, 273, 277, 279, 280, 282, 283,  
285, 286, 288~290, 292, 294, 296,  
298, 302, 304, 306, 308~312, 316,  
317, 338, 341, 354

찰스 테일러 185

참여민주주의 332

최영중 189, 201, 203

최원식 188, 200, 234, 268, 327

최재석 209

충성도 286, 29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 淸邁倡議) 58, 84, 109

침략지향 338

침략지향의 민족주의 338

## <ㅋ>

쿠리모토 나오카즈 245

킹 357, 362

## <ㅌ>

타당성 요구 227

타이완 389, 394~398, 412, 416, 419,  
428~430, 439, 441, 442, 444, 445,  
460

타이완 문제 395, 397, 412, 429, 442

타자 185, 212, 218, 219, 224, 225,  
260, 320, 321, 329, 337, 338, 340,  
348, 353, 354, 370

탈근대적 기획 192, 193, 233, 236, 263,  
268

탈민족이론 200, 346

탈식민주의 224, 226

탈아입구 240, 241

탈중심화 228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FTA) 81

테러리즘 54, 129

통화스왑 58, 59, 84, 93, 98, 100, 104,  
109

<π>

패권주의 182, 189~200, 245, 250,  
252, 261, 268, 330, 331, 344, 346  
패권질서 199, 202, 203, 234, 263, 321  
패러다임 182, 184, 222, 335, 343  
평등주의 273, 275, 294  
평화 182, 183, 195, 196, 198~202,  
231, 244, 246, 250, 258, 261,  
301~303, 313, 317, 326~329, 338,  
341, 342, 344, 360, 361, 365  
평화공존 5항 원칙 49  
평화적 244, 250, 30~303, 328  
평화체제 182  
폐쇄성 308, 360  
포스트모더니즘 233, 323  
푸코 184, 185, 223~227, 229, 238,  
256, 258, 373

<ㅎ>

하버마스 185, 197, 205, 227, 228,  
342, 348~351  
하타케야마 노보루[畠山襄] 251  
학생교류 프로그램 365  
한의 문화 255  
한자문화권 262  
해석학적 보편성 220  
헌법개정 396, 397, 404~406, 422,  
423, 427, 428, 441, 444, 452, 453,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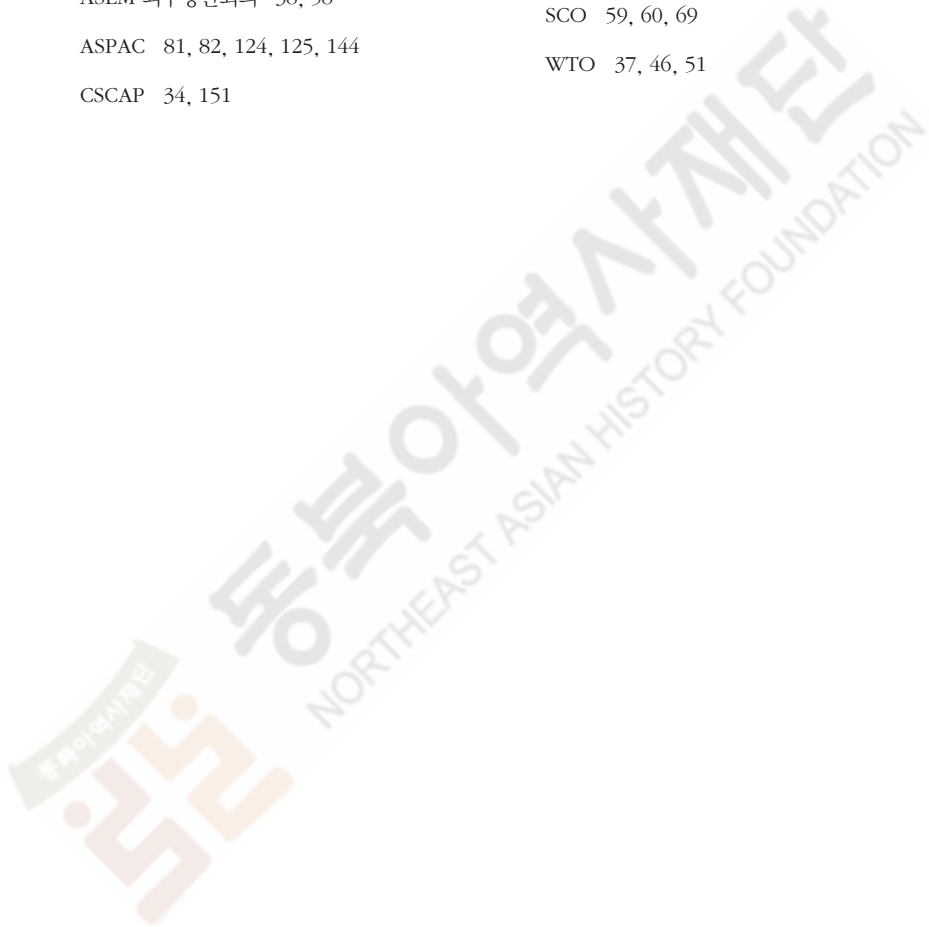
헌팅턴 212, 213  
헤게모니 181, 224~226, 335, 343,  
372  
헤겔 185, 222, 341, 368  
현실주의 189, 193, 198, 199, 201, 203  
혈연 215, 278, 279, 286~288  
협조적 분업체제 249  
형제애 358  
호르크하이머 197  
호전적 301~303, 324  
혼성문화 263  
흡스테트 275  
화폐 206, 312  
환경상회의 103, 104  
환경장관 103  
환경장관회의 103  
회심문화 266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80  
후쿠자와 유키치 240

<기타>

APEC 18, 32, 71, 83, 84, 94, 95, 111,  
120, 127~131, 141, 151  
ARF 18, 32, 93~95, 100, 114, 128,  
131, 151  
ASEAN 18, 35, 37, 38, 53, 56~58,

62, 63, 65, 66, 71, 72, 80, 83~86,  
89~93, 95, 96~99, 102, 108, 111,  
113, 121, 126, 130, 140, 141, 144,  
151  
ASEAN+3 정상회의 37, 53, 58, 84, 85  
ASEM 외무장관회의 38, 58  
ASPAC 81, 82, 124, 125, 144  
CSCAP 34, 151

EPA 86, 92, 98, 99, 105, 108, 112  
FTA 19, 32, 38, 58, 62, 70, 86, 91,  
98, 99, 108, 112, 151  
IMF 27, 79, 84, 130  
NEACD 34, 151  
SCO 59, 60, 69  
WTO 37, 46, 51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34

##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초판 1쇄 인쇄 2009년 12월 7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12월 15일

지은이 이숙중·김기석·박영준·서상민·전재성·조양현·한석희·나종석·  
권용혁·이진원·이남주·배기찬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66-2-9330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